연구보고서 | 2025-07

#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김민영 · 박진경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김 민 영(부연구위원)
박 진 경(선임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육 동 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판 매 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394-0337
**인 쇄 처** (주)투데이기획 044-862-0242
**I S B N** 978-89-7865-552-1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서 문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흐름은 단순한 인구 수의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기반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정주인구의 축소와 산업활동의 위축이 맞물리며,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소비 행태와 체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을 분류하며,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인구를 지역의 경제 순환과 산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을 수립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과 소비 활성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가 인구감소시대에 지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 동 일**

# 요 약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정주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인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활인구 소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생활인구를 단순히 '얼마나 머무는가'를 파악하는 행정적 지표로 다뤘던 것과 달리,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제 경제 주체로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의 소득, 고용,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중심 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현황과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생활인구 소비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떤 소비 주체가 지역경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해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맞춤형 전략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구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 실행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제2장은 인구감소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며,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생산 중심 지역경제 성장 전략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짚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소비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비 활동이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임을 밝히며, 소비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생활인구의 통계적 산출과 이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동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관광 활성화나 축제 개최,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유입 전략과 주요 소비 주체에 집중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 내 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인구 연구가 행정적·기술통계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생활인구를 지역경제 구성 요소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경제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의 수준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패턴은 연령, 체류 형태, 방문 목적 등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제3장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행태를 '인구', '공간', '시간' 등 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누가 소비를 주도하는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업종별 소비를 강화하는지, 언제 수요가 집중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제1절)에서는 생활인구의 세부 속성별로 소비 수

준과 업종별 지출 구조가 달랐다. 체류인구 중 고령층(65세 이상)의 1인당 소비액이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았으며, 이는 보건의료 지출이 총소비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방문객보다 장기 체류 및 실거주 인구의 소비가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었고, 체류 목적별로는 장기 실거주 인구가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소비 주체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제2절)에서는 체류인구 소비를 기준으로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을 도출하여, 어떤 지역적 요인이 특정 업종의 소비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 업종 소비가 높은 경북 울릉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외식 의존도, 숙박 중심의 관광 구조가 결합되어 음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 담양군은 짧은 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이 식도락을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 음식 업종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인프라가 업종별 소비 집중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활인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제3절)에서는 계절성과 명절 등 시기적 요인에 따라 소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1월, 12월)에는 실거주 인구 중심의 보건의료·교통 소비가 증가했고, 리조트 이용 등 숙박 지출도 확대되었다. 반면, 봄·여름철(5~7월)에는 외식과 문화·여가 소비가 증가했으며, 여름휴가철(8월)에는 숙박과 운송교통 지출이 집중되었다. 추석 명절(9월)에는 귀향과 선물 구입으로 인한 소매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4장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의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소비 구조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에는 생활인구의 규모, 소비 규모,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 등 다양한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차원을 축소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으로,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며 외부

방문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가 지배적이다. 숙박·음식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 내 소비의 환류 효과가 낮아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군집 2는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대도시 접근성이 높아 재방문을 동반한 음식·문화·레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높고, 반복적 여가 소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가 소비의 중심을 이루며, 소매·보건의료·운송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된다.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보이지만 외부 유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인근 배후 지역의 소비 수요를 흡수하며, 음식·소매·보건의료 등 다양한 업종이 균형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광역 생활권의 중간 결절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간 소비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각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주요 소비 주체를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세분화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통해 지역의 소비구조 및 체류·정주 특성을 '체류형 소비중심형 - 생활형 정주 중심형'의 스펙트럼 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사례지역은 제4장의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군집의 대표성을 갖는 지자체 중 체류인구 및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소비 구조의 다양성, 계절적 편차, 정주 및 재방문 인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안분하여 선정한다. 전형적인 계절성 관광지 특성을 갖는 군집 1의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강원 양양군을, 봄·가을 반복방문형 당일 나들이 집중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2의 경우 소매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충남 부여군을, 정주형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3의 경우 문화·여가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전북 고창군을, 평일 다세대 준중심지역의 특성을 갖는 군집 4의 경우 생활인구 인당 소비액이 가장 많은 경북 안동시를 선정해 심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생활인구 소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첫째,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인 효과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더 나아가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구감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규정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1. 연구범위 ····· 7
2. 분석자료 ····· 8
3. 연구방법 ····· 11

## 제2장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의 위상과 경제전략의 전환

**제1절 지역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 15**

1. 소비 중심 접근의 부상 ····· 15
2. 지역경제에 대한 소비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 ····· 17

**제2절 인구감소시대 인구정책 변화와 연구 동향 ····· 19**

1. 생활인구 개념 등장 배경 ····· 19
2. 생활인구 유형화 연구 동향 ····· 23

**제3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현황 ····· 28**

1.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공통 전략 ····· 28
2.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생활인구 유입 전략 ····· 34
3.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한계와 개선 과제 ····· 37

**제4절 연구의 차별성 ····· 44**

## 제3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특성

**제1절 인구: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 ····· 50**

1. 생활인구 유형별 소비 특성 ····· 50
2. 체류인구 유형별 소비 특성 ····· 51

**제2절 공간: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 ····· 57**
1.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인구 및 소비 구조 ····· 57
2. 체류인구 소비 기준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 ····· 58
3. 등록외국인 소비의 지역별 편차 ····· 90

**제3절 시간: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 ····· 92**
1. 연월별 체류인구 소비 현황 ····· 92
2. 시기별 체류인구의 인구 및 소비 특성 ····· 93

## 제4장 생활인구 소비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제1절 분석개요 ····· 99**
1. 분석방법 ····· 99
2. 분석자료 ····· 104
3. 분석지표 ····· 104

**제2절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류 결과 ····· 115**
1. 요인분석 결과 ····· 115
2. 군집분석 결과 ····· 125

**제3절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 분석 ····· 132**
1. 생활인구 유형 ····· 132
2. 체류인구 특성 ····· 133

**제4절 소결 ····· 147**
1.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특성 종합 ····· 147
2. 시사점 ····· 156

## 제5장 지역 유형별 심층 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 163**
1. 분석목적 ····· 163
2. 사례 선정기준 ····· 163
3. 사례 분석틀 ····· 166

**제2절 강원 양양군: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 168**
1. 지역 현황 ····· 168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 171
3. 정성적 특성: 서핑 및 워케이션 청년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 174

**제3절 충남 부여군: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 ····· 190**
1. 지역 현황 ····· 190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 195
3. 정성적 특성: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체류인구 소비 촉진 활성화 ····· 198

**제4절 전북 고창군: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 ····· 222**
1. 지역 현황 ····· 222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 225
3. 정성적 특성: 농업기반 체류인구의 정착 유도 활성화 ····· 227

**제5절 경북 안동시: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 ····· 241**
1. 지역 현황 ····· 241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 246
3. 정성적 특성: 생활인구 소비 기반 거점 활성화 ····· 249

**제6절 시사점 ····· 266**
1. 제도적 시사점 ····· 266
2. 정책사업적 시사점 ····· 267

3. 사업주체적 시사점 ····· 269

## 제6장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전략 추진의 기본 방향 ····· 273**

1.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 연계 강화 ····· 273
2.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추진 ····· 276
3.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 277

**제2절 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278**

1.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 278
2.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지역 ····· 280
3.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 285
4.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 ····· 288

**제3절 제도 개선 방안 ····· 294**

1. 2차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294
2.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개정 ····· 296
3. 생활인구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 304
4.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활성화 노력이 보상받는 지방소비세 개편 ····· 306

##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31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 319**

1. 연구의 한계 ····· 319
2. 후속 연구 제안 ····· 320

참고문헌 ····· 322

Abstract ····· 329

# 표 목차

〈표 1-1〉 카드 사용 정보의 업종 분류 ····· 9
〈표 1-2〉 생활인구 분류 및 조작적 정의 ····· 10

〈표 2-1〉 주민등록인구 외의 대안적 인구 개념 ····· 20
〈표 2-2〉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정책 ····· 21
〈표 2-3〉 생활인구 유형화 연구에서 활용된 지표 종합 ····· 24
〈표 2-4〉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상 전략 ····· 30
〈표 2-5〉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대상 전략 ····· 32
〈표 2-6〉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외국인 대상 전략 ····· 33
〈표 2-7〉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한계와 개선 과제 ····· 38

〈표 3-1〉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1
〈표 3-2〉 체류인구 연령대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2
〈표 3-3〉 체류인구 체류기간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3
〈표 3-4〉 체류인구 재방문 및 숙박 여부에 따른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4
〈표 3-5〉 체류인구 체류요일 패턴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5
〈표 3-6〉 체류인구 체류목적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 56
〈표 3-7〉 시군구별 인구 유형별 인구 및 소비 비중 ····· 57
〈표 3-8〉 경북 울릉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58
〈표 3-9〉 강원 삼척시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0
〈표 3-10〉 전남 담양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1
〈표 3-11〉 전남 진도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2
〈표 3-12〉 강원 평창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4
〈표 3-13〉 강원 홍천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5
〈표 3-14〉 대구 군위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6
〈표 3-15〉 강원 횡성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8

〈표 3-16〉 경북 고령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69
〈표 3-17〉 충북 제천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1
〈표 3-18〉 전북 김제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2
〈표 3-19〉 대구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3
〈표 3-20〉 경남 함안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5
〈표 3-21〉 경북 성주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6
〈표 3-22〉 경남 창녕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7
〈표 3-23〉 부산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79
〈표 3-24〉 대구 남구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0
〈표 3-25〉 전남 화순군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2
〈표 3-26〉 대구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3
〈표 3-27〉 경북 안동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5
〈표 3-28〉 대구 남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6
〈표 3-29〉 경북 울릉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7
〈표 3-30〉 충남 부여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88
〈표 3-31〉 경북 영주시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 90
〈표 3-32〉 주요 지역별 등록외국인 소비 현황 ····· 91
〈표 3-33〉 연월별 체류인구 소비 현황 ····· 92
〈표 3-34〉 시기별 체류인구 유형별 비중 ····· 93
〈표 3-35〉 시기별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 ····· 95

〈표 4-1〉 생활인구 데이터와 지역산업연관표 간 업종 연계표 ····· 100
〈표 4-2〉 시도 및 업종별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05
〈표 4-3〉 시도 및 업종별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109
〈표 4-4〉 기술통계량 ····· 111
〈표 4-5〉 요인 패턴 행렬 ····· 115

〈표 4-6〉 요인별 명칭 및 특성 ····· 125
〈표 4-7〉 군집별 요인점수 평균 ····· 126
〈표 4-8〉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구성 지역 ····· 148

〈표 5-1〉 군집 1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164
〈표 5-2〉 군집 2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164
〈표 5-3〉 군집 3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165
〈표 5-4〉 군집 4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165
〈표 5-5〉 사례지역 최종 선정 ····· 166
〈표 5-6〉 심층 사례분석 틀 ····· 167
〈표 5-7〉 강원 양양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169
〈표 5-8〉 강원 양양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 170
〈표 5-9〉 강원 양양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5개) ····· 170
〈표 5-10〉 강원 양양군 주요 체류인구 비중 ····· 172
〈표 5-11〉 강원 양양군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172
〈표 5-12〉 강원 양양군 청년층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173
〈표 5-13〉 강원 양양군 단기숙박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173
〈표 5-14〉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주요 내용 ····· 174
〈표 5-15〉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주요 내용 ····· 177
〈표 5-16〉 충남 부여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191
〈표 5-17〉 충남 부여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 192
〈표 5-18〉 충남 부여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5개) ····· 193
〈표 5-19〉 충남 부여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 및 특화도(2022년 기준) ····· 194
〈표 5-20〉 충남 부여군 주요 체류인구 비중 ····· 195
〈표 5-21〉 충남 부여군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196
〈표 5-22〉 충남 부여군 당일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197

〈표 5-23〉 충남 부여군 부여읍·규암면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22년 기준) ····· 202
〈표 5-24〉 충남 부여군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3
〈표 5-25〉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충남 부여군 관련 조례 재분류 ····· 204
〈표 5-26〉 충남 부여군 체류 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관련 조례 규정 ····· 205
〈표 5-27〉 충남 부여군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관련 조례 규정 ····· 206
〈표 5-28〉 충남 부여군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 규정 ····· 206
〈표 5-29〉 충남 부여군 2024년 축제 및 행사 총괄현황 ····· 208
〈표 5-30〉 전북 고창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223
〈표 5-31〉 전남 고창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 224
〈표 5-32〉 전북 고창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4개) ····· 225
〈표 5-33〉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26
〈표 5-34〉 전북 고창군 주민등록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27
〈표 5-35〉 전북 고창군 등록외국인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27
〈표 5-36〉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조례 ····· 228
〈표 5-37〉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조례 주요 내용 및 관련성 ····· 232
〈표 5-38〉 전북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성 ····· 236
〈표 5-39〉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워케이션 사업 운영 구조 ····· 238
〈표 5-40〉 경북 안동시와 도 내 지역 간 접근성 ····· 242
〈표 5-41〉 경북 안동시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 243
〈표 5-42〉 경북 안동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5개) ····· 244
〈표 5-43〉 경북 안동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 및 특화도(2023년 기준) ····· 245
〈표 5-44〉 경북 안동시 주요 체류인구 비중 ····· 247
〈표 5-45〉 경북 안동시 생활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47
〈표 5-46〉 경북 안동시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48
〈표 5-47〉 경북 안동시 재방문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 248

〈표 5-48〉 경북 안동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53
〈표 5-49〉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경북 안동시 관련 조례 재분류 ····· 254
〈표 5-50〉 경북 안동시 체류 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관련 조례 규정 ····· 256
〈표 5-51〉 경북 안동시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관련 조례 규정 ····· 257
〈표 5-52〉 경북 안동시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 규정 ····· 257

〈표 6-1〉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전략 ····· 292
〈표 6-2〉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 개정(안) ····· 298
〈표 6-3〉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 조문 추가(안) ·· 302
〈표 6-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문 추가(안) ····· 306
〈표 6-5〉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구조 중 2단계 재정분권 잔여분 산정방식 ····· 308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 11

[그림 4-1] 부산 동구의 주요 지표 현황 ····· 120
[그림 4-2] 경북 영양군의 주요 지표 현황 ····· 122
[그림 4-3] 전남 영암군의 주요 지표 현황 ····· 123
[그림 4-4] 강원 양구군의 주요 지표 현황 ····· 124
[그림 4-5]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 비중 ····· 133
[그림 4-6] 생활인구 유형별 소비 비중 ····· 133
[그림 4-7] 연령대별 인구 비중 ····· 134
[그림 4-8] 연령대별 소비 비중 ····· 134
[그림 4-9] 체류 기간별 인구 비중 ····· 136
[그림 4-10] 체류 기간별 소비 비중 ····· 136
[그림 4-11] 재방문 여부별 인구 비중 ····· 137
[그림 4-12] 재방문 여부별 소비 비중 ····· 137
[그림 4-13] 숙박 여부별 인구 비중 ····· 138
[그림 4-14] 숙박 여부별 소비 비중 ····· 138
[그림 4-15] 체류요일 패턴별 인구 비중 ····· 139
[그림 4-16] 체류요일 패턴별 소비 비중 ····· 140
[그림 4-17] 체류 목적별 인구 비중 ····· 140
[그림 4-18] 체류 목적별 소비 비중 ····· 141
[그림 4-19] 월별 생활인구 비중 ····· 142
[그림 4-20] 월별 생활인구 소비 비중 ····· 143
[그림 4-21] 군집 1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 144
[그림 4-22] 군집 2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 145
[그림 4-23] 군집 3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 146
[그림 4-24] 군집 4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 146

[그림 4-25] 생활인구 소비 구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 지도 ····· 148

[그림 5-1] 강원 양양군 위치 ····· 168
[그림 5-2] 최근 10년간 강원 양양군 인구현황(2015~2024년) ····· 169
[그림 5-3] 강원 양양군의 서핑주요 스팟(좌), 가장 중심지인 죽도해변(우) ····· 178
[그림 5-4]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계획안(좌), 죽도 해안둘레길(우) ····· 179
[그림 5-5] 양양 웨이브웍스 전경과 내부에서 보이는 뷰 ····· 180
[그림 5-6] 강원 양양군의 '웨이브웍스양양' 내부 구성 ····· 181
[그림 5-7] 양양 웨이브웍스 이용자들이 신청가능한 지역민 상생 클래스 ····· 182
[그림 5-8] 고고양양(GogoYangyang) 앱스토어 소개 화면 ····· 184
[그림 5-9] 양양군 서피비치의 상권 활성화 ····· 187
[그림 5-10] 가구 브랜드 데스커의 워케이션 캠페인 '워크 온 더 비치' ····· 188
[그림 5-11]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공사 중인 현북초(좌),
서핑 강습중인 재학생들(우) ····· 189
[그림 5-12] 충남 부여군 위치 ····· 190
[그림 5-13] 최근 10년간 충남 부여군 인구현황(2015~2024년) ····· 191
[그림 5-14] 충남 부여군 고령인구비율 및 청년인구비율(2024년 기준) ····· 192
[그림 5-15] 백제문화단지 현황 ····· 200
[그림 5-16]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 관광객 비중(2010~2024년) ····· 201
[그림 5-17] 충남 부여군 분야별 세출현황 및 행사·축제경비 비교 ····· 207
[그림 5-18] 백제문화제 추진 현황 ····· 209
[그림 5-19]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제 기존 주 행사장 ····· 210
[그림 5-20] 백제문화단지로 백제문화제 주행사장 이전 ····· 211
[그림 5-21] 백제문화제 편의서비스 증진(무료셔틀버스 및 지역 맛집 연계) ····· 212
[그림 5-22] 백마강달밤야시장 전경 ····· 213
[그림 5-23] 골목형 백마강달밤야시장 프로그램 ····· 214

[그림 5-24] 공동체 순환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발행 및 이용추이 ····· 215
[그림 5-25]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 216
[그림 5-26] 충남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내 체류시설 ····· 217
[그림 5-27] 추진주체로서 부여군 주요 조직 구성 ····· 219
[그림 5-28] 롯데아울렛부여점 내부와 아울렛 내 입점한 부여향토특산물관 ····· 220
[그림 5-29] 롯데아울렛부여점과 지역상생협력 프로그램 ····· 221
[그림 5-30] 롯데아울렛부여점 별빛정원 ····· 221
[그림 5-31] 전북 고창군 위치 ····· 222
[그림 5-32] 최근 10년간 전북 고창군 인구현황(2015~2024년) ····· 223
[그림 5-33] 전북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좌),
체류형 주택(우) ····· 234
[그림 5-34]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전경 ····· 237
[그림 5-35]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워케이션 센터 개소식(좌),
워케이션오피스 예약창(우) ····· 238
[그림 5-36] 경북 안동시 위치 ····· 241
[그림 5-37] 최근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현황(2015~2024년) ····· 242
[그림 5-38] 경북 안동시 고령인구비율 및 청년인구비율(2024년 기준) ····· 243
[그림 5-39] 경북도청 이전지 위치도 ····· 250
[그림 5-40] 경상북도 내 시군별 산업구조(2021년 기준) ····· 252
[그림 5-41] 2014년 중추도시생활권 지정현황 ····· 253
[그림 5-42]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조감도 및 입지여건 ····· 259
[그림 5-43] 경북 안동시 지역자원 특화한 체류형 관광상품 ····· 261
[그림 5-44] 추진주체로서 안동시의 주요 역할 ····· 263
[그림 5-45] 경북도와 안동시가 공동개최하는 경북 K-스토리페스티벌 ····· 265

[그림 6-1] 무료교통수단 제공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소비 활성화 ····· 282

[그림 6-2] 야간시간대 지역화폐 할인 적용 프로그램 운영 ····· 283
[그림 6-3] 지역브랜드 관리 및 판촉 기획 등을 통한 가치소비 강화 ····· 284
[그림 6-4] 생활인구 소비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편의 제고 ····· 290
[그림 6-5] 지역청년 유출방지를 위한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 291
[그림 6-6] 체류인구 수요를 공략한 맞춤형 전략 마련 ····· 292
[그림 6-7] GRDP의 구성요소 ····· 309

# 1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 론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 수 감소를 넘어, 지역의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정주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고정된 정주인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실질적 경제 기여를 하는 인구를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동인으로 주목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 수단의 확대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분석 프레임 자체의 전환을 수반한다. 즉,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머물며 무엇을 소비하는가'라는 생활인구의 실질적 행태가 경제적 활력의 새로운 설명 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생산 중심 지역경제 성장 이론과 대조된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 정책은 수출 기반 이론(export-base theory)에 근거해, 외부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 활동이 지역 성장의 핵심 원천이라고 간주해왔다(Markusen & Schrock, 2009). 이에 따라 지역 내부의 소비 행위는 부차적 요소로 취급되었으며, 지역경제 내 고용과 산업 구조 역시 수출 관련 생산 활동의 함수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중심 접근은 지역 내 소비 활동의 독립적 역할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누적되었다(Markusen, 2007). 특히 서비스 산업의 확대, 도시화·탈산업화, 관광 수요 증가 등 경제 구조의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 기반 산업이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기반 지역경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Markusen & Schrock(2009)는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자의 소비 행태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분석에 있어 소비 행위의 독립적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Aoyama(2009) 또한 도시경제 분석이 전통적으로 생산 중심으로 치우쳐 소비 활동의 다양성과 경제적 기여를 과소평가해 왔음을 지적하고, 소비 중심 접근이 지역경제의 다차원적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단순한 지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경로를 형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적극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Martin et al., 2019). 이처럼, 지역 내 소비 활동은 더 이상 생산의 파생물이 아닌, 자립적 경제 구성 요소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현실과 밀접하게 맞물려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주인구만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자, 반복 체류자, 등록 외국인 등 다양한 생활인구의 실질적 경제 기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생산 중심에서 소비 기반으로의 이론적 전환은 단지 분석 틀의 전환을 넘어, 지역경제 전략의 실질적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학술적·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정책들은 대체로 관광객이나 정주인구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를 분석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관광객은 계절성과 단발성이 강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이며, 정주인구는 감소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소비 확대의 주체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일시적으로 머무르지만 소비 기여도가 높은 다양한 생활인구 집단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 전략과 주민 중심의 정주 전략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실제 생활인구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구축한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표본조사나 추정치에 기반한 분석과는 차별화된, 신뢰도 높은 데이터 기반 접근

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구 특성, 소비 행태, 지역 간 이동 양상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여 생활인구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단순한 소비 규모 분석을 넘어, 생활인구가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 순환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인구 소비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전환하는 데 실효적인 기반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학문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실제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인구 유형화와 지역별 소비 주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유형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각 지자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부족, 지역 간 전략 차별화 미흡,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 연계 약화 등 여러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실현이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소비 행태와 경제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고유한 자원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인구 유형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유치·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합리화이다. 생활인구 중에서도 장기 체류자, 재방문자, 특정 연령대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세분시장을 선별함으로써, 지자체가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업종별·산업별 투자 방향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전략 수립 시에도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와 체류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체류인구의 다양성과 소비 구조에 주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실제 소비 기반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로 구분하고, 체류인구는 연령, 체류 기간, 체류 목적, 숙박 여부, 방문 빈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출한다.

둘째, 지역별 소비 및 체류 기반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한 생활인구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를 통해, 정책 설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셋째, 도출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해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현행 전략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전략 차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종적인 연구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다.

### 2)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이며, 해당 지역들의 생활인구 소비 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및 체류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로 구분하고, 특히 체류인구에 대해서는 연령대, 체류 기간, 숙박 여부, 재방문 여부, 체류 목적, 체류 요일 등 다양한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인구 집단별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비 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지역별 생활인구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와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을 분석하였다. 셋째, 생활인구의 체류, 소비, 경제적 파급효과 특성에 기반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해 인구감소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유형별로 대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심층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지역 유형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데이터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축·공표한 자료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에,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생활인구 통계는 2023년 2분기(4~6월)를 시작으로 7개 인구감소지역(단양군, 보령시, 철원군, 영암군, 영천시, 고창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되었으며, 2024년 1월 최초로 공표되었다(통계청, 2024c).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자료, 그리고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모바일 통신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산정 대상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1분기(1~3월) 자료가 2024년 7월에 공표되었다(통계청, 2024d). 이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민간 카드사 및 신용정보사 자료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2분기(4~6월)부터는 카드 사용 정보가 본격적으로 추가되어, 생활인구 산정 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데이터 외에 4개 카드사(신한, BC, 삼성, 하나) 및 한국신용정보원(KCB)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통계청, 2024a). 카드 사용 정보는 음식, 숙박, 문화·여가, 개인 서비스, 운송·교통, 보건·의료, 교육, 종합소매, 전문소매, 온라인, 기타 등 11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같은 산정 방식은 2024년 3분기(7~9월) 자료에도 적용되어 2025년 3월에 공표되었으며(통계청, 2025), 현재 2025년 1분기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간 자료에는 1분기 데이터까지 카드 사용 정보가 포함되며, 월별 소비액은 연간 기준으로 누적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1인당 소비액은 연간 누적 소비액을 연간 누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카드 결제액을 카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과다 추정의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전수화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통계청 보도자료의 경우 소비 관련 지표는 전수화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지만, 인구 관련 지표는 전수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계산된 인구 비중은 통계청

보도자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업종 소비 분석 과정에서는 체류인구 4명 이하의 값이 마스킹 처리되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빈도가 낮아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1** 카드 사용 정보의 업종 분류

| 업종 분류 | 예시 | 업종 분류 | 예시 |
|---|---|---|---|
| 음식 |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 교육 | 초중고등 교육기관, 보습학원, 어학학원, 직업 훈련기관, 운전학원 등 |
| 숙박 | 호텔, 코도, 여관, 기타 숙박시설 등 | 종합소매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
| 문화·여가 | 영화관, 사진관, 공연시설, 독서실,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당구장, 볼링장, 유원지, 테마파크, 컴퓨터 게임방, 노래연습장 등 | 전문소매 | 음식료품 소매점, 컴퓨터 통신기기 소매점, 가전제품 전문 소매점, 의복 및 신발 소매점, 가구 및 주방용품 소매점,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점, 오락 및 운동용품 소매점, 화장품 소매점, 안경점, 귀금속 판매점, 꽃집 등 |
| 개인서비스 | 자동차정비, 자동차인테리어, 자동차 세차장, 미용실, 마사지, 사우나, 세탁소, 장례식장, 예식장 등 | 온라인 | 인터넷 쇼핑, PG 가맹점(결제대행) |
| 운송교통 | 항공사,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 여객선, 주차장, 견인 서비스 등 | 기타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판매, 도매업, 여행사, 보험, 통신서비스, 세무서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법무 서비스 등 |
| 보건의료 | 종합병원, 일반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개인 간병, 요양기관 등 | | |

출처: 통계청(2024a)

선행연구 검토 결과(〈표 2-3〉 참고)에 근거하여, 생활인구를 세부 인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할 때 다음 표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1-2** 생활인구 분류 및 조작적 정의

| 구분 | | 정의 |
|---|---|---|
| 생활인구 | 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br>• 체류인구: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br>• 등록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 체류인구 | 연령대 | • 아동·청소년층: 20세 미만<br>• 청년층: 20세 이상 35세 미만<br>• 중장년층: 35세 이상 65세 미만<br>• 고령층: 65세 이상 |
| | 체류 기간 | • 당일: 해당 월에 해당 지역에 1일만 머문 경우<br>• 단기: 해당 월에 해당 지역에 2일 이상 5일 이하 머문 경우<br>• 중기: 해당 월에 해당 지역에 6일 이상 14일 이하 머문 경우<br>• 정기: 해당 월에 해당 지역에 15일 이상 20일 이하 머문 경우<br>• 장기: 해당 월에 해당 지역에 21일 이상 머문 경우 |
| | 재방문 여부 | • 일회성 방문: 당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의 누적 체류일수가 당월 체류일수와 동일한 경우로, 체류 이력이 당월에 한정된 경우<br>• 재방문: 당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의 누적 체류일수가 당월 체류일수보다 큰 경우로, 당월 이전 월에도 동일 지역 체류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 | 숙박 여부 | • 비숙박: 해당 월에 자정을 전후하여 이어지는 연속 체류가 단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경우<br>• 숙박: 해당 월에 자정을 전후하여 이어지는 연속 체류가 한 번 이상 관측된 경우 |
| | 체류 요일 | • 평일: 해당 월에 평일에는 체류가 있으나 휴일에는 체류가 전혀 없는 경우<br>• 휴일: 해당 월에 휴일에는 체류가 있으나 평일에는 체류가 전혀 없는 경우<br>• 평일+휴일: 해당 월에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체류가 있는 경우 |
| | 체류 목적 | • 단기숙박: 해당 월에 연속하여 최소 1박 2일, 최대 4박 5일 범위의 숙박 체류가 존재하는 경우<br>• 통근·통학: 해당 월에 평일 기준으로 최소 15일 동안 체류가 확인되고, 숙박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br>• 장기 실거주: 해당 월의 총 체류일수가 21일 이상이며, 숙박이 하루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출처: 연구진 작성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소비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역 간 특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① 이론 및 연구동향 검토 → ② 지자체 계획 분석 → ③ 생활인구 소비 특성 분석 → ④ 지역 유형화 및 사례분석 →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비 중심의 지역경제 이론, 생활인구 개념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국내 생활인구·체류인구 관련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 검토는 생활인구 소비가 지역 내 수요를 재편하고 경제 순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의 기본 전제를 뒷받침하며, 이후 장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기반 분석의 개념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전수 분석하였다. 각 시군구가 생활인구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비전, 전략, 세부 추진 방향, 개별 사업 목록을 검토하였고, 이 중 생활인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선별하였다. 각 사업은 '인

구 유형', '전략 방향', '주요 방식', '추정 타깃 생활인구'의 네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전략의 초점과 대상을 파악하고, 현행 생활인구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구축한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소비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인구, 공간, 시간 세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분석 결과는 이후 수행된 지역 유형화 단계에서 '왜 특정 지역이 해당 유형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해석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규모 및 소비 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을 구분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 유형화에 사용될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와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을 계산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을 네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 및 특성 분석을 통해 각 군집을 대표하는 소비 주체와 그 행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유형화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유형의 소비 구조가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대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심층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과 유형화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인구 소비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형별로 도출된 소비 구조의 특징과 주요 소비 주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의 위상과 경제전략의 전환

**제1절** 지역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2절** 인구감소시대 인구정책 변화와 연구 동향
**제3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현황
**제4절**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의 위상과 경제전략의 전환

## 제1절 • 지역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 1. 소비 중심 접근의 부상

지역경제 성장 논의에서 생산과 수출 중심의 관점이 오랫동안 주류를 형성해온 이유는, 지역과 외부의 교환관계에서 창출되는 수입이 지역경제의 규모와 확장을 결정한다는 오랜 경제지리·지역과학의 기본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Porter(2003)가 강조하듯, 지역 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 수준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지역이 보유한 교역 산업(traded industries), 즉 외부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의 경쟁력이다. 이들 산업이 외부에서 소득을 유입시키고, 그 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소비·투자·서비스 수요를 자극하면서 연쇄적 성장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경제활동을 '대외 수요 확보 → 지역 소득 증가 → 내수 부문의 파급효과'라는 선형 구조로 모델링하기에 정책적으로도 단순하고 매력적이었다.

Markusen & Schrock(2009)이 지적하듯, 이 전통은 지역경제를 생산기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했다. 생산 활동—특히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지역 성장의 근본 동력이라는 가정이 널리 확산되면서, 지역 간 차이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외부 판매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가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었고, 지역경제 전략은 필연적으로 '수출 가능한 산업 유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Cochrane & Poot(2014)의 정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왜 견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전통적 경제기반 모델이 외생적 수요(수출)를 성장의 핵심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단순하고 정책적으로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 즉, 외부시장의 확대가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확실한 인과 구조가 제공되었고, 지역 내 소비·서비스 부문은 승수효과의 2차·3차적 결과로만 이해되었다. 지역의 성장 메커니즘을 생산·수출 부문에 집중시키는 이런 발상은 '내생적 수요', 즉 지역 주민

의 소비, 지역 서비스업, 순환적 지출 구조 등 수요 측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 단순성과 정책적 실행 용이성 덕분에 오랜 기간 주류적 위치를 유지했다.

전통적 생산·수출 중심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론적 비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구조적 전환에 기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 확대가 지역의 고용·소득 증가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모델의 핵심 가정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지역 사례에서 수출은 늘었지만 일자리나 임금은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외부 수요 → 내부 성장"이라는 선형적 인과 구조가 경험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Markusen(2007)은 이러한 괴리를 지적하며, 수출 기반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외부 판매 증가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고, 전통적 경제기반 모형이 전제한 승수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은 Kay et al.(2007)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기존 수출 중심 접근이 지역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산업연관 분석(Input-Output analysis, I-O)을 확장한 가상 추출(Hypothetical Extraction, HE) 분석 결과, 서비스업은 지역 내에서 강한 전방·후방 연계효과를 가지며, 특정 서비스업 부문은 수출 부문보다도 더 큰 총산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ay et al.(2007)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 내부 소비와 서비스업 기반이 지역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기존 모델은 이를 주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돌봄·헬스케어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Markusen(2007)이 강조한 바처럼, 지역 주민의 일상적 소비가 지역경제의 고용·소득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외부 수요가 지역경제 규모를 결정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부 소비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출 기반만으로 지역경제를 설명하는 모델은 현재의 구조적 변화와 실증적 사실을 설명하기에 점점 더 부적절해지고 있다. 수출 증가가 성장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험적 증거,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소비행태 변화, 지역 내 지출의 승수효

과 강화는 기존 공급 중심 패러다임이 가진 단선적·외생적 성장 논리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역 내부의 수요 구조와 소비 기반을 중심에 둔 보다 내생적인 지역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2. 지역경제에 대한 소비 중심 접근의 이론적 기반

소비 중심 접근의 첫 번째 명제는 경제의 성장 속도가 공급 능력이 아니라 총수요가 허용하는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생산·투자·기술혁신은 수요 변화에 대한 결과적 반응이며, 수요 확대가 없다면 어떤 지역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Smith(2012)는 거시경제의 장기 성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성장의 제약 요인은 생산 능력이 아니라 총수요의 흡수 능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조차도 '확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촉발되는 과정'이며, 경제는 본질적으로 '수요가 허용하는 만큼 성장한다'고 강조한다.

소비 중심 접근 방식이 지역경제에 적용될 때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 성장의 기반을 외부 수요(수출 등)에만 두어온 전통적 모델과 달리, 지역 내부 수요(local consumption base) 역시 성장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은 수출, 공공지출, 이전소득 등 외생적 수요로 간주되었지만, Markusen & Schrock(2009)은 지역 주민의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도 일정한 수준의 고용과 안정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지역경제가 외부 수요에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는 기존 경제기반 모형을 보완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local-serving activities)은 가계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성장하거나 위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수출 기반 확대 없이도 지역 고용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Kay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소비 중심 접근의 두 번째 명제는 소비가 생산 활동의 부차적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조와 공간을 재편하는 핵심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Aoyama(2009)는 현대 도시경제에서 소비가 단순한 지출 행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 경제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녀는 소비의 문화적·상징적 차원이 도시 공간과 산업을 형성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변화하는 소비 선호가 도시의 경제적 풍경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실제로 Aoyama(2009)는 소비가 도시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교외화·도심 재활성화·젠트리피케이션 등 주요 도시 변화의 배후에는 새로운 소비 방식

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소비 기반의 파급효과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제로도 이어진다. 특정 지역에서 문화·여가 소비가 증가하면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교육서비스, 출판 등 다양한 로컬 산업군의 확대가 뒤따를 수 있다. 지역 문화·엔터테인먼트 기회가 늘어날수록 주민의 지출이 외부 여행이나 수입품 구매에서 지역 내부 지출로 전환되고, 이는 지역 고용 및 소득의 승수효과를 확대한다. 특히 공연예술, 보건·헬스케어, 교육 등 노동집약적 소비활동은 상대적으로 강한 승수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는 지역경제의 내적 순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소비 중심 접근의 세 번째 명제는 지역 내부 소비 기반(local consumption base)이 독립적 성장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Markusen & Schrock(2009)은 지역 주민의 취향과 생활양식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수출 기반이 확대되지 않아도 지역 내 일자리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보건의료 지원, 교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예술 활동처럼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일수록 지역 간 편중도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이 아니라 지역 소비 기반의 크기와 성격이 산업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성장의 촉매로 작동하는 또 다른 경로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승수효과다. 문화·예술·돌봄·헬스케어·교육 등은 지역 주민의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되며 다층적인 고용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지역 공연예술 활동에 지출된 비용은 예술인의 소득이 되어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이 연쇄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러한 활동일수록 외주화나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수출 산업보다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Kay et al., 2007).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비, 즉 관광도 지역 내부 소비 기반 확대의 한 축이다. 다양한 연구(Bohlin et al., 2016; Lin et al., 2019; Nunkoo et al., 2020)에서 관광 지출이 지역 소득과 고용에 긍정적 승수효과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방문객 지출은 지역의 숙박·식음료·교통·문화활동 등 넓은 범위의 로컬 경제활동을 자극하며, 수출 기반이 미약한 지역일수록 외부 소비의 유입이 독자적 성장 기반으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

# 제2절 • 인구감소시대 인구정책 변화와 연구 동향

## 1. 생활인구 개념 등장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 중심 통계가 지역 내 실제 경제·사회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인구층, 즉 거주지는 외부에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며 활동하는 인구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정주인구 외에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나 활동을 이어가는 인구를 포괄하여, 보다 현실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통근·통학, 관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반복적 체류가 이루어지는 인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생활인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민, ②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자,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로 구성된다(통계청, 2024d). 이러한 구성은 지역 내에서 경제·사회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구층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의 관계인구(関係人口)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갖는다. 일본은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이 지역 활성화에 한계를 보인다는 인식 아래, 지역 외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구를 정책적으로 포섭해 왔다. 한국의 생활인구 개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양한 체류형 인구의 기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국내외적으로도 유사한 대안적 인구 개념들이 존재해 왔다(안소현 외, 2023).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유동인구, 주간인구, 서울 생활인구, 부산 서비스인구 등의 개념이 정책과 연구에 활용되어 왔고, 해외에서는 임시인구(temporary population)나 관계인구(関係人口) 등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개념은 모두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생활인구는 그중에서도 법적 정의와 측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제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라는 기준은 정책적 적용과 통계 측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1** 주민등록인구 외의 대안적 인구 개념

| 구분 | 개념 | 내용 |
|---|---|---|
| 국내 | 주간인구 | - 해당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를 뺀 인구 |
| | 서울 생활인구 | -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
| | 부산 서비스인구 | - 상주인구를 비롯하여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부산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
| | 제주 생활인구 | - 제주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친 인구 |
| | 전북 체류인구 | -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 |
| | 전남 관계인구 | -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 지역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 |
| 국외 | 관계인구 | - 지역과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 | 임시인구 | -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1박 이상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거주지에서 최소 1박 이상 떠나는 일시적 이동) |

출처: 안소현 외(2023)의 〈표 2-1〉

정부는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서는 생활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다양한 생활인구 정책을 전개 중이다. 예컨대 행정안전부는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유입 전략을 추

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도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표 2-2**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정책

| 사업명 | 소관 | 기간 | 내용 |
|---|---|---|---|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 | 행정안전부 | 2024년~계속 | - 인구감소지역 월별 생활인구를 분기별로 산정·공표<br>-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 대한 특성 분석 |
| 청년마을 만들기 | 행정안전부 | 2018년~계속 | - 청년마을 조성 사업비 지원<br>-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br>-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기업·대학 연계, 정책 홍보 등 활성화 지원 |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행정안전부 | 2023년~계속 | -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
| 접경지역 체류 여행 | 행정안전부 | 2019~2027년 | - 테마형 접경지역 거점, 평화빌리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등 조성 |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 | 2023~2026년 | - 생활권 단위로 매력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 강점·특색을 강화하는 사업<br>- 지자체 대상 기획 및 특화인프라 확대 지원 |
| 고향올래 (GO鄕All來) | 행정안전부 | 2023~2025년 | - 워케이션(업무+휴양), 런케이션(배움+휴양), 로컬벤처(지역 창업), 로컬유학(가족 단위 장기 체류), 두지역살이 등 지자체 사업 지원 |
| 로컬100 |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계속 | -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br>- 로컬100 홍보, 지역방문 캠페인 등 추진 |
|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계속 | - 해당 지역 여행 시 숙박, 식음, 관광, 체험, 쇼핑 등 영역의 할인 혜택 제공 |
| 고령·장애인 관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계속 | - 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br>- 무장애 관광정보 발굴 및 여행코스 개발<br>-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 교육, 나눔여행 지원 |
| 관광거점도시 | 문화체육관광부 | 2020~2025년 | -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국 5개 도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

| 사업명 | 소관 | 기간 | 내용 |
|---|---|---|---|
| 광역관광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계속 | -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 걷기여행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계속 | - 코리아둘레길 관리,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육성 |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계속 | - (예비)귀농·귀촌인, 청년농 대상 탐색, 준비, 실행, 정착 단계별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 |
| 농촌관계인구 형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 - 농촌 워케이션 이용 직장인 대상 활동비 지원<br>- 농촌일손여행 참가자 모집 및 체험비 지원 |
|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확산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2002년~계속 | -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 특화 교육 프로그램, 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
| 귀어귀촌 활성화 | 해양수산부 | 2015년~계속 | - 귀어귀촌에 필요한 상담, 교육, 거주지, 정착금 지원 |
|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조성 | 해양수산부 | 2015년~계속 | -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조성(리모델링) 지원<br>- 표준 관리 매뉴얼 배포,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해양관광육성-전국해양스포츠제전 | 해양수산부 | 2025~2027년 | -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회 개최 |
| 지역특화형 비자 | 법무부 | 2025년~계속 | -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체류 특례 부여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 법무부 | 2009년~계속 | - 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기본소양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확대 | 고용노동부 | 2004년~계속 |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
| 국가무형유산 지역기반 종목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 국가유산청 | 2025년 |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의 전승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br>- 전시·공연·행사 개최 지원 |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 국가유산청 | 2008년~계속 | - 국가유산의 의미 및 가치를 활용해 교육, 공연, 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프로그램 지원 |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이처럼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정책이 지역 내 실제 생활 수요나 경제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며 소비, 이동, 서비스 이용 등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인구를 정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제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인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생활인구 구성과 소비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체류 여건 개선, 소비 활성화 전략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2. 생활인구 유형화 연구 동향

### 1) 생활인구 유형화에 대한 주요 접근법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인구 유형화 방식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생활인구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인구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인구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구 유형, 성별, 연령, 소비액 등과 같은 인구적 특성 변수뿐만 아니라, 체류일수, 재방문 여부, 체류 요일, 체류 시간, 체류 시간대, 숙박 여부, 등록지역 등의 체류 특성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다차원적 변수 분석을 통해 생활인구의 규모와 분포뿐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패턴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두 번째 흐름은 단순한 특성 분석을 넘어, 체류인구의 활동 목적을 추론하고 생활인구를 의미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예컨대, 김필·전대욱·김해솔(2023)의 연구는 체류기간과 방문 목적을 결합하여 생활인구를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류 목적에 따라 생활인구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안소현 외(2023) 역시 체류기간과 연령을 결합한 분석 틀을 제안하여,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를 통근 인구(20일 이상 체류, 30대 이상)와 통

학 인구(20일 이상 체류, 25세 미만)로 구분함으로써, 생활인구의 기능적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윤소연 외(2023)의 연구는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의 주요 활동 목적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분석 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형 생활인구(1~2일 체류)는 주로 관광, 출장, 쇼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로 간주되며, 중기형 생활인구(3~10일 체류)는 정기 업무 방문자, 휴양·요양 인구 등 일정 기간 머무르는 인구를 포함한다. 정기형 생활인구(11~20일 체류)는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하는 인구로 해석되고, 장기형 생활인구(21일 이상 체류)는 주민등록지는 다른 지역에 있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사실상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실질적 체류인구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등록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 외국인 등 상시 거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통계청(2025)은 생활인구 분석에 있어 숙박일 수, 체류일 수, 재방문 여부 등을 활용하여 체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추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단기숙박 체류인구, 통근·통학 체류인구,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로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류 방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한 달 동안 4박 이하로 연속 숙박하고 해당 월 내 재방문하지 않은 인구, 통근·통학 체류인구는 평일 기준 한 달 동안 15일 이상 숙박 없이 반복적으로 체류한 인구,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한 달 기준 21일 이상 체류하고 숙박 경험이 있는 인구로 정의된다.

**표 2-3** 생활인구 유형화 연구에서 활용된 지표 종합

| 구분 | 변수 | 변수의 수준 | 관련연구 |
|---|---|---|---|
| 생활인구 공통 특성 | 인구 유형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체류인구 | 통계청(2024a; 2024c; 2024d), 이원도·윤소연(2024) |
| | | 외지인 체류인구,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거주 외국인 | 이원도·윤소연(2023) |
| | | 주민등록인구, 외지인 체류인구 | 이원도·이소영·홍근석(2023) |
| | 성 | 여자, 남자 | 통계청(2024a; 2024c; 2024d) |
| | 연령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통계청(2024a; 2024c; 2024d) |
| | |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이원도·이소영·홍근석(2023), 윤소연 외(2025) |

| 구분 | 변수 | 변수의 수준 | 관련연구 |
|---|---|---|---|
| | 소비액 | 전체 카드 사용액 | 통계청(2024a), 윤소연 외(2025) |
| | | 업종별 카드 사용액 | 통계청(2024a), 윤소연 외(2025) |
| 체류 인구 특성 | 체류 일수 | 1~30일 | 통계청(2024a; 2024c; 2024d) |
| | | 1일, 2~7일, 8일 이상 | 통계청(2024a; 2024c; 2024d), 이원도·윤소연(2024) |
| | | 평균 체류일수 | 윤소연 외(2025) |
| | 재방문 여부 | 해당 월 체류인구 중 직전 2개월 내 체류한 인구 여부 | 통계청(2024d), 윤소연 외(2025) |
| | 체류 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이원도·김주락(2024) |
| | | 주중, 주말 | 통계청(2024a; 2024c; 2024d), 이원도·윤소연(2023), 윤소연 외(2025) |
| | | 평일, 휴일 | 통계청(2024d) |
| | 체류 시간 | 평균 체류시간 | 통계청(2024d), 이원도·윤소연(2024), 윤소연 외(2025) |
| | 체류 시간대 | 00~24시 한 시간 단위 | 이원도·윤소연(2023) |
| | | 새벽, 아침, 점심, 저녁 | 이원도·윤소연(2023) |
| | 숙박 | 당일 야간(19:00~24:00) 체류 및 익일 심야(00:00~06:59) 체류한 인구 여부 | 통계청(2024a; 2024c; 2024d) |
| | | 당일 숙박, 2~3일, 4~20일, 21일 이상 | 이원도·윤소연(2024) |
| | | 평균 숙박일수 | 윤소연 외(2025) |
| | 등록 지역 | 거주하는 시도 | 통계청(2024a; 2024c; 2024d), 이원도·윤소연(2023), 이원도·김주락(2024), 이원도·윤소연(2024), 윤소연 외(2025) |
| | 체류 목적 | 통근(20일 이상 체류, 30대 이상), 통학(20일 이상 체류, 25세 미만) | 안소현 외(2023) |
| | | 관광·출장·쇼핑(1~2일), 업무·생활(3~10일), 통근·통학(11~20일), 실질 거주(21일 이상) | 윤소연 외(2023) |
| | |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실거주 | 통계청(2025) |

출처: 연구진 작성

### 2) 생활인구 유형화와 관련된 개별 선행연구 검토

생활인구 통계 산출은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통계청 공식 보도자료(2024c, 2024d, 2024a, 2025)는 생활인구 유형화와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구분하여 성별, 연령대, 체류일수(1~30일 또는 1일·2~7일·8일 이상), 숙박 여부, 요일(주말·주중) 등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통계청, 2024c). 이후에는 체류시간(평균 체류시간), 휴일 체류 여부, 재방문 여부, 숙박형 체류인구 여부 등 분석이 추가되었다(통계청, 2024d). 최근에는 카드 사용액과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통계청, 2024a).

통계청(2025)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분석 기준을 유지하되 등록지 유형(동일 시도, 인접 시도, 비인접 시도), 유출인구, 유입인구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체류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져, 단기숙박 체류인구(한 달 동안 4박 이하로 연속 숙박하고 같은 달에 재방문하지 않은 사람), 통근·통학 체류인구(한 달 동안 평일 15일 이상 숙박하지 않고 체류한 사람),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한 달 동안 21일 이상 체류하며 숙박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유형화가 시도되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생활인구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필·전대욱·김해솔(2023)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초단기 유동인구(통근·통학자, 쇼핑·의료·문화·종교 목적 방문자), 단기 체류자(1주일 이내), 중·장기 체류자(학생·직장인·군인·정기 방문자·휴양·요양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취업자, 관광객)로 생활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에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사례로,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소현 외(2023)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서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유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에서는 체류인구 비중, 외국인·재외동포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체류인구 비중 높은 지역, 외국인 비중 높은 지역, 주민등록인구 감소율 높은 지역)과, 체류 목적별 유형화(통근, 통학, 단기 방문, 장기 방문)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소연 외(2023)는 체류일수를 중심으로 단기형(1~2일), 중기형(3~10일), 정기형

(11~20일), 장기형(21일 이상), 등록 생활인구로 생활인구를 구분하고, 체류 목적(관광, 출장, 업무, 통근·통학, 상시 거주)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원도·윤소연(2023)은 생활인구 유형을 외지인 체류인구, 단기 체류 외국인,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거주지역, 체류 시간대(00~24시), 주중·주말 체류 패턴을 분석하여 지역별 체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원도·이소영·홍근석(2023)과 이원도·김주락(2024)의 연구에서도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와 외지인 체류인구로 구분하고, 연령대(20세 미만부터 70세 이상), 요일별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생활인구의 구조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소연 외(2025)는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인구 구성, 성별·연령별 특성, 체류 기간, 소비 행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재방문 인구를 별도로 분석하여 생활인구의 지속성까지 고려한 고도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 제3절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현황

본 절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분석하여,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설정한 전략의 방향, 주요 수단, 추정 대상 인구 집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전략을 어떤 구조와 논리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적 진단을 통해 계획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각 시군구가 수립한 대응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세부 추진 방향, 개별 사업 목록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중 생활인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을 선별하였다. 분석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사업은 '인구 유형 분류', '전략 방향', '주요 방식', '추정 타깃 생활인구'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조화하였다. 인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략 방향은 각 인구 유형에 대해 생활인구 확대 또는 유입 유도를 위한 정책의 전반적인 지향점을 요약하였다. 주요 방식은 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의 유형과 수단을 정리하고, 추정 타깃 생활인구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는 인구 집단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 전략을 어떤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춰 수립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유사한 전략 방향을 가진 지역들 간의 유형화를 정성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 수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에 주목하여, 현행 전략이 생활인구 특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 1.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공통 전략

본 연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통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 지역들은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이라는 세 가지 인구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유형 내에서도 연령대, 체류 목적, 거주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주민등록인구 대상 전략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가족 단위 전입 촉진,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 유도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전략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유입 및 정착 지원은 모든 지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전략이다. 청년은 인구유지의 핵심 연령대인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지탱할 인적 기반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들을 위한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거창군은 '거창한 청년집'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영천시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청년창업센터 설립, 로컬 기반 창업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청군은 스마트농업 기반의 곶감 유통 플랫폼과 연계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을 연결하고 있다.

보육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또한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형성하고자 출산·보육·교육 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화천군은 온종일 초등 돌봄체계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보육·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도시 가족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교육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수군의 '장수일 써머 챌린지'는 가족 단위 체류를 유도하는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한 정책 방향이다. 특히 기존 주민의 지속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주거환경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삼척시의 새뜰마을사업과 스마트 돌봄 서비스 연계 정비사업은 고령자 중심의 맞춤형 정주환경 개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평창군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도 고령자 중심의 보건 돌봄 서비스 확장의 좋은 예다.

또한, 일자리 기반 확대 및 정착 인센티브 강화는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한 인구 이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산업 특화형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며, 특히 농어업 중심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창업 지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집중 추진되고 있다. 괴산군, 보은군, 고흥군은 이러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농 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성군은 청년 스마트팜 단지를, 김제시는 종자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표 2-4**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상 전략

| 전략 | 주요 대상 | 핵심 정책 수단 | 대표 사례 |
|---|---|---|---|
| 청년 및 신혼부부 유입 및 정착 지원 | 청년층, 신혼부부 |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 청년 커뮤니티 공간 | 거창군 '거창한 청년집', 산청군 스마트농업 창업 |
|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 | 청년가구, 자녀동반가족 | 공공보육시설, 교육체험, 작은학교 연계 | 화천군 온종일 돌봄, 장수군 '써머 챌린지' |
| 주거환경 정비 | 고령층, 기존 주민 | 빈집 리모델링, 생활인프라 개선, 돌봄서비스 | 삼척시 새뜰마을, 평창군 디지털헬스케어 |
| 일자리 창출 | 청년층, 중장년층 |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업 인큐베이팅 | 김제시 종자산업, 보성군 스마트팜 |

출처: 연구진 작성

### 2) 체류인구 대상 전략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체류인구 유입 전략을 기존의 단기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체류 가능성과 정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워케이션 프로그램, 관계인구 육성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여기에 숙박 및 커뮤니티 기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여 체류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는 체류인구 전략의 중심축을 이룬다. 대다수의 지역은 자연환경, 생태자원, 고유의 문화·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해 체류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괴산군은 치유·힐링·트레킹이 결합된 웰니스 산업과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전지훈련센터, 레포츠 기반 인프라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워케이션과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역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원격근무자 등 다양한 계층을 주요 대상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과 커뮤니티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선군은 '정선이 살아보기', '은빛 지역활력타운', '귀농·귀촌 워케이션' 등을 통해 청년층과 은퇴 세대 모두를 포용하며, 단양군은 트리하우스 숙박시설과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로컬 워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경험을 축적한 후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계인구 유입 확대 전략도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체험마을', '농촌유학', '한 달 살아보기'와 같은 탐색형 체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공주시와 청양군은 빈집 활용 실험 주거 프로그램을, 영월군은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 시간 확장 전략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미식 자원을 활용하여 감성 소비층을 겨냥한 축제형 콘텐츠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과 워케이션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공주시는 '공주미식학교', '야간문화야행',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을 운영하며 지역 브랜드화를 강화하고 있고, 부여군은 백제문화 기반의 디지털 테마파크와 체험형 마을 콘텐츠를 통해 장기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레저 시설과 숙박 인프라 확충은 관광을 넘어 장기 체류인구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캠핑장, 파크골프장, 산악레포츠 시설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속 체류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태백시는 종합 스포츠 클러스터와 고원 캠핑장을 중심으로 한 체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한옥마을과 해양레저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대 간 구분 없는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2-5**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대상 전략

| 전략 | 주요 대상 | 핵심 정책 수단 | 대표 사례 |
|---|---|---|---|
| 체험형 관광 활성화 | 일반 관광객 | 생태·치유·역사·문화자원 활용 테마형 관광지 조성 | 괴산군(웰니스+생태탐방), 장흥군(산림치유+레포츠) |
| 워케이션 및 장기 체류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원격근무자 | 워케이션 숙박공간, 공유오피스, 한 달 살기, 체험형 커뮤니티 조성 | 정선군(정선이 살아보기, 지역활력타운), 단양군(트리하우스+자연휴양림) |
| 관계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탐색 프로그램 |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 가족 단위 이주 희망자 | 귀농·귀촌 체험마을, 농촌유학, 빈집공유 플랫폼, 실험적 주거공간 제공 | 공주시·청양군(빈집 활용 '한 달 살기'), 영월군(가족체류형 귀농학교) |
| 문화·예술·축제 콘텐츠 활용 | 문화·예술 관심층 | 지역 전통문화, 미식, 축제 콘텐츠 연계 장기 체류 유도 | 공주시(공주미식학교, 문화야행), 부여군(백제 테마파크, 체험마을) |
| 스포츠·레저 및 숙박 인프라 확충 | 레저 활동 희망자 | 캠핑장, 파크골프장, 해양레저시설, 종합체육센터 등 기반 시설 조성 | 태백시(스포츠 클러스터+캠핑장), 고성군(한옥마을+해양레저 복합화) |

출처: 연구진 작성

### 3) 등록외국인 대상 전략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에서는 내국인 중심의 정주인구 유입 전략뿐 아니라, 등록외국인을 생활인구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업, 제조업, 복지 등 기초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이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외국인을 필수 노동력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계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농업 및 지역 산업 연계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및 농업 전문 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제조업과 수산업 분야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홍천군, 신안군, 영양군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기숙사 조성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숙소 제공, 완도군, 부안군, 해남군은 해양수산업 중심의 계절근로자 도입과 함께 문화시설 및 정주 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통합 촉진 전략도 다수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언어,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요소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청양군, 함양군, 고흥군, 괴산군 등은 외국인 대상 주거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영암군, 보성군, 청도군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와 다문화 복지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기초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논산시, 예산군, 공주시 등은 가족 동반 체류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정책 수용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외국인을 일시적 인력이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 2-6**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외국인 대상 전략

| 전략 | 주요 대상 | 핵심 정책 수단 | 대표 사례 |
|---|---|---|---|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 농업·수산업·제조업 인력 | 계절근로자 유치, 기숙사·숙소 조성, 비자 전환 | 홍천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
| 정착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통합 | 외국인 근로자, 가족 동반 체류자 | 외국인 주거단지, 주민지원센터, 다문화복지시설 | 청양군, 고흥군, 영암군, 논산시 |
| 지역특화 비자 및 장기 체류 유도 | 유학생, 중장기 체류 외국인 | 비자 전환 제도, 언어·취업 교육 | 괴산군, 남원시, 안동시 |
|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지원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커뮤니티 센터, 통합 프로그램 | 단양군, 보은군, 담양군, 남해군 |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나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장기 체류와 정주를 유도하고 있다. 괴산군, 남원시, 안동시는 유학생 비자를 정착형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된 언어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지역 고령화 대응 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확대 전략은 등록외국인 중에서도 실질적인 정주 주체로 부각되는 계층을 겨냥한 접근이다. 단양군, 보은군,

화순군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서비스, 취업소양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담양군, 남해군 등은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지역 주민과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2.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생활인구 유입 전략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청년층 유입 및 정착, 보육과 정주 여건 개선, 체험형 관광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획일화된 접근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리적·산업적·사회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를 타깃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정체성과 기능을 분석해, 보다 차별화된 인구 유입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1)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정주 유도 전략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지역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을 장기 체류인구 또는 전입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체류주민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군 장병 및 가족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적 실험을 펼치고 있다. 철원군은 '군인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전개하며, 군인가족이 단순 방문자 또는 임시 체류자가 아닌 정착 가능한 생활인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군생활 기반의 주거안정 지원(주택 설계비 및 수리비 지원), 그리고 군 장병 및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군인과 가족이 지역 내에서 '일상'을 경험하고, 장기 체류 또는 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철원군과 유사하게, 인접한 화천군 역시 군부대 관련 인구를 정주 가능성 있는 체류인구로 전환하고자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천군은 '한번 살아봐 화천'이라는 명칭의 살아보기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 장병과 가족이 지역의 환

경과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장기 거주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화천군은 군과 민간 사이의 정서적·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인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통해 군 장병과 지역 청년 간의 교류, 군인가족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체류형 관계인구 확대를 넘어, 지역의 청년 신규정착자로 군 관련 인구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철원군과 화천군의 사례는 '군 장병 및 가족'이라는 매우 특정한 대상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병역 시스템이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연결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이들은 전통적인 귀농·귀촌이나 청년 창업 중심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지역에 일정 시간 체류하고 있는 집단을 정착 가능한 인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체류→관계→정주'라는 인구 유입 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군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향후 타 군사시설 밀집 지역에도 정책적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 인력 유입 전략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 바이오, 종자, 백신, 농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고학력 및 기술 전문 인력을 주요 유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산업기반과 연계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인재 양성과 돌봄환경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원자력 분야 특화대학 유치 및 마린보이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가족 단위 정주 유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구조다.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미래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제시는 '생애주기 맞춤형 도시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종자산업 클러스터, 청년창업 앵커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집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청년 창업가, 기술 기반 영농 인구, 귀농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등 농업 첨단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유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홍천군은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K-Bio 기업 유치 및 청년농업인 스마트촌 창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 또한 함께 추진되며, 이는 창업 초기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 기술 인력의 정착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전략이다. 바이오 산업 중심의 도시전환을 도모하면서, 산업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화순군은 '청년 일자리 및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하에 화순생물의약 제2산단 조성,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사업 연계 복합정주시설 및 기숙사 건립을 통해 단기 산업체 근로자는 물론, 바이오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체류→정주 전환 전략을 운영 중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산업과 도시 기능의 동시 확장을 꾀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지자체는 단순히 일자리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유출되는 청년층을 지역에 붙잡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 환경, 정주할 수 있는 직업적 비전을 지역 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 기반 위에 설계된 청년 유입 구조는 단기적인 인구 대응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3) 디지털노마드 및 창작자 유치 전략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청년 창업, 귀농·귀촌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콘텐츠 창작자,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청년층 등 유연한 삶과 노동 양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인구를 타깃으로 한 유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예술, 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등 창의산업과 지역 자산을 결합해, 기존의 '생계 기반 정착'이 아닌 '창작 기반 체류 및 정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주군은 '지역인재 양성 및 문화 체류인구 유입'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 융복합 문화공간을 포함한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주된 타깃은 지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문화예술 체험 관광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머물

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창작 활동에 적합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전통적인 정주인구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양구군은 '체류주민 확보' 전략 하에 스포츠 유학센터와 양구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외부 청년층과 체험형 청년살이 참가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포츠 보드게임 복합센터와 연계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유튜브 방송 시스템 도입 등 콘텐츠 제작 기반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도다. 이는 창작 기반 노동을 수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 청년 기술인을 위한 생활-업무 융합형 정주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년 레지던스와 콘텐츠 창작 공간이 결합된 이 전략은 지역 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동시에 체류형 정착 기반 강화라는 이중의 목표를 지닌다.

장성군은 '관광·힐링·레저 기반 체류형 인구 유치' 전략을 바탕으로, 장성호 워케이션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특히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장인, 디지털노마드를 주요 유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 관광을 넘어 장기 체류 및 지역 정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더불어, 주간활동 인구 정착 지원, 청년 커뮤니티 조성, 로컬기반 미식관광 창업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되며, 창작자 및 프리랜서 등 다양한 자기고용 계층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삶의 방식과 일의 방식이 변화한 계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창작 생태계,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자원, 워케이션과 관광을 결합한 이들 전략은 유연한 정주 모델을 모색하는 다른 지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지역은 기존의 '일자리-주거-보육' 중심 정착 전략이 포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구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내부의 사회·문화적 다양성도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인구정책의 대상 다변화와 정주유형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3.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한계와 개선 과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구조의 지속적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다양한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수립해왔다. 대부분의 지역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 관광을 통

한 체류인구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수용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주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머무른 사람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를 위해 주거 인프라, 복지 서비스, 창업 공간, 문화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활인구 정착 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표 2-7**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한계와 개선 과제

| 구분 | 주요 한계 | 개선 과제 |
|---|---|---|
| 생활인구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전략 수립 | – 정량적 생활인구 분석 없이 전략 수립<br>– 체류 유형, 시간대, 소비 특성 등 세부 정보 반영 부족<br>– 지자체의 데이터 접근성 낮음 | – 중앙정부가 활용 가능한 집계표 제공 및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br>–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필요 |
| 모든 생활인구 유형을 포괄하는 확장 전략 수립 | –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모두를 늘리겠다는 포괄적 전략 수립<br>–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 부족 | – 핵심 타깃 인구 설정 유도<br>–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정책 설계 환경 조성<br>– 인센티브 구조 차등화 |
|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지역 간 차별화 부족 | – 유사한 틀의 전략 반복<br>–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전략 설계 부족 | – 전략 수립 시 지역 특성 진단 도구와 차별화된 설계 프레임 제공<br>– 지역 간 전략 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 연계 부족 | – 정주인구 중심 전략이 다수를 구성하나, 국가적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실효성 부족<br>– 생활인구 유입 전략 제시 시 소비 활동과 연계 미흡 | – 체류인구의 소비와 경제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 설계<br>– 소비 여력 높은 인구 유형에 대한 타깃 설정 필요 |

출처: 연구진 작성

그러나 실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간 계획이 유사하고 전략 구성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표현과 사업명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략의 핵심 방향은 대체로 '청년 유입', '체험형 관광', '귀농·귀촌 활성화', '외국인 노동력 정주화' 등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이나 생활인구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틀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생활인구 유입 전략 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

### 1) 생활인구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전략 수립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대부분의 기본계획은,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생활인구 분석 없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등록 인구와 달리,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비정주인구를 포함하는 유연한 개념으로, 시간대별 유동량, 방문 목적, 체류 유형, 소비 행태 등 다층적인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유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구조와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대부분 생활인구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기 이전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집·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던 시점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략 설계에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기술적 제약이 존재했다. 그 결과, 다수의 계획이 실제 생활인구의 유입 패턴이나 체류 시간, 소비 성향, 재방문 가능성 등과 같은 실질적 정보 없이, 일반화된 유입 모델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수립된 사례가 적지 않다.

생활인구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타깃 설정과 전략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생활인구 데이터는 가명정보 결합 기반의 민감한 자료로 분류되어, 일부 지정된 분석기관 외에는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와 통계 생산기관인 통계청은 생활인구 데이터를 지자체가 전략 수립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집계표를 상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월별·요일별 체류인구 규모, 방문 목적 유형, 주요 유입 경로, 계절별 체류 특성 등은 전략 설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 데이터를 지자체가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실무 활용 사례 공유, 전략 수립 컨설팅 등 행정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및 전략 설계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정밀한 전략 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되어야,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단순한 방향 제시나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 2) 모든 생활인구 유형을 포괄하는 확장 전략 수립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대부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모든 생활인구 유형을 포괄적으로 유입하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는 계획 기간이 5년이라는 중장기적 특성을 갖는 만큼, 향후 다양한 인구유형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인구유형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 지리적 환경, 인프라 수준, 인구구조, 사회적 수용 역량이 상이한 만큼, 유입 전략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 기반이 강한 지역은 주민등록인구 유입보다는 단기 체류인구의 반복 방문과 소비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 제조업 중심 지역은 등록외국인의 정주화와 가족 단위 체류 기반 조성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고립되었거나 산업 기반이 쇠퇴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주인구 유치보다 체류인구 확대나 장기 체험형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활력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지자체는 '모든 인구유형을 늘리겠다'는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모호하고, 실행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 전략은 '무엇이든 다 하는 전략'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타깃 인구를 명확히 식별하고, 해당 인구유형에 맞는 집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컨설팅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 구조,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교통 접근성, 사회문화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 유형별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설계 도구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정 인구유형을 중심으로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책

적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 성과 평가, 우수사례 확산 등에서 차등적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지역이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는 비현실적인 틀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인구유입 모델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3)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지역 간 차별화 부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개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략 구성요소와 표현 방식이 상호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년 유입', '체험형 관광', '귀농·귀촌 유도', '외국인 정주화' 등 유사한 틀 안에서 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고유의 자산이나 경쟁력, 잠재력이 전략 속에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획일화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한 타깃 설정과 선택적 자원 배분을 어렵게 만들고, 생활인구 유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모두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작 지역마다 인프라 수준, 산업 기반, 지리적 접근성, 인구 구조, 정주 여건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계획상에서는 이를 반영한 전략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실행 단계에서 서로 유사한 사업을 반복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간 전략의 차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성 진단 도구' 또는 '전략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산업 구조, 관광 자원, 주거·정주 환경, 교통 접근성, 문화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에 유의미한 생활인구 유형(예: 군 장병, 디지털노마드, 예술인, 유학생, 복지 수요자 등)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분화하거나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고유 자원의 발굴과 전략화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타 지역과 전략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 검토 및 조율 절차

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우리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인구 유형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전략 수립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전략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고유성과 전략 적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설계 방식 자체가 필요하다. 단순한 생활인구 유입 수치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 평가 틀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설정한 타깃 인구가 지역의 여건과 얼마나 정합적인지, 전략이 고유한 지역 자원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방향을 향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인구 유입 모델을 고유하게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변화하고 전략 환경을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인구 정책이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자생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과 실행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4)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 연계 부족

생활인구 유입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전략은 정주 가능성에 중점을 둔 주거 기반 중심의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유입된 생활인구가 실제로 지역에서 어디에 소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지역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전입을 유도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령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는 해당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주인구 자체를 늘리는 접근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 머무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인구 전입 효과나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생활인구 유입 전략은 단순히 거주를 전제로 한 장기 정착 유도에서 벗어나,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소비하고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전략 설계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역 상권, 관광지, 로컬 비즈니스와 연계하거나, 참가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워케이션 인구가 지역 창업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외국인 생활인구를 지역 농산물 소비나 문화 체험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소비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닌, 소비 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생활인구 유형을 선별하고 집중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단순 체류 시간이나 방문 횟수가 아니라, 실제 소비 규모, 활동 다양성, 지역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의 타깃을 정해야 한다. 생활인구 유입의 수치 자체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하나의 출발점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전략 수립 초기부터 체류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머물고, 어떤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가 이뤄져야만, 유입이 곧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애초에 정책이 작동 가능한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설계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제4절 •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시나 광역권을 중심으로 인구 이동과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안소현 외(2023)는 서울, 부산, 제주, 전북, 전남 등 주요 지자체가 '생활인구', '서비스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한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유입 및 체류 규모를 산정하고 행정 수요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행정 영역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부분 인구의 움직임과 체류 특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원도·윤소연(2023, 2024)과 윤소연 외(2025)의 연구 역시 체류일수, 숙박 형태, 요일, 방문 빈도 등 변수를 중심으로 체류인구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주로 인구의 규모와 분포를 중심으로 한 현황 진단적 접근에 머물렀다. 즉,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관계를 함께 해석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생활인구와 체류인구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와 지역경제 간 연계 메커니즘을 생활인구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즉, 소비가 지역경제의 소득 순환, 산업 구조, 회복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의 소비와 체류 특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생활인구 연구들이 행정적·통계적 차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인구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려는 분석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및 체류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기반 지역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이는 개별 도시나 특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인구구조와 소비 행태의 차이를 비교 가능한 분석 체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소비 특성의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고, 유형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2024년 1년치 전국 생활인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기존 연구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단기적 변화 추세를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연 단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연중 소비 구조와 변동 패턴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접근은 특정 시점의 소비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소비 패턴이 계절·시간·인구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연구가 제시하지 못한 정책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즉, 데이터 구축이나 개념 제안에 머물렀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분석-유형화-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연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인구 소비를 매개로 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생활인구 연구가 주로 행정적, 기술통계적 접근에 머물렀던 기존 흐름을 넘어,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구조적 이해와 전략 설계의 핵심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본 연구의 의의는 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경제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 3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특성

**제1절** 인구: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
**제2절** 공간: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
**제3절** 시간: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

# 제3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특성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은 물론,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의 소비활동은 지역경제의 활력과 직결된다. 특히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패턴은 연령, 체류 형태, 방문 목적 등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적·시간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소비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소비하는가(인구적 측면), 어디서 소비가 발생하는가(공간적 측면), 언제 소비가 이루어지는가(시간적 측면)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특성을 인구, 공간, 시간의 세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적 측면에서는 생활인구의 유형과 연령대,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 세부 속성에 따라 소비 수준과 업종별 비중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생활인구를 세부 인구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할 때 〈표 1-2〉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어디서 어떤 업종의 소비가 두드러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체류인구 소비를 기준으로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을 도출하였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특정 업종 소비가 높은 이유를 지역의 산업·관광·생활편의 인프라, 접근성, 상권 구조 등과 연계해 해석함으로써,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질 때 특정 업종의 소비가 활발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언제 소비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월 단위의 체류인구 소비 현황을 산출하여 계절성과 추세를 분석하고, 성수기, 비수기 등 시기별 체류인구 규모, 소비 특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처럼 인구·공간·시간의 세 관점을 구분한 이유는, 누가 소비를 이끄는지(인구), 어떤 지역 특성이 업종별 소비를 강화하는지(공간), 언제 수요가 집중되는지(시간)를 함께 고려해야만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후 장에서 제시되는 세부 결과 해석의 기초자료이자 실마리를 제공한다.

# 제1절 • 인구: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

## 1. 생활인구 유형별 소비 특성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의 업종별 1인당 소비액과 비중을 분석했다. 먼저, 주민등록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378.0천 원으로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음식(76.1천 원, 20.1%)과 소매(149.7천 원, 39.6%)가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18.4천 원, 4.9%), 운송교통(40.2천 원, 10.6%), 보건의료(24.3천 원, 6.4%), 교육(13.5천 원, 3.6%)에서도 절대적 소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서비스, 운송교통,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15.0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음식(33.2천 원, 28.9%)과 소매(33.1천 원, 28.8%)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본적인 소비를 이끌고, 동시에 숙박(5.9천 원, 5.1%), 문화여가(10.8천 원, 9.4%), 보건의료(7.7천 원, 6.7%)의 비중이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높다. 체류인구 소비는 관광, 여가, 의료 서비스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등록외국인의 1인당 소비액은 255.4천 원으로 체류인구보다 높지만 주민등록인구보다는 낮다. 등록외국인의 소매 지출은 171.1천 원으로 주민등록인구(149.7천 원)보다 높고,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67.0%로 주민등록인구(39.6%)보다 훨씬 크다. 등록외국인은 외식보다는 소매를 통해 식재료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음식, 문화여가, 개인서비스, 운송교통 소비가 적은 대신, 정착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가전, 의류 등 소매 항목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1인당 교육 지출은 11.6천 원으로 주민등록인구(13.5천 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소비 비중도 4.5%로 높다. 등록외국인은 주민등록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교육 서비스를 중요한 지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1**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등록외국인 |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378.0 | 100.0 | 115.0 | 100.0 | 255.4 | 100.0 |
| 음식 | 76.1 | 20.1 | 33.2 | 28.9 | 38.3 | 15.0 |
| 숙박 | 1.2 | 0.3 | 5.9 | 5.1 | 0.7 | 0.3 |
| 문화여가 | 5.8 | 1.5 | 10.8 | 9.4 | 2.0 | 0.8 |
| 개인서비스 | 18.4 | 4.9 | 3.8 | 3.3 | 5.9 | 2.3 |
| 운송교통 | 40.2 | 10.6 | 9.1 | 8.0 | 7.0 | 2.8 |
| 보건의료 | 24.3 | 6.4 | 7.7 | 6.7 | 10.6 | 4.2 |
| 교육 | 13.5 | 3.6 | 0.7 | 0.6 | 11.6 | 4.5 |
| 소매 | 149.7 | 39.6 | 33.1 | 28.8 | 171.1 | 67.0 |

주: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2. 체류인구 유형별 소비 특성

체류인구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소비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각 연령층이 타 지역에 머무르며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층 1인당 소비액이 50.0천 원으로 가장 낮고, 이 중 소매(44.7%)와 음식(35.5%)이 주를 이루어 생활용품과 간식 구입, 식사에 주로 소비하는 구조를 보인다. 청년층 1인당 소비액이 83.4천 원으로 증가하면서, 음식(37.0%)과 소매(33.2%)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운송교통(5.6%)과 숙박(5.3%) 지출이 확대되어 이동 관련 소비가 확대되며 공간적 활동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장년층 소비액은 120.8천 원/인으로 크게 증가하며, 문화여가(10.4%), 운송교통(8.3%), 보건의료(6.1%) 영역에서 지출이 늘어나 여가 활동, 가족 단위 여행, 의료 이용 등 다양한 체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령층 1인당 소비액은 126.5천 원으로 여러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나, 음식, 숙박, 문화여가 등에서 중장년층 소비 수준과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낮다. 다만, 고령층 보건의료 지출은 16.3천 원/인으로 중장년층 소비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나 의료서비스 이용 목적의 방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건의료 지출이 고령층 전체 소비액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2** 체류인구 연령대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아동·청소년층 | | 청년층 | | 중장년층 | | 고령층 |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50.0 | 100.0 | 83.4 | 100.0 | 120.8 | 100.0 | 126.5 | 100.0 |
| 음식 | 17.8 | 35.5 | 30.8 | 37.0 | 34.0 | 28.1 | 32.7 | 25.9 |
| 숙박 | 2.9 | 5.8 | 4.4 | 5.3 | 6.4 | 5.3 | 4.6 | 3.6 |
| 문화여가 | 3.3 | 6.5 | 4.3 | 5.2 | 12.6 | 10.4 | 9.2 | 7.3 |
| 개인서비스 | 0.7 | 1.4 | 2.2 | 2.6 | 4.2 | 3.5 | 4.2 | 3.3 |
| 운송교통 | 0.5 | 1.1 | 4.7 | 5.6 | 10.1 | 8.3 | 10.2 | 8.1 |
| 보건의료 | 0.8 | 1.6 | 3.1 | 3.7 | 7.4 | 6.1 | 16.3 | 12.9 |
| 교육 | 0.9 | 1.8 | 0.8 | 1.0 | 0.7 | 0.6 | 0.2 | 0.1 |
| 소매 | 22.3 | 44.7 | 27.7 | 33.2 | 33.7 | 27.9 | 37.4 | 29.6 |

주: 아동·청소년층은 20세 미만, 청년층은 20세 이상 35세 미만, 중장년층은 35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층은 65세 이상을 나타냄.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체류인구의 체류기간별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당일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78.3천 원으로 가장 낮으며, 음식(31.3%)과 문화여가(17.3%) 소비가 두드러져 짧은 방문에 따른 식음료 소비와 여가 활동 중심 지출 구조를 보인다. 단기(월 2~5일)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은 108.8천 원으로 소비 규모가 확대된다. 전체 소비 중 음식(30.1%)과 소매(28.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숙박(9.5%) 비중이 높아졌다. 당일 체류와 비교했을 때 문화여가 지출액이 13.6천 원에서 10.6천 원으로 줄어든 점은 단기 체류에 관광 외에도 업무 목적 방문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기(월 6~14일)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이 178.6천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음식(23.9%), 소매(29.0%) 외에 운송교통(11.2%), 보건의료(11.4%) 지출이 크게 늘어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 체류인구 체류기간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당일 | | 단기 | | 중기 | | 정기 | | 장기 |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78.3 | 100.0 | 108.8 | 100.0 | 178.6 | 100.0 | 178.9 | 100.0 | 255.5 | 100.0 |
| 음식 | 24.5 | 31.3 | 32.7 | 30.1 | 42.7 | 23.9 | 49.9 | 27.9 | 65.9 | 25.8 |
| 숙박 | 2.0 | 2.5 | 10.3 | 9.5 | 6.0 | 3.4 | 3.1 | 1.7 | 2.8 | 1.1 |
| 문화여가 | 13.6 | 17.3 | 10.6 | 9.7 | 5.8 | 3.3 | 3.8 | 2.1 | 6.1 | 2.4 |
| 개인서비스 | 2.4 | 3.0 | 2.9 | 2.7 | 7.2 | 4.0 | 7.7 | 4.3 | 11.8 | 4.6 |
| 운송교통 | 5.7 | 7.2 | 7.0 | 6.4 | 20.1 | 11.2 | 21.3 | 11.9 | 23.7 | 9.3 |
| 보건의료 | 4.7 | 6.0 | 5.9 | 5.4 | 20.3 | 11.4 | 14.3 | 8.0 | 18.5 | 7.2 |
| 교육 | 0.4 | 0.5 | 0.5 | 0.4 | 1.1 | 0.6 | 1.3 | 0.7 | 2.7 | 1.0 |
| 소매 | 18.4 | 23.5 | 31.0 | 28.5 | 51.7 | 29.0 | 52.9 | 29.6 | 95.9 | 37.5 |

주: 당일은 1일, 단기는 2~5일, 중기는 6~14일, 정기는 15~20일, 장기는 21일 이상 체류를 나타냄.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정기(월 15~20일) 체류인구 소비 또한 178.9천 원/인으로 중기 체류인구 소비액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숙박 비중은 1.7%로 급감해, 해당 지역에서 거주에 가까운 형태로 생활하면서 음식(27.9%)과 소매(29.6%) 중심의 소비를 이어가는 특성이 나타난다. 장기(월 21일 이상) 체류인구 소비액은 255.5천 원/인으로 가장 큰 소비액을 기록하며, 소매(37.5%)와 음식(25.8%) 소비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개인서비스(4.6%), 보건의료(7.2%) 지출도 동반 증가하여 정주적 소비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주민등록인구의 소비 구조와 비교해 보면, 장기 체류인구는 교육 지출 비중이 1.0%로 주민등록인구(3.6%)보다 크게 낮아 자녀 동반보다는 성인 단독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인서비스(4.6% 대 4.9%), 운송교통(9.3% 대 10.6%), 보건의료(7.2% 대 6.4%) 등에서는 주민등록인구와 유사한 비중을 보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소비 구조가 실제 거주민의 소비 패턴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장기 체류인구 소비 행태는 실제 거주민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당일·단기 체류는 관광과 여가 활동에 집중된 소비 구조를 보이는 반면, 중기·정기·장기 체류는 실제 거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항목으로 소비가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재방문 여부와 숙박 여부에 따른 체류인구 소비 특성을 살펴봤다. 일회성 방문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은 92.0천 원으로 가장 낮으며, 음식(33.3%), 소매(26.8%), 문화여가(11.8%) 비중이 높아 단발적 방문에서 나타나는 관광, 여가 중심 소비 구조가 나타난다.

**표 3-4** 체류인구 재방문 및 숙박 여부에 따른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재방문 여부 | | | | 숙박 여부 | | | |
|---|---|---|---|---|---|---|---|---|
| | 일회성 방문 | | 재방문 | | 비숙박 | | 숙박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92.0 | 100.0 | 146.2 | 100.0 | 98.6 | 100.0 | 138.4 | 100.0 |
| 음식 | 30.6 | 33.3 | 36.8 | 25.2 | 27.6 | 28.0 | 41.3 | 29.9 |
| 숙박 | 7.9 | 8.6 | 3.1 | 2.1 | 1.8 | 1.8 | 11.7 | 8.4 |
| 문화여가 | 10.8 | 11.8 | 10.8 | 7.4 | 13.5 | 13.7 | 7.1 | 5.1 |
| 개인서비스 | 2.1 | 2.3 | 6.2 | 4.2 | 3.8 | 3.9 | 3.8 | 2.7 |
| 운송교통 | 3.9 | 4.2 | 16.3 | 11.1 | 9.8 | 9.9 | 8.3 | 6.0 |
| 보건의료 | 4.8 | 5.2 | 11.6 | 8.0 | 6.6 | 6.7 | 9.3 | 6.7 |
| 교육 | 0.4 | 0.5 | 1.0 | 0.7 | 0.6 | 0.6 | 0.8 | 0.6 |
| 소매 | 24.7 | 26.8 | 44.5 | 30.4 | 23.7 | 24.1 | 46.4 | 33.5 |

주: 일회성 방문은 당월 포함 최근 3개월 누적 체류일수가 당월 누적 체류일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재방문은 당월 포함 최근 3개월 누적 체류인수가 당월 누적 체류일수보다 큰 경우를 의미함.
숙박 여부는 당일 야간 및 익일 심야에 동시에 체류했는지로 판별함.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반면, 재방문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은 146.2천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음식(25.2%), 소매(30.4%)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운송교통(11.1%), 보건의료(8.0%), 개인서비스(4.2%) 지출이 확연히 늘어난다.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의료, 개인서비스 이용 등 지출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숙박 여부에 따른 체류인구 소비 특성을 보면, 비숙박 체류인구는 1인당 소비액이 98.6천 원으로 낮고 음식(28.0%), 문화여가(13.7%)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체류시간이 짧은 관광, 여가형 소비 패턴을 보인다. 반면, 숙박 체류인구는 1인당 소비액이 138.4천 원으로 늘어나며, 비숙박 체류인구에 비해 지역 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음식(29.9%), 숙박(8.4%), 소매(33.5%) 지출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체류인구의 체류요일 패턴별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휴일 체류인구는 음식(36.5%)과 소매(30.8%) 비중이 높고 문화여가(11.8%)와 숙박(5.7%)이 이를 뒤따르며, 전형적인 관광·여가 목적의 소비 행태가 나타난다.

**표 3-5** 체류인구 체류요일 패턴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평일 | | 휴일 | | 평일+휴일 |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102.6 | 100.0 | 79.2 | 100.0 | 167.5 | 100.0 |
| 음식 | 26.2 | 25.6 | 28.9 | 36.5 | 45.0 | 26.9 |
| 숙박 | 4.8 | 4.6 | 4.5 | 5.7 | 8.5 | 5.1 |
| 문화여가 | 14.6 | 14.2 | 9.3 | 11.8 | 8.9 | 5.3 |
| 개인서비스 | 4.2 | 4.1 | 1.3 | 1.6 | 6.4 | 3.8 |
| 운송교통 | 10.1 | 9.8 | 3.8 | 4.8 | 14.2 | 8.5 |
| 보건의료 | 9.2 | 8.9 | 1.8 | 2.2 | 12.9 | 7.7 |
| 교육 | 0.5 | 0.5 | 0.4 | 0.4 | 1.2 | 0.7 |
| 소매 | 21.9 | 21.3 | 24.4 | 30.8 | 53.8 | 32.2 |

주: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반면, 평일 체류인구는 1인당 소비액이 102.6천 원/인으로 더 크고, 문화여가 지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서비스(4.1%), 운송교통(9.8%), 보건의료(8.9%) 등 생활 유지와 관련된 항목 비중이 두드러진다. 평일 체류인구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생활을 영위하는 준거주형 체류자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평일과 휴일을 연속해 머무르는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이 167.5천 원으로 가장 소비 수준이 높고, 음식(26.9%)과 소매(32.2%)를 중심으로 운송교통, 보건의료, 개인서비스 지출 비중이 커 실거주 소비 구조를 보인다.

체류목적별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99.5천 원으로, 세 가지 체류 목적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지출 구조를 보면 음식(35.0%)과 소매(31.7)가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여기에 숙박(14.1%)이 더해져 단기 체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기 방문객의 소비가 숙식과 쇼핑, 외식 등 체류 기간 중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여가 지출 비중도

8.1%로 비교적 높아 관광·여가 활동을 동반한 소비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교육·개인서비스 등 생활 기반형 지출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3-6** 체류인구 체류목적별 1인당 소비액 및 비중

(단위: 천 원/인, %)

| 업종 | 단기숙박 | | 통근·통학 | | 장기 실거주 | |
|---|---|---|---|---|---|---|
|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1인당 소비액 | 비중 |
| 합계 | 99.5 | 100.0 | 170.9 | 100.0 | 276.5 | 100.0 |
| 음식 | 34.8 | 35.0 | 45.6 | 26.7 | 72.6 | 26.3 |
| 숙박 | 14.1 | 14.1 | 0.5 | 0.3 | 3.7 | 1.3 |
| 문화여가 | 8.1 | 8.1 | 3.2 | 1.9 | 6.8 | 2.5 |
| 개인서비스 | 1.2 | 1.2 | 8.9 | 5.2 | 12.3 | 4.4 |
| 운송교통 | 5.9 | 6.0 | 24.4 | 14.3 | 22.1 | 8.0 |
| 보건의료 | 2.2 | 2.2 | 9.0 | 5.3 | 21.5 | 7.8 |
| 교육 | 0.3 | 0.3 | 1.3 | 0.8 | 3.2 | 1.1 |
| 소매 | 31.5 | 31.7 | 50.9 | 29.8 | 107.5 | 38.9 |

주: 단기숙박은 한 달 동안 4박 이하로 연속 숙박한 인구, 통근·통학은 평일 기준 한 달 동안 15일 이상 숙박 없이 체류한 인구, 장기 실거주는 한 달 동안 21일 이상 체류하고 숙박 경험이 있는 인구를 나타냄. 합계에는 온라인소매와 기타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소비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통근·통학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70.9천 원으로 단기숙박보다 높으며, 일상적 이동과 반복 소비가 결합된 소비 구조를 보인다. 지출 비중은 소매(29.8%)와 음식(26.7)이 가장 크고, 운송교통(14.3%)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통근·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음료, 생활필수 소비가 주요 지출 항목임을 보여준다. 숙박 지출 비중은 0.3%로 사실상 미미한 반면, 개인서비스(5.2%)와 보건의료(5.3%) 비중은 단기숙박보다 높아, 일정 수준의 생활형 소비가 동반되고 있다.

장기 실거주 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276.5천 원으로 가장 높으며, 소비 항목도 가장 폭넓게 분포한다. 소매 지출이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음식(26.3%)이 그 뒤를 이어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소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보건의료(7.8%), 운송교통(8.0%), 개인서비스(4.4%) 등 생활 유지와 관련된 지출 비중이 통근·통학이나 단기숙박보다 높아, 장기 정주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 패턴이 확인된다.

# 제2절 • 공간: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

## 1.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인구 및 소비 구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와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체류인구가 전체 생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0%로 주민등록인구(29.2%)보다 압도적으로 크지만, 실제 소비 비중은 주민등록인구가 57.2%로 체류인구(41.8%)를 상회한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주민등록인구 소비가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체류인구 소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을 보여준다. 다만, 체류인구는 인구 비중에 비해 소비 비중이 낮아 현 시점에서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향후 체류인구 지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체류인구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등록외국인의 경우, 전체 생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소비 비중 또한 1.0%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외국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외국인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편입을 지원한다면, 단순히 노동력 보완을 넘어 생활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7** 시군구별 인구 유형별 인구 및 소비 비중

(단위: %)

| 지역 | 인구 비중 | | | 소비 비중 | | |
|---|---|---|---|---|---|---|
| | 주민등록 인구 | 체류인구 | 등록 외국인 | 주민등록 인구 | 체류인구 | 등록 외국인 |
| 89개 인구감소지역 | 29.2 | 70.0 | 0.7 | 57.2 | 41.8 | 1.0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2. 체류인구 소비 기준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

### 1) 음식

체류인구 음식 소비가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71.1천 원, 1위), 강원 삼척시(47.4천 원, 2위), 전남 담양군(45.1천 원, 3위), 강원 태백시(44.6천 원, 4위), 충남 보령시(43.6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경북 울릉군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 음식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71.1천 원)이다. 울릉군은 당일 방문이 어렵고 대부분 숙박을 수반하는 체류 형태를 보이는데, 실제로 체류인구 중 84.8%가 숙박 체류로 나타나며 음식 소비액도 74.2천 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단기(72.6천 원), 중기(80.8천 원), 장기(110.4천 원) 체류 등 기간이 길수록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자의 음식 소비액은 112.8천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음식 소비에는 관광 목적뿐 아니라 장기 체류자의 일상생활에 기반한 소비도 포함된다. 연령별로도 청년층(71.5천 원), 중장년층(75.4천 원), 고령층(54.6천 원) 모두 1위를 차지해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소비 수준을 보인다. 이는 울릉군의 높은 물가 수준과 외식 의존도, 숙박 중심의 관광 구조, 장기 체류 및 재방문 수요가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8** 경북 울릉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음식 소비액 | 1인당 음식 소비액 순위 | 경북 울릉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10.1 | 1 | 24.1 | 29.2 |
| | | 체류인구 | 71.1 | 1 | 75.6 | 70.0 |
| | | 등록외국인 | 19.0 | 87 | 0.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1.4 | 14 | 0.5 | 0.6 |
| | | 청년층 | 71.5 | 1 | 12.6 | 16.1 |
| | | 중장년층 | 75.4 | 1 | 70.1 | 72.0 |
| | | 고령층 | 54.6 | 1 | 16.8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42.6 | 2 | 9.8 | 39.8 |
| | | 단기 | 72.6 | 1 | 82.8 | 42.0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음식 소비액 | 1인당 음식 소비액 순위 | 경북 울릉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 중기 | 80.8 | 1 | 3.2 | 7.1 |
| | | 정기 | 77.9 | 4 | 1.1 | 3.8 |
| | | 장기 | 110.4 | 1 | 3.0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71.5 | 1 | 88.9 | 57.5 |
| | | 재방문 | 68.3 | 1 | 11.1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53.6 | 1 | 15.2 | 58.7 |
| | | 숙박 | 74.2 | 1 | 84.8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61.2 | 1 | 31.1 | 31.6 |
| | | 휴일 | 53.6 | 1 | 15.3 | 36.2 |
| | | 평일+휴일 | 81.8 | 1 | 53.7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78.0 | 1 | 37.7 | 14.0 |
| | | 통근·통학 | 39.1 | 72 | 0.1 | 3.5 |
| | | 장기 실거주 | 112.8 | 1 | 2.9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강원 삼척시는 체류인구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1인당 음식 소비액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 음식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일(33.0천 원, 5위), 단기(48.4천 원, 2위), 일회성 방문(46.9천 원, 2위), 재방문(48.5천 원, 5위), 비숙박(35.2천 원, 5위), 숙박(56.3천 원, 3위), 평일(39.0천 원, 3위), 휴일(40.4천 원, 5위), 평일+휴일(59.7천 원, 5위), 단기숙박(51.5천 원, 2위), 장기 실거주(101.0천 원, 6위) 등 거의 모든 체류 특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표 3-9** 강원 삼척시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음식 소비액 | 1인당 음식 소비액 순위 | 강원 삼척시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84.3 | 25 | 27.7 | 29.2 |
| | | 체류인구 | 47.4 | 2 | 72.1 | 70.0 |
| | | 등록외국인 | 40.6 | 22 | 0.2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6.5 | 9 | 0.5 | 0.6 |
| | | 청년층 | 39.3 | 9 | 16.3 | 16.1 |
| | | 중장년층 | 49.1 | 2 | 73.5 | 72.0 |
| | | 고령층 | 49.5 | 3 | 9.7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33.0 | 5 | 28.8 | 39.8 |
| | | 단기 | 48.4 | 2 | 56.2 | 42.0 |
| | | 중기 | 51.5 | 14 | 5.4 | 7.1 |
| | | 정기 | 58.2 | 26 | 2.7 | 3.8 |
| | | 장기 | 92.4 | 10 | 6.9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46.9 | 2 | 67.0 | 57.5 |
| | | 재방문 | 48.5 | 5 | 33.0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5.2 | 5 | 41.8 | 58.7 |
| | | 숙박 | 56.3 | 3 | 58.2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9.0 | 3 | 29.5 | 31.6 |
| | | 휴일 | 40.4 | 5 | 31.8 | 36.2 |
| | | 평일+휴일 | 59.7 | 5 | 38.7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51.5 | 2 | 25.9 | 14.0 |
| | | 통근·통학 | 55.9 | 21 | 2.1 | 3.5 |
| | | 장기 실거주 | 101.0 | 6 | 5.6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전남 담양군의 체류인구 1인당 음식 소비액이 높은 것은 담양군 방문 목적이 음식점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 체류보다 장기 체류 인구의 음식 소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양군의 경우는 오히려 당일 체류(42.8천 원, 1위)와 단기 체류(47.3천 원, 3위)에서 음식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담양군의 체류인구 비중은 82.9%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당일 체류(52.9%)와 단기 체류

(33.5%)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짧은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식도락을 목적으로 찾아와 소비를 집중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담양군의 높은 음식 소비는 지역 물가 요인보다는 관광객의 방문 동기와 식도락 여행지로서의 위상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전남 담양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음식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음식 소비액 | 1인당 음식 소비액 순위 | 전남 담양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66.0 | 60 | 16.8 | 29.2 |
| | | 체류인구 | 45.1 | 3 | 82.9 | 70.0 |
| | | 등록외국인 | 32.0 | 48 | 0.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8.0 | 26 | 0.3 | 0.6 |
| | | 청년층 | 37.6 | 13 | 17.5 | 16.1 |
| | | 중장년층 | 46.0 | 4 | 70.6 | 72.0 |
| | | 고령층 | 51.7 | 2 | 11.6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42.8 | 1 | 52.9 | 39.8 |
| | | 단기 | 47.3 | 3 | 33.5 | 42.0 |
| | | 중기 | 46.0 | 28 | 5.3 | 7.1 |
| | | 정기 | 46.9 | 59 | 3.0 | 3.8 |
| | | 장기 | 52.7 | 73 | 5.3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45.2 | 3 | 55.6 | 57.5 |
| | | 재방문 | 45.0 | 10 | 44.4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44.6 | 2 | 77.6 | 58.7 |
| | | 숙박 | 47.0 | 15 | 22.4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40.9 | 2 | 29.2 | 31.6 |
| | | 휴일 | 45.3 | 2 | 46.0 | 36.2 |
| | | 평일+휴일 | 49.8 | 23 | 24.8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47.2 | 7 | 7.5 | 14.0 |
| | | 통근·통학 | 46.2 | 43 | 3.7 | 3.5 |
| | | 장기 실거주 | 56.9 | 73 | 3.0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2) 숙박

체류인구 숙박 소비가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36.9천 원, 1위), 강원 평창군(30.5천 원, 2위), 강원 홍천군(29.1천 원, 3위), 강원 정선군(20.8천 원, 4위), 강원 고성군(18.6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전남 진도군의 체류인구 1인당 숙박 소비액은 36.9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도군은 전체 인구에서 체류인구 비중이 68.4%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 중 숙박 체류인구 비중이 71.7%로 인구감소지역 전체(41.3%)를 크게 웃돈다. 주목할 점은 일회성 방문(72.2%), 단기 체류(67.0%), 숙박 체류(71.7%)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들 집단에서의 1인당 숙박 소비액 또한 각각 47.8천 원, 51.2천 원, 48.5천 원으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진도군에는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인 쏠비치 리조트가 위치해 있어 단기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숙박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진도군의 높은 숙박 소비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단기 숙박 중심의 소비 패턴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전남 진도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숙박 소비액 | 1인당 숙박 소비액 순위 | 전남 진도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2.5 | 8 | 30.3 | 29.2 |
| | | 체류인구 | 36.9 | 1 | 68.4 | 70.0 |
| | | 등록외국인 | 0.6 | 48 | 1.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4.3 | 2 | 0.2 | 0.6 |
| | | 청년층 | 36.3 | 1 | 13.0 | 16.1 |
| | | 중장년층 | 39.1 | 1 | 76.2 | 72.0 |
| | | 고령층 | 22.1 | 3 | 10.5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8.1 | 5 | 20.6 | 39.8 |
| | | 단기 | 51.2 | 1 | 67.0 | 42.0 |
| | | 중기 | 8.3 | 13 | 5.5 | 7.1 |
| | | 정기 | 6.2 | 10 | 2.2 | 3.8 |
| | | 장기 | 6.4 | 7 | 4.7 | 7.3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숙박 소비액 | 1인당 숙박 소비액 순위 | 전남 진도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47.8 | 1 | 72.2 | 57.5 |
| | | 재방문 | 8.5 | 7 | 27.8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7.5 | 6 | 28.3 | 58.7 |
| | | 숙박 | 48.5 | 1 | 71.7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2.7 | 1 | 28.6 | 31.6 |
| | | 휴일 | 30.2 | 1 | 29.5 | 36.2 |
| | | 평일+휴일 | 44.5 | 1 | 41.9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48.9 | 1 | 30.8 | 14.0 |
| | | 통근·통학 | 2.1 | 7 | 0.6 | 3.5 |
| | | 장기 실거주 | 6.7 | 8 | 4.3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강원 평창군의 체류인구 1인당 숙박 소비액은 30.5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2위에 해당한다. 평창군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은 88.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들은 당일 방문(31.4%)보다는 단기 체류(58.3%)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회성 방문이 74.2%, 숙박 체류가 62.1%를 차지해, 지역을 재방문하거나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보다는 2~4일 정도 짧게 머물며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숙박 소비가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평창군에는 휘닉스 리조트(골프·스키·워터파크),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 한화리조트(워터파크) 등 숙박 단가가 높은 대형 리조트들이 위치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고비용 숙박과 레저 활동이 결합되면서 1인당 숙박 소비액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강원 평창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숙박 소비액 | 1인당 숙박 소비액 순위 | 강원 평창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7.9 | 2 | 11.6 | 29.2 |
| | | 체류인구 | 30.5 | 2 | 88.3 | 70.0 |
| | | 등록외국인 | 10.1 | 1 | 0.1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3.5 | 3 | 0.8 | 0.6 |
| | | 청년층 | 20.1 | 3 | 16.6 | 16.1 |
| | | 중장년층 | 32.2 | 3 | 72.2 | 72.0 |
| | | 고령층 | 36.4 | 1 | 10.3 | 11.3 |
| | 체류 기간 | 당일 | 10.8 | 4 | 31.4 | 39.8 |
| | | 단기 | 39.1 | 3 | 58.3 | 42.0 |
| | | 중기 | 50.8 | 1 | 5.4 | 7.1 |
| | | 정기 | 34.3 | 2 | 1.6 | 3.8 |
| | | 장기 | 29.5 | 2 | 3.4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31.8 | 3 | 74.2 | 57.5 |
| | | 재방문 | 26.6 | 1 | 25.8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11.6 | 3 | 37.9 | 58.7 |
| | | 숙박 | 42.0 | 3 | 62.1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22.7 | 2 | 28.4 | 31.6 |
| | | 휴일 | 22.7 | 3 | 35.2 | 36.2 |
| | | 평일+휴일 | 44.1 | 2 | 36.4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39.4 | 3 | 27.5 | 14.0 |
| | | 통근·통학 | 4.5 | 3 | 0.4 | 3.5 |
| | | 장기 실거주 | 31.5 | 2 | 3.1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강원 홍천군의 체류인구 1인당 숙박 소비액은 29.1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3위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이 80.6%로 매우 높은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단기 체류(52.3%)와 숙박 체류(54.4%)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각각 42.0%, 41.3%)보다 크게 높아, 홍천군 방문은 당일 체류보다 숙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 구조 속에서 단기 체류 시 숙박 소비액이 44.5천 원(2위), 단기 숙박 목적 체류가 46.9천 원(2위), 일회성 방문 시 37.3천 원(2위)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천군 체류인구는 짧은 기간 동안 숙박과 관광 활동에 집중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있다. 특히 홍천군에는 비발디파크(워터파크, 스키장, 골프장)와 같은 대규모 리조트 시설이 입지해 있어 숙박 단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평창군과 마찬가지로 리조트 중심의 숙박·레저 소비가 지역의 높은 숙박 소비액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3** 강원 홍천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숙박 소비액 | 1인당 숙박 소비액 순위 | 강원 홍천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2.0 | 13 | 19.3 | 29.2 |
| | | 체류인구 | 29.1 | 3 | 80.6 | 70.0 |
| | | 등록외국인 | 1.5 | 8 | 0.2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3.2 | 1 | 1.1 | 0.6 |
| | | 청년층 | 22.5 | 2 | 20.5 | 16.1 |
| | | 중장년층 | 32.7 | 2 | 70.1 | 72.0 |
| | | 고령층 | 15.2 | 5 | 8.3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2.5 | 2 | 35.2 | 39.8 |
| | | 단기 | 44.5 | 2 | 52.3 | 42.0 |
| | | 중기 | 14.6 | 4 | 5.5 | 7.1 |
| | | 정기 | 6.2 | 9 | 2.2 | 3.8 |
| | | 장기 | 9.7 | 5 | 4.8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37.3 | 2 | 66.5 | 57.5 |
| | | 재방문 | 12.8 | 3 | 33.5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11.8 | 2 | 45.6 | 58.7 |
| | | 숙박 | 43.5 | 2 | 54.4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21.7 | 3 | 30.6 | 31.6 |
| | | 휴일 | 26.4 | 2 | 36.0 | 36.2 |
| | | 평일+휴일 | 38.6 | 3 | 33.5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46.9 | 2 | 22.0 | 14.0 |
| | | 통근·통학 | 4.1 | 4 | 1.2 | 3.5 |
| | | 장기 실거주 | 10.1 | 5 | 4.2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3) 문화여가

체류인구 문화여가 소비가 높은 지역은 대구 군위군(41.7천 원, 1위), 강원 횡성군(38.7천 원, 2위), 경북 고령군(32.3천 원, 3위), 경북 의성군(30.4천 원, 4위), 전남 함평군(29.5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대구 군위군의 체류인구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은 41.7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한다. 이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이 82.2%로 매우 높으며, 특히 중장년층(79.4%)과 청년층(9.7%)이 주요 구성원으로서 문화·여가 활동 수요를 주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위군은 숙박보다는 비숙박 체류(82.0%)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의 문화여가 소비액이 49.3천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당일 체류(인구 비중 60.2%, 소비액 44.8천 원, 5위)와 단기 체류(인구 비중 28.1%, 소비액 48.7천 원, 1위)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출이 나타나, 군위군이 장기 관광보다는 단기·비숙박 중심의 문화여가 소비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위 구니CC, 이지스카이 골프클럽, 군위오펠GC, 군위 칼레이트CC 등 다수의 골프장이 소재해 있으며, 파크골프장 또한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27년까지 180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레저 인프라는 군위군을 반복 방문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재방문 체류인구의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은 49.2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 결국 군위군의 높은 문화여가 소비는 지역 특성상 골프·파크골프 등 레저시설 이용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4** 대구 군위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순위 | 대구 군위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4.5 | 53 | 17.5 | 29.2 |
| | | 체류인구 | 41.7 | 1 | 82.2 | 70.0 |
| | | 등록외국인 | 0.3 | 82 | 0.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8.6 | 3 | 0.1 | 0.6 |
| | | 청년층 | 17.2 | 1 | 9.7 | 16.1 |
| | | 중장년층 | 47.6 | 1 | 79.4 | 72.0 |
| | | 고령층 | 20.4 | 9 | 10.8 | 11.3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순위 | 대구 군위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체류기간 | 당일 | 44.8 | 5 | 60.2 | 39.8 |
| | | 단기 | 48.7 | 1 | 28.1 | 42.0 |
| | | 중기 | 12.8 | 7 | 5.4 | 7.1 |
| | | 정기 | 4.5 | 30 | 2.5 | 3.8 |
| | | 장기 | 7.0 | 29 | 3.8 | 7.3 |
| | 재방문여부 | 일회성 방문 | 35.6 | 3 | 55.2 | 57.5 |
| | | 재방문 | 49.2 | 1 | 44.8 | 42.5 |
| | 숙박여부 | 비숙박 | 49.3 | 2 | 82.0 | 58.7 |
| | | 숙박 | 7.0 | 30 | 18.0 | 41.3 |
| | 체류요일패턴 | 평일 | 49.7 | 2 | 40.6 | 31.6 |
| | | 휴일 | 37.0 | 1 | 39.3 | 36.2 |
| | | 평일+휴일 | 34.8 | 1 | 20.1 | 32.2 |
| | 체류목적 | 단기숙박 | 6.7 | 33 | 4.2 | 14.0 |
| | | 통근·통학 | 4.5 | 18 | 2.2 | 3.5 |
| | | 장기 실거주 | 6.9 | 32 | 2.7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강원 횡성군의 체류인구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은 38.7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강원 횡성군은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20.9%에 불과한 반면, 체류인구가 78.7%로 압도적으로 많아 생활인구 구조에서 체류인구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체류인구 중에서는 중장년층(70.1%)과 고령층(10.8%)의 비중이 높아 소비 여력이 큰 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문화여가 부문에서 각각 42.8천 원(2위), 42.4천 원(2위)의 높은 1인당 소비액을 기록하며, 체류인구 전체 평균(38.7천 원, 2위)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당일 체류(55.9천 원, 1위)와 비숙박 방문(54.2천 원, 1위)에서 소비가 집중되는 점은 짧은 체류 기간에도 문화·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과 알프스대영CC, 벨라스톤CC, 웰리힐리파크CC, 옥스필드CC, 동원썬밸리CC, 벨라45컨트리클럽 등 다수의 레저·골프 인프라가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을

기반으로 문화여가 소비가 높은 대구 군위군 사례와도 유사하며, 횡성군 역시 레저 인프라가 체류인구의 반복 방문과 높은 소비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5** 강원 횡성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순위 | 강원 횡성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6.3 | 26 | 20.9 | 29.2 |
| | | 체류인구 | 38.7 | 2 | 78.7 | 70.0 |
| | | 등록외국인 | 2.4 | 18 | 0.5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3.4 | 36 | 0.6 | 0.6 |
| | | 청년층 | 13.7 | 3 | 13.1 | 16.1 |
| | | 중장년층 | 42.8 | 2 | 75.5 | 72.0 |
| | | 고령층 | 42.4 | 2 | 10.8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55.9 | 1 | 41.2 | 39.8 |
| | | 단기 | 32.8 | 3 | 43.2 | 42.0 |
| | | 중기 | 11.8 | 11 | 7.0 | 7.1 |
| | | 정기 | 5.7 | 13 | 3.1 | 3.8 |
| | | 장기 | 9.7 | 9 | 5.4 | 7.3 |
| | 재방문여부 | 일회성 방문 | 40.5 | 1 | 59.8 | 57.5 |
| | | 재방문 | 36.1 | 2 | 40.2 | 42.5 |
| | 숙박여부 | 비숙박 | 54.2 | 1 | 57.7 | 58.7 |
| | | 숙박 | 17.6 | 3 | 42.3 | 41.3 |
| | 체류요일패턴 | 평일 | 55.8 | 1 | 33.5 | 31.6 |
| | | 휴일 | 35.2 | 2 | 35.4 | 36.2 |
| | | 평일+휴일 | 24.3 | 2 | 31.0 | 32.2 |
| | 체류목적 | 단기숙박 | 21.9 | 3 | 15.4 | 14.0 |
| | | 통근·통학 | 6.5 | 6 | 2.7 | 3.5 |
| | | 장기 실거주 | 10.1 | 9 | 3.9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경북 고령군 체류인구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은 32.3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위를 기록했다. 경북 고령군은 체류인구 비중이 67.3%이며, 특히 당일 체류 인구

(42.7%)와 단기 체류 인구(30.0%) 비중이 크다. 또한,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이 58.3%로 높고,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 역시 78.5%로 매우 높다. 대구와의 근접성 덕분에 대구 시민들이 짧은 일정으로 반복 방문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류인구 특성은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에도 반영되어, 당일 체류(48.1천 원, 2위)와 비숙박 체류(39.7천 원, 5위)에서 소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중장년층 체류인구가 77.8%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의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이 37.2천 원(3위)에 달해 고령군의 문화여가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소비는 고령오펠GC, 마스터피스CC, 대가야CC, 고령유니밸리CC, 가야골프랜드 등 골프장과 고령대가야파크골프장, 다산파크골프장 같은 파크골프장을 활용하는 레저 수요뿐 아니라,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생활촌 등 역사·문화 관광지 방문에 따른 지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스키와 골프 위주로 소비가 집중된 강원 횡성군과 달리, 고령군은 레저와 문화관광이 결합된 방문 패턴 속에서 체류인구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6** 경북 고령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숙박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 1인당 문화여가 소비액 순위 | 경북 고령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5.9 | 33 | 30.2 | 29.2 |
| | | 체류인구 | 32.3 | 3 | 67.3 | 70.0 |
| | | 등록외국인 | 0.5 | 71 | 2.5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3.4 | 32 | 0.2 | 0.6 |
| | | 청년층 | 13.8 | 2 | 9.0 | 16.1 |
| | | 중장년층 | 37.2 | 3 | 77.8 | 72.0 |
| | | 고령층 | 15.9 | 15 | 13.0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48.1 | 2 | 42.7 | 39.8 |
| | | 단기 | 33.1 | 2 | 30.0 | 42.0 |
| | | 중기 | 7.6 | 19 | 9.0 | 7.1 |
| | | 정기 | 4.9 | 21 | 6.5 | 3.8 |
| | | 장기 | 6.9 | 31 | 11.8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36.8 | 2 | 41.7 | 57.5 |
| | | 재방문 | 29.0 | 5 | 58.3 | 42.5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문화 여가 소비액 | 1인당 문화 여가 소비액 순위 | 경북 고령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9.7 | 5 | 78.5 | 58.7 |
| | | 숙박 | 5.1 | 40 | 21.5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43.6 | 4 | 35.2 | 31.6 |
| | | 휴일 | 35.0 | 3 | 31.4 | 36.2 |
| | | 평일+휴일 | 17.8 | 7 | 33.5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4.6 | 39 | 3.5 | 14.0 |
| | | 통근·통학 | 6.3 | 8 | 9.4 | 3.5 |
| | | 장기 실거주 | 6.5 | 35 | 6.3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4) 개인서비스

체류인구 개인서비스 소비가 높은 지역은 충북 제천시(19.8천 원, 1위), 전북 김제시(16.4천 원, 2위), 대구 서구(12.4천 원, 3위), 경남 함안군(12.2천 원, 4위), 충북 옥천군(8.9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충북 제천시는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이 19.8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개인서비스 소비는 장기 체류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제천시는 장기 체류 비중이 6.6%에 불과해 높지 않다. 오히려 체류인구 구성에서 단기숙박 인구 비중이 18.4%로 큰 편임에도 이들의 개인서비스 소비액 순위는 12위에 머무르고 있어, 특정 체류 유형의 집중 소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점은 거의 모든 인구 유형에서 개인서비스 소비액이 상위권을 기록한다는 점으로, 제천시의 생활물가가 높아서, 지역 내에서 자동차 정비·세차, 미용·세탁, 욕탕, 장례·예식 등 생활 기반 서비스업을 이용할 때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천의 높은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는 특정 체류인구의 구성보다는 지역 전반의 서비스 요금 수준과 생활 인프라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17** 충북 제천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순위 | 충북 제천시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45.5 | 1 | 40.6 | 29.2 |
| | | 체류인구 | 19.8 | 1 | 58.6 | 70.0 |
| | | 등록외국인 | 12.0 | 1 | 0.8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2 | 16 | 0.6 | 0.6 |
| | | 청년층 | 7.1 | 1 | 17.8 | 16.1 |
| | | 중장년층 | 22.7 | 1 | 70.6 | 72.0 |
| | | 고령층 | 23.3 | 1 | 11.0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8.0 | 2 | 34.8 | 39.8 |
| | | 단기 | 16.2 | 2 | 49.4 | 42.0 |
| | | 중기 | 33.4 | 1 | 6.9 | 7.1 |
| | | 정기 | 32.6 | 1 | 2.3 | 3.8 |
| | | 장기 | 37.7 | 1 | 6.6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0.6 | 3 | 59.0 | 57.5 |
| | | 재방문 | 33.1 | 1 | 41.0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28.8 | 1 | 48.1 | 58.7 |
| | | 숙박 | 11.5 | 2 | 51.9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3.1 | 1 | 30.9 | 31.6 |
| | | 휴일 | 4.7 | 3 | 34.5 | 36.2 |
| | | 평일+휴일 | 23.1 | 1 | 34.5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2.9 | 12 | 18.4 | 14.0 |
| | | 통근·통학 | 43.6 | 1 | 0.9 | 3.5 |
| | | 장기 실거주 | 36.8 | 1 | 6.1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김제시의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은 16.4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전북 김제시의 체류인구는 전체 생활인구의 60.5%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70.0%)보다 낮지만, 체류기간별로 보면 중기(9.9%), 정기(6.5%), 장기 체류(11.3%) 인구 비중이 모두 높다. 또한, 재방문 인구 비중(60.4%)과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69.9%)이 모두 인구감소지역 전체보다 높아, 김제시를 생활권처럼 생각하여 반복 방문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근·통학 인구(8.0%)와 장기 실거주 인

구(6.9%)의 비중이 인구감소지역 전체 수준보다 높아, 전주 등 인접 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김제 내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일하는 집단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제시에는 관광객보다 일정 시간 머무르며 생활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은 개별적으로는 매우 높진 않지만,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제시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이 높은 이유는 중·장기 체류 기반의 생활형 소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18** 전북 김제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순위 | 전북 김제시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20.4 | 21 | 37.8 | 29.2 |
| | | 체류인구 | 16.4 | 2 | 60.5 | 70.0 |
| | | 등록외국인 | 5.7 | 39 | 1.6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0.5 | 45 | 0.3 | 0.6 |
| | | 청년층 | 6.3 | 2 | 12.6 | 16.1 |
| | | 중장년층 | 18.4 | 2 | 77.1 | 72.0 |
| | | 고령층 | 13.7 | 3 | 10.1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8.0 | 1 | 36.7 | 39.8 |
| | | 단기 | 16.7 | 1 | 35.6 | 42.0 |
| | | 중기 | 14.7 | 5 | 9.9 | 7.1 |
| | | 정기 | 11.2 | 15 | 6.5 | 3.8 |
| | | 장기 | 14.4 | 19 | 11.3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5.8 | 1 | 39.6 | 57.5 |
| | | 재방문 | 16.7 | 2 | 60.4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19.8 | 2 | 69.9 | 58.7 |
| | | 숙박 | 8.5 | 4 | 30.1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26.9 | 2 | 33.3 | 31.6 |
| | | 휴일 | 6.7 | 2 | 29.8 | 36.2 |
| | | 평일+휴일 | 14.7 | 3 | 36.9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3.5 | 6 | 6.5 | 14.0 |
| | | 통근·통학 | 11.9 | 25 | 8.0 | 3.5 |
| | | 장기 실거주 | 14.9 | 19 | 6.9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대구 서구의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은 12.4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위를 기록했다. 먼저 체류기간별로 보면 중기(12.2%)와 정기 체류인구(9.7%) 비중이 각각 인구감소지역 전체(7.1%, 3.8%)보다 높고, 장기 체류인구 역시 18.9%로 인구감소지역 전체(7.3%)를 상회한다.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탁업·미용업·수리업 등 생활에 필요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근·통학 인구 비중이 14.3%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수준(3.5%)을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다른 대구 자치구에서 서구로 이동하는 통근·통학 체류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이 69.0%로 높고,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 역시 75.1%로 높아, 서구를 생활권처럼 반복 이용하는 체류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 서구의 높은 체류인구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는 관광 수요보다는 대구권 내부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 인구와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일상적 소비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9** 대구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순위 | 대구 서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1.2 | 72 | 43.2 | 29.2 |
| | | 체류인구 | 12.4 | 3 | 56.2 | 70.0 |
| | | 등록외국인 | 4.6 | 55 | 0.7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0.6 | 30 | 0.9 | 0.6 |
| | | 청년층 | 5.3 | 3 | 18.2 | 16.1 |
| | | 중장년층 | 13.8 | 3 | 69.2 | 72.0 |
| | | 고령층 | 15.9 | 2 | 11.7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4.9 | 3 | 30.9 | 39.8 |
| | | 단기 | 11.0 | 4 | 28.2 | 42.0 |
| | | 중기 | 10.9 | 11 | 12.2 | 7.1 |
| | | 정기 | 9.7 | 21 | 9.7 | 3.8 |
| | | 장기 | 12.9 | 32 | 18.9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4.1 | 2 | 31.0 | 57.5 |
| | | 재방문 | 11.7 | 5 | 69.0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13.4 | 3 | 75.1 | 58.7 |
| | | 숙박 | 9.5 | 3 | 24.9 | 41.3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 1인당 개인서비스 소비액 순위 | 대구 서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15.7 | 3 | 35.1 | 31.6 |
| | | 휴일 | 7.8 | 1 | 20.0 | 36.2 |
| | | 평일+휴일 | 11.9 | 6 | 44.9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5.9 | 1 | 2.5 | 14.0 |
| | | 통근·통학 | 11.8 | 27 | 14.3 | 3.5 |
| | | 장기 실거주 | 12.2 | 35 | 10.4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5) 운송교통

체류인구 운송교통 소비가 높은 지역은 경남 함안군(34.9천 원, 1위), 경북 성주군(33.1천 원, 2위), 경남 창녕군(27.3천 원, 3위), 경북 영천시(25.9천 원, 4위), 전남 장성군(24.6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경남 함안군의 체류인구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은 34.9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 체류인구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76.4%)과 고령층(12.2%)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이 각각 37.2천 원, 37.6천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체류기간별로는 중기 체류(70.8천 원, 1위), 정기 체류(61.5천 원, 1위), 장기 체류(51.0천 원, 1위)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 이용 집단에서 높은 소비가 나타난다. 실제로 함안군은 경전선 철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KTX 함안역과 같은 철도 인프라가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공단과 물류 거점이 위치해 있어 통근·통학 인구(13.4%, 3위)와 장기 실거주 인구(8.2%, 1위)도 교통소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방문 체류인구의 소비액이 49.8천 원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은, 대구, 창원, 부산 등 인접 대도시와의 반복적인 이동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함안군의 높은 운송교통 소비는 관광보다는 철도·고속도로 기반의 광역 교통 이동과 생활 기반 교통 수요가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0** 경남 함안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순위 | 경남 함안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51.0 | 29 | 31.4 | 29.2 |
| | | 체류인구 | 34.9 | 1 | 65.7 | 70.0 |
| | | 등록외국인 | 9.4 | 21 | 2.9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1 | 16 | 0.2 | 0.6 |
| | | 청년층 | 17.0 | 1 | 11.3 | 16.1 |
| | | 중장년층 | 37.2 | 1 | 76.4 | 72.0 |
| | | 고령층 | 37.6 | 1 | 12.2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7.2 | 4 | 37.9 | 39.8 |
| | | 단기 | 28.6 | 2 | 27.6 | 42.0 |
| | | 중기 | 70.8 | 1 | 9.7 | 7.1 |
| | | 정기 | 61.5 | 1 | 8.7 | 3.8 |
| | | 장기 | 51.0 | 1 | 16.2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0.8 | 3 | 38.3 | 57.5 |
| | | 재방문 | 49.8 | 1 | 61.7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5.2 | 1 | 76.9 | 58.7 |
| | | 숙박 | 33.6 | 2 | 23.1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4.1 | 3 | 37.3 | 31.6 |
| | | 휴일 | 10.5 | 2 | 25.0 | 36.2 |
| | | 평일+휴일 | 51.8 | 1 | 37.6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19.6 | 3 | 3.0 | 14.0 |
| | | 통근·통학 | 54.1 | 3 | 13.4 | 3.5 |
| | | 장기 실거주 | 45.6 | 1 | 8.2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경북 성주군의 체류인구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은 33.1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중기(10.4%), 정기(5.8%), 장기(11.1%) 체류인구가 비교적 많지만 이들의 운송교통 소비액은 높지 않다. 또한 통근·통학 인구(7.6%)와 장기 실거주 인구(6.5%)도 비중이 높은 편이나, 이들 역시 운송교통 부문에서 높은 소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주군 전체 운송교통 소비액이 높은 이유는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이 57.5%로 높고, 이들의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이 48.0천 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성주군은 대구, 구미 등 인근 도시민이 성밖숲, 가야산생태탐방원, 포천계곡, 금수문화공원야영장, 가야산오토캠핑장 등 자연 자원을 즐기기 위해 반복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귀가길에 차량을 주유하면서 운송교통 소비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주군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에 주유소 시설을 갖춘 성주휴게소가 위치해 있는데, 성주군 체류인구 차량의 주유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 역할을 하여 운송교통 소비액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의 높은 운송교통 소비는 지역 내 일상적 생활 수요라기보다는, 주유소와 휴게소 등 교통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방문 인구의 소비 행태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경북 성주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 |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 순위 | 경북 성주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44.3 | 51 | 30.4 | 29.2 |
| | | 체류인구 | 33.1 | 2 | 67.9 | 70.0 |
| | | 등록외국인 | 5.1 | 64 | 1.8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0 | 20 | 0.2 | 0.6 |
| | | 청년층 | 9.3 | 8 | 11.1 | 16.1 |
| | | 중장년층 | 36.4 | 2 | 76.3 | 72.0 |
| | | 고령층 | 34.8 | 2 | 12.4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22.9 | 1 | 36.9 | 39.8 |
| | | 단기 | 36.9 | 1 | 35.8 | 42.0 |
| | | 중기 | 66.4 | 2 | 10.4 | 7.1 |
| | | 정기 | 27.7 | 23 | 5.8 | 3.8 |
| | | 장기 | 26.2 | 34 | 11.1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2.9 | 1 | 42.5 | 57.5 |
| | | 재방문 | 48.0 | 2 | 57.5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0.5 | 3 | 68.2 | 58.7 |
| | | 숙박 | 38.6 | 1 | 31.8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55.2 | 1 | 34.0 | 31.6 |
| | | 휴일 | 7.5 | 10 | 31.4 | 36.2 |
| | | 평일+휴일 | 34.6 | 3 | 34.5 | 32.2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순위 | 경북 성주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29.2 | 2 | 6.6 | 14.0 |
| | | 통근·통학 | 23.3 | 54 | 7.6 | 3.5 |
| | | 장기 실거주 | 26.6 | 26 | 6.5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창녕군의 체류인구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은 27.3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체류인구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체류기간별로 보면, 당일(20.8천 원, 2위), 단기(25.0천 원, 5위), 중기(47.5천 원, 6위), 정기(39.9천 원, 7위), 장기(41.8천 원, 5위) 등 모든 집단이 상위권에 분포한다.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운송교통 소비가 높게 나타난다. 창녕군은 철도망이 부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내부 이동에서 자가용 의존도가 높다. 우포늪, 화왕산 등 자연관광지와 읍·면 간 생활권 이동도 대부분 차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연료비, 주차비, 교통서비스 이용 등이 생활 및 체류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즉, 창녕군에서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관광객, 단기 체류자, 장기 체류자 모두가 교통소비를 일정 수준 이상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표 3-22** 경남 창녕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운송교통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순위 | 경남 창녕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64.1 | 3 | 31.5 | 29.2 |
| | | 체류인구 | 27.3 | 3 | 66.4 | 70.0 |
| | | 등록외국인 | 10.3 | 10 | 2.2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0.2 | 80 | 0.3 | 0.6 |
| | | 청년층 | 10.5 | 7 | 10.2 | 16.1 |
| | | 중장년층 | 28.7 | 3 | 77.1 | 72.0 |
| | | 고령층 | 32.9 | 3 | 12.4 | 11.3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 1인당 운송 교통 소비액 순위 | 경남 창녕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체류 기간 | 당일 | 20.8 | 2 | 41.0 | 39.8 |
| | | 단기 | 25.0 | 5 | 37.3 | 42.0 |
| | | 중기 | 47.5 | 6 | 8.5 | 7.1 |
| | | 정기 | 39.9 | 7 | 4.4 | 3.8 |
| | | 장기 | 41.8 | 5 | 8.7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1.4 | 2 | 47.4 | 57.5 |
| | | 재방문 | 41.7 | 3 | 52.6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1.0 | 2 | 65.5 | 58.7 |
| | | 숙박 | 20.2 | 6 | 34.5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43.2 | 2 | 31.3 | 31.6 |
| | | 휴일 | 8.3 | 6 | 37.0 | 36.2 |
| | | 평일+휴일 | 33.9 | 4 | 31.6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14.0 | 7 | 7.7 | 14.0 |
| | | 통근·통학 | 43.5 | 9 | 4.2 | 3.5 |
| | | 장기 실거주 | 39.2 | 6 | 6.4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6) 보건의료

체류인구 보건의료 소비가 높은 지역은 부산 서구(78.2천 원, 1위), 대구 남구(48.4천 원, 2위), 전남 화순군(39.7천 원, 3위), 부산 동구(21.3천 원, 4위), 경북 안동시(18.6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부산 서구는 체류인구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이 78.2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한다. 체류인구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61.8%)과 고령층(18.0%)이 다수를 차지해 의료 수요가 높은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집단의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도 중장년층 79.8천 원, 고령층 140.1천 원으로 매우 높아, 고령 환자의 의료 수요가 지역 전체 보건의료 소비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이 55.6%로 과반을 차지하며, 이들의 소비액도 81.8천 원으로 1위를 기록한다. 이는 정밀검사·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특성과 맞닿아 있다. 대학병원 진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촬영, 진단, 추적검사 등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복적 이용이 소비액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산 서구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밀집해 있어 고액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은 87.8천 원으로 월등히 높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단기숙박 체류는 관광 목적이 주를 이루어 보건의료 소비가 크지 않은 반면, 부산 서구에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 단기숙박 체류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3** 부산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순위 | 부산 서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41.9 | 1 | 34.1 | 29.2 |
| | | 체류인구 | 78.2 | 1 | 65.3 | 70.0 |
| | | 등록외국인 | 22.0 | 3 | 0.6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4 | 14 | 1.3 | 0.6 |
| | | 청년층 | 19.2 | 1 | 18.8 | 16.1 |
| | | 중장년층 | 79.8 | 1 | 61.8 | 72.0 |
| | | 고령층 | 140.1 | 1 | 18.0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54.3 | 1 | 39.1 | 39.8 |
| | | 단기 | 87.8 | 1 | 30.1 | 42.0 |
| | | 중기 | 162.8 | 1 | 11.4 | 7.1 |
| | | 정기 | 61.5 | 2 | 8.2 | 3.8 |
| | | 장기 | 62.0 | 2 | 11.2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73.8 | 1 | 44.4 | 57.5 |
| | | 재방문 | 81.8 | 1 | 55.6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54.3 | 1 | 74.1 | 58.7 |
| | | 숙박 | 146.7 | 1 | 25.9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79.8 | 1 | 45.9 | 31.6 |
| | | 휴일 | 20.2 | 1 | 19.1 | 36.2 |
| | | 평일+휴일 | 107.8 | 1 | 35.0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64.0 | 2 | 5.0 | 14.0 |
| | | 통근·통학 | 21.5 | 2 | 9.2 | 3.5 |
| | | 장기 실거주 | 87.0 | 2 | 6.7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대구 남구의 체류인구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은 48.4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남구의 체류인구 중 청년층(21.7%)과 고령층(15.0%)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체류인구의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은 87.3천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소비는 장기 실거주 인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대구 남구의 경우 오히려 당일(43.0천 원), 단기(57.7천 원), 중기(71.8천 원)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이 정기(35.8천 원)나 장기(32.4천 원)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78.1천 원으로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38.9천 원)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에서 외부 환자와 보호자가 단기간 집중적인 진료·검사·치료를 받으며 체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구 남구의 높은 보건의료 소비는 지역 거주민보다는 단기간 의료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체류인구에 의해 주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4** 대구 남구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순위 | 대구 남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32.2 | 10 | 36.1 | 29.2 |
| | | 체류인구 | 48.4 | 2 | 63.4 | 70.0 |
| | | 등록외국인 | 14.0 | 16 | 0.4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4 | 17 | 1.5 | 0.6 |
| | | 청년층 | 13.1 | 3 | 21.7 | 16.1 |
| | | 중장년층 | 52.5 | 2 | 61.8 | 72.0 |
| | | 고령층 | 87.3 | 2 | 15.0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43.0 | 2 | 36.6 | 39.8 |
| | | 단기 | 57.7 | 2 | 28.3 | 42.0 |
| | | 중기 | 71.8 | 3 | 12.0 | 7.1 |
| | | 정기 | 35.8 | 3 | 8.2 | 3.8 |
| | | 장기 | 32.4 | 8 | 14.9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57.7 | 2 | 36.0 | 57.5 |
| | | 재방문 | 43.2 | 3 | 64.0 | 42.5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순위 | 대구 남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38.3 | 2 | 76.1 | 58.7 |
| | | 숙박 | 80.5 | 3 | 23.9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59.1 | 2 | 40.5 | 31.6 |
| | | 휴일 | 16.3 | 2 | 19.3 | 36.2 |
| | | 평일+휴일 | 53.0 | 3 | 40.2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78.1 | 1 | 2.3 | 14.0 |
| | | 통근·통학 | 19.3 | 3 | 9.5 | 3.5 |
| | | 장기 실거주 | 38.9 | 7 | 9.8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전남 화순군의 체류인구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은 39.7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3위에 해당한다. 화순군은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이 73.5%로 높으며, 특히 중장년층(74.1%)과 고령층(14.3%)이 주를 이루고 이들의 1인당 소비액이 각각 38.0천 원, 67.9천 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당일(17.6천 원), 단기(34.6천 원) 체류인구에 비해 중기(110.3천 원), 정기(67.9천 원), 장기(110.8천 원), 장기 실거주(164.1천 원) 체류인구의 1인당 보건의료 소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 방문객 중심이 아닌, 오랜 기간 머물면서 반복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화순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암특화 병원)과 같은 대규모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 장기 치료나 정기적인 진료를 위해 체류하거나 전원 오는 환자 및 보호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5** 전남 화순군 인구 유형별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 1인당 보건의료 소비액 순위 | 전남 화순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35.9 | 5 | 26.1 | 29.2 |
| | | 체류인구 | 39.7 | 3 | 73.5 | 70.0 |
| | | 등록외국인 | 20.8 | 6 | 0.4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9 | 9 | 0.2 | 0.6 |
| | | 청년층 | 15.9 | 2 | 11.4 | 16.1 |
| | | 중장년층 | 38.0 | 3 | 74.1 | 72.0 |
| | | 고령층 | 67.9 | 3 | 14.3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7.6 | 3 | 44.0 | 39.8 |
| | | 단기 | 34.6 | 3 | 37.0 | 42.0 |
| | | 중기 | 110.3 | 2 | 7.6 | 7.1 |
| | | 정기 | 67.9 | 1 | 4.4 | 3.8 |
| | | 장기 | 110.8 | 1 | 7.0 | 7.3 |
| | 재방문여부 | 일회성 방문 | 24.8 | 3 | 44.4 | 57.5 |
| | | 재방문 | 51.6 | 2 | 55.6 | 42.5 |
| | 숙박여부 | 비숙박 | 23.4 | 3 | 75.2 | 58.7 |
| | | 숙박 | 88.9 | 2 | 24.8 | 41.3 |
| | 체류요일패턴 | 평일 | 42.8 | 3 | 38.0 | 31.6 |
| | | 휴일 | 4.9 | 6 | 31.3 | 36.2 |
| | | 평일+휴일 | 71.4 | 2 | 30.7 | 32.2 |
| | 체류목적 | 단기숙박 | 18.9 | 5 | 5.9 | 14.0 |
| | | 통근·통학 | 13.5 | 7 | 4.7 | 3.5 |
| | | 장기 실거주 | 164.1 | 1 | 4.5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7) 교육

체류인구 교육 소비가 높은 지역은 대구 서구(2.3천 원, 1위), 경북 안동시(2.2천 원, 2위), 대구 남구(1.7천 원, 3위), 경북 영주시(1.2천 원, 4위), 충남 논산시(1.2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대구 서구의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은 2.3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가 대구 내에서 2021년 기준 교육지표가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체류인구를 살펴보면 청년층(18.2%)과 중장년층(69.2%)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이들 연령대에서 교육 소비액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러한 특징은 서구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의 영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학은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신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중년 특별과정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다시 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많다. 이들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소비가 청소년 중심이 아닌 성인·중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이러한 특성이 대구 서구의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26** 대구 서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교육 소비액 | 1인당 교육 소비액 순위 | 대구 서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4.2 | 31 | 43.2 | 29.2 |
| | | 체류인구 | 2.3 | 1 | 56.2 | 70.0 |
| | | 등록외국인 | 15.4 | 43 | 0.7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1 | 9 | 0.9 | 0.6 |
| | | 청년층 | 2.3 | 2 | 18.2 | 16.1 |
| | | 중장년층 | 2.7 | 1 | 69.2 | 72.0 |
| | | 고령층 | 0.3 | 8 | 11.7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7 | 1 | 30.9 | 39.8 |
| | | 단기 | 2.1 | 1 | 28.2 | 42.0 |
| | | 중기 | 2.7 | 2 | 12.2 | 7.1 |
| | | 정기 | 2.6 | 6 | 9.7 | 3.8 |
| | | 장기 | 3.5 | 14 | 18.9 | 7.3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교육 소비액 | 1인당 교육 소비액 순위 | 대구 서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8 | 1 | 31.0 | 57.5 |
| | | 재방문 | 2.6 | 2 | 69.0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2.0 | 2 | 75.1 | 58.7 |
| | | 숙박 | 3.3 | 1 | 24.9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1.8 | 1 | 35.1 | 31.6 |
| | | 휴일 | 1.7 | 1 | 20.0 | 36.2 |
| | | 평일+휴일 | 3.0 | 2 | 44.9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0.4 | 12 | 2.5 | 14.0 |
| | | 통근·통학 | 1.8 | 11 | 14.3 | 3.5 |
| | | 장기 실거주 | 5.1 | 10 | 10.4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경북 안동시는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이 2.2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안동이 북부 경북의 중심 도시로서 교육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동에는 13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예천군, 청송군, 영주시 등 인근 지역 학생들이 안동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 규모에 비해 대학교 수가 많은 편으로, 안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등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비중(18.1%)이 높다. 통근통학 체류인구 비중은 전체 체류인구 중 2.1%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인당 교육 소비액은 13.5천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안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집중된 교육 거점 도시로서, 통근통학 체류인구와 장기 실거주 청년 체류인구가 교육비 지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안동시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27** 경북 안동시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교육 소비액 | 1인당 교육 소비액 순위 | 경북 안동시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8.4 | 6 | 41.5 | 29.2 |
| | | 체류인구 | 2.2 | 2 | 58.2 | 70.0 |
| | | 등록외국인 | 16.8 | 40 | 0.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1.8 | 14 | 0.6 | 0.6 |
| | | 청년층 | 2.0 | 4 | 18.1 | 16.1 |
| | | 중장년층 | 2.5 | 2 | 71.5 | 72.0 |
| | | 고령층 | 0.4 | 5 | 9.9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1.1 | 4 | 37.8 | 39.8 |
| | | 단기 | 1.2 | 5 | 42.3 | 42.0 |
| | | 중기 | 3.3 | 1 | 7.7 | 7.1 |
| | | 정기 | 6.1 | 1 | 3.1 | 3.8 |
| | | 장기 | 9.4 | 1 | 9.1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0 | 5 | 50.8 | 57.5 |
| | | 재방문 | 3.4 | 1 | 49.2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2.1 | 1 | 56.8 | 58.7 |
| | | 숙박 | 2.4 | 2 | 43.2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1.3 | 4 | 30.7 | 31.6 |
| | | 휴일 | 1.0 | 4 | 34.6 | 36.2 |
| | | 평일+휴일 | 4.2 | 1 | 34.7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0.4 | 13 | 12.3 | 14.0 |
| | | 통근·통학 | 13.5 | 1 | 2.1 | 3.5 |
| | | 장기 실거주 | 8.6 | 1 | 7.7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대구 남구는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이 1.7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위를 기록하였다. 남구의 체류인구를 보면, 청년층 비중(21.7%)이 높다.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영남대학교 대구캠퍼스, 영남이공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1인당 교육 소비액은 1.3천 원으로 대학 밀집도를 감안하면 적어 보인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실제로는 부모 세대가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주

체인 중장년층 부모들은 남구의 생활인구 통계(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절대적인 교육 소비 지출액이 대학교 수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4위에 해당해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 남구의 높은 체류인구 1인당 교육 소비액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 집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8** 대구 남구 인구 유형별 1인당 교육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교육 소비액 | 1인당 교육 소비액 순위 | 대구 남구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0.7 | 62 | 36.1 | 29.2 |
| | | 체류인구 | 1.7 | 3 | 63.4 | 70.0 |
| | | 등록외국인 | 13.4 | 49 | 0.4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0.8 | 30 | 1.5 | 0.6 |
| | | 청년층 | 1.3 | 14 | 21.7 | 16.1 |
| | | 중장년층 | 2.2 | 3 | 61.8 | 72.0 |
| | | 고령층 | 0.2 | 18 | 15.0 | 11.3 |
| | 체류 기간 | 당일 | 1.2 | 3 | 36.6 | 39.8 |
| | | 단기 | 1.7 | 2 | 28.3 | 42.0 |
| | | 중기 | 1.8 | 6 | 12.0 | 7.1 |
| | | 정기 | 2.1 | 9 | 8.2 | 3.8 |
| | | 장기 | 2.8 | 22 | 14.9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1.2 | 2 | 36.0 | 57.5 |
| | | 재방문 | 1.9 | 3 | 64.0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1.5 | 3 | 76.1 | 58.7 |
| | | 숙박 | 2.2 | 3 | 23.9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1.5 | 2 | 40.5 | 31.6 |
| | | 휴일 | 1.3 | 2 | 19.3 | 36.2 |
| | | 평일+휴일 | 2.1 | 5 | 40.2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0.4 | 15 | 2.3 | 14.0 |
| | | 통근·통학 | 1.8 | 10 | 9.5 | 3.5 |
| | | 장기 실거주 | 3.3 | 19 | 9.8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8) 소매

체류인구 소매 소비가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71.2천 원, 1위), 충남 부여군(59.5천 원, 2위), 경북 영주시(56.2천 원, 3위), 경북 안동시(51.1천 원, 4위), 강원 태백시(49.9천 원, 5위) 등으로 나타난다.

경북 울릉군의 체류인구 1인당 소매 소비액은 71.2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 울릉군 체류인구 비중은 75.6%로 인구감소지역 전체(70.0%)보다 높고, 특히 단기 체류인구(82.8%)와 숙박 체류인구(84.8%)가 두드러진다. 단기 체류인구의 1인당 소매 소비액은 69.5천 원, 숙박 체류인구는 74.0천 원으로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중장년층(70.1%)과 고령층(16.8%) 체류인구 비중이 높고, 이들의 1인당 소매 소비액 역시 각각 74.4천 원, 67.3천 원으로 체류인구 전체 소비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울릉군은 섬 지역 특성상 체류하는 동안 생활용품과 생필품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며, 기상 악화로 예상치 못하게 체류가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표 3-29** 경북 울릉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소매 소비액 | 1인당 소매 소비액 순위 | 경북 울릉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54.2 | 32 | 24.1 | 29.2 |
| | | 체류인구 | 71.2 | 1 | 75.6 | 70.0 |
| | | 등록외국인 | 135.6 | 65 | 0.3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9.0 | 12 | 0.5 | 0.6 |
| | | 청년층 | 60.1 | 1 | 12.6 | 16.1 |
| | | 중장년층 | 74.4 | 1 | 70.1 | 72.0 |
| | | 고령층 | 67.3 | 3 | 16.8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46.4 | 3 | 9.8 | 39.8 |
| | | 단기 | 69.5 | 1 | 82.8 | 42.0 |
| | | 중기 | 83.2 | 2 | 3.2 | 7.1 |
| | | 정기 | 107.7 | 1 | 1.1 | 3.8 |
| | | 장기 | 171.9 | 1 | 3.0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69.0 | 1 | 88.9 | 57.5 |
| | | 재방문 | 88.6 | 1 | 11.1 | 42.5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소매 소비액 | 1인당 소매 소비액 순위 | 경북 울릉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55.2 | 2 | 15.2 | 58.7 |
| | | 숙박 | 74.0 | 1 | 84.8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59.9 | 1 | 31.1 | 31.6 |
| | | 휴일 | 60.2 | 2 | 15.3 | 36.2 |
| | | 평일+휴일 | 80.8 | 3 | 53.7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69.1 | 1 | 37.7 | 14.0 |
| | | 통근·통학 | 101.8 | 4 | 0.1 | 3.5 |
| | | 장기 실거주 | 173.8 | 1 | 2.9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충남 부여군의 체류인구 1인당 소매 소비액은 59.5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했다. 체류인구 비중은 69.0%로 인구감소지역 전체(70.0%)와 비슷하지만, 특히 당일 체류인구(45.0%)와 휴일 체류인구(43.5%)가 두드러진다. 이들의 1인당 소매 소비액은 각각 59.4천 원, 65.0천 원으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 아울렛 부여점과 같은 대형 쇼핑시설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 아울렛 부여점은 백제문화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즐기려는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휴일에 쇼핑을 목적으로 부여군을 찾는 체류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체류인구 소매 소비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3-30** 충남 부여군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구분 | 1인당 소매 소비액 | 1인당 소매 소비액 순위 | 충남 부여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주민등록인구 | 149.7 | 39 | 30.4 | 29.2 |
| | 체류인구 | 59.5 | 2 | 69.0 | 70.0 |
| | 등록외국인 | 149.2 | 51 | 0.6 | 0.7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소매 소비액 | 1인당 소매 소비액 순위 | 충남 부여군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32.9 | 8 | 0.4 | 0.6 |
| | | 청년층 | 56.3 | 2 | 14.0 | 16.1 |
| | | 중장년층 | 61.2 | 2 | 76.2 | 72.0 |
| | | 고령층 | 51.9 | 12 | 9.4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59.4 | 1 | 45.0 | 39.8 |
| | | 단기 | 49.4 | 2 | 41.1 | 42.0 |
| | | 중기 | 68.0 | 13 | 6.0 | 7.1 |
| | | 정기 | 73.3 | 17 | 2.6 | 3.8 |
| | | 장기 | 121.4 | 19 | 5.4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56.1 | 2 | 61.6 | 57.5 |
| | | 재방문 | 65.1 | 6 | 38.4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59.4 | 1 | 58.5 | 58.7 |
| | | 숙박 | 59.7 | 12 | 41.5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9.4 | 3 | 28.3 | 31.6 |
| | | 휴일 | 65.0 | 1 | 43.5 | 36.2 |
| | | 평일+휴일 | 71.3 | 10 | 28.2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45.1 | 5 | 13.8 | 14.0 |
| | | 통근·통학 | 69.1 | 14 | 1.8 | 3.5 |
| | | 장기 실거주 | 128.6 | 20 | 4.4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경북 영주시의 체류인구 1인당 소매 소비액은 56.2천 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체류인구 비중은 51.3%이며, 특히 단기 체류인구(45.6%)와 숙박 체류인구(52.6%)가 두드러진다. 이들의 1인당 소매 소비액은 단기 체류인구 45.0천 원, 숙박 체류인구 65.2천 원으로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 영주시에는 풍기인삼시장, 풍기토종인삼시장, 풍기중앙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선비골전통시장, 공설시장, 신영주번개시장·종합시장, 영주문화의거리, 소백쇼핑몰 등 12개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어 인삼·홍삼, 사과 등 특산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 유입이 활발하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연령대, 체류기간 등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체류인구 유형에서

소매 소비액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전반의 물가 수준이 높아 소매 소비 지출이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3-31** 경북 영주시 인구 유형별 1인당 소매 소비액과 생활인구 구조

(단위: 천 원/인, 위, %, %)

| 대분류 | | 구분 | 1인당 소매 소비액 | 1인당 소매 소비액 순위 | 경북 영주시 인구 비중 |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 비중 |
|---|---|---|---|---|---|---|
| 생활인구 유형 | | 주민등록인구 | 192.4 | 7 | 48.2 | 29.2 |
| | | 체류인구 | 56.2 | 3 | 51.3 | 70.0 |
| | | 등록외국인 | 206.4 | 4 | 0.5 | 0.7 |
| 체류인구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27.4 | 18 | 0.6 | 0.6 |
| | | 청년층 | 39.7 | 4 | 16.0 | 16.1 |
| | | 중장년층 | 57.1 | 3 | 71.9 | 72.0 |
| | | 고령층 | 74.9 | 2 | 11.5 | 11.3 |
| | 체류기간 | 당일 | 36.6 | 5 | 33.2 | 39.8 |
| | | 단기 | 45.0 | 3 | 45.6 | 42.0 |
| | | 중기 | 77.4 | 5 | 8.5 | 7.1 |
| | | 정기 | 85.2 | 8 | 3.1 | 3.8 |
| | | 장기 | 149.5 | 6 | 9.6 | 7.3 |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38.1 | 7 | 50.4 | 57.5 |
| | | 재방문 | 74.6 | 4 | 49.6 | 42.5 |
| | 숙박 여부 | 비숙박 | 46.2 | 3 | 47.4 | 58.7 |
| | | 숙박 | 65.2 | 4 | 52.6 | 41.3 |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8.9 | 4 | 27.3 | 31.6 |
| | | 휴일 | 39.8 | 4 | 36.4 | 36.2 |
| | | 평일+휴일 | 85.6 | 2 | 36.3 | 32.2 |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38.0 | 15 | 15.4 | 14.0 |
| | | 통근·통학 | 86.2 | 7 | 1.4 | 3.5 |
| | | 장기 실거주 | 153.2 | 5 | 8.8 | 5.4 |

주: 체류인구의 체류목적별 비중 합은 100%에 미치지 않음. 이는 단기숙박, 통근·통학, 장기 실거주 외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3. 등록외국인 소비의 지역별 편차

89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산업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영암

군은 등록외국인 인구 비중이 8.1%로 89개 지역 중 가장 높으며, 소비 비중도 10.3%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업과 대불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로, 외국인이 지역경제 소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남 함안군(등록외국인 인구 비중 2.9%, 등록외국인 소비 비중 3.2%)과 경북 고령군(등록외국인 인구 비중 2.5%, 등록외국인 소비 비중 3.4%) 역시 등록외국인 인구 비중과 소비 비중에 있어서 상위권에 속하며, 두 지역 모두 등록외국인의 상당수가 농업·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지역의 등록외국인 1인당 소비액을 보면, 전남 영암군은 281.3천 원(18위), 경남 함안군은 239.9천 원(43위), 경북 고령군은 234.5천 원(48위)로 모두 중위권에서 상위권에 해당한다. 반면, 충북 제천시(351.3천 원, 1위), 전북 정읍시(337.6천 원, 2위), 경북 영주시(330.0천 원, 3위)처럼 등록외국인 인구와 소비 비중은 낮더라도 1인당 소비액이 훨씬 높은 지역도 존재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나 소비 행태가 지역별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외국인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숙식 제공 여부에 따라 소비 여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 내 상권 발달 정도나 거주 형태, 계절근로와 상시근로 여부 등에 따라 소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표 3-32** 주요 지역별 등록외국인 소비 현황

(단위: %, 위, %, 위, 천 원/인, 위)

| 지역 | 인구 비중 | | 소비 비중 | | 1인당 소비액 | |
|---|---|---|---|---|---|---|
| | 비중 | 순위 | 비중 | 순위 | 소비액 | 순위 |
| 전남 영암군 | 8.1 | 1 | 10.3 | 1 | 281.3 | 18 |
| 경남 함안군 | 2.9 | 2 | 3.2 | 3 | 239.9 | 43 |
| 경북 고령군 | 2.5 | 3 | 3.4 | 2 | 234.5 | 48 |
| 충북 제천시 | 0.8 | 21 | 0.8 | 27 | 351.3 | 1 |
| 전북 정읍시 | 1.1 | 15 | 1.3 | 18 | 337.6 | 2 |
| 경북 영주시 | 0.5 | 38 | 0.5 | 53 | 330.0 | 3 |

주: 비중은 생활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제3절 • 시간: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

## 1. 연월별 체류인구 소비 현황

연월별 체류인구 소비 현황을 보면, 인구와 소비 비중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명절에 집중되어 8월(인구 비중 11.2%, 소비 비중 10.8%)과 9월(인구 비중 10.2%, 소비 비중 9.5%)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9월은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 귀성·귀향 인구와 명절 소비가 겹치면서 인구와 소비 비중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7월과 10~11월 역시 인구와 소비 비중이 상위권에 속해 본격적인 나들이와 관광 활동이 두드러진 계절임을 보여준다. 한편, 1인당 소비액은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12월은 124.2천 원으로 1위, 1월은 123.9천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겨울철이 되면 체류인구 수는 줄어들지만 스키와 같은 고소비 레저 활동을 즐기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겨울철에는 체류인구 자체는 많지 않지만 1인당 지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평균 소비액이 높게 집계된 것이다.

**표 3-33** 연월별 체류인구 소비 현황

(단위: %, 위, %, 위, 천 원/인, 위)

| 연월 | 인구 비중 | | 소비 비중 | | 1인당 소비액 | |
|---|---|---|---|---|---|---|
| | 비중 | 순위 | 비중 | 순위 | 소비액 | 순위 |
| 2024년 1월 | 6.3 | 12 | 6.8 | 12 | 123.9 | 2 |
| 2024년 2월 | 7.3 | 9 | 7.2 | 10 | 113.2 | 9 |
| 2024년 3월 | 7.2 | 10 | 7.4 | 9 | 117.9 | 4 |
| 2024년 4월 | 7.9 | 8 | 8.0 | 8 | 117.0 | 5 |
| 2024년 5월 | 9.0 | 3 | 9.1 | 3 | 115.4 | 6 |
| 2024년 6월 | 8.6 | 6 | 8.6 | 6 | 115.0 | 7 |
| 2024년 7월 | 8.7 | 5 | 8.9 | 4 | 118.6 | 3 |
| 2024년 8월 | 11.2 | 1 | 10.8 | 1 | 111.0 | 10 |
| 2024년 9월 | 10.2 | 2 | 9.5 | 2 | 106.7 | 12 |
| 2024년 10월 | 8.9 | 4 | 8.6 | 5 | 110.9 | 11 |
| 2024년 11월 | 8.1 | 7 | 8.1 | 7 | 114.3 | 8 |
| 2024년 12월 | 6.5 | 11 | 7.1 | 11 | 124.2 | 1 |

주: 비중은 1년 전체 체류인구 중 각 연월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2. 시기별 체류인구의 인구 및 소비 특성

겨울철(1월, 12월), 여름 휴가철(8월), 추석 명절(9월), 봄·초여름철(5~7월), 가을철(10~11월) 등 시기를 구분하여 특정 시기별로 체류인구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떤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지를 살펴봤다.

**표 3-34** 시기별 체류인구 유형별 비중

(단위: %)

| 대분류 | 구분 | 겨울철 (1·12월) | 봄·여름철 (5~7월) | 여름 휴가철 (8월) | 추석 명절 (9월) | 가을철 (10~11월) | 전체 (1~12월) |
|---|---|---|---|---|---|---|---|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0.7 | 0.6 | 0.6 | 0.5 | 0.4 | 0.6 |
| | 청년층 | 17.9 | 15.6 | 17.1 | 16.6 | 14.2 | 16.1 |
| | 중장년층 | 70.7 | 72.4 | 72.5 | 72.4 | 72.1 | 72.0 |
| | 고령층 | 10.6 | 11.4 | 9.8 | 10.5 | 13.2 | 11.3 |
| 체류 기간 | 당일 | 38.9 | 39.6 | 38.2 | 38.4 | 42.9 | 39.8 |
| | 단기 | 39.7 | 42.4 | 46.6 | 44.8 | 39.5 | 42.0 |
| | 중기 | 7.7 | 7.1 | 6.4 | 7.4 | 6.8 | 7.1 |
| | 정기 | 3.9 | 3.6 | 3.1 | 4.2 | 3.6 | 3.8 |
| | 장기 | 9.7 | 7.4 | 5.7 | 5.2 | 7.3 | 7.3 |
| 재방문 여부 | 일회성 방문 | 73.7 | 53.9 | 59.8 | 53.6 | 53.7 | 57.5 |
| | 재방문 | 26.3 | 46.1 | 40.2 | 46.4 | 46.3 | 42.5 |
| 숙박 여부 | 비숙박 | 59.5 | 58.9 | 54.5 | 55.7 | 62.1 | 58.7 |
| | 숙박 | 40.5 | 41.1 | 45.5 | 44.3 | 37.9 | 41.3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34.8 | 34.1 | 33.0 | 23.6 | 31.4 | 31.6 |
| | 휴일 | 30.7 | 33.7 | 30.1 | 49.6 | 36.0 | 36.2 |
| | 평일+휴일 | 34.5 | 32.2 | 37.0 | 26.8 | 32.6 | 32.2 |
| 체류 목적 | 단기숙박 | 11.6 | 9.0 | 31.0 | 27.7 | 22.8 | 14.0 |
| | 통근·통학 | 4.5 | 3.5 | 2.7 | 2.6 | 3.5 | 3.5 |
| | 장기 실거주 | 6.8 | 5.4 | 4.3 | 4.3 | 5.3 | 5.4 |

주: 비중은 대분류 내 체류인구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1~12월 체류인구 분포와 비교해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겨울철(1·12월)은 단기숙박 체류(11.6%)가 전체(14.0%)보다 낮아 여가·관광 목적의 단기 방

문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대신 중기(7.7%)·장기 체류인구(9.7%), 통근통학 체류인구(4.5%),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6.8%) 비중이 모두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 일상적 생활 기반을 둔 체류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이는 겨울철 관광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인구 비중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비중이 73.7%로 높고,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은 26.3%로 낮다. 당월 포함 최근 3개월 누적 체류인수가 당월 누적 체류일수보다 큰 경우 재방문 인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해 1~2월 재방문 인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봄·여름철(5~7월)은 단기 체류인구(42.4%)와 재방문 체류인구(46.1%) 비중이 전체(각각 42.0%, 42.5%)보다 높다. 이는 기후적으로 야외 활동과 행락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찾는 방문 패턴이 강화된 결과다. 그러나 단기숙박 체류 비중은 9.0%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장기간 머무르기보다는 당일 또는 반복적인 단기 방문 중심으로 소비가 형성되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8월은 단기숙박 체류인구(31.0%)와 숙박 체류인구(45.5%)가 전체(각각 14.0%, 41.3%)를 크게 상회하며, 휴가철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장기 체류인구(5.7%)와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4.3%) 비중은 전체보다 낮다. 또한, 평일과 휴일 연달아 체류하는 비중이 37.0%로 전체 평균(32.2%)보다 높아, 장기 휴가나 연속된 연휴를 활용한 체류 패턴이 나타난다. 여름 휴가철은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며 단기숙박 행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9월은 휴일에만 체류하는 인구 비중이 49.6%로 전체 평균(36.2%)보다 크게 높아, 명절 귀향과 가족 방문이 주요 체류 목적임을 잘 보여준다. 단기숙박 체류도 27.7%로 전체(14.0%)보다 높아, 친척 방문이나 명절 행사 참여뿐 아니라 명절 연휴를 활용한 국내여행 수요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을철(10~11월)은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22.8%)이 전체(14.0%)보다 크고,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62.1%) 또한 전체(58.7%)보다 크다. 단풍 관광, 지역축제 등 계절적 이벤트로 짧은 기간 방문하거나 당일 체험하는 패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숙박 체류인구는 37.9%로 전체(41.3%)보다 낮고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도 46.3%로 전체(42.5%)보다 높아, 가을철 체류는 가볍지만 반복적인 체류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다.

시기별 체류인구의 업종 소비 특성을 보면, 겨울철(1·12월)은 생활 기반 지출이 두드

러진 시기다. 보건의료(9.4%)와 운송교통(10.1%) 비중이 전체(각각 7.3%, 8.6%)를 웃도는데, 이는 장기 체류 및 장기 실거주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다. 이들은 지역 내 의료 서비스와 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소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숙박 소비 비중(7.3%) 역시 높게 나타나는데, 리조트 숙박과 스키·워터파크 이용 등 겨울철 특유의 실내·레저형 활동을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봄·여름철(5~7월)은 음식(32.4%)과 문화여가(12.3%) 소비가 전체 수준을 웃돌며, 근교 지역을 방문해 외식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여름 휴가철(8월)에는 숙박(6.6%)과 운송교통(13.3%)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 수요가 집중되고 장거리 이동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석 명절(9월)에는 운송교통(13.8%)과 소매(32.2%) 소비가 두드러진다. 귀성·귀향 이동으로 교통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구입으로 소매 소비가 확대된 결과다. 가을철(10~11월)에는 문화여가(11.6%)와 운송교통(15.2%) 소비가 늘어나는데, 단풍 관광이나 지역축제 참여 등 가볍지만 반복적인 체류가 중심을 이루며 인근 교외 지역 방문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표 3-35** 시기별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

(단위: %)

| 시기 | 음식 | 숙박 | 문화여가 | 개인서비스 | 운송교통 | 보건의료 | 교육 | 소매 |
|---|---|---|---|---|---|---|---|---|
| 전체 (1~12월) | 31.4 | 5.6 | 10.2 | 3.6 | 8.6 | 7.3 | 0.6 | 31.2 |
| 겨울철 (1·12월) | 30.9 | 7.3 | 5.4 | 4.3 | 10.1 | 9.4 | 0.7 | 30.3 |
| 봄·여름철 (5~7월) | 32.4 | 5.6 | 12.3 | 3.6 | 5.7 | 7.1 | 0.6 | 31.9 |
| 여름 휴가철 (8월) | 31.0 | 6.6 | 8.8 | 2.8 | 13.3 | 5.7 | 0.6 | 29.2 |
| 추석 명절 (9월) | 28.6 | 4.1 | 10.0 | 2.9 | 13.8 | 5.8 | 0.5 | 32.2 |
| 가을철 (10~11월) | 28.8 | 4.0 | 11.6 | 3.5 | 15.2 | 6.5 | 0.6 | 27.1 |

주: 시기별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 합은 100%가 아님. 온라인소매, 기타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4

# 생활인구 소비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류 결과
**제3절**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 분석
**제4절** 소결

# 제4장 생활인구 소비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특성 분석

## 제1절 • 분석개요

###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세부 집단의 규모와 소비, 그리고 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지역 내 귀속되는 정도를 종합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즉, 어떤 인구가 많이 존재하고, 누가 많이 소비하며, 그 지출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많이 파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인구 비중, 소비 비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을 인구 집단별로 산출하였다. 인구 집단은 생활인구 유형과 체류인구의 연령대, 체류 기간, 재방문 여부, 숙박 여부, 체류 요일, 체류 목적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분류 기준과 조작적 정의는 〈표 1-2〉에 정리하였다.

이 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와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해당 지역의 특정 인구 집단이 업종별로 지출한 카드금액에 시도(지역) 단위의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모두 합산한 뒤, 같은 집단의 총 카드지출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은 특정 인구 집단이 1원 지출할 때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이 유발되는지를 의미한다.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해당 지역의 특정 인구 집단의 업종별 지출액에 대해 한 번은 지역 생산유발계수로, 또 한 번은 전국 생산유발계수로 각각 산출한 총 파급효과를 비교한 비율로, 지역 합계를 전국 합계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얻는다. 즉, 특정 집단의 지출로 발생한 전체 파급효과 중 얼마가 지역 내부에 남는지를 백분율로 보여준다.

###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투입산출분석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통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입산출분석은 산업 간 상호의존 구조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다른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이며, 지역별 생활인구 소비지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이 포함되며, 소비지출 자료는 2024년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최종 연간 자료가 공표되기 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3분기 데이터를 임시로 활용하였다.

카드소비 데이터는 음식, 숙박, 문화여가, 개인서비스, 운송교통, 보건의료, 교육, 종합소매, 전문소매, 온라인소매, 기타 등 총 11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코드(통합소분류)와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카드소비 데이터 중 온라인소매, 기타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 데이터 간 업종 분류체계는 구성과 세분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카드소비 업종이 포괄적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세부 산업코드를 다수 매칭하고, 반대로 산업연관표의 산업이 더 포괄적인 경우에는 관련 카드 업종을 통합하여 연계하였다. 양자 간의 연계 기준은 별도의 연계표에 정리하였다.

**표 4-1** 생활인구 데이터와 지역산업연관표 간 업종 연계표

| 생활인구 데이터 업종 분류 | 지역산업연관표 업종 분류 | | 업종 연계 결과 |
|---|---|---|---|
| | 산업코드 | 산업명 | |
| 음식 | 581 | 음식점 및 주점 | 음식 |
| 숙박 | 582 | 숙박서비스 | 숙박 |
| 문화여가 | 790 |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문화여가 |
| | 800 |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 |
| 개인서비스 | 821 |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서비스 | 개인서비스 |
| | 822 | 개인서비스 | |
| 운송교통 | 531 | 철도운송서비스 | 운송교통 |
| | 532 | 도로운송서비스 | |
| | 540 | 수상운송서비스 | |
| | 550 | 항공운송서비스 | |

| 생활인구 데이터 업종 분류 | 지역산업연관표 업종 분류 | | 업종 연계 결과 |
|---|---|---|---|
| | 산업코드 | 산업명 | |
| | 561 | 운송보조서비스 | |
| | 563 | 보관 및 창고서비스 | |
| | 569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 |
| 보건의료 | 770 | 의료 및 보건 | 보건의료 |
| | 780 | 사회복지서비스 | |
| 교육 | 760 | 교육서비스 | 교육 |
| 종합소매 | 520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소매 |
| 전문소매 | 520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
| 온라인소매 | - | - | - |
| 기타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산업 간 파급효과 분석에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IRIO)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고, 17개 시도 간 산업연계가 반영된 통합소분류 기준 총거래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총거래표를 기반으로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I-A)^{-1}$)을 산출하였다. 이 행렬은 최종수요 벡터($f$)가 주어졌을 때 경제 내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유발되는 총산출($x$)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x = (I-A)^{-1}f$$

여기서 $I$는 항등행렬(Indentity matrix), $A$는 산업 간 중간재 거래 비율을 나타내는 투입계수행렬(Input coefficient matrix), $f$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으로 구성된 최종수요 벡터(Final demand vector)를 나타낸다.

분석은 R 언어의 ioanalysis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레온티에프 역행렬 계산, 생산유발계수 도출, 그리고 최종 생산유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국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지역 $r$의 산업 $j$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모든 지역과 산업에서 유발되는 총생산 증가액을 의미하며, 다음 수식에 의해 산출된다.

$$\text{전국 생산유발계수}_{rj} = \sum_{s}\sum_{i} L_{(s,i),(r,j)}$$

여기서, $L_{(s,i),(r,j)}$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원소로, 지역 $r$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지역 $s$ 산업 $i$에서 유발되는 생산 증가액을 나타낸다. 지역 내(시도 내) 생산유발계수는 지역 $r$의 산업 $j$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동일 지역 $r$내의 모든 산업에서 유발되는 총생산 증가액을 의미하며, 다음 수식에 의해 산출된다.

$$\text{지역내 생산유발계수}_{rj} = \sum_{i} L_{(r,i),(r,j)}$$

이후 카드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산업별 소비지출액에 해당 시도 산업의 전국 생산유발계수 또는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하여 전국 및 지역 내 총산출 증가액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단위의 소비지출을 산업연관표 기반의 시도 단위 경제구조와 연결하고, 해당 소비가 전국 또는 지역 경제에 유발하는 생산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집단별 소비 1단위당 총산출 증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2) 인구감소지역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인구감소지역의 소비 및 체류 기반 생활인구 특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결합한 2단계 분석 절차를 설계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며,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 관련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88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주요 지표는 인구 집단별 소비 기여율, 인구구성 비율, 체류 유형별 소비 비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등이며, 특히 생산유발 및 파급효과 관련 지표는 별도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실제 지역에서 소비와 체류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유발하는 생활인구의 구조와 행태, 그리고 그 소비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파급되고 자립적으로 순환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소비·체류·파급 특성을 기반으로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의 1단계에서는 고차원 지표의 수를 축소하고, 변수 간 중복성과 상관관계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군집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요인 수는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해석의 명료성을 확보하고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교 회전(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도출된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K-평균(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군집화 과정에서 유형 간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해당 군집의 대표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군집분석 결과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전형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본문에서 별도로 기술하고 해석상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소비 관련 지표는 시계열 변동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일정 수준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 결과이므로,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지역 정책 추진에 따라 군집의 특성과 분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군집분석 결과는 절대적 구분이 아닌 정책 참고를 위한 성격을 가지며, 지역에서 전략 수립 시에는 지역별 특수성과 시점별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 분석

인구감소지역별 소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류 규모나 소비 총량을 넘어, 누가 소비를 주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구감소지역 유형별로 소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인구 집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인구 유형, 체류인구의 연령대, 체류 기간, 재방문 여부, 숙박 여부, 체류 요일, 체류 목적, 소비 시기, 등록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인구 비중과 소비 비중을 분석하였다. 각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소비 주체를 도출하였으며, 이들이 소비를 집중하는 업종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소비 구조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군집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개입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2. 분석자료

### 1) 생활인구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의 '2. 분석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 2) 지역산업연관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산업연관표(Regional Input-Output Table, IRIO)는 한국은행이 작성·공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2003년부터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연도 산업연관표 작성 주기(5년 주기)에 맞추어 전국 지역(17개 시·도) 단위로 지역 간 투입산출표(IRIO)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 17개 시·도를 구분하여 지역 간 산업 간 거래(이출입)와 지역 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투입산출표이며, 산업 분류는 통합소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분석지표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규모(인구 비중), 소비 기여도(소비 비중), 그리고 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주요 소비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그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지역별로 어떤 인구 집단이 소비를 주도하며, 그 지출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어느 정도 지역 안에 귀속되는지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총 88개의 분석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지표는 인구 집단별 소비 기여율, 인구 구성 비율,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등으로, 각각은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보여준다. 이 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와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 1)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17개 시도의 지역 내(시도 내)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1.048~1.504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다. 해당 업종에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면, 해당 시도에서 총생산이 1.048~1.504배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 시도 및 업종별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시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서울 | 1.318 | 1.410 | 1.395 | 1.270 | 1.207 | 1.204 | 1.225 | 1.377 |
| 인천 | 1.226 | 1.252 | 1.201 | 1.185 | 1.194 | 1.156 | 1.131 | 1.240 |
| 경기 | 1.504 | 1.465 | 1.335 | 1.378 | 1.338 | 1.258 | 1.280 | 1.331 |
| 대전 | 1.246 | 1.235 | 1.204 | 1.163 | 1.193 | 1.143 | 1.141 | 1.240 |
| 세종 | 1.174 | 1.133 | 1.117 | 1.119 | 1.089 | 1.138 | 1.048 | 1.154 |
| 충북 | 1.458 | 1.298 | 1.224 | 1.192 | 1.222 | 1.239 | 1.128 | 1.218 |
| 충남 | 1.428 | 1.287 | 1.226 | 1.293 | 1.319 | 1.207 | 1.136 | 1.233 |
| 광주 | 1.272 | 1.286 | 1.206 | 1.258 | 1.229 | 1.148 | 1.144 | 1.252 |
| 전북 | 1.403 | 1.289 | 1.234 | 1.241 | 1.221 | 1.182 | 1.160 | 1.232 |
| 전남 | 1.418 | 1.277 | 1.216 | 1.169 | 1.275 | 1.185 | 1.116 | 1.198 |
| 대구 | 1.279 | 1.319 | 1.237 | 1.238 | 1.228 | 1.160 | 1.150 | 1.275 |
| 경북 | 1.372 | 1.298 | 1.224 | 1.271 | 1.253 | 1.162 | 1.206 | 1.216 |
| 부산 | 1.290 | 1.327 | 1.262 | 1.216 | 1.233 | 1.167 | 1.207 | 1.287 |
| 울산 | 1.225 | 1.255 | 1.200 | 1.199 | 1.324 | 1.143 | 1.063 | 1.196 |
| 경남 | 1.405 | 1.339 | 1.252 | 1.263 | 1.257 | 1.180 | 1.177 | 1.235 |
| 강원 | 1.311 | 1.264 | 1.226 | 1.172 | 1.215 | 1.175 | 1.091 | 1.194 |
| 제주 | 1.381 | 1.294 | 1.265 | 1.160 | 1.181 | 1.199 | 1.081 | 1.240 |

출처: 연구진 작성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과 숙박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큰 편으로 나타난다. 음식업은 거의 모든 시도에서 1.3 이상, 특히 경기(1.504), 충북(1.458). 충남(1.428), 전남(1.418)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식자재, 음료, 소매, 운송, 서비스업 등 다수의 산업으로부터 중간재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특히 곡물, 채소·과실, 축산물, 수산물 등 1차 산업 부문과의 연계가 강하며, 식료품·음료 제조업, 포장재 및 위생용품 등 제조업 부문에도 높은 수요를 발생시킨다.

숙박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서울(1.410), 경기(1.465), 부산(1.327) 등 대도시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숙박업이 객실 운영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중간재와 서비스를 폭넓게 구매하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중심 경제권으로서 숙박업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도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매업, 법무 및 경영지원서비스, 방송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 간 긴밀한 연계 구조로 인해 대도시의 숙박업은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문화여가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문화여가업이 콘텐츠 제작, 기획, 홍보, 운영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중간재와 서비스를 지역 내 산업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문화여가업은 공연기획사, 영화·영상 제작사, 전시기획사, 테마파크 운영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광고업, 방송서비스업, 법무 및 경영지원서비스업,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인쇄·출판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대도시 내에 집적되어 있어, 문화여가업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고부가 서비스와 전문 인력을 지역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여가업의 지출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생산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편, 제주와 강원에서도 문화여가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와 달리 산업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업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와 강원의 문화여가업은 공연, 축제, 체험형 관광, 레저시설 운영 등 관광과 연계된 형태가 중심을 이루며, 이러한 사업체들은 운영 과정에서 음식업, 숙박업, 운송·교통업, 개인서비스업 등 지역 내 생활·관광 서비스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직접 구매한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케이터링, 행사용 식음료 조달, 공연단 및 운영 인력의 숙소 확보, 관광버스나 렌터카 등 교통서비스 이용, 행사운영 보조 인력이나 청소·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활용한다.

개인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는 1.119~1.378 수준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지역주민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산업 간 거래가 적고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운송교통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089~1.338 수준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을 보인다. 서울(1.207)과 경기(1.338)는 높은 편이지만, 세종(1.089), 제주(1.181), 강원(1.215) 등은 낮다.

교육업을 보면, 모든 시도에서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1.048~1.280 수준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다. 이는 교육서비스가 주로 인건비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교육업은 교원, 강사 인건비 등 부가가치 창출이 인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구매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업 역시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1.138~1.258 수준으로 교육업 다음으로 낮은 업종에 해당한다. 의료서비스 역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원은 지역 내 고용과 소비를 발생시키지만, 지역 내부 산업과의 연계 효과는 제한적이다.

소매업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1.154~1.377로, 음식업이나 숙박업보다 낮지만 교육업, 보건의료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울(1.377)과 경기도(1.331)는 소매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서울의 소매업은 고부가 소비재 중심의 고도화된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의복제품, 가죽제품, 화장품 등 고부가 소비재 제조업과 더불어 인쇄·광고, 법무 및 경영지원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등과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경기도는 대규모 물류·제조 기반과 결합된 실물 공급망 중심의 유통 구조를 보인다. 기타식료품, 떡·과자류, 음료 등 소비재 제조업에 대한 투입이 크며, 플라스틱제품, 종이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포장재·진열용품 제조업으로의 지출도 높다. 경기도 소매업은 대규모 물류센터와 창고를 기반으로 도매와 소매가 결합된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강원(1.194), 울산(1.196), 전남(1.1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유발계수를 보인다. 이들 지역의 소매업은 식료품, 생활필수재, 음료 등 기초소비재 중심의 단순 유통 구조를 가지며, 판매 상품의 상당 부분이 외부 도매시장이나 수도권 공급망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의 연쇄 거래가 제한되고, 산업 간 연계 강도가 약화된다. 부산(1.287), 대구(1.275), 광주(1.252) 등 광역도시는 중간 수준의 값을 보이며, 지역 상권과 제조 기반이 일정 부분 결합된 형태를 띤다. 예컨대 부산은 수산가공품과 식료품 유통이 활발하고, 대구는 의류 및 전기·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유통이 활발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중간재·서비스 공급망이 조밀하게 형성된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

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은 음식·숙박·문화여가·소매업 등 소비 중심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광범위한 산업 연관망과 전문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어 소비지출이 지역 내부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단기 방문객보다는 정기적·반복적 방문을 통해 숙박·외식·문화소비를 수행하는 체류형 인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표 4-2〉의 인구 집단별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을 보면,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휴일, 당일, 단기 체류,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체류인구, 특히 청년층 체류인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들의 소비는 음식, 숙박, 문화여가, 소매 등 지역 내 다른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등록인구, 장기, 재방문 체류인구 집단에서는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의 지출 중 지역 내 다른 산업과 연계성이 낮은 의료, 교육, 개인서비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내 다른 산업 생산에 파급되는 효과가 적은 것이다. 즉, 당일 혹은 단기 체류인구 소비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높고, 주민등록인구나 정주 체류인구 소비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낮은 경향이 있다.

### 2)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시도 및 업종별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각 업종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중간재와 서비스가 지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업 간 연계의 내재성과 지역경제의 자급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전반적으로 교육과 소매업의 귀속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만 귀속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건의료와 교육은 전국적으로도 생산유발효과가 작은 산업으로, 지역 내 거래가 일정 부분 존재하더라도 산업 간 연쇄효과는 제한적이다.

음식업은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식자재, 포장재, 운송,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함으로써 광범위한 연쇄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투입의 상당 부분이 전국적 유통망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지역 내부 귀속률은 중간 수준(약 55~6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음식업은 산업 간 거래가 활발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지역 외부로 일정 부분 분산되는 구조를 갖는다.

숙박업 또한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으로, 객실 운영 과정에서 식음료, 세탁, 위생용품, 시설관리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다. 다만, 이러한 구매 활동이 지역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일부 투입재는 전국 단위 공급망을 통해 조달된다. 그 결과 숙박업은 생산유발효과는 크지만 지역 내부 귀속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나타난다.

**표 4-3** 시도 및 업종별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단위: %)

| 시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서울 | 58.7 | 68.9 | 73.9 | 63.6 | 76.7 | 77.1 | 79.3 | 76.5 |
| 인천 | 54.2 | 60.9 | 66.4 | 58.1 | 70.6 | 72.6 | 76.0 | 67.8 |
| 경기 | 66.1 | 71.4 | 75.3 | 67.4 | 68.9 | 77.9 | 79.9 | 76.1 |
| 대전 | 53.3 | 60.0 | 66.6 | 57.0 | 64.8 | 68.2 | 73.4 | 68.1 |
| 세종 | 50.9 | 55.2 | 60.2 | 54.5 | 54.6 | 62.3 | 81.4 | 65.5 |
| 충북 | 62.4 | 63.3 | 69.8 | 57.5 | 63.4 | 70.5 | 78.6 | 70.0 |
| 충남 | 61.8 | 62.7 | 68.6 | 62.2 | 68.0 | 69.6 | 78.6 | 69.3 |
| 광주 | 54.5 | 62.4 | 67.1 | 60.0 | 64.4 | 68.8 | 74.3 | 68.3 |
| 전북 | 60.6 | 62.8 | 68.7 | 60.3 | 63.7 | 69.8 | 76.6 | 68.5 |
| 전남 | 61.6 | 62.4 | 68.8 | 57.5 | 65.1 | 68.2 | 81.2 | 70.2 |
| 대구 | 54.8 | 64.3 | 68.3 | 60.9 | 64.4 | 70.4 | 75.6 | 68.8 |
| 경북 | 58.8 | 63.4 | 68.6 | 61.2 | 65.2 | 69.1 | 70.6 | 69.1 |
| 부산 | 56.4 | 64.6 | 69.2 | 60.3 | 71.7 | 71.2 | 74.0 | 71.1 |
| 울산 | 52.9 | 61.3 | 67.5 | 58.7 | 68.0 | 68.8 | 86.1 | 70.0 |
| 경남 | 61.1 | 65.4 | 70.1 | 62.0 | 65.1 | 70.5 | 76.4 | 71.0 |
| 강원 | 57.4 | 61.8 | 68.4 | 58.3 | 65.4 | 66.9 | 82.3 | 69.5 |
| 제주 | 59.3 | 63.2 | 69.1 | 57.2 | 63.7 | 67.7 | 86.5 | 69.5 |

주: 시도 및 업종별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를 시도 및 업종별 전국 생산유발계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함.
출처: 연구진 작성

문화여가업의 파급효과 지역귀속률은 약 65~70% 수준으로, 산업 간 연계의 내생성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화여가업이 콘텐츠 제작, 기획, 홍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부 중간재와 서비스를 지역 내부에서 조달하지만, 고부가

가치 장비나 전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의 문화여가업은 공연기획, 영상제작, 전시운영 등에서 필요한 광고, 방송, 법무·경영지원, IT·소프트웨어, 인쇄·출판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주요 투입재를 지역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 집적은 문화여가업의 지역 내 지출을 확대시키며, 결과적으로 지역귀속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제주나 강원과 같은 지역에서는 문화여가업이 공연·축제·체험형 관광 등과 결합하여 운영되지만,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등 전문 서비스 부문은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신 음식, 숙박, 운송, 개인서비스 등 관광과 연계된 지역 생활서비스업으로부터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정 수준의 지출이 유지된다. 즉, 문화여가업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편이지만, 그 귀속 범위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공급망의 밀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건의료업은 중간 수준의 귀속률(약 65~75%)을 보이나, 산업 간 연계효과는 제한적이다. 의료 서비스는 고가의 장비, 의약품, 소모품 등을 전국 단위 공급망에 의존하며, 병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형태로 지출된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외부와의 거래가 제한적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이 약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보건의료업은 생산유발효과와 지역 내 경제 파급력이 모두 크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교육업은 다수의 시도에서 귀속률이 70%를 상회하며, 울산(86.1%), 제주(86.5%), 세종(81.4%) 등에서는 80%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자체는 크지 않다. 즉, 높은 귀속률은 시설 관리 등 지출이 지역 내에서 유지됨을 의미할 뿐, 산업 간 파급효과가 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업은 산업적 연쇄가 약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소매업은 평균적으로 약 70% 수준의 높은 귀속률을 보인다. 이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임대, 관리, 청소, 보안, 운송 등의 서비스가 동일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76.5%), 경기(76.1%) 등 대도시의 경우 공급망이 촘촘히 구성되어 지역 내부 순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반면 중소 지역에서는 상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외부 유통망에 의존하므로 귀속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4-2〉의 인구 집단별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평균을 보면,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정주형, 반복형 체류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는 등록외국인

(68.05%)이 가장 높고, 주민등록인구(65.99%)가 체류인구(64.83%)보다 높아 생활기반을 둔 지출이 많을수록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로는 중장년층(64.85%), 고령층(64.96%)이 청년층(64.45%)보다 지역귀속률이 높아, 생계 유지를 위한 소비가 지역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중기(65.01%), 장기(65.27%)가 당일(64.60%), 단기(64.80%)보다 높고, 재방문 여부도 재방문(65.14%)이 일회성 방문(64.55%)을 상회한다. 체류 목적별로는,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65.35%)가 가장 높고 단기숙박(64.66%), 통근·통학(64.65%)은 낮은 편이다. 즉, 생활 기반을 지역에 두고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이들의 소비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기술통계량

다음 표는 주요 지표의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등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수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기술통계량

| 대분류 | 구분 | 지표 | 평균 | 중앙값 | 최소값 | 최대값 |
|---|---|---|---|---|---|---|
| 인구유형 | 주민등록인구 | 소비 기여율 | 56.62 | 58.00 | 28.89 | 78.40 |
| | | 인구 구성 비율 | 29.52 | 29.94 | 11.05 | 49.72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6 | 1.26 | 1.22 | 1.37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99 | 65.74 | 62.52 | 72.20 |
| | 체류인구 | 소비 기여율 | 42.47 | 41.12 | 21.37 | 70.65 |
| | | 인구 구성 비율 | 69.75 | 69.58 | 49.91 | 88.63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83 | 64.86 | 60.25 | 71.52 |
| | 등록외국인 | 소비 기여율 | 0.91 | 0.60 | 0.14 | 10.27 |
| | | 인구 구성 비율 | 0.73 | 0.46 | 0.10 | 8.10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4 | 1.24 | 1.19 | 1.36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8.05 | 67.91 | 65.04 | 74.23 |
| 연령대 | 아동·청소년층 | 소비 기여율 | 0.23 | 0.14 | 0.04 | 1.65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0.48 | 0.36 | 0.15 | 1.73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3 | 1.38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33 | 65.28 | 60.63 | 73.13 |

| 대분류 | 구분 | 지표 | 평균 | 중앙값 | 최소값 | 최대값 |
|---|---|---|---|---|---|---|
| | 청년층 | 소비 기여율 | 10.95 | 9.78 | 5.47 | 31.34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14.44 | 13.07 | 8.96 | 28.59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9 | 1.29 | 1.23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45 | 64.59 | 60.14 | 71.13 |
| | 중장년층 | 소비 기여율 | 76.65 | 77.77 | 58.17 | 83.8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73.62 | 74.91 | 60.28 | 79.60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85 | 64.88 | 60.28 | 71.59 |
| | 고령층 | 소비 기여율 | 12.16 | 12.06 | 7.13 | 25.23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11.46 | 11.53 | 7.65 | 17.99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1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96 | 65.04 | 59.80 | 71.69 |
| 체류기간 | 당일 | 소비 기여율 | 27.06 | 27.48 | 6.23 | 49.37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9.71 | 40.79 | 9.84 | 60.22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9 | 1.29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60 | 64.68 | 58.58 | 71.62 |
| | 단기 | 소비 기여율 | 39.96 | 36.65 | 23.29 | 82.4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42.18 | 39.95 | 26.50 | 82.84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80 | 64.80 | 60.43 | 71.32 |
| | 중기 | 소비 기여율 | 11.00 | 11.14 | 3.81 | 18.72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7.23 | 7.11 | 3.21 | 12.17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7 | 1.27 | 1.20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01 | 64.98 | 61.40 | 71.61 |
| | 정기 | 소비 기여율 | 5.71 | 5.43 | 1.52 | 12.76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63 | 3.22 | 1.13 | 9.91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70 | 64.67 | 61.76 | 71.43 |
| | 장기 | 소비 기여율 | 16.27 | 16.15 | 5.90 | 31.22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7.26 | 6.37 | 2.72 | 21.58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7 | 1.27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27 | 65.54 | 62.51 | 72.13 |
| 재방문여부 | 일회성방문 | 소비 기여율 | 47.01 | 44.89 | 24.09 | 87.30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57.82 | 57.57 | 30.96 | 88.86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9 | 1.29 | 1.22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55 | 64.68 | 59.42 | 71.20 |

| 대분류 | 구분 | 지표 | 평균 | 중앙값 | 최소값 | 최대값 |
|---|---|---|---|---|---|---|
| | 재방문 | 소비 기여율 | 52.99 | 55.11 | 12.70 | 75.91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42.18 | 42.43 | 11.14 | 69.04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7 | 1.27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14 | 65.09 | 61.53 | 71.99 |
| 숙박 여부 | 비숙박 | 소비 기여율 | 48.25 | 47.29 | 11.76 | 79.71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57.52 | 57.88 | 15.21 | 82.00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71 | 64.82 | 59.37 | 71.69 |
| | 숙박 | 소비 기여율 | 51.75 | 52.71 | 20.29 | 88.24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42.48 | 42.12 | 18.00 | 84.79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1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94 | 65.03 | 61.26 | 71.35 |
| 체류 요일 패턴 | 평일 | 소비 기여율 | 26.84 | 26.02 | 17.69 | 44.56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0.70 | 29.80 | 25.30 | 45.94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74 | 64.89 | 59.73 | 71.87 |
| | 휴일 | 소비 기여율 | 26.29 | 26.55 | 10.06 | 42.8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7.03 | 37.60 | 15.27 | 51.39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9 | 1.29 | 1.23 | 1.40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57 | 64.74 | 59.42 | 71.16 |
| | 평일+ 휴일 | 소비 기여율 | 46.88 | 47.21 | 26.96 | 63.5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2.27 | 31.78 | 20.11 | 53.67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01 | 65.03 | 61.69 | 71.57 |
| 체류 목적 | 단기 숙박 | 소비 기여율 | 12.65 | 10.82 | 1.61 | 39.20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14.12 | 12.66 | 2.32 | 37.65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9 | 1.29 | 1.21 | 1.41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66 | 64.89 | 60.36 | 71.26 |
| | 통근· 통학 | 소비 기여율 | 4.45 | 3.04 | 0.06 | 18.61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3.04 | 2.06 | 0.06 | 17.18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8 | 1.28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4.65 | 64.74 | 61.87 | 70.56 |
| | 장기 실거주 | 소비 기여율 | 13.45 | 13.33 | 4.10 | 28.3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5.58 | 5.33 | 2.54 | 15.08 |
| | |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1.27 | 1.27 | 1.22 | 1.39 |
| | |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65.35 | 65.60 | 62.44 | 72.29 |

주: 표본 수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출처: 연구진 작성

기술통계를 보면, 지역경제에서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민등록인구에 필적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소비 기여율은 56.62%, 체류인구는 42.47%로, 주민등록인구가 핵심적 소비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체류인구 또한 지역 총소비의 약 40%를 담당한다. 특히, 체류인구의 인구 구성 비율이 69.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소비액이 다소 낮더라도 집단 규모 자체가 지역 내 총수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외국인의 소비 기여율은 0.91%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후 분석에서 보이듯 지역 내 파급효과의 귀속률 측면에서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체류인구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얼마나 소비하는가"뿐 아니라 "그 소비가 지역 내 추가 생산활동을 얼마나 촉발하는가"에 있다. 체류인구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평균 1.28로, 주민등록인구(1.26)나 등록외국인(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체류인구의 소비가 발생할 때 산업 연쇄를 통해 총산출이 1.28배 증가함을 의미하며, 체류인구 소비가 지역 내부의 생산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유발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체류인구는 지역 소비의 약 40%를 담당하면서도 소비 1단위당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은 인구 및 소비 규모 면에서는 미미하지만, 파급효과의 지역 귀속률이 평균 68.05%로 주민등록인구(65.99%)와 체류인구(64.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록외국인의 소비가 주로 소매 및 일상재 구매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지출이 지역 상권과 공급망 내부에서 순환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등록외국인 소비는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 내부에 잔존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한편, 인구 집단별 소비 기여율은 지역 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의 소비 기여율은 최저 28.89%에서 최고 78.40%까지, 체류인구는 21.37~70.65%, 등록외국인은 0.14~10.27%의 범위를 보여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구조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인구가 중심이 되는 소비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체류인구나 등록외국인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주체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생활인구 구성과 소비 특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 인구감소지역 유형 분류 결과

## 1. 요인분석 결과

본격적인 군집분석에 앞서, 88개의 지표를 요인분석을 통해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으로 판단되었다. 첫째, 군집분석은 거리 기반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변수의 수가 관측치 수에 근접할 경우 분석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고차원 데이터 내에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다수 존재할 경우, 일부 지표가 군집 형성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많은 수의 변수에 기반한 군집 결과는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각 군집의 특성을 독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88개 지표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공통된 요인을 도출하고, 지역별로 산출된 요인 점수를 이후 군집분석의 입력값으로 활용하였다. 요인 수는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회전 방법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고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교 회전(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표 4-5** 요인 패턴 행렬

| 지표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
| 등록외국인 소비 기여율 | | | | | 0.66 | |
| 주민등록인구 소비 기여율 | | | | 0.93 | | |
|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0.93 | | |
| 고령층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 |
|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 0.84 |
| 중장년층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 −0.92 |
| 청년층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 0.88 |
| 단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84 | | | |
| 당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82 | | | |
| 장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0.77 | | |
| 정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0.66 | |
| 중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0.64 | | |

| 지표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
|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63 | −0.59 | | |
| 재방문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63 | 0.59 | | |
| 비숙박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94 | | | |
| 숙박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94 | | | |
| 평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60 | | | |
| 평일+휴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52 | 0.55 | 0.54 | |
| 휴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 −0.76 | |
| 단기숙박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87 | | | |
|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 0.89 | | |
| 통근·통학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 | | | 0.57 | | 0.76 | |
| 등록외국인 구성 비율 | | | | | 0.68 | |
| 주민등록인구 구성 비율 | | | | 0.89 | | |
|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0.89 | | |
| 고령층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 |
|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 0.93 |
| 중장년층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 −0.95 |
| 청년층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 0.93 |
| 단기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93 | | | |
| 당일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84 | | | |
| 장기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0.74 | |
| 정기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0.76 | |
| 중기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0.62 | 0.53 | |
|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61 | −0.51 | −0.51 | |
| 재방문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61 | 0.51 | 0.51 | |
| 비숙박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97 | | | |
| 숙박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97 | | | |
| 평일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54 | | | |
| 평일+휴일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57 | | 0.68 | |
| 휴일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 −0.78 | |
| 단기숙박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91 | | | |
|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 0.68 | | |
| 통근·통학 체류인구 구성 비율 | | | 0.51 | | 0.82 | |
| 등록외국인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64 | | | | | |
| 주민등록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84 | | | | | |

| 지표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
|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6 | | | | | |
| 고령층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5 | | | | | |
|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77 | | | | | |
| 중장년층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6 | | | | | |
| 청년층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1 | | | | | |
| 단기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5 | | | | | |
| 당일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3 | | | | | |
| 장기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88 | | | | | |
| 정기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89 | | | | | |
| 중기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2 | | | | | |
|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5 | | | | | |
| 재방문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4 | | | | | |
| 비숙박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4 | | | | | |
| 숙박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4 | | | | | |
| 평일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5 | | | | | |
| 평일+휴일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5 | | | | | |
| 휴일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2 | | | | | |
| 단기숙박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92 | | | | | |
|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88 | | | | | |
| 통근·통학 체류인구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 0.83 | | | | | |
| 등록외국인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7 | 0.52 | | | | |
| 주민등록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6 | 0.68 | | | | |
|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5 | | | | |
| 고령층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7 | | | | |
|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6 | | | | | |
| 중장년층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5 | | | | |
| 청년층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3 | 0.71 | | | | |
| 단기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4 | | | | |
| 당일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7 | | | | |

| 지표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
| 장기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5 | 0.71 | | | | |
| 정기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4 | 0.73 | | | | |
| 중기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2 | 0.81 | | | | |
|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7 | | | | |
| 재방문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3 | 0.82 | | | | |
| 비숙박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6 | | | | |
| 숙박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3 | 0.80 | | | | |
| 평일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 0.87 | | | | |
| 평일+휴일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5 | 0.80 | | | | |
| 휴일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2 | 0.77 | | | | |
| 단기숙박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52 | 0.78 | | | | |
|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4 | 0.72 | | | | |
| 통근·통학 체류인구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 0.65 | 0.66 | | | | |
| 분산(%) | 28.70 | 17.90 | 15.30 | 10.10 | 9.70 | 6.80 |

주: 절대값이 0.5 이상인 패턴계수만 표기함.
분산은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을 나타냄.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구조 및 소비·체류·경제적 파급 특성을 설명하는 총 6개의 주요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패턴 행렬에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패턴계수를 기준으로 각 요인이 특정 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요인을 해석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28.70%를 설명하며,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와 파급효과의 지역 귀속률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였다. 이는 생활인구의 소비가 단위당 투입될 때 지역경제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특정 연령층이나 체류 특성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인구 집단의 소비가 고르게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이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소비 주체가 누구이든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로 환류되면서 높은 생산유발효과

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소비 파급효과 확산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소비 지출이 단순한 거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생산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연천군(3.66), 경기 가평군(3.51), 전남 담양군(1.8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 연천군의 경우, 인구 집단 전반에서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1.35~1.40,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은 70.4~74.2%로 높게 나타났다. 연천군은 다양한 생활인구 소비가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17.90%를 설명한다. 생활인구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의 지역 귀속률 관련 적재량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체류인구(0.85), 주민등록인구(0.68)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생활인구의 소비가 발생했을 때 그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환류되는 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하며, 지역 내부의 산업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소비 파급효과 내부 순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생활인구의 소비 지출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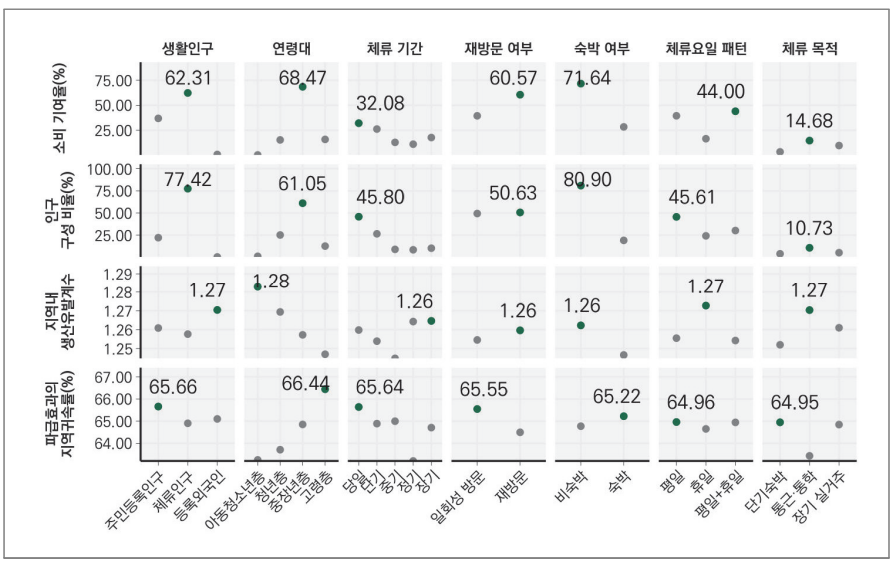
두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가평군(3.51), 부산 서구(3.16), 전남 장흥군(2.62)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가평군은 인구 집단 전반에서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이 70.5~73.6%로 높게 유지되어, 생활인구 소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15.30%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량을 살펴보면, 비숙박 체류인구(구성 비율 0.97, 소비 기여율 0.94), 당일 체류인구(0.84, 0.82), 재방문 체류인구(0.61, 0.63), 평일 체류인구(0.54, 0.60), 통근·통학 체류인구(0.51, 0.57)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반대로 숙박 체류인구(-0.97, -0.94), 단기 체류인구(-0.93, -0.84), 단기숙박 체류인구(-0.91, -0.87),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0.61, -0.63), 평일+휴일 체류인구(-0.57, -0.52)에서는 낮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이는 곧 특정 지역의 소비 구조가 숙박이나 일회성 방문객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비숙박·당일·재방문 체류인구와 같은

반복적·일상적 방문층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근·통학 인구처럼 정기적 재방문 성격을 지닌 집단이 지역 소비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비숙박·당일·재방문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지역소비가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보다는 일상적·정기적 방문을 지속하는 생활인구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부산 동구(2.14), 대구 군위군(2.08), 전남 함평군(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동구는 당일 체류인구가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이들의 소비 기여율이 전체 소비액의 32.1%에 달한다. 또한,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이 80.9%, 이들의 소비 기여율이 71.6%로 나타나, 숙박 체류인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통근·통학 체류인구 비중은 10.7%, 소비 기여율은 14.7%로,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통근·통학 체류인구 구성 비율 4.5%, 이들의 평균 소비 기여율 3.0%를 크게 상회한다. 즉, 부산 동구는 일상형 체류인구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부산 동구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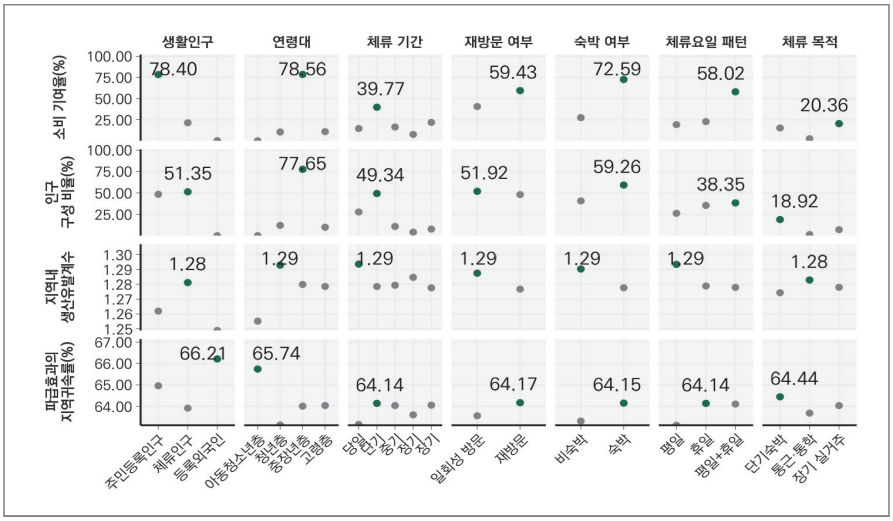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10.10%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량을 보면 주민등록인구(구성 비율 0.89, 소비 기여율 0.93),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0.68, 0.89), 장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0.89), 중기 체류인구(0.62, 0.64), 재방문 체류인구(0.51, 0.59), 평일+휴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0.55)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0.51, -0.59)와 체류인구 전체 비중(-0.89) 및 소비 기여율(-0.93)에서는 낮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이는 생활인구 중 주민등록인구의 비중이 높고, 장기·중기 체류인구와 재방문 체류인구가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 기여율 또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율은 낮은 특징을 갖는다. 즉, 이 요인은 지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특히 정주인구와 실거주·중장기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시적 방문보다는 지역 정착 기반의 생활인구가 소비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정주·실거주 중심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하며, 일시적·단기적 방문보다 정주 및 장기적 관계에 기반한 생활인구가 지역 소비의 중심축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네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경북 영양군(2.59), 경남 거창군(2.39), 강원 화천군(2.2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 영양군은 주민등록인구의 소비가 전체 생활인구 소비의 78.4%를 차지하여, 지역 소비 구조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전체 체류인구 소비액의 20.4%로,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13.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영양군 생활인구 소비가 정주인구와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4-2** 경북 영양군의 주요 지표 현황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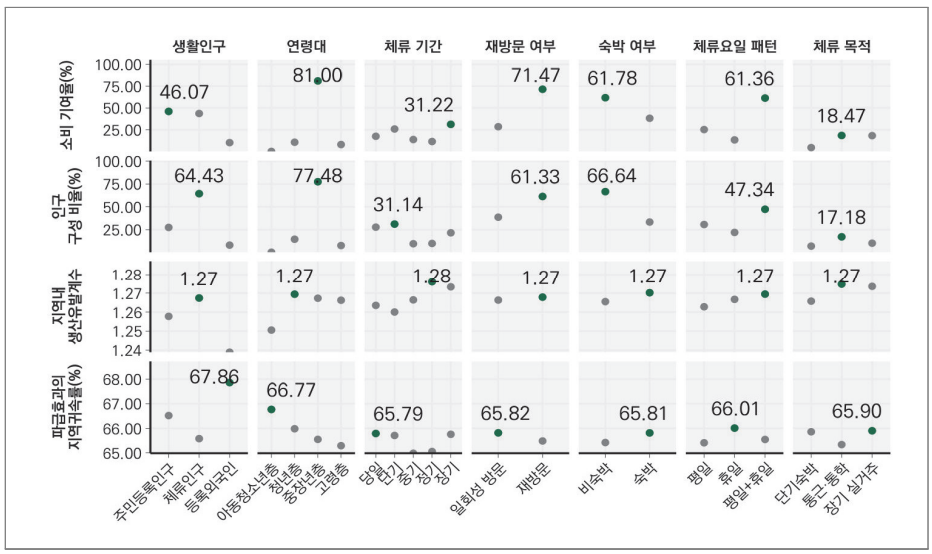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9.70%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량을 보면 통근·통학 체류인구(구성 비율 0.82, 소비 기여율 0.76), 정기 체류인구(0.76, 0.66), 장기 체류인구 구성 비율(0.74), 평일+휴일 체류인구(0.68, 0.54), 등록외국인(0.68, 0.66), 중기 체류인구(0.53), 재방문 체류인구(0.51)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반대로 휴일 체류인구(-0.78, -0.76)와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0.51)는 낮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정기적·장기적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의 주요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단순한 휴일 방문이나 일회성 체류보다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체류 행태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등록외국인과 통근·통학 인구처럼 지역과 정기적 관계를 맺는 집단이 소비의 핵심 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등록외국인·정기체류 중심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등록외국인과 더불어 정기적·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무르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체류인구가 소비를 이끌며, 지역경제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전남 영암군(5.12), 경남 함안군(3.23), 대구 서구(2.6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 영암군은 장기 체류인구 소비가 전체 체류

인구 소비의 31.2%를 차지하는데, 이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장기 체류인구 평균 소비 기여율 16.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등록외국인 구성 비율이 8.1%, 이들의 소비 기여율이 10.3%로, 89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외국인 평균 구성 비율 0.7%, 이들의 평균 소비 기여율 0.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즉, 영암군은 등록외국인과 장기 체류인구 소비가 두드러지는 지역 특성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6.80%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량을 보면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구성 비율 0.93, 소비 기여율 0.84)와 청년층 체류인구(0.93, 0.88)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중장년층 체류인구의 구성 비율과 소비 기여율은 각각 -0.92, -0.9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아동·청소년과 청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세대의 활발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요인을 '아동·청소년·청년층 중심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젊은 세대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3** 전남 영암군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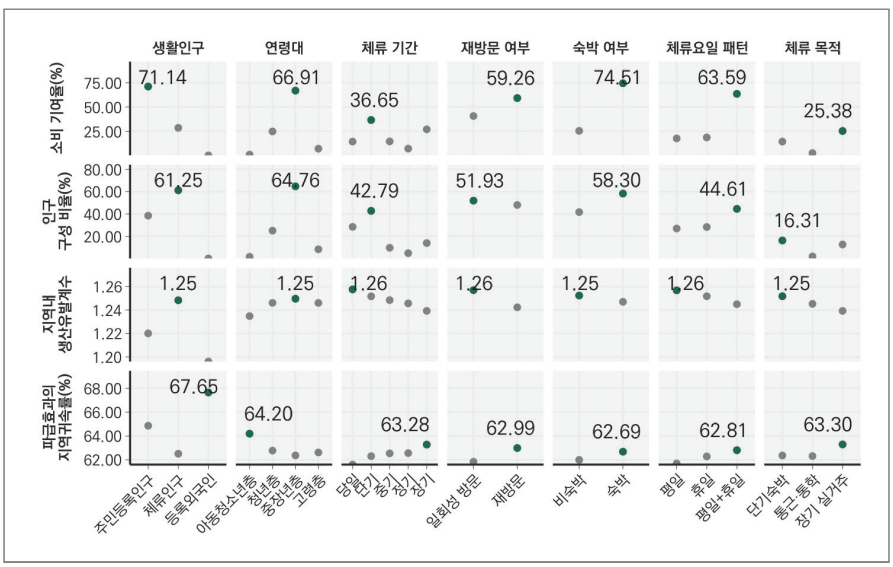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여섯 번째 요인점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강원 양구군(3.94), 강원 화천군(2.80), 부산 영도구(2.4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층 구성 비율은 1.7%,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1.1%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층 평균 구성 비율 0.5%, 평균 소비 기여율 0.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층 구성 비율은 25.1%,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24.9%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청년층 평균 구성 비율 14.4%, 평균 소비 기여율 11.0%를 상회한다. 즉, 양구군은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등 젊은 체류인구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지닌 지역임이 확인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든 요인 해석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패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장년층의 인구 규모나 소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요인분석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인구 집단의 소비 기여율이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를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각 요인은 분석 대상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도출된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해석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4** 강원 양구군의 주요 지표 현황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표 4-6** 요인별 명칭 및 특성

| 요인 | 요인 명칭 | 요인점수 의미 | | 요인점수 상위 5개 지역 |
|---|---|---|---|---|
| | | 양(+)의 점수 의미 | 음(-)의 점수 의미 | |
| 요인 1 | 소비 파급효과 확산형 | 소비 1단위가 지역경제에 큰 생산유발효과를 미침 | 소비의 경제 파급력이 약함 |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전남 담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
| 요인 2 | 소비 파급효과 내부 순환형 | 소비 파급효과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에 머무름 | 소비 파급효과가 지역 외부로 유출됨 | 경기 가평군, 부산 서구, 전남 장흥군, 경기 연천군, 경남 합천군 |
| 요인 3 | 비숙박 당일 재방문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 | 비숙박, 당일, 재방문, 평일, 통근·통학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단기숙박, 평일+휴일,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 전북 임실군 |
| 요인 4 | 정주인구, 실거주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 | 주민등록인구, 장기 실거주, 재방문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와 체류인구 중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경북 영양군, 경남 거창군,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강원 양구군 |
| 요인 5 | 등록외국인, 정기적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 | 등록외국인, 정기적, 장기적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휴일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전남 영암군, 경남 함안군, 대구 서구, 전북 김제시, 경북 성주군 |
| 요인 6 | 아동·청소년·청년층 중심 소비형 |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중장년층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높음 |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부산 영도군, 경기 가평군, 대구 남구 |

출처: 연구진 작성

## 2. 군집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관련 88개 지표를 6개의 요인으로 축약하였고, 이들 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K-평균(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요인 점수는 단순히 "값이 크면 많고, 작으면 적다"는 절대적 의미보다는 각 요인이 지닌 양(+)의 방향성과 음(-)의 방향성이 각각 의미하는 인구·소비 특성을 상대적으로 반영한 지표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요인 점수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특성이 '약하다'는 의미를 넘어, 그 반대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지역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요인 3(비숙박 당일 재방문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당일 방문이나 재방문 체류인구 소비가 적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회성 방문자나 단기 숙박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제시되는 군집별 해석은 각 요인이 설명하는 양(+)과 음(-)의 의미를 함께 고려한 상대적 특성 해석임을 전제로 한다. 군집별 요인점수 평균을 비교하여 각 군집이 어떠한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4-7** 군집별 요인점수 평균

| 군집 | 요인 1 (소비 파급효과 확산형) | 요인 2 (소비 파급효과 내부 순환형) | 요인 3 (비숙박 당일 재방문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 | 요인 4 (정주인구, 실거주 체류인구 중심 소비형) | 요인 5 (등록외국인, 정기적 체류 인구 중심 소비형) | 요인 6 (아동·청소년·청년층 중심 소비형) |
|---|---|---|---|---|---|---|
| 군집 1 | -0.309 | -0.621 | -1.341 | -1.312 | 0.132 | -0.013 |
| 군집 2 | 0.094 | 0.020 | 0.700 | -0.365 | -0.701 | -0.731 |
| 군집 3 | 0.330 | -0.629 | 0.045 | 1.009 | 0.798 | -0.093 |
| 군집 4 | -0.373 | 1.288 | -0.069 | -0.002 | -0.264 | 1.127 |

출처: 연구진 작성

### 1) 군집 1

군집 1은 모든 요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특히 요인 3(-1.341)과 요인 4(-1.312)에서 두드러진 음(-)의 값을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요인 3의 낮은 점수는 당일·재방문·비숙박 중심의 반복적 체류 소비가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지역 소비가 일회성 방문자나 단기 숙박 체류자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요인 4의 낮은 점수는 정주인구나 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자체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소비의 주요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요인 2(-0.621) 역시 낮은 값을 보여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기보다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요인 1 역시 음의 값(-0.309)을 기록하여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하면, 군집 1은 소비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내부 환류 구조가 약하며, 정주·재방문 인구 기반이 부족하여 일시적·단기적 방문객에 의존하는 특성이 강한 지역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군집에 속한 지역들은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충남 태안군, 충북 단양군 등으로 관광지와 자연자원 중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들 지역에는 주로 관광 성수기에 외부 방문객 유입이 집중되며, 외지 관광객의 일시적 소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지역 소비 구조는 내생적이지 않고, 계절성과 외부 의존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강원 고성군의 경우, 체류인구가 전체 생활인구의 88.4%에 달하며, 이들의 소비 기여율도 70.4%로 높게 나타난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단기 체류인구가 전체 체류인구의 62.1%, 단기 숙박 체류인구가 31.9%를 차지해 단기 체류 중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평일과 휴일을 연달아 머무는 체류 유형이 전체의 37.9%로 높아, 휴가철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패턴이 확인된다. 숙박 체류인구 비중은 62.9%,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73.2%로, 숙박형 방문객이 지역 소비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광 성수기 중심 단기 체류 소비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 2) 군집 2

군집 2는 요인 3에서 0.700이라는 높은 양(+)의 값을 기록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지역 소비가 비숙박·당일·재방문 인구의 반복적 체류에 의해 크게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요인 4(-0.365), 요인 5(-0.701), 요인 6(-0.731)은 모두 뚜렷한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주민등록인구나 장기 실거주 인구의 소비 기반이 약하고, 등록외국인이나 장기 체류인구의 기여 또한 낮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층, 청년층의 체류 비중과 소비 기여율도 낮다. 즉, 군집 2는 지역 내 정주 기반이나 외국인인구 소비가 제한된 가운데, 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비숙박·당일·재방문 체류인구에 의존하는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1(0.094)과 요인 2(0.020)는 양(+) 값을 보이지만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비 파급효과의 확산이나 내부 순환 측면에서는 뚜렷한 강점이 있지는 않다.

이 군집에 속한 지역들은 강원 영월군, 경남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의성군, 청도군,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함평군,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남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 보은군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숙박하지 않는 당일 체류인구가 소비를 주도하고, 재방문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군집 1(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 지역)처럼 일시적 외부 관광객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지만, 정주 및 장기 체류 인구 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군집 1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경남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의성군, 청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담양군, 함평군, 전북 임실군, 충남 공주시, 서천군, 충북 보은군 등은 당일, 비숙박, 휴일 중심 체류가 주된 체류 패턴으로 나타나며, 재방문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높아 군집 2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강원 영월군, 경남 함양군, 합천군, 전남 강진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등은 당일보다 단기 체류인구 비중이 높거나 숙박 체류인구가 비숙박 체류인구보다 많은 경향을 보여, 군집 2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지역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남 구례군, 전북 순창군, 진안군, 충남 부여군 등은 재방문보다 일회성 방문의 소비 기여율이 더 높아, 외부 방문객의 일시적 소비에 의존하는 특성이 좀 더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경북 고령군, 대구 군위군은 휴일보다 평일 체류인구 비중이 높아, 생활권 내 일상적 방문과 소비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군집 2는 공통적으로 비숙박·재방문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 구조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체류기간, 방문유형, 요일별 소비 특성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도 존재한다. 군집분석 결과는 유형 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구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전형적 특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세부 전략 수립 시에는 해당 지역의 별도 분석 결과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결과는 해당 지역이 다른 군집보다 군집 2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시사하는 참고자료로 해석되어야 한다.

### 3) 군집 3

군집 3은 요인 1(0.330), 요인 4(1.099), 요인 5(0.79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값을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요인 4의 높은 점수는 주민등록인구나 장기 실거주 인구, 중·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지역경제가 일회성 방문보다 정주 및 장기적 생활 기반을 둔 인구 집단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요인 5 역시 높은 값을 보여 등록외국인이나 정기·장기적 체류인구가 소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요인 1도 양(+)의 값을 기록하면서 생활인구의 소비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생산유발효과 역시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요인 2는 -0.629로 음(-)의 값을 보여, 소비 파급효과가 지역 내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요인 3(0.045)과 요인 6(-0.093)은 0에 가까운 값으로, 비숙박·재방문 인구나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등 특정 연령층의 소비 기여는 두드러지지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군집 3은 정주·장기 체류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안정적·지속적 생활인구가 소비의 중심을 이루며, 이들의 소비가 일정 부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소비의 내부 순환성은 약해 지역 외부로의 경제적 유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군집에는 강원 태백시, 화천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함안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청송군,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충남 논산시, 예산군, 청양군, 충북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이 포함된다. 이 군집에 속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외국인의 소비 기여율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즉, 외부 방문객이나 단기 방문객보다 지역 내 거주 인구와 장기 체류인구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내생적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 태백시의 주민등록인구 소비 기여율은 67.4%로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56.6%)보다 높으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 역시 16.0%로 평균(13.5%)을 상회한다, 지역 내 정주인구가 지역 소비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강원 화천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보성군, 전북 김제시, 정읍시, 충남 논산시, 예산군, 청양군, 충북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경남 함안군은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이 14.7%로 평균을 상회하지만, 주민등록인구 소비 기여율은 51.8%로 다소 낮다. 이로 인해, 군집 3 내에서도 정주인구보다 체류인구 소비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북 성주군, 전남 영암군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등은 군집 3 내 다른 지역처럼 주민등록인구 소비 기여율이 높지만,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보다 단기숙박 체류인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 함안군은 등록외국인 비중이 2.9%, 이들의 소비 기여율이 3.2%로, 각각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0.7%, 0.9%)을 크게 웃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경북 성주군, 영천시, 전남 영암군, 전북 김제시, 충남 논산시, 예산군, 청양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등록외국인 소비가 지역경제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군집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구분으로, 유형 간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은 군집의 전형적 특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특정 지역의 전략 수립 시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분석과 현황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 4) 군집 4

군집 4는 요인 2(1.288)와 요인 6(1.127)에서 두드러진 양(+)의 값을 기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해당 군집이 소비 파급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환류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층과 청년층의 체류 비중과 소비 기여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세대가 지역 소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지역 내 소비 순환성이 강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통해 경제 활력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 요인 1(-0.373)은 생활인구 소비 1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요인 5(-0.264)는 등록외국인이나 정기적·장기적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가 낮다는 것과 동시에 휴일이나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준다. 즉, 등록외국인이나 장기 체류인구보다는

일시적인 휴일 방문 인구의 소비가 더 많이 기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 3(-0.069)과 요인 4(-0.002)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비숙박·재방문 인구나 정주·실거주 인구의 소비 기여는 해당 군집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종합하면, 군집 4는 지역 내부 소비 순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젊은 세대의 소비 지출이 활발하고 일시적 휴일 방문 인구의 소비가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군집에는 강원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서구, 전남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보령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강원 양구군 청년층 체류인구 비중은 25.1%,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24.9%로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14.4%, 11.0%)을 크게 상회한다. 강원 철원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경북 안동시,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전북 무주군, 충남 보령시 등도 유사하게 청년층 체류인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부산 서구는 청년층 체류인구 비중은 18.8%로 높지만,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9.5%에 그쳐 체류 비중 대비 소비 활동이 낮은 특수한 구조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집 전체의 전형적 경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강원 횡성군, 경남 하동군, 전남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충남 금산군은 청년층의 체류 및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하동군, 고흥군, 영광군, 화순군, 금산군은 고령층 체류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아, 군집 내에서도 고령층 소비 기반이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군집 4는 다른 군집들과 달리 중장년층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고령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일정한 소비 비중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군집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사성에 기반한 상대적 구분이므로, 일부 지역은 군집의 전형적 특성과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개별 지역의 세부 전략 수립 시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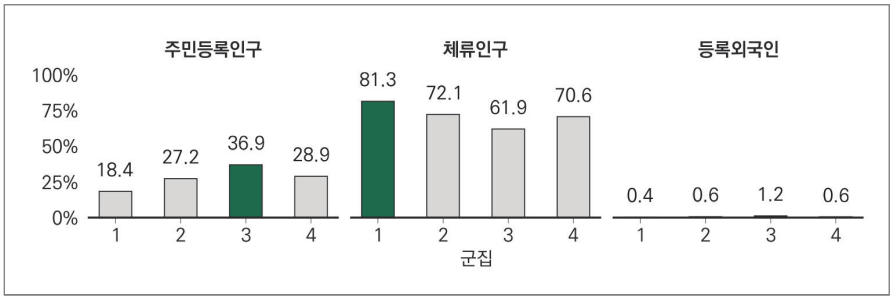
각 군집의 주요 소비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별로 생활인구 유형, 체류인구의 연령대, 체류 기간, 재방문 여부, 숙박 형태, 체류요일 패턴, 체류 목적, 소비 시기, 등록지에 따른 인구 비중과 소비 비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과 소비 비중이 높은 집단을 주요 소비 주체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 소비 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비교·검토하였다.

### 1. 생활인구 유형

군집 1은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생활인구의 81.3%를 차지하는 체류인구가 소비의 55.4%를 담당하며, 이들이 주된 소비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18.9%에 불과하지만 소비 비중은 44.1%로 높은 편이어서, 유입 인구가 다수인 지역이면서도 정주인구 소비가 상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주로 음식(32.6%), 소매(28.0%), 숙박(14.5%), 문화여가(11.9%)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네 업종의 소비 비중만 합쳐도 전체의 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관광형 소비 특성을 보인다. 반면, 개인서비스(1.6%), 보건의료(0.9%), 교육(0.4%)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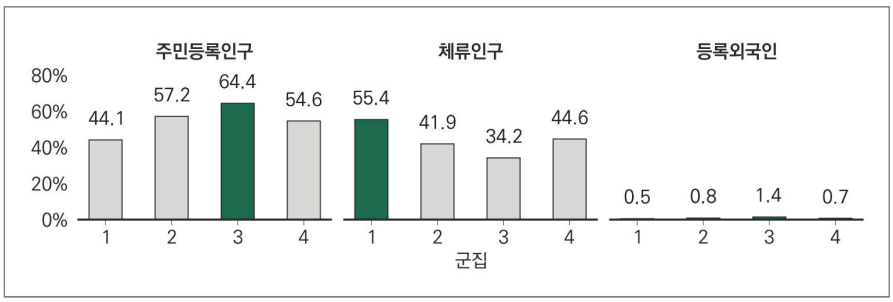
군집 3은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전체 생활인구의 36.9%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에서는 무려 64.4%를 차지한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생활인구 내 비중은 1.2%, 소비 비중은 1.4%로 나타나 다른 군집에 비해 비중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 구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의 소비는 소매(39.2%), 음식(19.8%), 운송교통(10.9%)에 집중되어 있다. 등록외국인의 소비 역시 비슷하게 소매(67.7%)와 음식(15.1%)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보건의료(4.1%), 교육(3.8%)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6** 생활인구 유형별 소비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2. 체류인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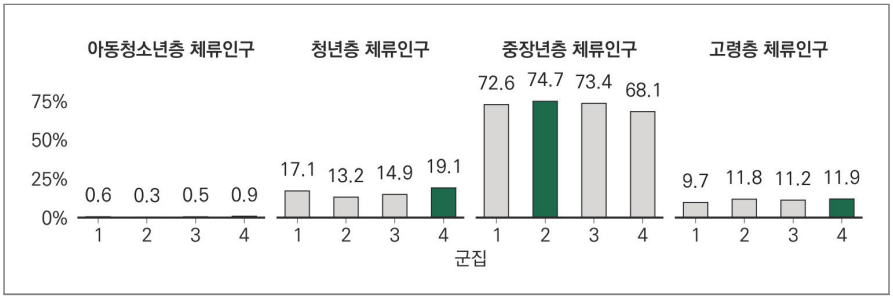
### 1) 연령대

군집 1은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체류인구 중 청년층은 17.1%를 차지하며, 이들의 소비는 전체 체류인구 소비의 13.4%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음식(37.7%)과 소매(3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숙박(13.2%), 문화여가(5.9%), 운송교통(3.5%)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중장년층 체류인구의 절대적 우위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중장년층은 74.7%를 차지하고, 소비에서는 77.9%를 기록한다. 다른 군집과 비교할 때 중장년층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장년층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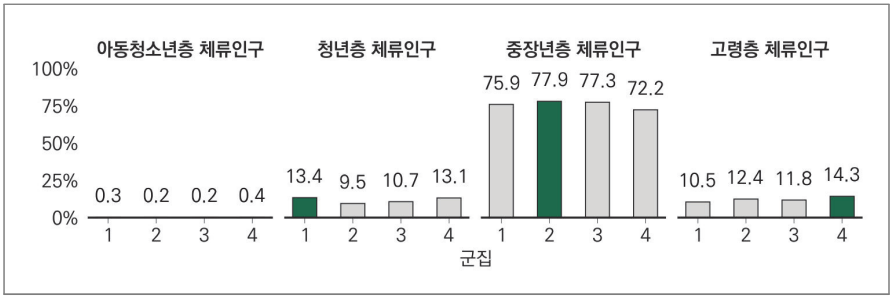
음식(29.1%)과 소매(27.5%)가 중심을 이루며, 이어 문화여가(14.1%), 운송교통(9.6%) 순으로 분포한다. 특히 문화여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장년층 체류인구가 적극적으로 여가 소비를 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8** 연령대별 소비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4는 세대별 인구 구성에서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아동·청소년층은 0.9%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0.4%로,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우 전체 체류인구의 19.1%, 소비 비중은 13.1%로, 다른 군집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또한 고령층은 전체 체류인구의 11.9%, 소비 비중은 14.3%를 기록해 역시 다른 군집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업종별 소비 비중을 보면, 아동·청소년층 체류인구는 소매(44.8%)와 음식(38.0%)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여가(5.9%)

가 그 뒤를 잇는다. 청년층 체류인구의 소비는 음식(37.7%), 소매(33.6%), 보건의료(7.3%)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층 체류인구의 소비는 소매(29.1%)와 보건의료(28.8%)에 집중되어 있고, 음식(20.9%)과 문화여가(6.1%)도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 4의 체류인구가 특정 세대, 특히 중장년층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고령층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세대별 다양성을 지닌 지역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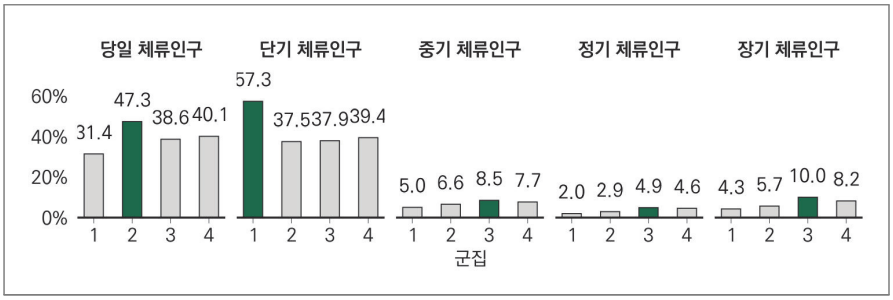
### 2) 체류 기간

군집 1은 단기 체류인구(월 2~5일 체류)에 크게 의존하는 소비 구조를 보인다. 전체 체류인구 중 단기 체류인구가 57.3%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 역시 58.3%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기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음식(32.7%)과 소매(26.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숙박(19.6%)과 문화여가(12.0%)가 뒤따른다.

군집 2는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당일 체류인구는 47.3%를 차지하고, 이들의 소비 비중은 33.9%로 다른 군집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당일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은 음식(34.2%)과 문화여가(22.2%)가 중심을 이루며, 소매(21.4%)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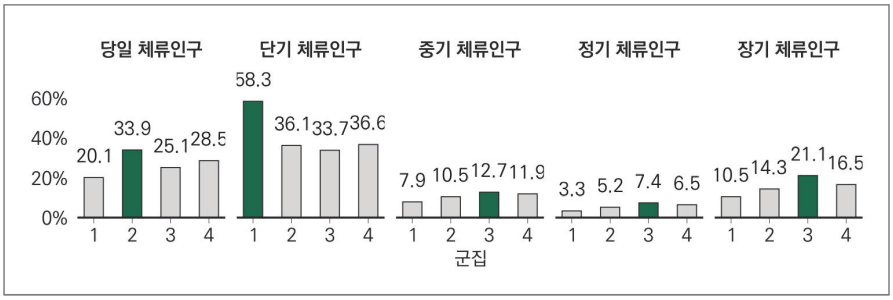
군집 3은 중·장기 체류인구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중기(월 6~14일), 정기(월 15~20일), 장기(월 21일 이상) 체류인구 모두에서 다른 군집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기 체류인구는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12.7%로 나타났고, 정기 체류인구는 4.9%로 소비 비중은 7.4%에 달한다. 특히 장기 체류인구는 전체의 10.0%를 차지하면서 소비 비중은 21.1%로, 지역 소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중기 체류인구와 정기 체류인구 모두 소매(28.4%~28.8%)와 음식(22.4%~24.7%), 운송교통(15%대)이 주요 소비 항목으로 나타난다. 장기 체류인구는 소매(37.0%)와 음식(24.4%)의 비중이 특히 높으며, 운송교통(11.3%)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그림 4-9** 체류 기간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10** 체류 기간별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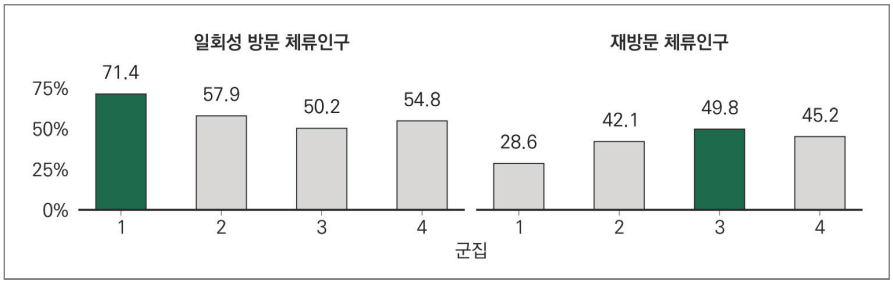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3) 재방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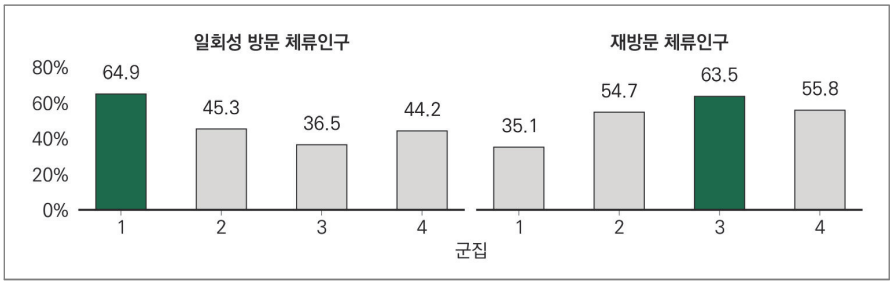
군집 1은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전체 체류인구 중 일회성 방문 인구가 71.4%를 차지하며, 이들의 소비는 전체 소비의 64.9%를 담당한다.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음식(35.0%)과 소매(26.1%)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숙박(18.1%)과 문화여가(12.2%)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그림 4-11** 재방문 여부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12** 재방문 여부별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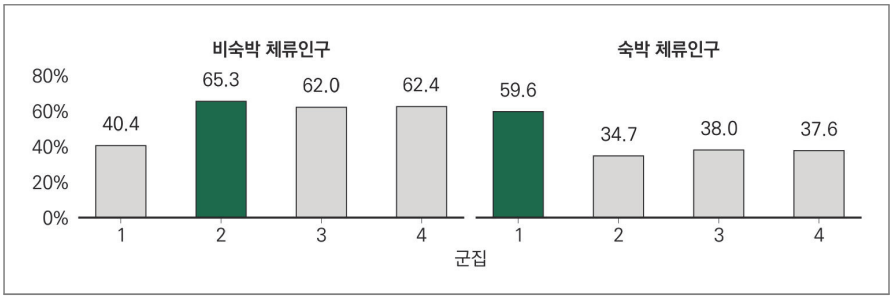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3은 재방문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전체 체류인구 중 재방문 인구의 비중은 49.8%이며, 소비 비중은 63.5%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재방문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은 소매(30.8%)과 음식(23.4%)가 가장 크고, 이어 운송교통(14.6%), 개인서비스(6.1%)가 뒤따른다.

### 4) 숙박 여부

군집 1은 숙박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숙박 인구가 59.6%를 차지하며, 이들이 담당하는 소비 비중은 69.9%로 다른 군집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 숙박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음식(32.8%)과 소매(3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숙박(17.8%)과 문화여가(8.9%)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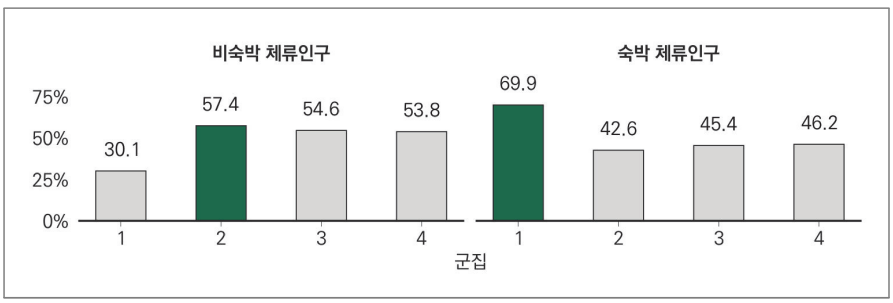
**그림 4-13** 숙박 여부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2는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 체류인구 중 비숙박 인구가 65.3%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57.4%를 기록한다. 비숙박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는 음식(30.3%)과 소매(22.0%)가 주축을 이루며, 문화여가(18.7%)와 운송교통(10.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군집 2(비숙박 인구 65.3%, 소비 57.4%)가 가장 높은 비숙박 체류인구 비중을 보이지만, 군집 3(비중 62.0%, 소비 54.6%)과 군집 4(비중 62.4%, 소비 53.8%) 역시 비숙박 체류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군집 1이 숙박 체류인구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지역이라면, 군집 2~4는 상대적으로 비숙박 체류인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숙박 여부별 소비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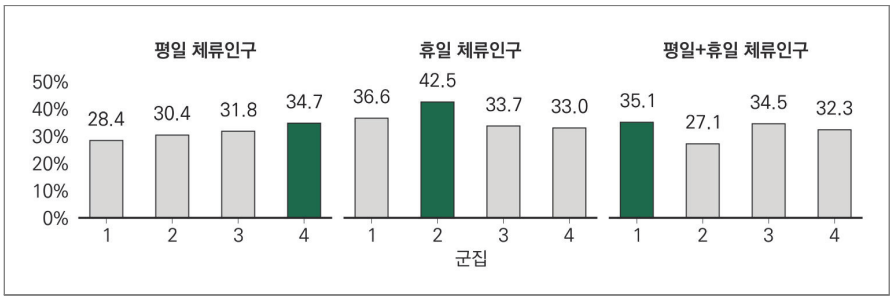
### 5) 체류요일 패턴

군집 1은 평일과 휴일을 연속해 체류하는 인구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평일+휴일 체류인구 비중이 35.1%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47.7%에 달해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평일+휴일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음식(31.0%)과 소매(30.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숙박(15.0%)과 문화여가(8.8%) 순으로 나타난다.

군집 2는 휴일 중심의 체류인구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휴일 체류인구의 비중이 42.5%에 달하고, 이들의 소비 비중은 30.4%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다. 휴일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은 음식(38.6%)과 소매(30.1%)가 중심을 이루며, 문화여가(14.7%)와 운송교통(5.0%)이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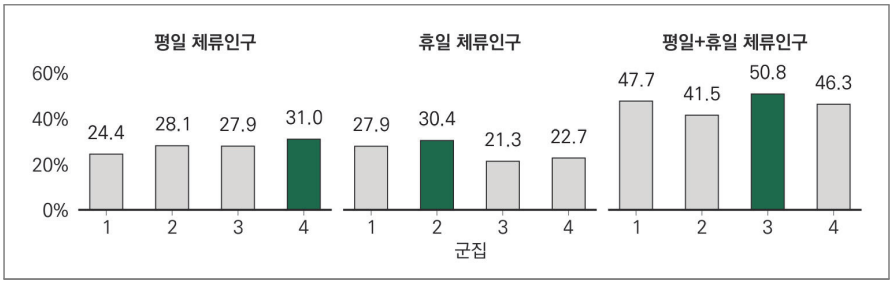
군집 3 역시 군집 1처럼 평일+휴일 체류인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전체 체류인구의 34.5%가 이에 해당하며 소비 비중은 50.8%로 가장 높다. 그러나 소비의 업종별 분포는 군집 1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평일+휴일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비중을 보면, 소매(32.7%)와 음식(25.0%)이 주요 소비 항목을 이루지만, 운송교통(11.7%), 개인서비스(5.5%), 보건의료(4.9%)와 같은 생활형 소비 항목의 비중이 두드러지고, 문화여가(3.4%)의 비중은 낮다.

**그림 4-15** 체류요일 패턴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16** 체류요일 패턴별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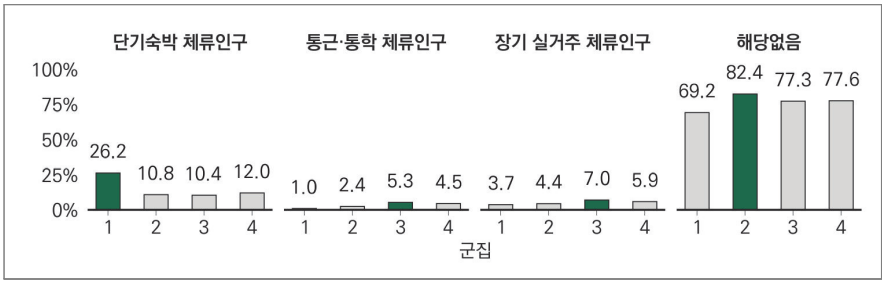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4는 평일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평일 체류인구 비중이 34.7%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31.0%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다. 평일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는 음식(24.5%)과 소매(23.0%)가 주축을 이루며, 특히 보건의료(21.9%)의 비중이 높아 다른 군집과 구별된다. 문화여가(12.8%) 역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 6) 체류 목적

군집 1은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단기숙박 체류인구가 26.2%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도 26.4%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음식(35.1%)과 소매(27.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숙박(20.0%)과 문화여가(10.7%)가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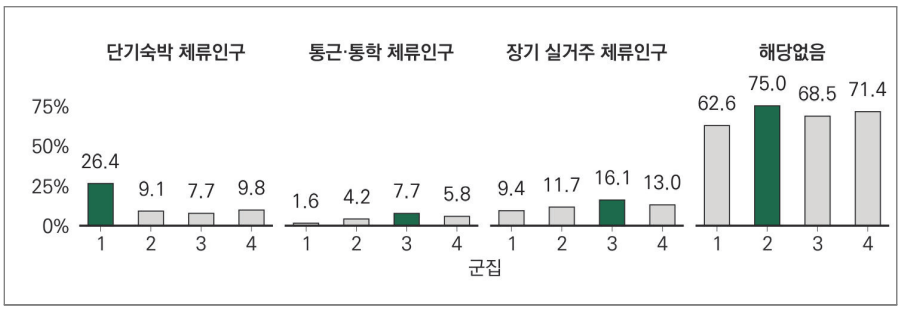
**그림 4-17** 체류 목적별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3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통근·통학 체류인구가 5.3%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7.7%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다. 이들의 업종별 소비는 소매(29.1%)와 음식(22.7%)에 집중되며, 운송교통(17.2%)과 개인서비스(6.2%)의 비중도 높아, 통근·통학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소비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의 비중도 7.0%로, 소비 비중은 16.1%에 달해 다른 군집보다 높게 나타난다.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의 소비는 소매(38.8%)와 음식(25.4%)이 주축을 이루며, 운송교통(9.6%), 보건의료(5.3%), 개인서비스(5.2%) 등 생활기반 소비 항목의 비중도 크다.

**그림 4-18** 체류 목적별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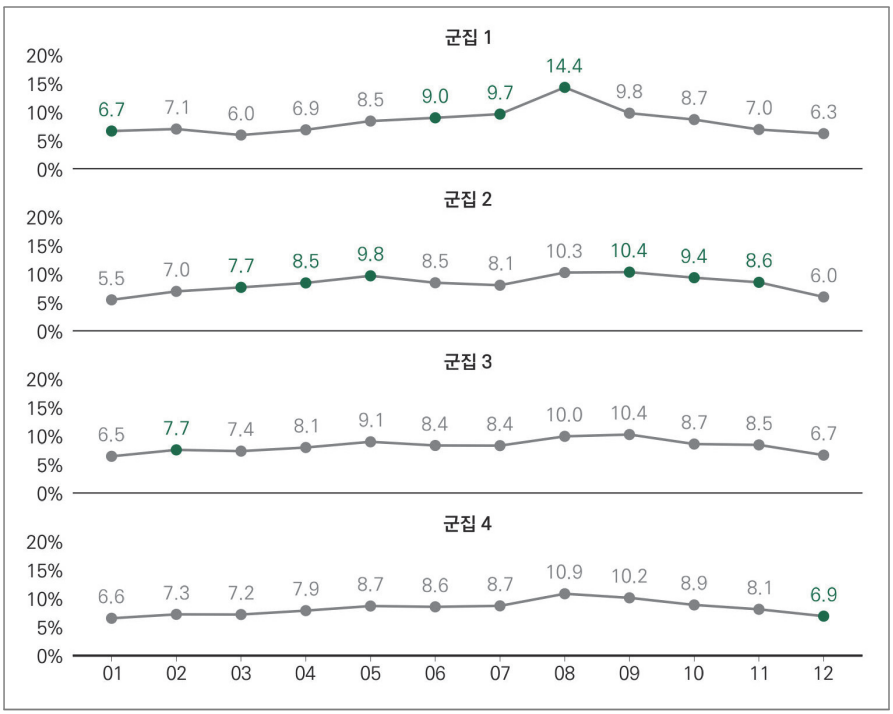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7) 체류인구의 소비 시기

군집 1은 겨울철과 여름철 휴가기간에 생활인구와 소비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다. 2024년 1월 생활인구 비중은 6.7%, 소비 비중은 7.2%를 기록하며, 여름철에는 6월(9.0%), 7월(9.7%), 8월(14.4%)에 생활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같은 기간 소비 비중도 6월 9.0%, 7월 9.9%, 8월 14.2%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군집 1이 겨울 및 여름 휴가철에 외부 인구의 유입과 함께 소비가 동반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 소비 구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음식과 소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과 문화여가가 시기에 따라 증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월에는 음식(31.0%), 소매(27.3%) 비중이 크고 숙박(23.3%)이 높게 나타나며, 6월에는 문화여가(15.7%)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된다. 7월에는 음식(33.1%), 소매(27.3%), 숙박(15.1%), 문화여가

(12.4%) 순으로 나타나며, 이와 마찬가지로 8월에도 음식(34.6%), 소매(28.1%), 숙박(15.3%), 문화여가(10.9%)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19** 월별 생활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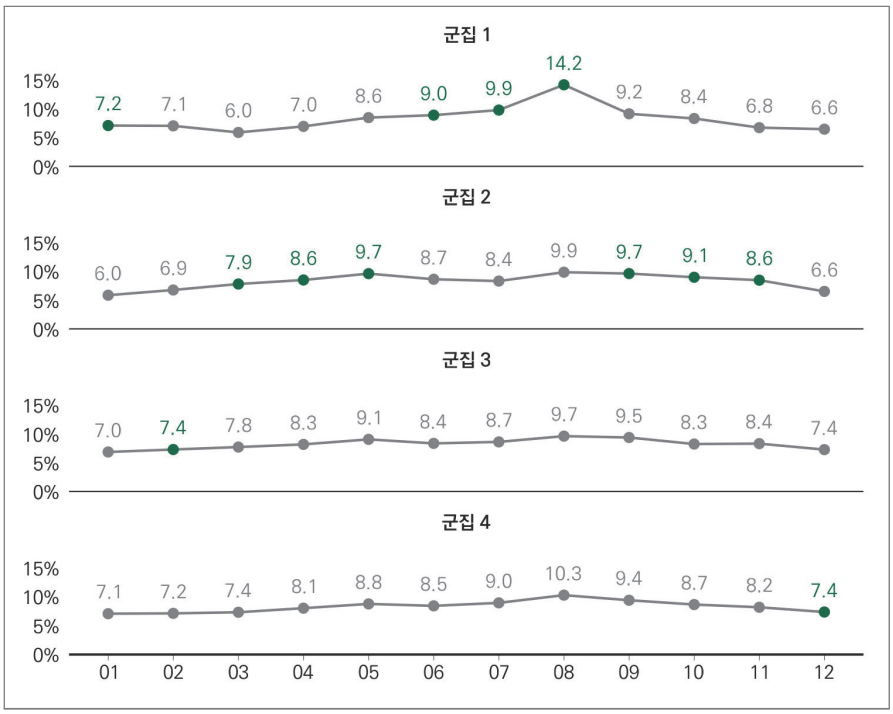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2는 봄철과 가을철에 생활인구와 소비가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생활인구 비중은 3월 7.7%, 4월 8.5%, 5월 9.8%로 상승하며, 가을철에도 9월 10.4%, 10월 9.4%, 11월 8.6%로 높게 나타난다. 소비 비중 또한 3월(7.9%), 4월(8.6%), 5월(9.7%), 9월(9.7%), 10월(9.1%), 11월(8.6%)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군집 2가 관광 성수기보다는 계절 전환기인 봄·가을에 생활인구와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봄철(3~5월)에는 음식과 소매 소비가 주축을 이루고, 문화여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3월에는 음식(30.8%)과 소매(27.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문화여가(12.6%)가 뒤를 이었다. 4월에는 음식(30.1%)과 소매(27.2%)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화여가가 14.3%로 증가하였고, 5월에는 음식(30.6%)과 소매(28.2%)가 여전히 중심이지만 문화여가가 15.0%까지 확대되었다.

**그림 4-20** 월별 생활인구 소비 비중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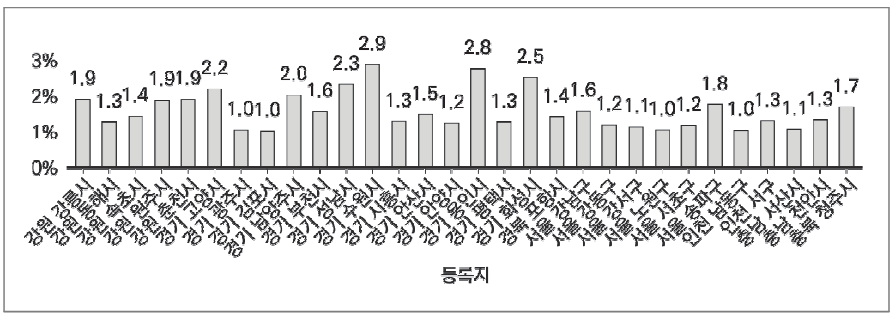
가을철(9~11월)에는 소매와 음식 외에 운송교통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9월에는 소매(32.4%)와 음식(29.8%)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운송교통(15.4%)과 문화여가(12.9%)가 뒤를 이었다. 10월에는 음식(30.3%)과 소매(26.7%)가 다소 낮아지는 대신 운송교통(16.8%)과 문화여가(15.8%)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1월에는 음식(29.7%)과 소매(26.4%)가 여전히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운송교통이 18.3%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문화여가도 15.0%를 기록했다.

군집 3과 군집 4는 특정 월에 생활인구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뚜렷한 집중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 지역으로 보인다. 군집 3은 2024년 2월에 생활인구 비중 7.7%, 소비 비중 7.4%, 군집 4는 2024년 12월에 생활인구 비중 6.9%, 소비 비중 7.4%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두 군집 모두 특정 시점을 제외하면 생활인구와 소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군집 1이나 군집 2와 달리 계절별 집중성이 강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8) 체류인구의 등록지

군집 1을 방문하는 체류인구는 수도권 거주 인구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다. 경기 수원시(2.9%), 용인시(2.8%), 화성시(2.5%), 성남시(2.3%), 고양시(2.2%) 등 경기도 주요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1.8%), 강남구(1.6%) 등 강남권 거주자의 비중도 나타난다. 또한 강원 강릉시·춘천시·원주시(각각 1.9%) 등 강원권 도시와 충북 청주시(1.7%), 충남 천안시(1.3%) 등 중부권 도시에서도 일정한 유입이 확인된다. 이는 군집 1이 수도권 및 강원권 중심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관광·휴양 목적의 단기 방문 수요가 활발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1** 군집 1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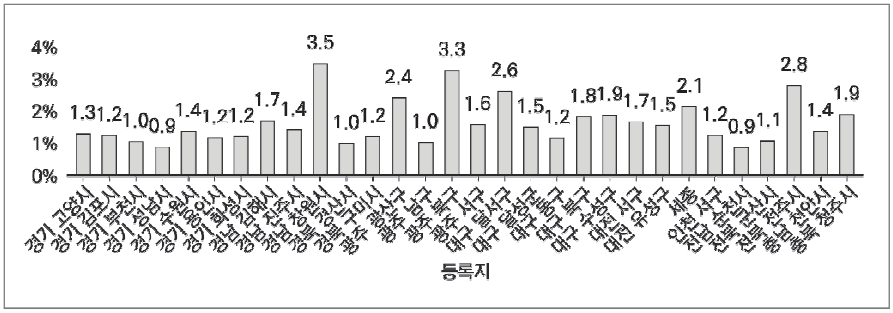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2를 방문하는 체류인구는 호남권·영남권 대도시와 중부권 주요 거점 도시 거주자의 비중이 높다. 경남 창원시(3.5%), 광주 북구(3.3%), 전북 전주시(2.8%), 대구 달서구(2.6%), 광주 광산구(2.4%) 등이 상위권에 있으며, 세종(2.1%), 충북 청주시(1.9%),

대전 서구(1.7%) 등의 기여도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구 수성구(1.9%), 북구(1.8%), 달성군(1.5%) 등 대구권 전역에서의 유입도 확인된다. 이는 군집 2가 호남과 영남의 중대도시 및 중부 도시에서 고르게 방문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그림 4-22** 군집 2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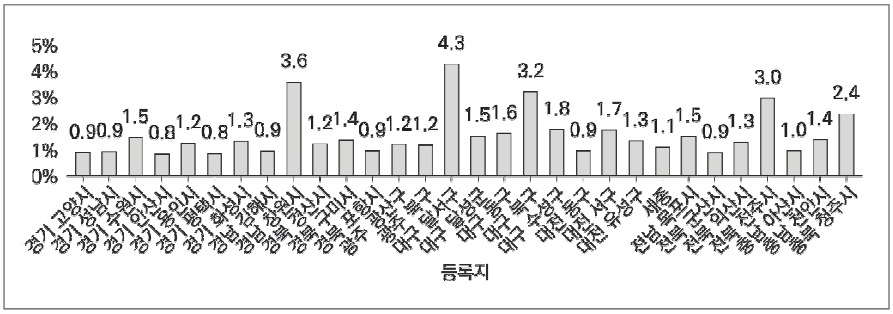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군집 3은 대구권과 영남권 거주자의 방문 비중이 매우 높다. 대구 달서구(4.3%), 북구(3.2%), 수성구(1.8%), 동구(1.6%), 달성군(1.5%) 등 대구시 전역에서 다수의 등록지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3.6%), 전북 전주시(3.0%), 충북 청주시(2.4%), 경북 구미시(1.4%), 경북 경산시(1.2%) 등 영남·호남·충청 거점 도시의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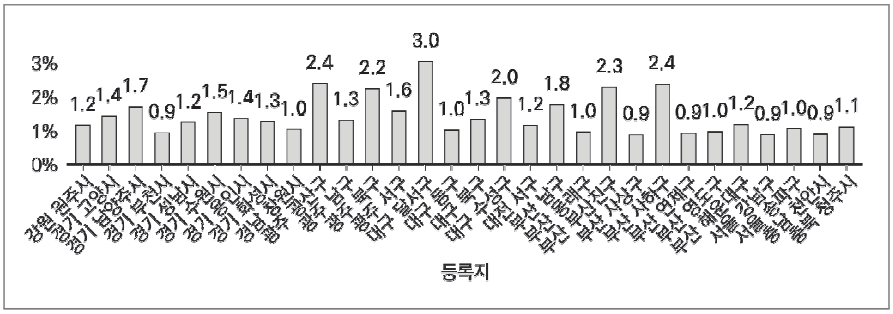
군집 4를 방문하는 체류인구는 부산권과 광주·대구권 거주자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부산 사하구(2.4%), 부산진구(2.3%), 남구(1.8%), 해운대구(1.2%)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광주 광산구(2.4%), 북구(2.2%), 서구(1.6%) 등 광주권과 대구 달서구(3.0%), 수성구(2.0%), 북구(1.3%) 등 대구권 거주자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경기 남양주시(1.7%), 수원시(1.5%), 고양시(1.4%) 등 수도권 도시와 강원 원주시(1.2%), 충북 청주시(1.1%) 등 중부권 도시에서도 일정한 방문이 이루어진다.

**그림 4-23** 군집 3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그림 4-24** 군집 4 체류인구의 등록지별 인구 비중 상위 30개 지역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제4절 • 소결

## 1.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특성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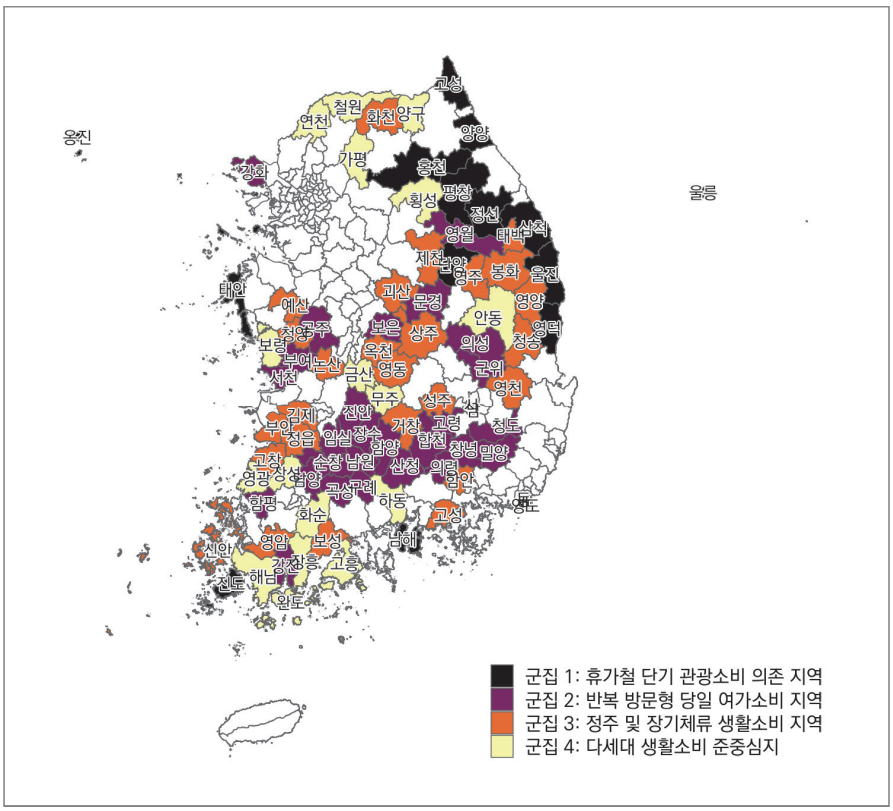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지역별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은 생활인구의 구성, 체류 형태, 소비 특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앞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지역 소비 구조와 주요 소비 주체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유형 명칭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군집 1: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 지역

군집 1은 외부 관광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 구조를 지닌 지역군으로, 전반적인 소비 수준과 경제 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모든 요인에서 평균 이하의 값을 보이며, 특히 요인 3(-1.341)과 요인 4(-1.312)의 음(-)의 값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일·재방문·비숙박 중심의 반복적 체류 소비가 활발하지 않고, 정주·장기 체류 인구의 소비 기여가 낮은 구조임을 의미한다. 또한 요인 2(-0.621)의 낮은 점수는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기보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요인 1(-0.309)은 생활인구 소비의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군집 1은 소비의 지역 내 환류가 약하고, 외부 관광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 군집에는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충남 태안군, 충북 단양군 등이 속한다. 대부분이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지 혹은 휴양지로, 특정 계절에 외부 인구의 유입이 집중되는 특징을 지닌다. 2024년 1월(동계 관광철)에는 생활인구 비중 6.7%, 소비 비중 7.2%를 기록하며, 여름철(6~8월)에는 생활인구 비중이 9.0%→9.7%→14.4%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소비 비중 역시 9.0%→9.9%→14.2%로 상승해, 계절적 관광소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임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음식·소매 소비가 중심이며, 숙박과 문화여가는 계절에 따라 증감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4-25** 생활인구 소비 구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 지도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8**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구성 지역

| 군집 | 지역 |
|---|---|
| 군집 1 |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양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홍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충남 태안군, 충북 단양군 |
| 군집 2 | 강원 영월군, 경남 밀양시,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경북 문경시,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함평군, 전북 남원시,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북 보은군 |

| 군집 | 지역 |
|---|---|
| 군집 3 | 강원 태백시, 강원 화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함안군,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청송군,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북 정읍시, 충남 논산시, 충남 예산군, 충남 청양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제천시 |
| 군집 4 | 강원 양구군, 강원 철원군, 강원 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대구 남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전남 고흥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남 보령시 |

출처: 연구진 작성

군집 1의 전체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가 81.3%를 차지하며, 이들이 전체 소비의 55.4%를 담당한다. 즉,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의 중심 주체로 작동한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18.9%에 불과하지만 소비 기여율은 44.1%로, 상권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음식(32.6%), 소매(28.0%), 숙박(14.5%), 문화여가(11.9%)에 집중되어 있으며, 네 업종의 합계가 전체 소비의 87.0%를 차지한다. 관광활동과 여가 소비가 중심이 되는 소비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0.9%), 교육(0.4%) 등 일상적인 소비는 미미해, 정주 기반 소비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군집 1은 단기 체류 중심의 소비 구조가 뚜렷하다. 전체 체류인구 중 단기 체류인구(월 2~5일 체류)가 57.3%, 소비 비중은 58.3%로, 짧은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이루어진다. 단기 체류인구의 업종별 소비는 음식(32.7%), 소매(26.7%), 숙박(19.6%), 문화여가(12.0%) 순으로 나타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관광소비가 집중되는 형태이다. 또한, 일회성 방문 체류인구가 전체 체류인구의 71.4%, 소비 비중은 64.9%에 달한다. 이들의 소비 구조 역시 음식(35.0%)과 소매(26.1%) 중심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숙박 체류인구의 비중과 소비 기여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숙박 체류인구는 전체 체류인구의 59.6%를 차지하며, 소비 비중은 69.9%에 달한다. 숙박 체류인구의 소비는 음식(32.8%), 소매(30.0%), 숙박(17.8%), 문화여가(8.9%)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형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평일과 휴일을 연속해 체류하는 인구의 비중이 35.1%, 소비 비중은 47.7%로 나타나, 휴일 중심의 단기 휴가형 소비 패턴이 강하게 드러난다. 단기 숙박 체류인구는 전체 체류인구의 26.2%, 소비 비중 26.4%로, 짧지만 숙박 중심의 소비 형태가 확인된다.

군집 1은 청년층 체류 비중이 높고 이들의 소비 참여가 활발한 지역군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청년층 비중은 17.1%, 소비 기여율은 13.4%이며, 음식(37.7%)과 소매(32.8%)에 집중된 소비 행태를 보인다. 숙박(13.2%), 문화여가(5.9%), 교통(3.5%) 순으로 나타나, 여행·휴양 중심의 청년층 관광 소비 패턴이 뚜렷하다. 이는 SNS와 체험형 관광 트렌드의 확산과도 관련이 깊다.

군집 1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인구는 수도권 및 중부권 중심의 외부 인구가 주를 이룬다. 경기 수원시(2.9%), 용인시(2.8%), 화성시(2.5%), 성남시(2.3%), 고양시(2.2%), 서울 송파구(1.8%), 강남구(1.6%) 등 수도권 도시에서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또한 강원권(강릉·춘천·원주)과 중부권(청주·천안)에서도 일정한 유입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은 군집 1 지역이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외곽 관광지로 기능하며, 휴가철 단기 방문 수요가 소비를 주도하는 구조임을 잘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군집 1은 외부 방문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 계절적 집중성, 낮은 지역 내 환류 효과, 정주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소비는 주로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집중되고, 지역경제는 단기 숙박과 관광 소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군집 1은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명칭은 군집 1이 보여주는 계절적 관광 집중, 단기 체류 중심 소비, 외부 인구 의존성을 포괄하며,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보다는 외생적 방문 수요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적 속성을 드러낸다.

### 2) 군집 2: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

군집 2는 비숙박·당일·재방문 중심의 반복 체류 소비 구조가 두드러진 지역군으로, 지역경제가 외부 방문객의 지속적 여가소비에 의해 유지되는 형태를 보인다. 요인 3에서 0.700이라는 높은 양(+)의 값을 기록한 것은 이 군집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지역 소비가 비숙박·당일 체류 및 재방문 인구의 반복적 방문을 통해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요인 4(-0.356), 요인 5(-0.701), 요인 6(-0.731)은 모두 음(-)의 값을 기록하여, 정주인구나 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기반이 약하고 등록외국인 등 장기 체류층의 기여도 역시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과 아동·청소년층의 체류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낮아, 지역 내 소비가 주로 중장년층 중심의 당일 여가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요인 1(0.094)과 요인 2(0.020)는 소폭의 양(+) 값을 보이지만, 지역

내 소비 확산이나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강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군집 2에 속한 지역은 강원 영월군, 경남 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함양군·합천군, 경북 고령군·문경시·의성군·청도군·군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강진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함평군, 전북 남원시·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충남 공주시·부여군·서천군, 충북 보은군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숙박보다는 당일 혹은 비숙박 체류에 기반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근 광역도시권 주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반복적으로 방문해 여가소비를 하는 형태를 보인다. 즉, 군집 1(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 지역)이 계절적 관광지 중심의 외부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군집 2는 도시 근교의 여가소비 공간으로 기능하며, 일상생활권 내에서 접근 가능한 중소도시 및 농촌형 여가권의 성격을 갖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담양군·함평군, 전북 임실군, 충남 공주시·서천군, 충북 보은군 등은 비숙박·당일 중심의 체류 패턴과 높은 재방문 소비 기여율을 보이며 군집 2의 전형적 성격을 나타낸다. 반면 강원 영월군, 경남 함양군·합천군, 전남 강진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등은 숙박 또는 단기 체류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군집 내부에서도 체류 기간이 긴 지역으로 구분된다. 전남 구례군, 전북 순창군·진안군, 충남 부여군 등은 일회성 방문 소비 비중이 높아 외부 방문객 의존도가 다소 더 크고, 경북 고령군과 대구 군위군은 평일 체류 인구 비중이 높아 인근 도시권과의 생활적 연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집 2의 가장 뚜렷한 인구학적 특징은 중장년층 체류인구의 절대적 우위이다. 전체 체류인구의 74.7%가 중장년층이며, 이들이 담당하는 소비 비중은 77.9%로 다른 군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중장년층 체류인구의 소비는 음식(29.1%)과 소매(27.5%)가 중심을 이루며, 문화여가(14.1%)와 운송교통(9.6%)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문화여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중장년층이 단순한 관광보다는 휴식·체험 중심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체류 형태를 보면, 군집 2는 비숙박 및 당일 체류 중심의 소비 구조가 핵심적이다. 전체 체류인구 중 당일 체류인구는 47.3%로, 이들이 담당하는 소비 비중은 33.9%에 달한다. 업종별로 음식(34.2%), 문화여가(22.2%), 소매(21.4%) 순으로 소비가 집중되어 있어, 단시간 방문에 기반한 식음·관람·체험형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숙박 체류인구는 전체의 65.3%, 소비 비중은 57.4%로, 음식(30.3%)과 소매(22.0%) 외에도 문화여가(18.7%)와 운송교통(10.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숙박을 수반하지 않는 짧은 여가·관광 활동이 군집 2 지역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일별로 보면, 휴일 중심의 체류와 소비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전체 체류인구 중 휴일 체류인구 비중은 42.5%, 소비 비중은 30.4%로 다른 군집보다 높다. 즉,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한 근거리 여가 활동이 지역 내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에 생활인구와 소비가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생활인구 비중은 봄철 3월 7.7%, 4월 8.5%, 5월 9.8%로 상승하고, 가을철 9월 10.4%, 10월 9.4%, 11월 8.6%로 높게 유지된다. 소비 비중 또한 같은 흐름을 보이며, 3월(7.9%), 4월(8.6%), 5월(9.7%), 9월(9.7%), 10월(9.1%), 11월(8.6%)에 집중된다. 이러한 양상은 군집 2가 봄·가을의 온화한 계절에 방문이 집중되는 여가 중심 지역임을 보여준다.

군집 2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인구의 거주지는 호남권·영남권 대도시와 중부권 주요 거점 도시에 고르게 분포한다. 경남 창원시(3.5%), 광주 북구(3.3%), 전북 전주시(2.8%), 대구 달서구(2.6%), 광주 광산구(2.4%)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세종(2.1%), 충북 청주시(1.9%), 대전 서구(1.7%) 등의 유입도 두드러진다. 특히 대구 수성구(1.9%), 북구(1.8%), 달성군(1.5%) 등 대구권 전역에서의 방문이 활발하게 나타나, 군집 2가 광역도시 인근의 주말 여가권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군집 2는 정주 기반은 약하지만, 인근 광역도시권 인구의 반복적 방문과 여가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는 구조를 지닌다. 소비는 숙박보다 당일·비숙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방문율이 높고 중장년층이 핵심 소비층으로 작용한다. 또한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에 여가 활동이 집중되고, 음식·소매·문화여가 업종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군집 2는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 3) 군집 3: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 체류인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내생적 소비 구조를 지닌 지역군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0.330), 요인 4(1.099), 요인 5(0.798)에서 뚜렷한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생활인구의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지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등록외국인이 주요 소비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요인 4의 높은 점수는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요인 5는 등록외국인, 중·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영향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요인 2는 -0.629로 음(-)의 값을 기록해 지역 내 소비가 내부에서 순환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 체류인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내생적 생활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군으로 볼 수 있다.

이 군집에는 강원 태백시, 화천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함안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청송군,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충남 논산시, 예산군, 청양군, 충북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높고, 외부 방문객이나 단기 체류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외생적 관광 소비보다는 정주 및 장기 거주 인구의 일상적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장기 체류인구나 등록외국인 소비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아, 군집 내부에서도 소비 구조의 다양성이 관찰된다. 경남 함안군은 장기 체류인구 소비 기여율이 14.7%로 높지만, 주민등록인구의 소비 기여율은 51.8%로 다소 낮아 정주 기반보다 체류인구 의존도가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성주군과 영암군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반면 청송군, 신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주민등록인구의 소비 기여율이 높으면서도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소비 비중이 커, 장·단기 체류 소비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함안군, 성주군, 영천시, 영암군, 김제시, 논산시, 예산군, 청양군 등은 등록외국인의 생활인구 비중과 소비 기여율이 다른 지역의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등록외국인 소비가 지역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집 3은 전체 생활인구 중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36.9%, 소비 비중은 64.4%로 다른 군집보다 높다. 등록외국인의 비중도 1.2%, 소비 기여율은 1.4%로, 전체 인구감소지역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의 소비는 소매(39.2%), 음식(19.8%), 운송교통(10.9%)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외국인 역시 소매(67.7%)와 음식(15.1%)이 중심을 이루고, 보건의료(4.1%), 교육(3.8%) 등 생활필수 영역의 소비가 뒤를 따른다. 정주 기반의 생활형 소비 구조를 갖고 있다.

체류기간을 보면, 군집 3은 중·장기 체류인구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다. 중기 체류인구(월 6~14일)는 8.5%, 정기 체류인구(월 15~20일)는 4.9%, 장기 체류인구(월 21일 이상)는 10.0%를 차지하며, 이들의 소비 기여율은 각각 12.7%, 7.4%, 21.1%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소매(37.0%)와 음식(24.4%)이 중심이며, 운송교통(11.3%)도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중·정기 체류인구 역시 소매와 음식, 교통 소비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생활형 소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군집 3은 재방문 체류인구의 소비 기여가 큰 지역으로, 전체 체류인구의 49.8%, 소비 비중의 63.5%를 차지한다. 이들의 소비는 소매(30.8%), 음식(23.4%), 운송교통(14.6%), 개인서비스(6.1%) 순으로 분포하며, 관광형 소비보다는 생활권 내 반복 소비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평일과 휴일을 연속해 머무는 체류인구의 비중이 34.5%, 소비 비중이 50.8%로 높게 나타나,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지속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체류인구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들의 소비는 소매(32.7%), 음식(25.0%), 운송교통(11.7%), 개인서비스(5.5%), 보건의료(4.9%) 등 생활 필수 영역이 중심으로, 군집 1이나 2와 달리 문화여가 비중(3.4%)은 낮다.

이 지역군은 통근·통학을 포함한 정기적 이동형 체류인구의 비중도 높다. 전체 체류인구의 5.3%가 이에 해당하며, 소비 비중은 7.7%로 나타난다. 이들의 소비는 소매(29.1%), 음식(22.7%), 운송교통(17.2%), 개인서비스(6.2%) 중심으로, 생활과 이동이 결합된 구조를 보인다. 또한,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비중은 7.0%, 소비 비중은 16.1%로, 이들의 소비는 소매(38.8%), 음식(25.4%), 운송교통(9.6%), 보건의료(5.3%), 개인서비스(5.2%) 순으로 나타난다.

군집 3은 군집 1이나 2와 달리 계절에 따른 소비 집중도가 높지 않다. 2024년 2월 생활인구 비중 7.7%, 소비 비중 7.4%로 다소 상승한 시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소비가 분포하는 안정형 지역 구조를 보인다. 즉, 특정 관광 성수기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적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생활소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종합하면, 군집 3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정주 및 장기 체류인구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내생적 소비 구조, 안정적·비계절적 소비 패턴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소비의 주요 항목이 소매·음식·교통·보건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경제는 외부 방문객보다는 내부 거주·체류 인구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군집 3은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 4) 군집 4: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

군집 4는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성이 강하고, 세대 간 소비 참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군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2(1.288)와 요인 6(1.127)이 높은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순환되며,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체류와 소비 기여가 다른 군집에 비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즉, 젊은 세대가 지역경제 활력을 주도하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비를 구성하는 특징을 지닌 지역이다. 반면, 요인 1(-0.373)과 요인 5(-0.264)의 낮은 점수는 생활인구 소비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낮고, 장기체류·등록외국인 소비 기여가 낮은 것음을 나타낸다.

이 군집에는 강원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대구 남구, 부산 동구·서구, 전남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보령시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내부 순환형 소비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청년층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 강원 양구군의 청년층 체류인구 비중은 25.1%, 소비 기여율은 24.9%로 인구감소지역 평균(14.4%, 11.0%)을 크게 상회한다. 철원군, 가평군, 연천군, 안동시,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전북 무주군, 충남 보령시 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하동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금산군 등은 고령층의 체류 및 소비 기여가 높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함께 소비 기반을 이루는 세대 혼합형 구조를 보인다.

체류인구 연령대를 통해서도 이러한 다양성이 확인된다. 전체 체류인구 중 아동·청소년층은 0.9%(소비 0.4%), 청년층은 19.1%(소비 13.1%), 고령층은 11.9%(소비 14.3%)로, 중장년층에 편중되지 않고 세대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소비 항목별로는 아동·청소년층이 소매(44.8%)와 음식(38.0%), 청년층이 음식(37.7%), 소매(33.6%), 보건의료(7.3%), 고령층이 소매(29.1%)와 보건의료(28.8%)를 중심으로 소비해, 세대별로 다른 소비 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류 형태를 보면, 군집 4는 비숙박 중심의 소비 구조를 보인다. 전체 체류인구의 62.4%, 소비 비중의 53.8%가 비숙박 체류인구에 해당하며, 평일 체류인구 비중도 34.7%(소비 31.0%)로 높다. 평일 체류인구의 소비는 음식(24.5%), 소매(23.0%), 보건의료(21.9%), 문화여가(12.8%) 중심으로, 일상 소비와 복지·문화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군집 4는 계절적 편중이 거의 없고, 연중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유지한다. 2024년 12월 생활인구 비중 6.9%, 소비 비중 7.4%로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 소비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류인구는 주로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수도권과 중부권에서도 일정한 유입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부산 사하구(2.4%), 부산진구(2.3%), 대구 달서구(3.0%), 광주 광산구(2.4%) 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군집 4가 대도시 생활권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체류인구가 평일에 일상소비·보건의료·문화여가를 위해 꾸준히 방문하는 개방적 생활경제권 내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명명할 수 있다. 이 군집은 대도시 생활권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연령층의 체류인구가 음식, 소매, 보건의료, 문화여가 등 일상적 소비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특징지어진다. 생활권 내에서 중간 위계의 소비 기능을 담당하며 외부 방문 인구의 일상 소비 수요를 흡수하는 준중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구조는 군집 4가 중심도시와 주변 배후지 사이에서 생활소비의 중간 결절지로서, 권역 내 소비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다양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시사점

본 연구는 생활인구 정책이 단순히 인구 규모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이 경제 구조와 생활환경에 맞는 생활인구 세부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지자체가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생활인구 전반의 수적 확대를 공통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인구집단을 늘리는 방식이 동일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인구 구성 비중, 소비 비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 등 네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어떤 생활인구 유형이 지역경제에서 주요 주체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관광·여가 중심의 단기 체류 인구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정주형 생활소비 인구나 등록외국인 등 장기체류 집단이 더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생활소비 인구가 균형을 이루며 일상적 소비를 통해 지역 내수 기반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지역이 가진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집중해야 할 생활인구 세부 유형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인구 정책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목표 아래 인구 유입을 추구하기보다, 지역별로 규모가 크거나 파급효과가 큰 인구 유형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차별화된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체류 규모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인구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이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생활인구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체류인구를 주로 관광객으로 간주하고, 관광 수요의 증대나 관광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다. 체류인구의 실제 목적과 소비 행태를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류인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체류가 단순한 관광 목적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정주활동, 그리고 생활소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생활소비란 관광 목적의 일시적 지출이 아니라, 음식 구매, 소매 및 개인서비스 이용, 보건의료 서비스 등 일상적 필요에 기반한 소비 행위를 의미한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1과 군집 2는 관광 및 여가소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기존 연구와 정책이 주로 다루어 온 영역과 일치했다. 반면 군집 3과 군집 4는 이전의 접근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인구의 생활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러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 중심의 일시적 수요보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비 기반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군집 4는 다양한 연령대의 체류인구가 일상생활을 위해 방문하고 소비하는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소비의 상당 부분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되어 외부로의 누수가 적고,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연중 안정적인 소비활동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요 소비주체가 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미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활소비형 체류인구의 활동성을 높이고 소비의 지역 내 환류를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될 때,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분석은 등록외국인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이나 외국인 대상 행사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등록외국인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에서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등록외국인이 군집 3 지역 중 일부, 즉 정주 및 장기체류 인구의 생활소비가 활발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음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생활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내수 기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등록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지역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소비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군집 3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산업구조와 인구 구성, 지역의 개방성 등 조건이 갖춰진 일부 지역에서 두드러진 경향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외국인 인구가 실제로 밀집해 있고 생활소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 지원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는 선택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계와 정책 현장 모두에서, 체류인구나 등록외국인 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널리 공유되어 왔다.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인식 아래, 체류인구의 유입이나 외국인 정착 지원을 지역 활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지만, 실제로 이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체류인구의 소비는 일시적 지출에 그치지 않는가?”, “등록외국인의 소비는 실제로 지역경제로 환류되는가?”, “이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 얼마나 의미 있는가?”와 같은 의문이 정책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주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소비 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구성 비중, 소비 비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귀속률을 함께 고려하여, 각 인구 집단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의 생산 증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류인구와 등록외국인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구체화한 첫 시도로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행정구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군집 2와 군집 4

지역에서 생활권 단위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 지역은 행정 경계를 넘어 인근 지역 간 체류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군집 2에서는 봄과 가을철에 인근 지역을 당일로 오가며 소비하는 인구 흐름이 확인되었고, 군집 4는 배후 거주지에서 유입된 인구의 일상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생활인구의 실제 활동 범위와 소비 흐름을 고려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생활인구 정책은 생활권내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통합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 단위에서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을 연계할 경우, 소비 흐름의 안정성과 지역 간 상생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군집 2와 군집 4처럼 인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자체 간 교통·상권·문화·여가 인프라를 공동으로 기획·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공동 인프라 조성이나 연합형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면, 소비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생활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 정책을 설계할 때, 행정 경계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생활권 단위의 연계성과 소비 흐름을 고려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생활권 단위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지역 간 상생 구조와 내생적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생활인구가 산업 구조와 공간 구조를 매개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각 군집 유형은 인구 특성과 소비 행태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 기반과 공간적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군집 1과 군집 2는 관광·여가 소비가 집중된 지역으로, 숙박·음식·레저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소비를 견인하고 있었다. 반면,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인구의 생활소비가 활발한 지역으로, 음식·소매·보건·교육 등 일상 기반 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군집 4는 문화·소매·개인서비스업이 혼재된 준중심지형 상권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연령층이 일상소비를 위해 방문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구 유형과 소비 행태, 산업 구조, 공간적 특성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체계로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생활인구의 유입이나 정주 확대를 단독 목표로 삼기보다, 각 인구 유형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공간적 여건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정주형 생활소비 지역(군집 3)에서는 생활서비스 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교육·보건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형 지역(군집 1·2)은 체류형 소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상품 구조 개선이나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을 줄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소비 준중심지(군집 4)는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복합 상업 공간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정책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를 인구정책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공간을 매개로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을 산업구조와 공간계획에 통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인구정책은 단기적 유입사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5

# 지역 유형별 심층 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강원 양양군: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제3절** 충남 부여군: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
**제4절** 전북 고창군: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
**제5절** 경북 안동시: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
**제6절** 시사점

# 제5장 지역 유형별 심층 사례분석

## 제1절 • 분석개요

### 1. 분석목적

본 사례분석의 목적은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통해 지역의 소비구조 및 체류·정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형별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 추세 속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단기 관광이나 단순 유입보다 장기 체류와 생활인구 소비의 지속성 확보가 지역경제 안정화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분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의 규모와 소비 행태를 중심으로 군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체류형 소비 중심형 - 생활형 정주 중심형'의 스펙트럼 속에서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사례 선정기준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제4장의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군집의 대표성을 갖는 지자체 중 체류인구 및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소비 구조의 다양성, 계절적 편차, 정주 및 재방문 인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안분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군집 1은 전형적인 휴가철 계절성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체류인구 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예: 울릉군). 따라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음식과 숙박 소비액이 큰 속성을 가지면서도 문화여가 소비액도 많은 지역, 특히 청년층의 소비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지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강원 양양군을 대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 5-1** 군집 1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구분 |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기타 |
|---|---|---|---|---|---|---|---|---|---|---|
| 경북 울릉군 | 169.3 | 71.1 | 7.8 | 2.7 | 0.8 | 7.6 | 0.3 | 0.0 | 71.2 | 4.2 |
| 강원 홍천군 | 129.8 | 26.5 | 29.1 | 24.7 | 1.9 | 7.9 | 1.4 | 0.3 | 30.6 | 0.9 |
| 강원 평창군 | 124.8 | 36.3 | 30.5 | 12.5 | 1.2 | 4.7 | 0.5 | 1.0 | 31.7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15.0 | 33.2 | 5.9 | 10.8 | 3.8 | 9.1 | 7.7 | 0.7 | 33.1 | 1.5 |
| 군집 1 | 111.3 | 36.3 | 16.2 | 13.3 | 1.7 | 5.3 | 1.0 | 0.4 | 3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양양군 | 97.7 | 42.5 | 10.5 | 12.6 | 1.4 | 3.3 | 0.2 | 0.2 | 23.5 | 0.9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군집 2는 봄·가을 반복방문형 당일 나들이 집중지역으로 체류인구 인당 소비가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므로,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남 창녕군, 충남 부여군, 대구 군위군 등을 후보에 두었으나, 그중에서도 군집 2에서 소매 업종의 소비액(1등)이 가장 많은 부여를 선정하였다.

**표 5-2** 군집 2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구분 |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기타 |
|---|---|---|---|---|---|---|---|---|---|---|
| 경남 창녕군 | 151.2 | 29.7 | 3.9 | 21.3 | 4.8 | 27.3 | 4.2 | 0.5 | 28.0 | 1.8 |
| 충남 부여군 | 137.5 | 28.8 | 11.8 | 15.1 | 3.7 | 7.5 | 2.1 | 0.5 | 59.5 | 1.2 |
| 대구 군위군 | 124.5 | 18.4 | 0.5 | 41.7 | 1.6 | 19.9 | 1.0 | 0.1 | 19.4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15.0 | 33.2 | 5.9 | 10.8 | 3.8 | 9.1 | 7.7 | 0.7 | 33.1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집 2 | 102.2 | 30.9 | 2.4 | 13.0 | 2.8 | 9.5 | 3.0 | 0.4 | 29.0 | 1.3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군집 3은 정주형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유형으로 생활인구 인당 소비액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군집인데, 이 중에서 장기 체류인구가 많고, 특히, 군집 3 중에서 문화여가 소비액(1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고창을 선정하였다.

**표 5-3** 군집 3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구분 |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기타 |
|---|---|---|---|---|---|---|---|---|---|---|
| 충북 제천시 | 332.9 | 69.3 | 5.9 | 8.7 | 30.2 | 31.4 | 20.7 | 7.8 | 119.8 | 5.7 |
| 경북 상주시 | 301.2 | 68.1 | 1.0 | 6.7 | 15.4 | 35.2 | 15.3 | 9.0 | 107.5 | 6.9 |
| 경북 영주시 | 300.8 | 68.9 | 1.9 | 4.4 | 15.3 | 27.0 | 18.0 | 9.7 | 122.6 | 5.2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집 3 | 225.9 | 49.8 | 2.6 | 6.7 | 12.1 | 24.7 | 12.8 | 6.0 | 81.9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고창군** | 194.1 | 44.0 | 1.7 | **15.4** | 6.0 | 22.5 | 9.7 | 4.5 | 64.3 | 3.7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92.9 | 45.8 | 4.5 | 9.3 | 8.1 | 18.2 | 12.6 | 4.5 | 68.2 | 3.4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표 5-4** 군집 4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구분 |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기타 |
|---|---|---|---|---|---|---|---|---|---|---|
| **경북 안동시** | **297.5** | 65.3 | 1.7 | 9.2 | 15.0 | 25.0 | 27.3 | 9.0 | 112.0 | 6.1 |
| 전남 해남군 | 251.9 | 55.1 | 2.0 | 10.8 | 10.7 | 29.0 | 16.3 | 6.1 | 87.4 | 7.4 |
| 전남 영광군 | 233.0 | 53.1 | 2.2 | 8.6 | 7.6 | 19.1 | 14.8 | 7.3 | 98.0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92.9 | 45.8 | 4.5 | 9.3 | 8.1 | 18.2 | 12.6 | 4.5 | 68.2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집 4 | 188.7 | 45.3 | 3.2 | 9.3 | 6.8 | 13.7 | 21.7 | 4.8 | 66.9 | 3.2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마지막으로 군집 4는 평일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군집 4 중에서 생활인구 인당 소비액(1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교육, 소매, 개인서비스, 운송교통 모두 인당 소비액이 높아 생활 중심지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안동시를 선정하였다.

**표 5-5** 사례지역 최종 선정

| 유형 | 지역 |
|---|---|
| 군집1: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 강원 양양군 |
| 군집2: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지역 | 충남 부여군 |
| 군집3: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 전북 고창군 |
| 군집4: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 | 경북 안동시 |

출처: 연구진 작성

## 3. 사례 분석틀

본 연구의 심층사례 분석은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의 위치, 접근성, 인구현황,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주요 관광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정량분석을 통해 주요 체류인구 비중, 생활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등 소비주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정성분석에서는 제도적 요인, 정책사업적 요인, 사업주체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군집별 사례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별 특성 및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지역의 생활인구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조직·운영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였고, 지자체가 실제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생활인구 관련 사업과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표 5-6** 심층 사례분석 틀

| 구분 | 분석 관점 | 주요 분석 내용 | 세부 분석 항목 |
|---|---|---|---|
| 제도적 요인 | 생활인구 체류·소비를 지원하는 법적·행정적 기반 | 조례, 계획, 제도 등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여 지역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분석 | •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br>• 체류·정주 지원 제도(귀농·귀촌, 농촌유학, 주거지원 등) |
| 정책적 요인 | 생활인구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및 실행 프로그램 | 지역별 정책사업의 내용·대상·성과를 검토하여 체류 및 소비로 이어지는 정책구조 파악 | • 생활인구 유입형, 정주형 사업<br>• 관광·농업·주거·문화 연계사업 구조<br>• 공공투자 및 국비공모 참여 실적 |
| 주체별 요인 | 공급주체와 소비주체의 관계성 및 공공·민간·주민 등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과 협력 구조 | 생활인구 소비활성화를 이끄는 주체 간 협력체계와 운영구조를 분석 | • 공공의 역할: 제도·재정·기획 주도<br>• 민간의 역할: 콘텐츠 개발·운영·소비 촉진<br>• 공공-민간 협력거버넌스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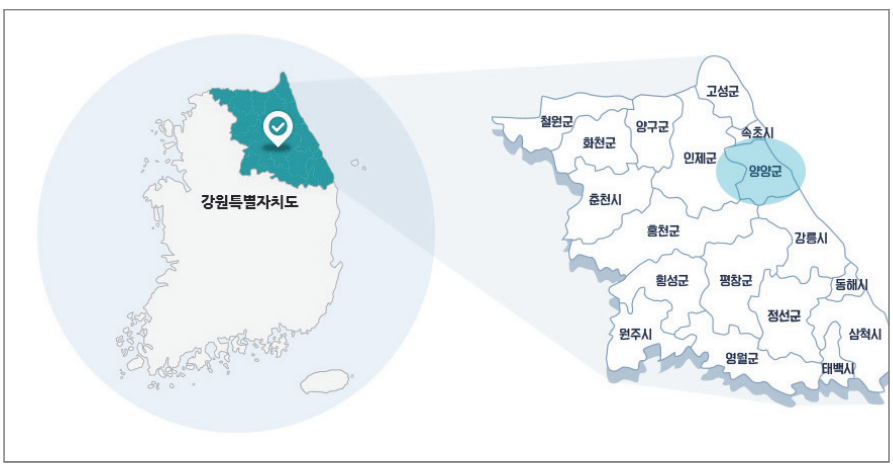
# 제2절 • 강원 양양군: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 1. 지역 현황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동해안 중앙부에 위치한 군으로, 북쪽으로는 속초시, 서쪽으로는 인제군, 남쪽으로는 강릉시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와 맞닿아 있다.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의 동사면에 자리하여 산악지형과 해안지형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군의 면적은 약 630㎢로, 동서로는 험준한 산지와 계곡이, 남북으로는 완만한 평야와 해안선이 펼쳐져 있다.

양양군의 중심부에는 양양읍이 위치하며, 군청과 주요 행정기관,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낙산해수욕장, 하조대, 남애항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양양군이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5-1** 강원 양양군 위치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양양군은 특히 동해안권 중심도시로서 강릉, 속초, 인제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도 7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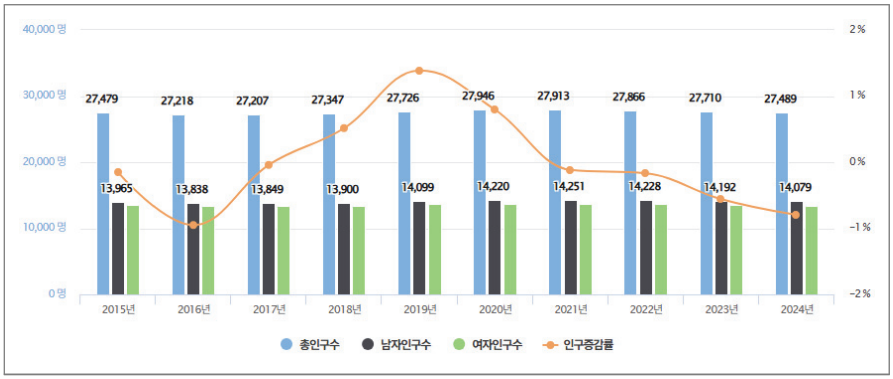
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는 양양군이 해양관광, 워케이션, 서핑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강점으로 평가된다.

**표 5-7** 강원 양양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세종 | 충북 | 대구 | 경북 |
|---|---|---|---|---|---|---|---|---|
| 최단 거리 | 181㎞ | 225㎞ | 202㎞ | 309㎞ | 302㎞ | 264㎞ | 372㎞ | 281㎞ |
| 최소 소요 시간 | 2시간 10분 | 2시간 30분 | 2시간 10분 | 3시간 15분 | 3시간 10분 | 3시간 | 3시간 40분 | 2시간 50분 |

주: 양양군청에서 각 시·도청까지의 평일 오전 10시 자가용 기준
출처: 네이버길찾기

**그림 5-2** 최근 10년간 강원 양양군 인구현황(2015~2024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최근 10년간 강원도 양양군의 인구 현황은 총인구가 2015년 27,479명에서 2024년 27,489명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인구와 여성인구 역시 큰 증감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증감률은 연평균 -1% 내외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의 안정성과 소폭의 감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표 5-8** 강원 양양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단위: %)

| 구분 | 지표 | 양양군 | 전국 평균 |
|---|---|---|---|
| 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40.1 | 85.85 |
| |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12.97 | 53.99 |
| 주거 | 노후주택비율 | 26.5 | 23.5 |
| 문화여가 |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15.31 | 60.35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27.11 | 19.08 |
| 생활환경 | 하수도보급률 | 88.2 | 95.1 |
| |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 0.03 | 0.7 |
| 보건복지 |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7.49 | 89.92 |
| |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0 | 16.53 |

주: 2024년 발표 자료 기준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나비스(NABIS) 균형발전지표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살펴본 양양군의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교육, 주거, 문화여가,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의 부문에 걸쳐 양양군의 현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양양군의 주택은 노후하고 의료서비스는 몹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격차는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은 7.49%로, 전국 평균(89.92%)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은 0%로 나타나,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응급 및 전문의료 접근성이 극히 낮은 지역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표 5-9** 강원 양양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상위 5개)

| 순위 | 주요관광지점 | 내국인 수(명) |
|---|---|---|
| 1 | 낙산사 | 1,578,813 |
| 2 | 오색그린야드호텔 온천 이용객 | 257,692 |
| 3 | 설해원 | 112,158 |
| 4 | 미천골자연휴양림 | 82,023 |
| 5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78,003 |

주: 2024년 한해 내국인 기준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양양군의 주요 관광지는 해안·산악·온천·생태·문화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낙산사와 오색온천을 중심으로 한 해안 및 휴양형 관광수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양양군은 동해안 중심의 해양·자연·휴양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한 지역으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복합형 관광도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제시된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일부 유료 입장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관광활동의 실제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의 관광객 실질 규모는 공식 입장객 통계보다 훨씬 크며, 자연경관 중심의 개방형 관광구조로 인해 통계상 과소집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요약하자면, 낙산사와 오색권역, 하조대·죽도해변 등은 이미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관광명소이며, 양양군은 해양·산악·문화·체험형 관광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양양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이다. 그러나 2024년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가 약 82만 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통계청, 2025).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가철 관광지로서, 양양군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강원 양양군의 체류인구는 전체 생활인구의 88.6%를 차지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평균(70.0%)이나 군집 1(휴가철 단기 숙박 관광 집중 지역, 8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문객의 61.5%가 단기(월 2~5일 체류) 방문객이며, 31.2%는 단기 숙박 인구(월 4박 이하 연속 숙박 후 재방문 없음), 62.1%가 숙박객, 75.7%가 일회성 방문객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비중이 19.8%로 높고, 평일과 휴일을 이어서 머무르는 체류 인구가 35.3%에 달한다. 즉, 양양군은 청년층 방문이 활발하고, 주말과 평일을 연결해 짧게 숙박하는 체류 패턴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표 5-10** 강원 양양군 주요 체류인구 비중

(단위: %)

| 구분 | 청년층 | 단기 | 일회성 방문 | 숙박 | 평일+휴일 | 단기숙박 |
|---|---|---|---|---|---|---|
| 강원 양양군 | 19.8 | 61.5 | 75.7 | 62.1 | 35.3 | 31.2 |
| 군집 1 | 17.1 | 57.3 | 71.4 | 59.6 | 35.1 | 26.2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6.1 | 42.0 | 57.5 | 41.3 | 32.2 | 14.0 |

주: 전체 체류인구 중 해당 특성을 지닌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양양군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은 97.7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115.0천 원)이나 군집 1(111.3천 원)보다 소비 수준이 낮다. 즉, 체류 규모는 크지만 개별 소비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업종별 소비를 보면 음식(42.5천 원/인)과 함께 문화여가(12.6천 원/인)에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여가 소비가 높은 이유는 양양군의 대표 관광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네비게이션 자료에 따르면, 쏠비치양양, 낙산사, 양양전통시장, 낙산해변, 설해원CC, 휴휴암, 서피비치, 하조대해변 등이 상위 관광지로 기록되었다. 이 중 상당수가 리조트, 골프장, 서핑 시설 등 레저·체험형 관광지다. 또한, 내국인 유료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보면, 오색그린야드호텔 온천, 설해원, 미천골자연휴양림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온천, 골프, 휴양림과 같이 체류형 여가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양양군에 레저 중심 관광지가 발달해 있어, 체류인구가 이러한 문화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1** 강원 양양군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여가 | 개인서비스 | 운송교통 | 보건의료 | 교육 | 소매 |
|---|---|---|---|---|---|---|---|---|
| 강원 양양군 | 42.5 | 10.5 | 12.6 | 1.4 | 3.3 | 0.2 | 0.2 | 23.5 |
| 군집 1 | 36.3 | 16.2 | 13.3 | 1.7 | 5.3 | 1.0 | 0.4 | 31.1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3.2 | 5.9 | 10.8 | 3.8 | 9.1 | 7.7 | 0.7 | 33.1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청년층 체류인구만 따로 보면, 양양군 방문 청년층의 연간 소비액은 80.5천 원/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음식(41.8천 원/인)과 문화여가(4.8천 원/인) 부문 지출은 전체 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층이 쇼핑보다는 외식과 여가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5-12** 강원 양양군 청년층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강원 양양군 | 41.8 | 5.0 | 4.8 | 1.0 | 2.2 | 0.2 | 0.2 | 22.4 |
| 군집 1 | 32.8 | 11.5 | 5.1 | 1.1 | 3.1 | 0.5 | 0.5 | 28.6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0.8 | 4.4 | 4.3 | 2.2 | 4.7 | 3.1 | 0.8 | 27.7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주요 방문객 집단인 단기숙박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06.4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99.5천 원)보다 높지만 군집 1(112.1천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업종별로는 음식(49.6천 원/인)과 문화여가(15.1천 원/인)에서 특히 지출이 많다.

**표 5-13** 강원 양양군 단기숙박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강원 양양군 | 49.6 | 12.6 | 15.1 | 1.0 | 3.7 | 0.1 | 0.2 | 23.2 |
| 군집 1 | 39.4 | 22.4 | 12.0 | 0.7 | 4.6 | 0.3 | 0.3 | 30.8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4.8 | 14.1 | 8.1 | 1.2 | 5.9 | 2.2 | 0.3 | 31.5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체류인구 출발지는 경기(37.9%), 서울(29.3%), 강원(15.5%), 인천(5.8%), 충북(2.0%)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양양군 전체 체류인구 중 강원도 출발 인구를 시군별로 보면, 속초시(5.1%), 강릉시(4.0%), 춘천시(2.1%), 원주시(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양군이 수도권과 양양군에 인접 도시에서 발생하는 단기 체류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정성적 특성: 서핑 및 워케이션 청년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양양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서핑·워케이션 중심지'로서 새로운 생활인구 유입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레저 중심의 단기 체류인구가, 비수기에는 원격근무형 체류자·청년 창업자 등이 지역에 머무는 등, 기존의 주민등록 기반 인구와는 다른 유동적·복합적 생활인구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양군의 생활인구 소비 및 체류의 특성을 '서핑 및 워케이션 인구 유입'으로 보고, 관련 제도와 정책사업, 추진주체를 분석하였다.

### 1) 제도적 요인

#### (1)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2024년 제정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는,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적으로 정의하고 군정의 정책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즉, 단기·중기 체류자, 비거주형 이용자, 외부생활권 연결인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정의'를 군 행정이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회복과 지역 내 소비활력 증진에 있다. 조례는 총 12조 내외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인구의 개념 정립', '군수의 책무', '시책 추진 근거',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 5-14**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주요 내용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조(목적) | 양양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제2조(기본이념) | 양양군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관광·문화 자원 활용, 지역 특성 보전 및 발전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함 |
| 제3조(정의)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양양사랑군민"이란 등록인,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 |
| 제4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 |
|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기본이 됨 |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6조(기본계획 수립) |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명시 |
| 제7조<br>(생활인구 사업추진) |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지역 정보 제공, 행사·이벤트, 홍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가능 |
| 제8조<br>(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정보제공·행사·서비스 등 예산 지원 가능 |
| 제9조<br>(시설 입장료 감면 등) | 군 운영 시설 입장료·사용료 등의 감면, 양양사랑군민·관광주민증 혜택 참여업체 지원 |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 |
| 제11조(사무의 위탁) | 생활인구 사업·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 |
| 제12조(포상) |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단체·개인 등에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가능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먼저 조례의 목적을 "양양군 생활인구의 확대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인구를 단순히 유동인구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행정·경제·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군정의 정책 영역 안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 생활인구의 정의를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군에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군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비거주형 인구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기본시책 추진 근거를 규정한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행정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례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은 제8조의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이다. 이 조항은 양양군에 실제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의 생활·경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양양사랑군민'으로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서핑, 워케이션, 장기체류 등 반복적으로 지역을 방문·소비하는 외지인을 행정적 '군민' 범위에 포함시키는

시도로, 지역 외부의 체류형 생활인구를 제도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의 제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대상의 확장이다. 기존의 인구정책이 주민등록상 상주인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조례는 체류형·비정주형 인구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양양군의 서핑산업, 워케이션 산업 등 계절적·생활형 소비 구조를 공식 행정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중요한 시도이다.

둘째, 비정주형 인구의 제도권 포섭이다. 양양사랑군민제도는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지역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타지에서 유입된 청년층·전문직 워케이션 참여자·서핑인구 등 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제공한다. 이는 '방문객 중심 관광정책'에서 '참여형 생활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행정의 지속성 확보이다.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정책이 행정조직 내에서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양양군 관광진흥 조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높이며, 생활인구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양양군은 해양레저(서핑), 동해안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과 체류의 경계를 허무는 원격근무 트렌드 확산을 결합한 워케이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2023년 11월에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워케이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류 인구 소비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시도가 실체화되었다. 이 조례는 워케이션 참여자의 수요 관리, 센터 예약 운영 기준, 행정적 책무 등을 규정하여 워케이션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리 대상 정책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조례에서는 군수가 직접(또는 위탁)을 통해 체류형 근무·관광 모델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

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스마트관광 플랫폼과 연계, 시설사용료, 수익금 배분 등 운영방식이 명확하여 지역의 경제·인구·관광정책 목표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15**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주요 내용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조(목적) | 워케이션 통한 체류형 관광 및 생활인구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규정 |
| 제2조(명칭 및 위치) | 행정명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br>상업명칭: 웨이브웍스 양양,<br>위치: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2-4번지 일원 |
| 제3조(시설) | IT좌석(48), 회의실(2), 전시·휴게·판매공간 등 복합시설 구성 |
| 제4조(운영·관리) | 군수가 직접 또는 적합한 민간위탁, 민간위탁 관련 조례 준용, 운영경비 수탁자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필요시 군 지원 가능, 대규모 수리 군 예산 지원 가능, 순수익 배분 협의 결정 |
| 제5조(위·수탁기간) | 위탁기간 3년 이내, 관리능력에 따라 갱신, 민간위탁심의와 성과평가 반영 |
| 제6조<br>(보험 및 손해배상) | 수탁자 책임, 안전사고·민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각종 보험가입 필수, 증빙 제출 |
| 제7조<br>(수탁자의행위제한) | 군수 승인 없는 행사·변경 불가, 필요시 사전 승인, 준공 즉시 군에 기부채납 |
| 제8조(개관 및 휴관) | 주 1회 휴관 가능, 정기외에는 군 앱에 7일 전 공지 의무 |
| 제9조(입장의 제한) | 위험물 반입, 악취·위험행위·고성방가 등 질서유지 위배시 제한 가능 |
| 제10조(사전예약) | 스마트관광앱(고고양양 앱) 통한 예약, 외국인·단체는 필요시 예약일자 제한 운영 가능, 좌석/회의실은 예약 원칙, 미예약은 당일 현장판매 |
| 제11조(시설 이용료) | 공고에 따름, 프로그램참가비 별도, 위탁 시 승인받아 결정 |
| 제12조(수익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준용, 수익관리 절차 명시 |
| 제13조(시행규칙) |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체류형 근무 및 관광의 융합모델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 민간위탁,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용, 인센티브 제공, 안전규정, 프로그램(교육·네트워킹) 운영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2) 정책사업 요인

양양군은 '서핑 메카'와 '워케이션 거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바탕으로, 계절·휴일 중심의 단기 유입을 평일·비수기까지 확장하는 체류형 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전환은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해변 인프라 → 디지털 플랫폼 → 체류·업무 공간을 잇는 다층 정책의 결과다. 특히 2019~2021년에 추진된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이 물리적 기반을, 2023년 출범한 스마트관광도시 '고고양양'앱이 디지털·유통 기반을, 2023~현재의 워케이션 정책이 평일·비수기 체류 수요를 담당하며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 내부로 환류시키는 정책 패키지를 이뤘다.

#### (1)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변 인프라 체계적 확충

양양군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주요 서핑 해변에 10개 단위사업, 총 21억 5천만 원(도·군·균특 이양) 규모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그림 5-3** 강원 양양군의 서핑주요 스팟(좌), 가장 중심지인 죽도해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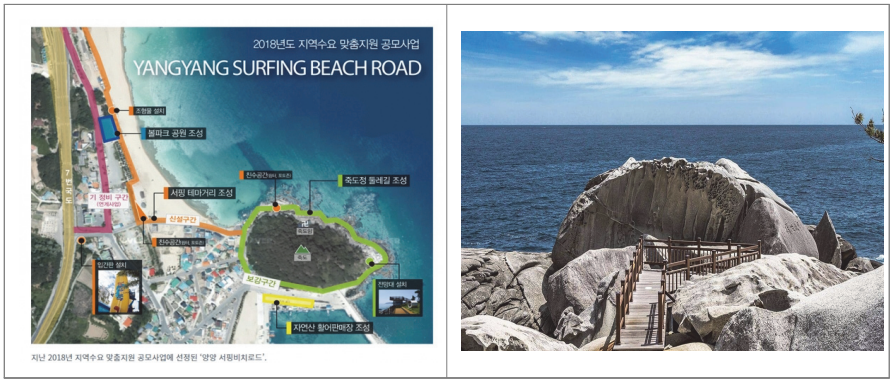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 와이키키 같은 여기… 'YY키키' 양양입니다, 2018. 05.04.

이는 서핑 라운지(죽도·기사문·남애), 전망데크, 지상연습시설,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보드 거치대, 정보 키오스크 등 체류·편의 시설군을 갖춰, 방문 행위를 해변 체류와 지역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는 현남면 죽도해변 일원에 '서핑 비치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다. 서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서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험 인프라, 볼거리, 먹거리를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억 8,900만 원을 들여 현남면 죽도 해변에 서퍼와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서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우선 서핑숍, 게스트하우스, 상가 등이 집중돼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죽도 해변 인구중앙길 일대에 서핑 테마거리를 조성하였고, 보드를 들고 이동하는 서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길을 확장하였으며, 서프보드 세척공간과 공동 거치대, 서핑 조형물도 설치하였다. 전망대가 있는 죽도정 일원에는 길이 900m 둘레길을 만들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4**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계획안(좌), 죽도 해안둘레길(우)




출처: 국토부(좌), 양양군 홈페이지(우)

공공이 물리적 기반을 깔아 민간 서핑숍·숙박·식음업이 활성화되는 구조를 촉진함으로써, 성수기 집중 수요의 흡수력을 높였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는 '체험→세탁·샤워→식음·휴식→숙박'의 소비 동선을 해변 단위에서 완결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다수의 해

변에 공통 표준의 편의시설(샤워, 거치대, 라운지)을 배치해 평균 체류시간을 끌어올리는 정책효과를 가진다.

### (2) 평일·비수기 수요 창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

양양군은 최근 몇 년간 서핑과 해양레저 중심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계절·휴일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구조를 평일·비수기까지 확장하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워케이션 기반의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핵심 거점으로 '웨이브웍스 양양(Waveworks Yangyang)'을 조성하였다. 해당 공간은 "죽도해변이 곧 업무공간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해변과 연계된 복합업무·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와 기업형 워케이션 수요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휴양형 관광지에서 나아가 업무·체류·소비가 결합된 지역형 경제 순환 구조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실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5** 양양 웨이브웍스 전경과 내부에서 보이는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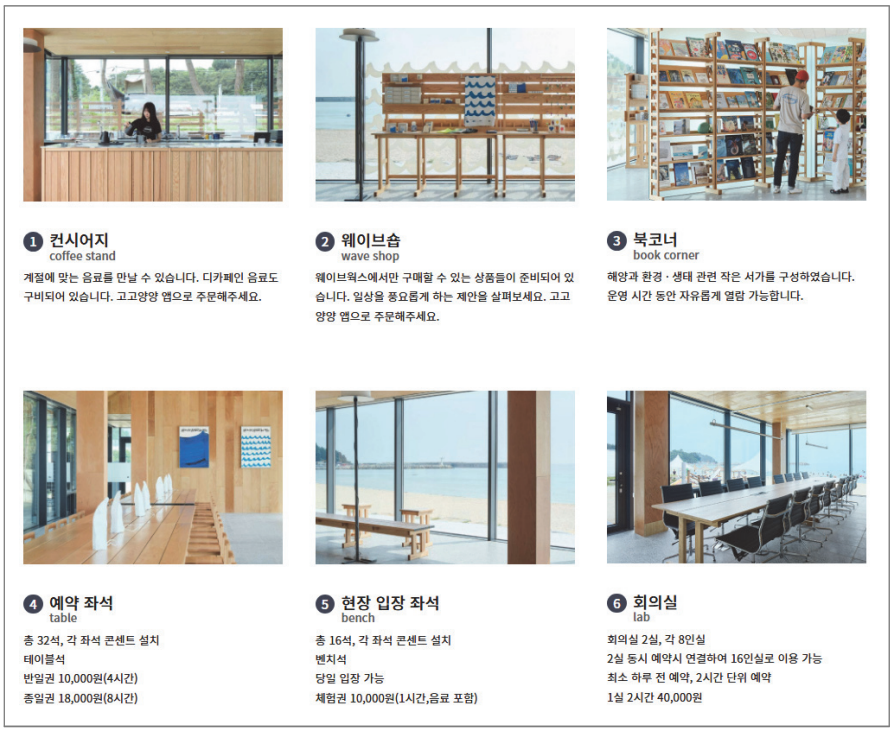

출처: 한경비즈니스, 오늘은 바다로 출근합니다, 웨이브웍스 양양, 2023.09.01.

'웨이브웍스 양양'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10(죽도해변 인근)에 위치한 복합형 워케이션 센터로, 총 48석(테이블형 32석, 벤치형 16석)의 업무 좌석과 회의·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워크스테이션, 회의실, 프리존, 테라스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센터는 이용자에게 노트북 기반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변 조망이 가능

한 개방형 오피스 공간을 통해 업무와 여가의 융합적 경험을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관광공사 소개 자료에 따르면, 웨이브웍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양양형 워케이션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기획되었다. 즉, 지역의 숙박시설·서핑샵·식음공간·문화시설 등과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소비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일시 방문 중심의 관광 흐름을 장기 체류 중심의 생활인구 흐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5-6** 강원 양양군의 '웨이브웍스양양' 내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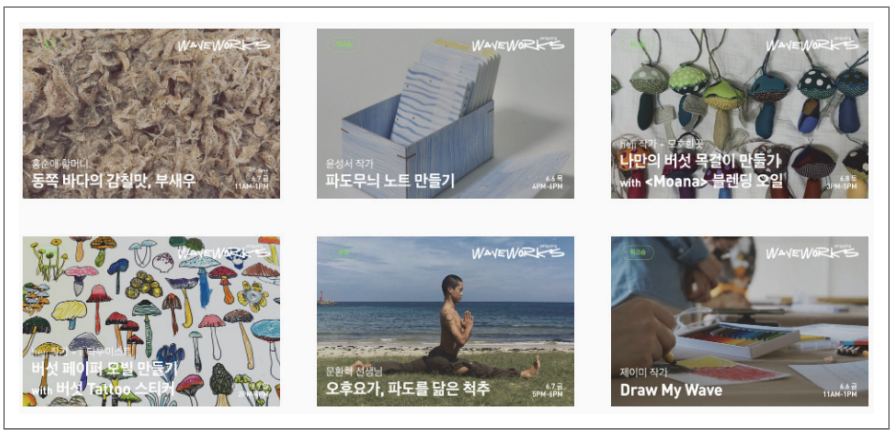

출처: 양양관광 홈페이지

양양군은 웨이브웍스를 단일 공간이 아닌 정책의 복합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2023년 7월 양양군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지정받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의 공식 출범식이 웨이브웍스에서 개최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군이 추진하는 '스마트관광도시 고고양양(GOGO YANGYANG)' 플랫폼과 워케이션 거점 공간을 연계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오프라인 체류 기반을 결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양양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웨이브웍스를 중심으로 숙박·서핑·식음업체 등과 연계한 복합 워케이션 패키지 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순 근무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의 주요 관광·체험시설과 숙박·식음업을 하나의 통합 상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또한, 양양군은 기업회원 유치를 통한 단체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단위의 중장기 워케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숙박·식음 매출 증대와 함께 평일형 체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5-7** 양양 웨이브웍스 이용자들이 신청가능한 지역민 상생 클래스




출처: 웨이브웍스 홈페이지

한편,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역시 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공항공사는 '25년 5월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떠나는 양양 워케이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양국제공항과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워케이션-공항-해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를 통한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을 공식화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사업자가 결합된 거버넌스형 정책 실현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역할로는 한국공항공사가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와 전문 컨설팅,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박과 체험을 위한 바우처(15만 원 상당 예정)도 지원한다. 양양군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웨이브웍스'를 업무 공간으로 제공하고, '고고양양 앱'을 활용한 쿠폰 발행과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양양군 보도자료, 2025.05.16).

양양군은 웨이브웍스를 지역 창업·문화활동의 플랫폼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 해피빈,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 창업 네트워킹, 지역 크리에이터 워케이션 캠프 등을 운영하거나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협력형 프로그램은 '워케이션'을 단순한 근무활동이 아닌 '창업·네트워킹·콘텐츠 생산 활동'으로 확장시켜, 지역 내 지속적 재방문 및 생활형 소비 기반을 형성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뉴시스, 24.06.28).

특히, 웨이브웍스 내 일부 공간은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소규모 전시·교육 세션에도 개방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외부 체류자가 상호 교류하는 공유형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공공 인프라의 단순 활용을 넘어 지역사회와 외부 이용자가 공존하는 생활·문화·경제 복합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원일보, 24.10.07).

### (3) 디지털 전환: 스마트관광도시 '고고양양' 플랫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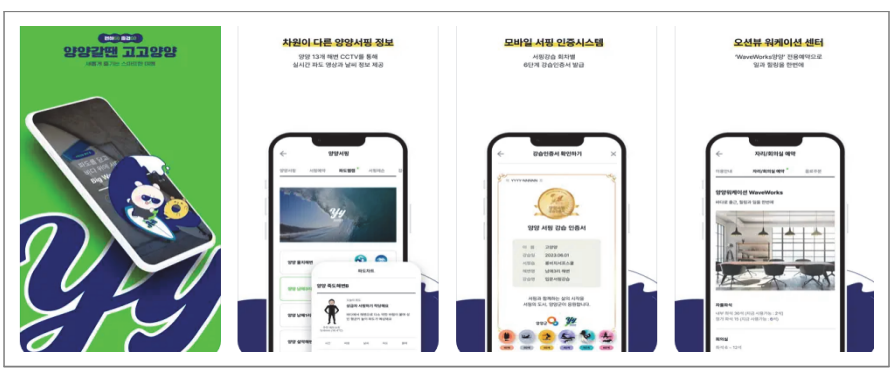
2022년, 양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 관광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집약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지역 규모와 지역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해 △교통연계형(지역공항, 고속철도 등 보유 지자체) △관광명소형(전국 지자체) △강소형(인구 15만 명 미만 지자체)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는데, 양양군은 이 가운데 강소형 유형에 최종 선정 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2023년 전국 군(郡) 단위 최초로 스마트관광도시를 구축하고 여름 성수기(8월) 본가동을 선언했다. 핵심 플랫폼인 '고고양양'(GOGO YANGYANG)은 6월 1일 선(先)출시 후 시범운영 기간 중 다운로드 5만 건을 돌파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했다. 7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의 출범식을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개최하고, 이후 2년간 총 20억 원 투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민간 참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됐다. ㈜이즈피엠피가 대표 사업자로 참여했고, KT·서피비치·WSB팜 등 지역·민간 주체가 결합했으며, 강원관광재단·양양서핑협회·상인연합회·택시조합과 200여 가맹점이 연동되는 구조다(경향신문, '23.07.24.).

양양군은 '서핑 메카'로 축적된 관광 수요를 체류형·생활형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변 중심 물리적 인프라(샤워·라운지 등) 위에 디지털 서비스를 얹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물이 지역 통합 앱 '고고양양'이다. 정책 의도는 다음과 같다. '분산된 관광·이동·결제를 한 화면에서 연결'하고, '실시간·개인화 정보로 체류 동선의 마찰 비용을 최소화', '수요·혼잡·예약 데이터를 행정·상권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것'이다. 출범 공지와 정부·공사 측 소개자료 모두에서 '군 단위 최초', '여름 성수기 본가동', '다운로드 급증'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그림 5-8** 고고양양(GogoYangyang) 앱스토어 소개 화면




출처: 애플스토어, '고고양양'

'고고양양'은 양양 전역 900여 개 관광·주차·편의 정보를 집적하고, 길안내·택시 호출, 서핑숍·체험·숙박·맛집·카페 예약/결제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영어·중국어(간체) 다국어까지 지원한다. 또한 양양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두드러진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서핑 정보: 13개 해변 FHD 웹캠으로 파도·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서퍼의 '장소 선택'·'방문 타이밍' 비용을 낮춘다.

- 택시 통합 호출: 반경 1km 내 최단 시간 가능한 차량을 자동 배차하고, 도착예정·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 이동의 병목을 해소한다.
- AR/체험 연계: AR 게임·필터 등 '체험형 콘텐츠'를 앱에 도입해 체류의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도입 이후 누적 다운로드 증가 보도).
- 서핑 강습 이력·인증: 앱 내 모바일 강습 인증서 발급과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해 학습→재방문→소비의 선순환을 자극한다(양양군 보도자료, 2023.07.21).

### 3) 추진주체 요인

#### (1) 공공부문 : 제도 설계자이자 정책사업의 실행주체, 그리고 조정자

양양군은 생활인구의 확대와 소비환류를 행정의 핵심 의제로 편입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3년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년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의 제정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 조례를 통해 군은 생활인구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군수가 생활인구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워케이션센터 설치·운영·위탁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근무환경과 소비공간을 행정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즉, 양양군은 생활인구 소비활성화의 제도적 설계자로서, 체류·소비를 행정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양군의 공공부문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정책사업으로 연결하여 행정적 실천력을 확보했다.

먼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워케이션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청년근로자·디지털노마드 등을 대상으로 한 워케이션 시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숙박·근무·여가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비수기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서핑산업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양양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변별 안전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정비, 샤워시설·보관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서핑 중심의 관광소비를 안정적 지역소비로 전환시키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양양군은 '고고양양(GO! GO!

YANGYANG)' 앱을 통해 숙박·교통·관광·워케이션 이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 플랫폼은 생활인구의 이동·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청년층을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 및 창업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창업자 워케이션 지원사업, 로컬푸드 창업공간 제공, 문화예술 체험거점 조성 등은 '머무는 청년층'을 '소비 주체'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장치다.

이처럼 양양군은 조례라는 법적 틀 위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형 정책사업을 다층적으로 펼치며 제도를 실천의 단계로 확장시켰다. 이는 공공부문이 단순한 규제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을 견인하는 정책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민간부문 : 서핑 인프라 조성 및 브랜드 구축

양양군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에 있어, 민간부문은 ① 양양군 지역경제의 실질적 실행주체이면서, ② 민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③ 브랜드의 주체이자 마케팅 파트너로서 역할하며, ④ 지역 환류형 경제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양양군의 생활인구 소비활성화에서 민간부문은 가장 직접적인 소비창출자이다. 서핑숍, 강습업체, 장비대여점, 숙박업소, 로컬식당, 카페, 체험공방 등이 체류형 소비를 주도하며, 실제 현장에서 지역경제의 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군의 제도적 지원 아래 관광객 중심 구조에서 '생활형 소비자' 중심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양양읍과 죽도해변 일대에는 서핑·워케이션 관련 업체 등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생활인구 소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공유오피스, 코워킹카페, 게스트하우스, 로컬푸드 매장, 문화공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이용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핑 인프라 확장, 페스티벌, 브랜드 협업, 지역 상권과의 결합을 통해서는 생활형 관광·소비 중심 클러스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이러한 클러스터를 통해 체류형 소비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의 행정지원과 결합하여 도시형·생활형 소비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페스티벌, 음악 이벤트, 파티, 문화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젊은 층 소비를 자극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브랜드, 식음업체, 숙박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이벤트 참여자에게 할인권 제공, 상품권 환원 등 상생 구조도 마련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숙박·카페·음식점·브랜드 숍 등이 밀집한 형태로 구성되

어 있으며, 방문객의 체류 소비가 로컬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연결되어 있다.

**그림 5-9** 양양군 서피비치의 상권 활성화



출처: 아는동네. '아는동네 아는강원1, 양양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2019.08.22.

또한 민간기업과 지역 사업자들은 양양군의 서핑·워케이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브랜드 메이커이자 홍보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 '서핑양양', '양양서피비치', '워케이션 캠페인' 등 민간주도 브랜드 및 행사가 군의 홍보와 연계되면서, 양양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비 활성화 기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콘텐츠 확산 등 민간 주도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체류형 방문객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사무용 가구 브랜드인 데스커(DESKER)는 2022년부터 양양에서 워케이션 캠페인 'WORK ON THE BEACH'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양양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데스커는 워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을 양양에 마련하였으며, 업무·회의 공간인 워케이션 센터와 죽도해변 인근에 위치한 워케이션 테라스 등 2곳으로 나눠진 이 공간은 데스커 B2B(기업 간 거래) 기업 회원과 데스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이투데이, 2022.08.12. 보도). 워케이션 근무자가 퇴근 후나 주말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데스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서핑보드 렌털·강습 할인, 카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서핑 강습과 핸드드립 원데이 클래스, 숙박 패키지를 지원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중앙일보, 2022.07.26. 보도).

**그림 5-10** 가구 브랜드 데스커의 워케이션 캠페인 '워크 온 더 비치'




출처: 중앙일보, "답답한 사무실 벗어나 일과 휴식이 있는 진정한 워케이션을 즐겨 보세요", 2022.07.26.

민간부문은 외지인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환류시키는 실질적 촉매 역할도 한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숙소·식당·카페는 단순한 영업장을 넘어 체류인구의 '생활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기능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 중심의 로컬 브랜드(예: 수제맥주펍, 로컬마켓, 해양레저 교육센터)는 지속 가능한 생활소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군이 조성한 인프라와 결합해 순환형 지역경제 구조를 완성시킨다.

민간 주체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친환경 캠페인, 해변 정화 활동, 지역사회 참여까지 포괄하는 상생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민간 운영자들과 지역주민 간 협력도 강화되어, 주민 축제 지원, 지역 행사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폐교 위기의 현북초등학교를 서핑 체험 중심 특성화 학교로 재생한 사례는, 민간 클러스터가 소비 기반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재생 역할까지 수행함을 보여준다. 현북초는 2018년 전교생이 9명에 불과한 폐교위기의 학교였으나, 2025년에는 42명이 재학 중인 '체험 중심 특성화 학교'로 발전했다. 재학생 중 75% 가량이 외지에서 온 전학생이다. 이 학교에는 '트리클라이밍, 서핑, 하조대라이딩, 생존수영, 테마학습여행, 북카페체험, 책방나들이, 빙상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생태교육, 캠프, 전입학 축하장학금, 졸업장학금 등의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양양군에 서피비치를 처음 도입한 로컬크리에이터 박준규 대표가 현북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어린이 서핑 강습 등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림 5-11**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공사 중인 현북초(좌), 서핑 강습중인 재학생들(우)



출처: 노컷뉴스, '서핑타고, 화상영어' 전교생 9명→53명…시골 학교가 만든 '기적', 2023.12.19.

양양군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는 '제도-사업-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층적 정책모델이다. 공공부문은 제도 설계자 → 정책 실행자 → 행정 조정자로 역할하며, 생활인구가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를 행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시장 실천자 → 소비 창출자 → 지역경제 촉매로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공-민간의 상호작용은 양양군이 단순한 관광지에서 생활형 소비경제도시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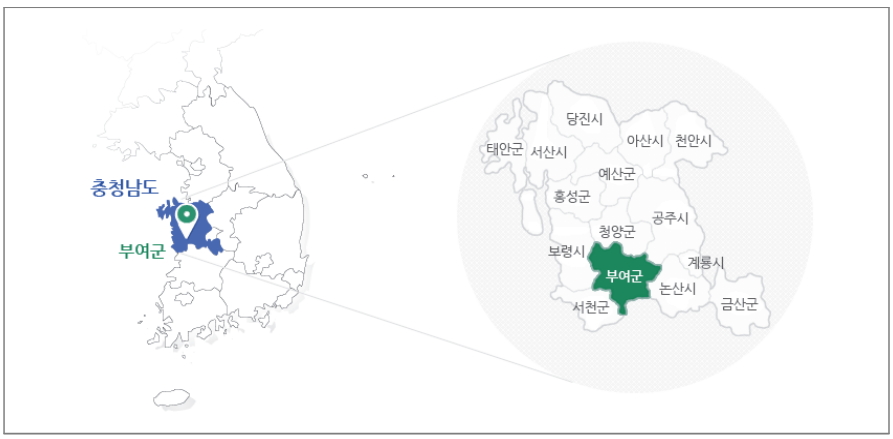
다만 양양군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숙박업체들이 성수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요금 관행이 확산되었고, 일부 유흥 중심 업종이 중심을 이루며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민일보, 2025.08.10.). 이러한 변화는 민간 사업주가 소비촉진 주체로 기능하던 역량이 오히려 지역사회 내 불신과 방문객 감소로 전환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민간 운영자는 가격 투명성·공정성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자정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단속 체계, 신고센터, 가격표시제 강화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 충남 부여군: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

## 1. 지역 현황

충남 서남부에 위치한 부여군은 청양군, 논산시, 보령시, 서천군과 경계를 접하며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북 익산시와 경계를 이루는 24년 기준 인구 6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군 지역이다. 지형적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친 차령산맥과 금강을 비롯한 금천, 구룡천 등 하천 유역 주변에 형성된 구룡평야 등이 펼쳐져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림 5-12** 충남 부여군 위치




출처: 부여군청 홈페이지

충남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부여군(624.53㎢)은 동서를 횡단하는 국도 4호선(대전-장항), 국도 40호선(공주-대천)과 남북을 연결하는 서천공주고속도로, 국도 29호선(청양-한산) 등을 주요 교통로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및 타지와의 접근성이 향상된 바 있다. 실제 충남 부여군을 기준으로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대략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 정도 거리 내 서울, 대전, 청주, 전주 등 중추도시들이 입지하여 우수한 교통접근성을 보였다. 향후 부여-평택을 오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보령-부여-대전간 고속도로, 보령-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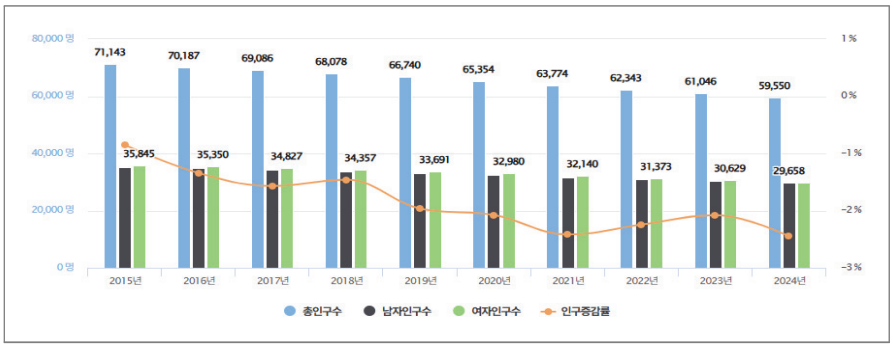
세종 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6** 충남 부여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북 |
|---|---|---|---|---|---|---|---|---|
| 최단 거리 | 175㎞ | 162㎞ | 139㎞ | 62㎞ | 52㎞ | 86㎞ | 65㎞ | 69㎞ |
| 최소 소요 시간 | 2시간 3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1시간 | 55분 | 1시간 30분 | 50분 | 1시간 |

주: 부여군청에서 각 시·도청까지의 평일 오전 10시 자가용 기준
출처: 네이버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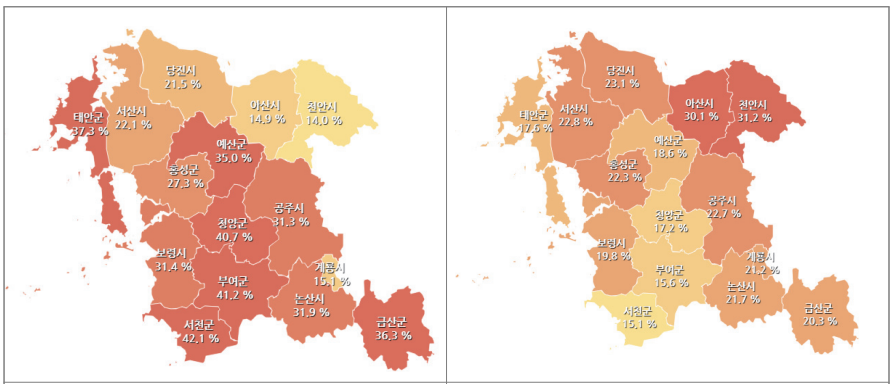
**그림 5-13** 최근 10년간 충남 부여군 인구현황(2015~2024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부여군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4년 기준 5만 9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인구 규모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도 심각하여 부여군의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41.2%로 전국 평균(20%)의 두 배가 넘고, 같은 도내 서천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19~39세의 청년인구는 15.6%로 전국 평균 26.5%, 충남 평균 25.7%를 모두 크게 하회한다.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2023년 기준 590.5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보다 65세 고령인구가 5.9배 많고, 이는 전국 평균인 171명에 비해 3.5배 큰 수치다.

**그림 5-14** 충남 부여군 고령인구비율 및 청년인구비율(2024년 기준)




고령인구비율 | 청년(19-39세)인구비율

출처: e-지방지표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살펴본 부여군의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교육, 주거, 문화여가,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의 부문에 걸쳐 부여군의 현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부여군의 주택은 노후하고 의료서비스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보급율은 전국 평균 95%에 육박하나 부여군은 약 69%에 불과하고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도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5-17** 충남 부여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단위: %)

| 구분 | 지표 | 부여군 | 전국 평균 |
|---|---|---|---|
| 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56.01 | 85.85 |
| |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32.01 | 53.99 |
| 주거 | 노후주택비율 | 49.2 | 23.5 |
| 문화여가 |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29.36 | 60.35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18.05 | 19.08 |
| 생활환경 | 하수도보급률 | 68.7 | 95.1 |
| |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 0.12 | 0.7 |
| 보건복지 |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53.03 | 89.92 |
| |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0.27 | 16.53 |

주: 2024년 발표 자료 기준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나비스(NABIS) 균형발전지표

그러나 부여군은 123년간 백제 수도로서 고고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1993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공식지정되었고,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부여왕릉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부여군은 매년 10월 백제문화제를 개최하여 횟수로 70회를 넘었고,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왕릉원, 부여 나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부여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약 356만 명의 방문객이 집계되었는데, 백제문화단지는 140만여 명이 찾은 관광명소다. 특히, 상위 15개에 해당하는 부여군 인기관광지 중 역사문화 유적지는 7곳(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부여유람선 선착장, 정림사지, 사비도성가상체험관, 능산리고분군)으로 한해 전체의 약 81%를 차지한다. 그리고 쇼핑 및 레저 관련 시설(백제컨트리클럽, 롯데리조트, 롯데스카이힐 부여C.C, 백마강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은 약 40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11%를 차지한다.

**표 5-18** 충남 부여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5개)

| 순위 | 주요관광지점 | 내국인 수(명) |
|---|---|---|
| 1 | 백제문화단지 | 1,395,407 |
| 2 | 국립부여박물관 | 688,317 |
| 3 | 부소산성 | 341,634 |
| 4 | 부여유람선선착장 | 198,645 |
| 5 | 정림사지 | 184,599 |
| 6 | 백제컨트리클럽 | 141,380 |
| 7 | 백제보 금강문화관 | 123,249 |
| 8 | 롯데리조트(아쿠아가든) | 96,608 |
| 9 | 롯데스카이힐부여C.C | 90,437 |
| 10 | 백마강파크골프장 | 72,383 |
| 11 |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 38,616 |
| 12 | 부여 청소년수련원 | 33,491 |
| 13 | 신동엽문학관 | 32,791 |
| 14 | 능산리고분군(왕릉) | 30,117 |
| 15 | 만수산자연휴양림 | 27,703 |

주: 2024년 한해 내국인 기준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부여군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 도·소매업 비중이 23%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13.9%를 차지하고 2차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13.3%)과 제조업(7.3%)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비중이 전체의 14%로 가장 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5%), 제조업(12.8%), 건설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2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부여군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를 살펴보았다. 입지상 계수(LQ)는 경제기반분석에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로. 입지상 계수가 1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은 특화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산업별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산업유형은 총 12개이며, 농림어업의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관광문화산업군에 속하는 도·소매업(1.0), 숙박 및 음식점업(1.0)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 모두 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충남 부여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 및 특화도(2022년 기준)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전국 대비 특화도 |
|---|---|---|---|---|---|
| | 개수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 계 | 7,728 | 100.0 | 24,093 | 100.0 | - |
| 농업, 임업과 어업 | 154 | 2.0 | 702 | 2.9 | 11.0 |
| 광업 | 9 | 0.1 | 75 | 0.3 | 5.4 |
| 제조업 | 564 | 7.3 | 3,072 | 12.8 | 0.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735 | 9.5 | 783 | 3.2 | 5.1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35 | 0.5 | 304 | 1.3 | 2.4 |
| 건설업 | 1,024 | 13.3 | 2,623 | 10.9 | 1.4 |
| 도매 및 소매업 | 1,781 | 23.0 | 3,370 | 14.0 | 1.0 |
| 운수업 및 창고업 | 632 | 8.2 | 1,034 | 4.3 | 0.8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72 | 13.9 | 2,040 | 8.5 | 1.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보서비스업 | 47 | 0.6 | 190 | 0.8 | 0.2 |
| 금융 및 보험업 | 57 | 0.7 | 455 | 1.9 | 0.7 |
| 부동산업 | 91 | 1.2 | 165 | 0.7 | 0.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6 | 1.6 | 477 | 2.0 | 0.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16 | 1.5 | 431 | 1.8 | 0.3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전국 대비 특화도 |
|---|---|---|---|---|---|
| | 개수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8 | 0.6 | 2,078 | 8.6 | 2.4 |
| 교육서비스업 | 189 | 2.4 | 1,809 | 7.5 | 1.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27 | 2.9 | 3,016 | 12.5 | 1.3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22 | 1.6 | 522 | 2.2 | 1.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99 | 9.0 | 947 | 3.9 | 1.1 |

출처: 부여군청 제 60회 통계연보(2022년 기준)

이처럼 부여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돋보이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쇼핑관광도시로서의 부여군 특성을 부각하여 생활인구 소비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심층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충남 부여군의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당일 방문 비중이 45.0%, 일회성 방문이 61.6%, 중장년층이 76.2%, 휴일 방문객이 43.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이 휴일에 당일로 일회성 방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체류인구는 부여군을 장기 체류보다는 당일 나들이 목적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충남 부여군 주요 체류인구 비중

(단위: %)

| 구분 | 중장년층 | 당일 | 일회성 방문 | 휴일 |
|---|---|---|---|---|
| 충남 부여군 | 76.2 | 45.0 | 61.6 | 43.5 |
| 군집 2 | 74.7 | 47.3 | 57.9 | 42.5 |
| 89개 인구감소지역 | 72.0 | 39.8 | 57.5 | 36.2 |

주: 전체 체류인구 중 해당 특성을 지닌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부여군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37.5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115.0천 원)과 군집 2(봄·가을 휴일 당일 나들이 집중 지역, 102.2천 원)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을 모두 웃돈다. 특히 소매 부문(59.5천 원/인) 지출은 인구감소지역(33.1천 원)과 군집 2(29.0천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숙박(11.8천 원/인)과 문화여가(15.1천 원/인)에서도 비교 지역을 상회하는 소비가 이루어졌다.

부여군에서 소매 소비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롯데아울렛부여점이 대표적 관광지로 꼽힐 만큼 방문객이 많아 의류·잡화·생활용품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백제문화단지나 국립부여박물관 주변 상권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수요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숙박 소비는 롯데리조트부여가 주요 관광지로 자리하면서 가족 단위 체류를 유도하는 데서 비롯된다. 문화·여가 소비는 유적지 관람보다는 워터파크와 골프장 이용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실제로 내국인 유료관광지 입장객 상위에 오른 롯데리조트 아쿠아가든, 백제CC, 롯데스카이힐부여CC는 수영장과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로, 문화·여가 소비 항목과 직접 연결된다.

주요 방문객 집단인 당일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14.2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78.3천 원)과 군집 2(73.1천 원)보다 약 1.4배 높다. 업종별로는 소매(59.4천 원/인)와 문화여가(19.8천 원/인)에서 두드러진 지출을 기록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표 5-21** 충남 부여군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충남 부여군 | 28.8 | 11.8 | 15.1 | 3.7 | 7.5 | 2.1 | 0.5 | 59.5 |
| 군집 2 | 30.9 | 2.4 | 13.0 | 2.8 | 9.5 | 3.0 | 0.4 | 29.0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3.2 | 5.9 | 10.8 | 3.8 | 9.1 | 7.7 | 0.7 | 33.1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표 5-22** 충남 부여군 당일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충남 부여군 | 20.2 | 3.2 | 19.8 | 2.0 | 4.4 | 0.8 | 0.1 | 59.4 |
| 군집 2 | 25.0 | 0.7 | 16.3 | 1.4 | 5.9 | 1.2 | 0.2 | 15.6 |
| 89개 인구감소지역 | 24.5 | 2.0 | 13.6 | 2.4 | 5.7 | 4.7 | 0.4 | 18.4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체류인구의 출발지를 보면, 충남(23.3%), 경기(20.4%), 대전(14.7%), 서울(12.9%), 전북(8.5%), 세종(4.7%), 인천(3.7%), 충북(3.3%) 순으로 나타났다. 부여군 전체 체류인구에서 충남 출발 인구를 시군별로 보면, 논산시(5.5%), 천안시(3.5%), 보령시(2.4%), 공주시(2.3%)의 비중이 높다. 전북 출발 인구를 시군별로 보면, 군산시(2.5%)와 전주시(2.5%)가 두드러진다. 부여군은 논산·공주·보령과 접해 있고, 대전·세종·군산·전주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중부권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나들이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주말·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중장년층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여군의 체류인구는 중장년층 중심의 당일 또는 휴일을 이용한 단기간 방문의 특성이 강하다. 특히, 인근 지역 및 수도권 관광객이 핵심 대상으로, 같은 도 내 및 대전·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42.7%이고, 수도권은 37%로 나타난다. 게다가 이들의 소비액 지출은 동일 군집 지역 대비 높은 편으로 특히 소매, 문화여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앵커시설인 롯데아울렛부여점, 롯데리조트 부여, 백제CC, 백제부여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등을 통해 체류인구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후 정성적 분석에서는 부여군이 체류인구를 비롯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 환경을 제도, 정책사업과 추진 주체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부여군의 핵심 타깃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제도 및 예산은 이와 얼마나 정합하는지, 그리고 정책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검토한다.

결국, 부여군 사례분석 핵심 논의는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중장년층 당일 방문객 유치

를 위해 부여군은 어떤 전략을 마련하였고, 무엇이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액 지출을 이끌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접근은 무엇이었는가'로 풀이할 수 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지점은 체계적인 접근으로서의 제도적 요인,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정책사업적 요인, 그리고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력을 담보하는 주도적인 참여자와 그 역할 범위 등으로서의 추진 주체 요인이다.

## 3. 정성적 특성: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체류인구 소비 촉진 활성화

### 1) 제도적 요인

#### (1)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관광시장 규모화

부여군은 1993년 6월 11일 대통령공고 제134호에 따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란 충청남도 공주. 부여. 논산과 전라북도 익산 등 백제문화권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으로,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이 지역에 산재한 백제문화유적을 발굴·정비·보존하고, 관광·휴양자원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통과관광권에서 체류관광권으로 전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린 결정이다(건설부, 1993).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정면적은 총 1,915㎢,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구체적인 지역 범위로는 당시 공주시와 공주군 전역, 부여군 전역, 논산시 두마면, 그리고 전북 익산시 함열읍·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금마면, 왕궁면, 삼기면, 용동면을 포함한다. 당시 정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듬해 10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건설부, 1994).

첫째, 백제역사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비이다. 백제역사유적을 재현시키기 위하여 공주. 부여. 익산지역에 산재한 대통사지, 공산성,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 25점의 문화유적을 발굴·정비하는 한편, 백제역사유적의 경우 백제 멸망 당시 목조품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고도인 공주. 부여는 시가화되어 유적의 복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백제시대의 왕실과 당시 풍습을 재현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고증을 통해 부여읍 규암면 일대 100만 평 부지에 건설하여 백제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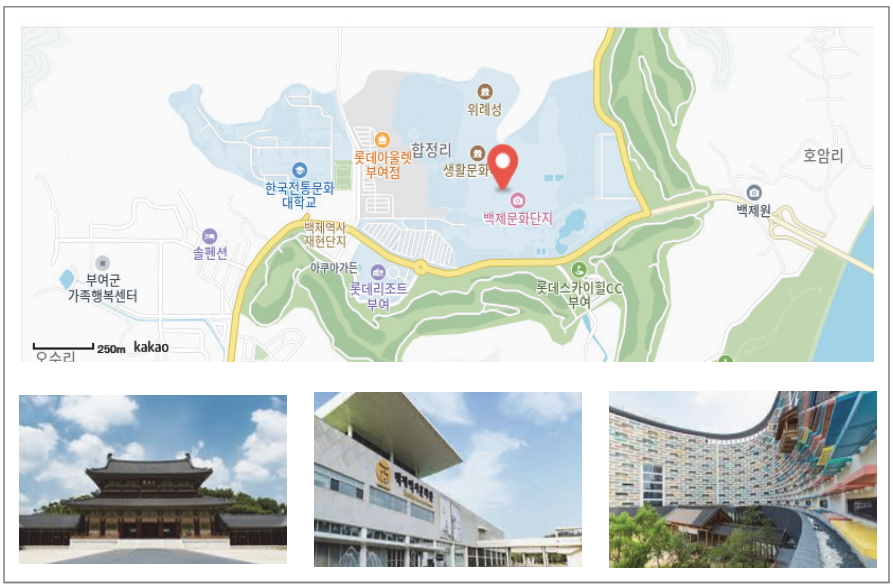
둘째, 관광 및 휴양 등 위락공간의 확충이다. 당시 공주, 부여는 역사유적 관광객이 일본인 수학여행단 6만 명을 포함하여 연간 168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열악하여 체류하지 않고 대부분 통과 관광에 그치고 있어 관광문화권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주. 부여를 연결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금강변에 종합관광단지(40만 평), 관광농업단지(24만 평), 노인휴양촌(24만 평), 오토캠프촌(5만 평), 기업연수촌(42만 평)과 숙박시설 등 관광위락공간을 확충하여 목표연도 2001년까지 연간 740만 명의 문화관광객을 유치한다.

셋째,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개발권역 내 연결도로망으로 공주-부여 간 금강변을 따라 백제큰길 25.3km 등 7개 노선 62.5km의 도로를 신설하고, 공주시 및 부여읍의 상수도와 가로망을 확충·정비하는 한편, 계룡신도시의 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본 계획은 총 1조 5,06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고, 국비 2,632억 원(17.5%), 지방비 3,005억 원(20%), 민자 9,428억 원(62.5%) 투입을 계획하였다. 이때 투자 우선순위는 공익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담당하고, 수익성 사업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제문화권 개발 위해 당시 계획에서 강조한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오늘날 백제문화단지라 불리는 곳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3,299㎢, 약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15년 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년간 총 투자금액 8,077억 원(국비 1,709억 원, 지방비 2,145억 원, 민간자본 4,223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단지다.

**그림 5-15** 백제문화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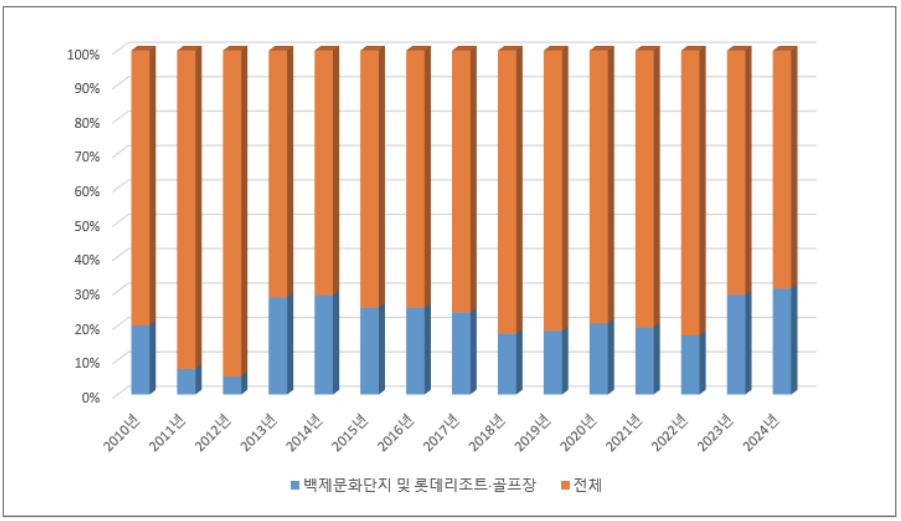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백제문화단지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
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좌, 중) 롯데리조트 부여 홈페이지(우)

도입시설은 크게 공공투자 부문과 민자유치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사비성, 백제역사문화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며 후자는 콘도, 아울렛, 골프장, 테마파크, 스파빌리지 등이다. 백제사를 다루는 특화된 박물관으로서 2006년 개관한 백제역사문화관을 비롯해 백제 왕궁인 사비궁,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등이 조성 완공되어 2010년 개관하였고, 콘도인 롯데리조트와 골프장, 아울렛 등도 2010년, 2012년, 2013년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처럼 백제문화단지는 고유한 백제시대 역사와 문화를 담은 역사문화 관광지이자 레저, 휴양, 쇼핑, 체험 등의 복합 관광단지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당일치기 방문객은 물론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여행객, 골프·휴양 등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지로서, 이는 과거 방문객의 대부분이 학생 중심의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던 정적인 역사교육관광지로서의 부여군의 관광 행태와 차별을 보이는 지점이다.

**그림 5-16**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 관광객 비중(2010~2024년)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0년 개관 이후 2024년까지 백제문화단지 누적 방문객 수는 내국인 기준 약 967만 명으로 인근의 민간투자시설인 롯데리조트와 롯데스카이부여C.C를 합하면 1,180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15년간 부여군 주요관광지점을 통해 집계된 전체 내국인 관광객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 해 평균 약 79만 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립부여박물관이 47만여 명, 부소산성 45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관광시장이 크게 규모화되었다.

그러나 연도별 방문객 수는 등락을 보여 백제문화단지는 개관 첫해 19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유입하였으나 이듬해 큰 폭의 낙차를 보인다. 그러다 2014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롯데리조트 등 민간투자시설을 통해 반등하다가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2년까지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다. 이후 2023년 백제문화제 일환으로 추진된 대백제전이 성황을 이루며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개관 당시 기록을 회복하였다.

한편, 도심에 해당하는 부여읍과 함께 규암면 백제문화단지 일원은 부여군 내 체류인구의 집중과 함께 소비를 창출하는 대표적 장소다. 구체적으로 부여군 산업별 읍면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부여읍과 규암면을 중심으로 도·소매 및 관광문화산업군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체의 69.1%, 전체 종사자의 68.0%가 이들 지역에 위치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사업체의 70.1%, 종사자의 72.5%가 부여읍과 규암면 두 곳에 편중되어 있다.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사업체의 81.2%, 종사자의 64.9%가 두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원도심으로서 부여읍이 기존 상권의 영향이라 한다면 규암면의 경우,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롯데리조트, 롯데아울렛, 골프장 등이 주요한 소비처로 보인다.

**표 5-23** 충남 부여군 부여읍·규암면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22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 도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 계 | 1,781 | 3,370 | 1,045 | 2,040 | 112 | 522 |
| 부여읍 | 905 | 1,482 | 574 | 1,104 | 66 | 196 |
| 규암면 | 325 | 811 | 159 | 376 | 25 | 143 |

출처: 부여군 제60회 통계연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90년대 초반 국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이후 17년간 신라문화권에 비해 저평가된 백제문화권을 되살리는 동시에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여군 일대에 대규모 관광투자를 단행한다. 그 결과, 조성된 백제문화단지와 주변 민간투자시설은 매년 일정 규모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지역의 대표 앵커시설이자 소비공간으로 변모하여 체류인구의 관광소비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관련 조례 및 예산 분석

조례는 지방의 사무를 정하는 자치법규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기에 조례는 해당 지자체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부여군의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근거로서 인구 및 문화관광, 지역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례는 총 18건이다. 이는 특정 문화시설이나 조직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논의상 제외한 결과로, 제정 시기별 백제문화제 개최

와 관련하여 1977년에 제정된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에서부터 출향인 교류협력, 인구감소대응, 123사비공예마을 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 최신 조례도 여러 건이다. 대부분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을 통해 조례 내용을 정비하거나 보충하여 사회 변화의 흐름과 주민 요구 수렴 등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24** 충남 부여군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구분 | 조례명 | 제정일시 |
|---|---|---|
| 인구 |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23.05.19. |
|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 05.05.28. |
| |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05.30. |
| 문화 관광 |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 15.08.14. |
| | 부여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 19.05.30. |
| |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 77.09.01. |
| |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19.05.30. |
| |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24.09.25. |
| |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02.26. |
| |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 | 18.04.18. |
| 지역 활성화 |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2.10.11. |
| |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11.04.01. |
| |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 23.08.14. |
| |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04.07.01. |
| |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 13.05.16. |
| |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2.06.27. |
| |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19.09.26. |
| |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2.12.16. |

출처: 연구자 작성

이상의 조례는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 전반, 체류인구 유입과 편의 증진,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조성,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이들 조례는 부여군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토대로 작용한다.

**표 5-25**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충남 부여군 관련 조례 재분류

| 구분 | 조례명 |
|---|---|
| 지방소멸 대응 전반 (2) |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br>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
| 체류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5) |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br>부여군 관광진흥 조례<br>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br>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br>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
|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3) | 부여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br>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br>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8) |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br>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br>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br>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br>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br>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br>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출처: 연구자 작성

특기할만한 지점으로 출향인 지원을 명시한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향인이란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과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이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지원을 명시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군은 관내에서 1박 이상 단체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기관이나 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에 의거 부여군 문화시설이나 축제에 방문한 주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표 5-26** 충남 부여군 체류 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br>1. 군 관내에 내 · 외국인 관광객 단체 및 마이스산업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및 기업체, 공공기관, 법인, 협회, 학회 등<br>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 판매하는 경우<br>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 |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이용자는 아래 각 호 대상으로 제한함<br>1. 부여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br>2.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br>3.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br>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한편,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시작된 백제문화제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축제로 부상하고, 여기에 공간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과 백제문화단지 조성, 2015년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적지구 지정 등이 결부되어 천년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부여로서의 도시 정체성 및 환경이 더욱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5-27** 충남 부여군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부여군 문화도시 조례 |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 ·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br>② 군수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함<br>③ 군수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br>1. 전통문화행사·홍보·체험·창작작업 활동지원<br>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가치 확산을 위한 계승사업<br>3. 전통문화 전시·공연·편의·안내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 사업<br>4.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화 및 전통산업화에 필요한 사업<br>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부여군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인센티브와 순환인센티브라는 독창적인 지역화폐 제도로 이를 구체화한 정책사업인 굿뜨래페이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굿뜨래는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기관, 조직 등 다양한 지점과 연계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굿뜨래 웰빙마을은 부여군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이자 글램핑장, 물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소비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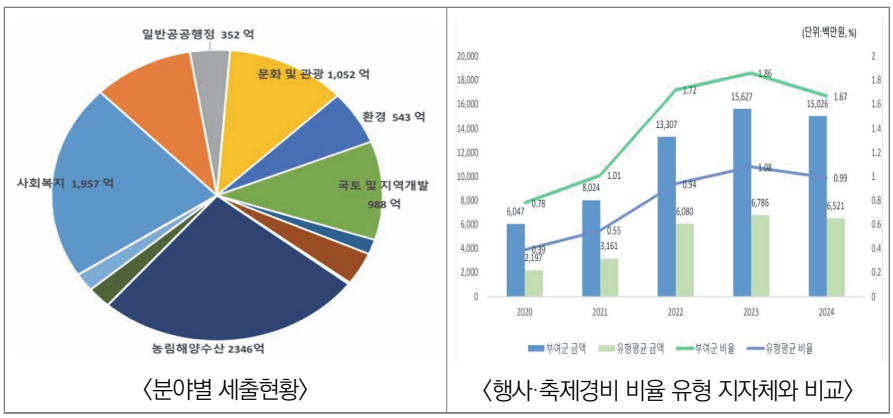
**표 5-28** 충남 부여군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br>제2조(정의) ① 생략<br>② “인센티브”란 지역화폐를 구매 또는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 조례명 | 내용 |
|---|---|
| | ③ “소비인센티브”이란 지역화폐의 쏠림현상 방지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br>④ “순환인센티브”란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이 지역화폐 매출액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업무 및 기능) 웰빙마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음<br>1. 굿뜨래 농특산물의 전시관·홍보관 및 판매장 운영<br>2. 굿뜨래 농특산물 체험농장, 음식거리 운영<br>3. 굿뜨래 세미나실 및 지역주민 지원시설 운영<br>4. 그 밖의 부여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그림 5-17** 충남 부여군 분야별 세출현황 및 행사·축제경비 비교




〈분야별 세출현황〉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자체와 비교〉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2025), 2025년 부여군 재정공시(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부여군의 2024년 기준 일반회계 세출 분석 결과, 전체의 과반 수준에 해당하는 약 47.7%를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였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체의 11.7%인 총 1,052억 원이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실제 부여군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최근 5년간 해당 경비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형 평균 금액의 2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부여군에서 개최한 행사 및 축제는 모두 32건으로 총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경비로 집행되었고 이는 작년 대비 65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집행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건은 총 16건으로 유형분류상 사회적 약자 배려(실버 건강운동경진대회,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장배 한궁대회 등)나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구룡면 당산제, 마을둘레길걷기 행사 등)의 부류가 이에 속했고, 전체 예산액은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였다.

**표 5-29** 충남 부여군 2024년 축제 및 행사 총괄현황

(단위: 건, 천 원)

| 연도별 | 전체 |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 |
|---|---|---|---|---|---|---|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 2024년 (A) | 32 | 10,038,595 | 16 | 9,989,677 | 16 | 48,918 |
| 2023년 (B) | 23 | 3,530,336 | 12 | 3,498,209 | 11 | 32,127 |
| 증감(A-B) | 9 | 6,508,259 | 4 | 6,491,468 | 5 | 16,791 |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2025), 2025년 부여군 재정공시(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반면, 집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총 16건은 전체 집행액 총 99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백제문화제(약 47억 원), 2024 국가유산미디어아트부여(약 17억 원), 부여서동연꽃축제(약 15억 원) 등 이들 세 건을 합한 비용만 약 80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정체성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축제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여군은 외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가 크다고 이해할 수 있고, 시기상 4월과 7월, 9월, 10월 집중하여 열리는 축제는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2) 정책사업 요인

### (1) 백제문화제-백제문화단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 간 연계성 강화

2025년 현재 71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다. 백제문화제는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1955년 부여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림 5-18** 백제문화제 추진 현황



출처: 제71회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초창기 백제 삼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향과 민속행사 위주였던 백제문화제는 1970년대 들어 축제 예산의 80%를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의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의 대표문화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부상하는데, 백제문화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지를 홀수 연도는 공주, 짝수 연도는 부여로 정하여 개최하던 방식을 바꿔 2007년부터 충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통합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증대하였고, 전문성 있는 대형 프로그램 제작 및 연출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5-19**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제 기존 주 행사장




출처: 제71회 백제문화제 홈페이지와 네이버지도를 토대로 작성

지금까지 부여군은 백제문화제를 주로 부여읍 시가지나 구드래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구드래공원은 부여의 대표적인 명소인 백마강 수변공원으로서 수상 무대공연, 부교설치, 황포돛배 유람선 운항 등과 시가지 인근에 있다는 장소적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차장 수용 규모가 축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의 진출입로가 좁아서 이로 인한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제기되는 곳이다(부여군, 2020:147).

특히, 이러한 문제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공주시의 백제문화제와 비교되는 지점으로, 공주시가 공산성을 배경으로 미르섬을 포함하여 주무대로 활용하는 금강신관공원은 대형야외축제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차공간을 갖추고 차량 이동의 동선 확보가 용이하며, 대전, 세종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공주로 이동하기 편리한 물리적 위치와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었다(부여군, 2020:148).

**그림 5-20** 백제문화단지로 백제문화제 주행사장 이전




출처: 제71회 백제문화제 홈페이지와 네이버지도를 토대로 작성

부여군은 2023년부터 백제문화제 대백제전 주행사장으로 백제문화단지를 지정하고 구드래공원을 비롯한 부여읍 시가지를 부행사장으로 결정하였다. 이곳은 차로와 완전히 분리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유리하고, 다양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등이 가능하다(충청매일, 2023.9.26.).

그 결과, 행사 운영기간 누적관광객 15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큰 불편 사항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였고(부여군 보도자료, 2023.10.10.), 2024년에도 방문객의 교통 및 관광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우수하였다는 평가를 얻었다(부여군 보도자료, 2024.12.19.). 다만, 기존 개최 장소와 달리 백제문화단지는 시가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평가와 있어 2025년부터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축제 기간에 부여 시가지를 오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한다(부여군 보도자료, 2025.9.19.). 또한 부여군 내 모범음식점이 참여하는 사

비골맛집 코너와 부여군 농특산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굿뜨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부여군 보도자료, 2025.9.19.).

**그림 5-21** 백제문화제 편의서비스 증진(무료셔틀버스 및 지역 맛집 연계)




출처: 제71회 백제문화제 홈페이지와 충남일보(2024.09.27. 보도)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공간을 기존 도심에서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이전함으로써 특정 관광지점을 구심점으로 지역의 관광여건 및 체류인구 특성 간의 정합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부여군이 가진 매력적인 관광자원 및 콘텐츠는 물론이고 편리한 교통 및 쇼핑, 여가 환경 등은 체류인구의 방문을 부추겼고, 기 조성된 산업여건과 맞물려 이들의 소비를 원활하게 하였다.

### (2) 전통시장, 지역화폐 등 지역 상권 소비 진작 유도

부여군은 지역 내 체류인구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는 백마강달밤야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야시장은 해가 진 저녁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시장으로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즉석에서 조리되는 길거리 음식, 수공예품, 거리공연, 이벤트행사 등 이색적이고 독특한 먹거리와 살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화소비 공간이다. 특히, 야간관광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야시장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5-22** 백마강달밤야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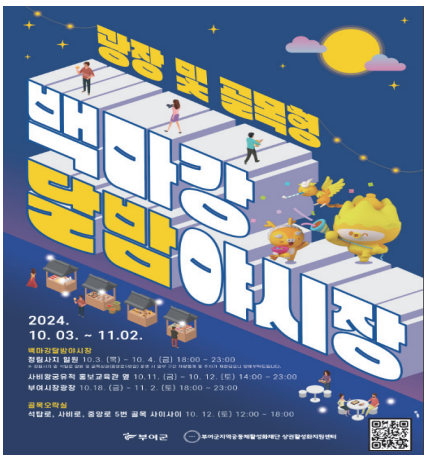



출처: 백마강달밤야시장 홈페이지(https://buyeonight.com/)

2016년 문을 연 부여 백마강달밤야시장은 부산 부평깡통야시장, 전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시장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5번째로 선정한 야시장으로 기존 부여시장을 새롭게 탈바꿈해 40개의 매대와 12개의 청년몰로 구성된 전국 유일 광장형(2,500㎡) 야시장이다. 원래 부여시장은 부여읍에 위치한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평상시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넓은 광장이 갖추고 있는데, 백마강달밤야시장은 이를 활용하여 매년 4월에서 7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야시장을 개장한다. 해마다 참여 매대 수와 프로그램 구성 등은 상이하며 주소지가 부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 관내 상인 다문화가정, 창업희망자, 부여시장 상인 등이 참여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횟수로 9회째를 지속 중인 백마강달밤야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여 2024년 기준 총매출 2억 5천만 원, 방문객 2만 3천여 명을 기록하였다(대전일보, 2025.2.10.). 특히, 2024년부터는 광장·골목형 백마강달밤야시장을 개최하여 부여시장 광장에서 골목상권으로 야시장 범위를 확장하였다. 10월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정림사지 일원에 야시장을 개장하고 부여시장 인근의 부여중앙시장에 '도깨비 골목'이라는 주제로 무소음 디제이(DJ) 파티를 여는 한편, 지역 내 핵심 상권인 중앙로5번길, 석탑로, 사비로 등 골목 사이사이 각종 프로그램 및 먹거리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림 5-23** 골목형 백마강달밤야시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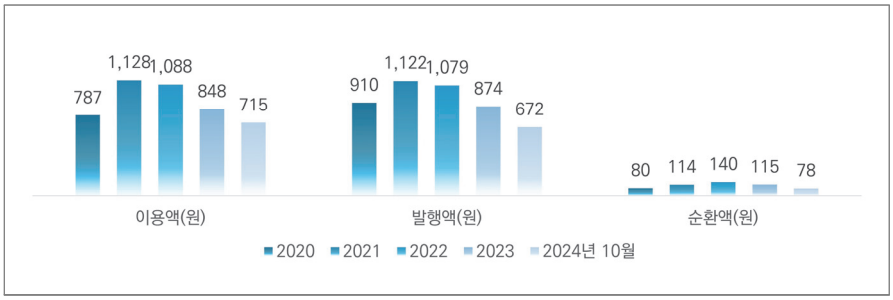
출처: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4.10.7. 2024 광장·골목형 백마강달밤야시장 개장

둘째, 부여군은 전국 유일 공동체 순환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12월 본격 출시된 굿뜨래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화폐로서 지역 내 순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타 지자체 지역화폐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한번 사용하면 가맹점에서 '원'이란 법정화폐로 환전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굿뜨래페이는 가맹점이 매출액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순환형으로 운영된다. 가령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업주는 이를 '원'으로 변환해 사용한다. 그러나 굿뜨래페이는 가맹점 간 재사용이 가능하여 가맹점주가 물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페이를 원으로 바꾸지 않은 채 결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재사용할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굿뜨래페이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포인트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 정책 수당까지 굿뜨래페이로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2024년 10월 기준 사용자 수와 가맹점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통액의 10%인 527억 원의 순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시점 기준 굿뜨래페이 가입자 수는 8만여 명으로 부여군 인구 6만 명을 훌쩍 넘는다.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 2만 명 정도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는 외지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

한 부여군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 부여군은 추천인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출향인사 또는 미가입자가 굿뜨래페이에 가입하면 해당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각각 5천 원 상당의 굿뜨래페이를 주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6,115명이 신규 가입하였고, 이 중 부여군(3,928명) 이외 대전시(336명), 경기도(234명), 세종시(195명) 등 관외 가입을 이끌어냈다(세계일보, 2024.12.5.). 이에 부여군은 향후 5년간 생활인구의 굿뜨래페이 가입을 확대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자 수를 40만 명으로 늘리고 연간 천억 원 정도인 굿뜨래페이 순환 규모를 6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대전MBC뉴스, 2024.5.10.).

**그림 5-24** 공동체 순환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발행 및 이용추이




출처: 세계일보. 지역소멸 위기, 경제 활성화 마중물 '지역화폐'로 활로 찾는다. 24.12.05.보도 도표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여군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활동을 진작하는 한편 전통시장, 원도심, 골목상권 등과의 지역연계를 통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소득 유출을 방지하는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선도적인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이들을 광의의 경제공동체로 포섭한다.

### (3) 우수한 브랜드경쟁력을 활용한 체류인구 소비확산

'좋은 들에 좋은 상품'의 가치를 뜻하는 굿뜨래는 2003년 개발되어 22년째 부여군이 지켜온 공동브랜드명이다. 지자체 브랜드로서는 전국 유일 14년(2011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브랜드 관리로 유명하다. 2023년 부여군이 실시한 굿뜨래 브랜드 가치평가 및 관련 조사용역에 따르면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중요도 및 인지도, 만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굿뜨래를 농특산물 브랜드로 인지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자의 80%가 상품과 품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화폐가치는 3,9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부여군청 보도자료, 2023.10.12.).

**그림 5-25**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출처: 부여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부여군은 지역 내 우수한 농특산물로 인정받은 110개 생산자조직과의 브랜드 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굿뜨래몰을 운영하고, 이 밖에 지역 내 공공시설과 조직, 온라인 플랫폼 등에도 굿뜨래 브랜드를 적극 사용한다. 굿뜨래음식특화거리, 부여굿뜨래웰빙마을, 굿뜨래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 등 부여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브랜드 굿뜨래는 외지인의 지역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자인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그중 방문객의 체류 및 소비와 관련한 시설로 알려진 굿뜨래웰빙마을은 글램핑장, 물놀이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체류가 빈번하다. 특히,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의 인기가 높아 올해는 7월 1일 개장 이후 약 2주 만에 1,5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양일보, 2025.07.28. 보도). 또한 브랜드 전략은 외지에서도 유효한데, 최

근 부여군은 제주도에 이어 대전광역시에 굿뜨래 직거래센터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부여군 보도자료, 2025.9.24.). 대전광역시는 부여군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체류할 가능성이 큰 인근 대도시로, 직거래센터 개장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로개척의 효과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지역홍보 효과를 통해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소비를 북돋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6** 충남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내 체류시설



출처: 부여군 홈페이지

브랜드는 특정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해 주는 고유한 이름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상품, 지역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경험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무형의 자산에 속한다. 굿뜨래라는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한 부여군의 전략적 접근은 상품에 대한 신뢰를 지역으로 전이시켜 체류인구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체류, 재방문 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 3) 추진주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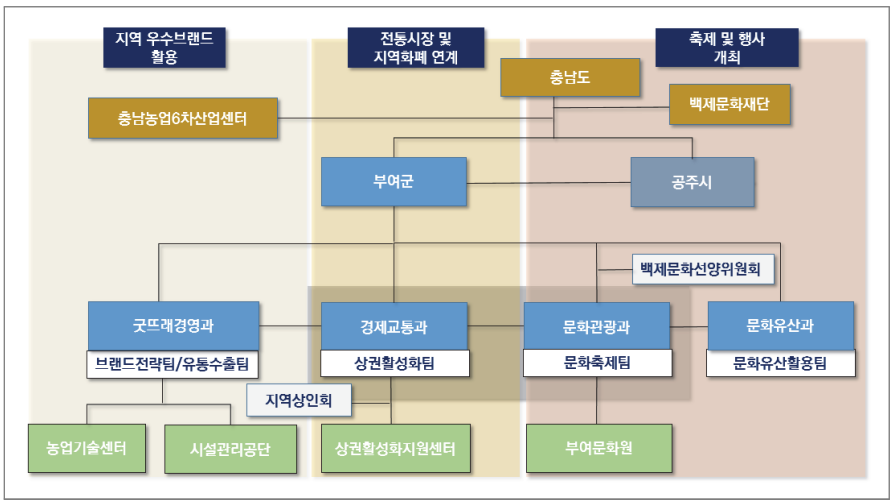
#### (1) 공공부문

부여군은 생활인구 유형 분류상 봄·가을 휴일 당일 나들이 집중 지역으로 특정시기 단기 체류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상권 활성화 전략 등은 체류인구의 유입과 이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주요한 축이다. 먼저,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의 공급자이자 관광 인프라의 관리자로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축제를 주최하며 축제 계획, 관광 안내, 접근성 개선, 이벤트 기획, 편의시설 운영 등의 역할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체류 환경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 내 문화축제팀을 주축으로 유관부서인 문화유산과와 중간지원조직 성격인 부여문화원 등이 연계하며, 필요시 공주시, 충남도, 백제문화재단과의 도·시·군 협력업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부여군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과 중간지원조직인 상권활성화지원센터 등은 체류인구의 소비를 지역 전통 상권 및 소상공인과 연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전통시장 및 원도심 골목상권을 무대로 야시장을 개장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 및 소비를 늘리고, 전국 최초 지역순환형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도입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외부로의 자본 유출 방지에 기여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외지인 가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규모를 늘려 생활인구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한편, 부여군은 굿뜨래라는 우수한 브랜드경쟁력을 기반으로 그 영향력을 군 전역은 물론 대전, 제주 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굿뜨래몰과 굿뜨래웰빙마을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지역브랜드가 가진 긍정적 이미지와 인지도, 신뢰 등을 토대로 체류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자 한다. 굿뜨래경영과 내 브랜드전략팀, 유통수출팀 등과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직거래장 확보, 지역특산물과 농촌 체험을 결합한 상품 공급, 체류 시설 제공 등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림 5-27** 추진주체로서 부여군 주요 조직 구성




### (2) 민간부문

주말·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중장년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당일 방문지로서의 소비가 두드러지는 부여군 체류인구 특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 민간 주체는 롯데아울렛부여점이다. 롯데아울렛부여점은 백제문화단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조성된 쇼핑공간으로 2013년 9월 개장하였다.

약 150개 매장이 집적한 이곳은 충청권 최초의 관광 쇼핑 테마파크로, 도보 5분거리에 롯데 부여 리조트와 롯데스카이힐 부여 컨트리클럽이 함께 자리하여 대전, 군산, 익산, 전주, 논산에 거주하는 30~40대 가족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장 첫 사흘 이곳을 방문한 인원은 총 11만여 명으로 당시 부여군 인구 7만 명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까지 연간 방문객은 약 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9.01.07. 보도).

공간적으로 백제문화단지 내 위치한 롯데아울렛부여점은 백제의 고도 부여의 아름다움과 멋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성곽, 배흘림기둥 등 백제시대 건축양식을 고증을 거쳐 재현하였다. 아울렛 중심부를 연못, 정자 등으로 꾸며 전통적인 건축미를 살림으로써 부여군만의 장소적 특성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림 5-28** 롯데아울렛부여점 내부와 아울렛 내 입점한 부여향토특산물관




출처: 롯데공식블로그. 충청권 최초의 관광쇼핑 테마파크, 부여 롯데아울렛. 2013.10.24.

롯데아울렛부여점은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시도가 엿보이는데, 부여군 로컬푸드직매장으로서 향토특산물관이 그 대표적인 예다. 롯데아울렛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부여의 향토브랜드인 '굿뜨래'를 중심으로 메론, 밤, 수박 등 부여 8미를 엄선하여 판매하고, 지역 제철 농산물은 물론 인근 지역 농특산물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야외장터를 개시하여 지역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롯데아울렛 부여점과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가 상생장터로서 운영하는 '왓슈마켓'과 롯데아울렛이 주축이 되어 지역농가 참여를 받아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롯컬마켓'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백제문화단지의 야간 개장에 맞춰 롯데아울렛부여점은 아울렛 입구와 매장건물 등에 별빛 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유입 및 체류를 유도한다. 백제유물을 이미지화한 금동대향로 조명을 비롯해 기와조명, 레이저조명 등 특색있는 경관 연출을 통해 부여를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서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소비 진작을 이끈다.

**그림 5-29** 롯데아울렛부여점과 지역상생협력 프로그램






출처: 롯데쇼핑 홈페이지

**그림 5-30** 롯데아울렛부여점 별빛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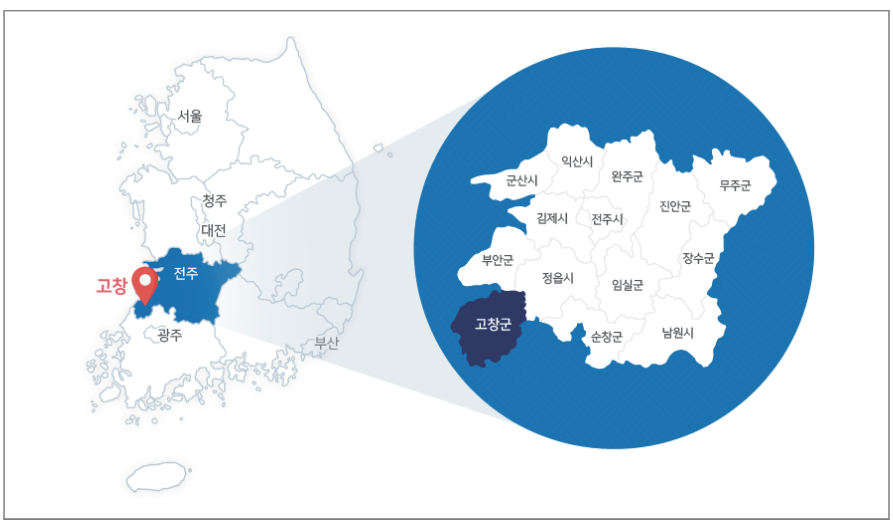
출처: 롯데쇼핑 홈페이지

# 제4절 • 전북 고창군: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

## 1. 지역 현황

고창군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정읍시와 부안군, 남쪽으로는 영광군, 북쪽으로는 부안군과 인접해 있다.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의 서해안 관문에 해당하며, 군 전체 면적은 약 609㎢로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호남평야의 북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모악산맥의 완만한 구릉지대가, 서쪽에는 고창갯벌과 해안사구, 해변 등이 분포하여 산·들·바다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색을 보인다. 특히 고창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은 고창군이 농업·생태·역사문화·관광 산업이 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31** 전북 고창군 위치




출처: 고창군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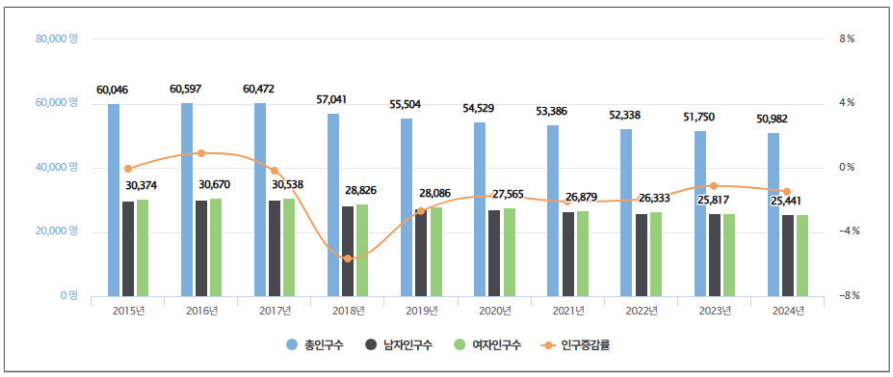
군의 중심부에는 고창읍이 위치하여 행정·경제·문화 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3시간 30분 정도이고, 주요 도로망인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 22호선을 통해 인근 도시인 광주, 목포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표 5-30** 전북 고창군과 주요 지역 간 접근성

| 구분 | 서울 | 인천 | 대전 | 세종 | 충북 | 전북 | 광주 | 목포 |
|---|---|---|---|---|---|---|---|---|
| 최단 거리 | 273㎞ | 263㎞ | 142㎞ | 154㎞ | 178㎞ | 65㎞ | 43㎞ | 89㎞ |
| 최소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3시간 35 | 2시간 | 1시간 55분 | 1시간 30분 | 2시간 30분 | 40분 | 1시간 |

주: 고창군청에서 각 시·도청까지의 평일 오전 10시 자가용 기준
출처: 네이버길찾기

**그림 5-32** 최근 10년간 전북 고창군 인구현황(2015~2024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최근 10년간 전북 고창군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기준 60,046명이던 인구는 2024년 59,822명으로 약 2000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고창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39.1%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19.2%)과 전북자치도 평균(24.1%)은 물론, 도내 군단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또한 19~39세 청년인구 비율은 약 15.6% 수준으

로 집계된다. 동일 연령 기준에서 전국 평균은 22.5%, 전북 평균은 18.2%, 전북 도내 군단위 평균은 16~18% 수준으로 나타난다. 청년 유출 문제 및 인구 고령화 심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을 감안할 때,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정주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표 5-31** 전남 고창군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단위: %)

| 구분 | 지표 | 고창군 | 전국 평균 |
|---|---|---|---|
| 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59.34 | 85.85 |
| |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17.28 | 53.99 |
| 주거 | 노후주택비율 | 49.4 | 23.5 |
| 문화여가 |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19.65 | 60.35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14.38 | 19.08 |
| 생활환경 | 하수도보급률 | 77.6 | 95.1 |
| |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 0.11 | 0.7 |
| 보건복지 |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57.37 | 89.92 |
| |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2.34 | 16.53 |

주: 2024년 발표 자료 기준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나비스(NABIS) 균형발전지표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살펴본 고창군의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는 전남 고창군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특히 교육·문화·보건복지 분야의 인프라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다만 주거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정주기반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균형형 생활SOC 확충, 의료·교육 접근성 개선, 문화생활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면 고창군의 인구감소 완화 및 정주형 장기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기반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다.

**표 5-32** 전북 고창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4개)

| 순위 | 주요관광지점 | 내국인 수(명) |
|---|---|---|
| 1 | 선운산 도립공원 | 957,958 |
| 2 | 석정온천관광지(휴스파) | 447,856 |
| 3 | 고창읍성 | 305,667 |
| 4 | 상하농원 | 167,193 |
| 5 | 고창고인돌유적 | 128,811 |
| 6 | 운곡람사르습지 | 105,938 |
| 7 | 무장읍성 | 104,616 |
| 8 | 골프존카운티선운 | 89,294 |
| 9 | 석정힐 컨트리클럽 | 87,166 |
| 10 | 하전갯벌체험마을 | 86,971 |
| 11 | 고창컨트리클럽 | 74,003 |
| 12 | 판소리박물관 | 20,418 |
| 13 | 미당시문학관 | 18,195 |
| 14 | 장호갯벌체험마을 | 2,341 |

주: 2024년 한해 내국인 기준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24년 기준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선운산 도립공원과 석정온천관광지(휴스파), 고창읍성이 상위 3대 관광지로 나타나며, 이 세 곳이 전체 관광객 유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고창군의 관광 구조는 자연경관(선운산), 휴양·치유형 자원(석정온천), 역사문화유산(고창읍성·고인돌유적)을 3대 축으로 하는 다핵형 관광체계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상하농원과 운곡습지 등 체험형·생태형 관광지의 부상은 농촌관광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 방문형에서 체류형·생활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흐름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전북 고창군은 군집 3(정주 및 지속체류 지역)에 속한다. 군집 3은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생활인구 중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창군의 생활인구 중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5.8%, 등록외국인 비율은 0.5%로, 같은 군집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두 집단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고창군 생활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94.1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192.9천 원)보다는 약간 높지만 군집 3(225.9천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문화여가 소비액이 15.4천 원/인으로 인구감소지역(9.3천 원)과 군집 3(6.7천 원)보다 크게 웃돌아,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인기 관광지 자료를 보면, 석정온천휴스파, 고창CC, 석정힐CC, 골프존카운티선운, 상하농원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온천, 워터파크, 골프장, 체험형 관광지 등으로 문화여가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표 5-33**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전북 고창군 | 44.0 | 1.7 | 15.4 | 6.0 | 22.5 | 9.7 | 4.5 | 64.3 |
| 군집 3 | 49.8 | 2.6 | 6.7 | 12.1 | 24.7 | 12.8 | 6.0 | 81.9 |
| 89개 인구감소지역 | 45.8 | 4.5 | 9.3 | 8.1 | 18.2 | 12.6 | 4.5 | 68.2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주민등록인구의 업종별 소비를 보면, 문화여가(8.2천 원/인), 운송교통(60.2천 원/인), 보건의료(27.5천 원/인), 교육(15.2천 원/인) 소비가 비교 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이동과 의료, 교육 등 생활 기반 수요뿐 아니라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외국인의 업종별 소비를 보면, 숙박(1.5천 원/인), 운송교통(9.9천 원/인), 보건의료(13.9천 원/인), 교육(23.2천 원/인) 지출이 비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인구가 문화여가 소비에 비중을 두는 반면, 등록외국인은 교육 분야에 많은 지출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고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족 동반 정주, 자녀 교육 등 생활 기반 수요를 중심으로 소비를 형성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34** 전북 고창군 주민등록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전북 고창군 | 76.7 | 0.8 | 8.2 | 16.4 | 60.2 | 27.5 | 15.2 | 149.9 |
| 군집 3 | 77.9 | 0.8 | 5.8 | 20.8 | 42.8 | 25.7 | 14.5 | 154.7 |
| 89개 인구감소지역 | 76.1 | 1.2 | 5.8 | 18.4 | 40.2 | 24.3 | 13.5 | 149.7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표 5-35** 전북 고창군 등록외국인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전북 고창군 | 40.3 | 1.5 | 1.7 | 5.3 | 9.9 | 13.9 | 23.2 | 167.7 |
| 군집 3 | 41.4 | 0.6 | 2.2 | 6.7 | 7.7 | 11.1 | 10.3 | 184.9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8.3 | 0.7 | 2.0 | 5.9 | 7.0 | 10.6 | 11.6 | 171.1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 3. 정성적 특성: 농업기반 체류인구의 정착 유도 활성화

### 1) 제도적 요인

고창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전입 인구 증가를 넘어 '정주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군은 전입·정착·체류·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조례를 통해 관계인구의 생활인구화, 생활인구의 장기체류화, 그리고 장기체류의 정주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이러한 고창군의 제도적 기반을 생활인구의 장기체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각 조례가 생활인구 유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창군의 관련 조례는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36**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조례

| 유형 | 주요 기능 | 관련 조례 |
|---|---|---|
| 관계인구·전입 기반형 | 지역 외부 인적자원과의 연결, 전입 인센티브 제공 |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 인구감소 대응 조례 |
| 청년·창업 정착형 | 청년층의 경제활동·창업·주거 안정 지원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
| 교육·체험 기반형 | 가족·청소년 대상 장단기 체류 및 지역 적응 지원 | 농촌유학 지원 조례,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
| 주거·공간 기반형 | 주거비 완화, 빈집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 공간 공급 |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
| 생활편의·이동권 지원형 | 교통 접근성 보완 및 교통약자 지원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조례 |
| 농업정착·소득기반형 | 귀농·귀촌·농업창업·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례, 귀농어·귀촌 조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조례 |
| 여가·레저형 | 장기체류자 및 외부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조례, 파크골프장 조례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고창군) 참고로 연구진 작성

### ① 관계인구·전입 기반형

고창군의 생활인구 정책은 우선 외부 인구와의 접점을 제도적으로 형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는 군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고창군의 온라인 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관계인구'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관리함으로써 장차 실제 전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는 국가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인구정책을 단기 시책이 아닌 법정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군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책의 지속적 시행, 추진체계 정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생활인구 정책의 종합 전략'으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고창군이 인구유입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생활인구의 유입과 유지 모두에 제도적 지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청년·창업 정착형

고창군은 청년층을 정주형 생활인구 전환의 핵심 집단으로 인식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들을 다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청년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심의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청년층이 단기 체류자가 아닌 지역 내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매개로 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년층의 권익 보장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및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이 조례는 주거, 문화, 일자리, 복지 등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공한다. 즉,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이유'를 주거·일·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함으로써, 고창군의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③ 교육·체험 기반형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험과 교육'을 통한 지역 적응 단계는 중요한 중간 단계로 작용한다.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는 도시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학교에서 학업과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도시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농촌유학을 통해 지역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향후 전입 가능성을 높인다.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는 관광형 체험을 넘어 실제 거주형 단기체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체험시설의 설치·운영·이용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도시민이 고창군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살아보기형 체류 인구'를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체험형 조례들은 단기 방문자를 잠재적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④ 주거·공간 기반형

생활인구가 실제로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성과 공간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흔히 문제시되는 유휴공간을 '생활인구를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지역에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청년과 신혼세대의 지역 정착을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두 조례는 물리적 공간과 재정적 부담 양 측면에서 주거 안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착 기반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⑤ 생활편의·이동권 지원형

지속 가능한 정주를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생활편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을택시 제도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에서도 고령층과 비운전자 세대가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조례는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읍·면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생활인구 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 교통 접근성의 개선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체류 지속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 ⑥ 농업정착·소득기반형

농업 분야는 고창군의 생활인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영역이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기술을 익히고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거주+교육+창업 준비'가 결합된 장기 체류형 인큐베이팅 모델로서 기능한다.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정착금, 주택수리비, 영농기반 조성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 조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과 교육·보육 체계를 제공하여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례들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정주형 생활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사례로서, 생활인구의 장기체류를 소득과 생업 기반에서 뒷받침한다.

### ⑦ 여가·레저형

마지막으로, 여가와 레저 인프라의 확충은 생활인구의 '머무름의 질'을 높이는 요소이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캠핑장을 관리하고 이용 요금·시설운영 기준을 명시하여, 관광객이 단기 방문을 넘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는 고창의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구가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여가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파크골프장은 관광형 체류객뿐 아니라 이미 지역에 거주 중인 장기체류자들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며, 생활인구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고창군의 조례 체계는 관계인구 형성에서 정주인구 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관계와 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사이버군민제도, 인구감소 대응조례)가 출발점이 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기반 조례(청년기업, 청년친화도시)가 정착의 동력이 된다. 이어 교육·체험형 조례(농촌유학, 단기체험시설)가 적응단계를 제공하고, 주거·교통·농업정착 조례들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여가·레저형 조례는 장기체류자의 만족도와 소비활동을 높여 생활인구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결국, 고창군의 조례들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유입-정착-체류-유지"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제도적 기반이 고창군을 '정주형 장기체류 지역'으로 규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5-37** 전북 고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조례 주요 내용 및 관련성

| 유형 | 조례명 | 주요 내용 | 생활인구 유입 관련성 |
|---|---|---|---|
| 관계인구전입 |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 | 외지인의 군정 참여 및 홍보 활동 제도화 | 관계인구 형성 → 전입 잠재층 확보 |
| | 인구감소 대응 조례 |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인센티브 규정 | 인구정책 일관성 확보, 유입사업 법제화 |
| 청년·창업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창업·판로·보육 지원, 위원회 설치 | 청년층 경제활동 정착 기반 마련 |
| |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 청년 기본계획·거버넌스·평가 근거 | 청년의 주거·문화·일자리 통합 지원 |
| 교육·체험 | 농촌유학 지원 조례 | 도시 학생 농촌유학·체험 지원 | 가족단위 장기체류·유학형 관계유입 |
| |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 체험시설 관리·이용 절차 규정 | '살아보기형' 체류 유도 경로 제공 |
| 주거·공간 |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 빈집 정비·활용·보조금 절차 규정 | 유휴공간 → 체류·정주형 주거자원 전환 |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 대출이자 보전으로 주거비 완화 | 청년·신혼세대 정착·전입 촉진 |
| 생활편의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조례 | 대중교통 공백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 농촌 접근성 확보 → 정주 지속성 강화 |
| 농업정착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비 귀농인 체류·교육·훈련 지원 | 초기 체류단계 정착률 제고 |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정착금·농지·주택 지원 근거 | 도시민의 귀촌·장기체류 촉진 |
|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 조례 | 스마트팜단지 조성·기술지원 | 청년농의 장기체류·농업정착 기반 |
| 여가·레저형 |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조례 | 캠핑장 운영·요금·시설관리 | 관광형 체류 → 생활형 장기체류 전환 |
| |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공공체육시설 이용·운영 규정 | 중·장년층 장기체류·정주 만족도 제고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고창군) 참고로 연구진 작성

고창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 체계는 ① 관계형 유입 → ② 경제·주거 기반 정착 → ③ 체험·교육 통한 적응 → ④ 생활편의·여가 정착 유지의 4단계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도 고창군이 '정주형 장기체류지역'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각 조례 간 연계성과 평가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인 생활인구 유지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고창군은 다양한 체류 유인책을 시험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형 농업, 청년 유입, 워케이션, 농촌유학 등의 축으로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여기서는 각 축별로 대표 사업 및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적 요인을 분석한다.

## 2) 정책사업 요인

### (1) 체류형 농업과 농업정착 인큐베이팅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심화된 지역으로, 신규 전입 인구의 상당수가 귀농·귀촌 희망자이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지역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 영농기술 미숙, 지역사회 적응 실패 등으로 1~2년 내 재이주(이탈)하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 창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착 실패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국비 40억 원 등 총 80억 원이 투입돼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일대 2만 4천㎡ 부지에 조성하였다. 2017년 말 완공되어 2018년 3월부터 예비 귀농·귀촌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농촌 적응과 창업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개관하였다. 주요 시설로 아파트형 주택 20가구, 단독주택 10가구, 영농 교육관, 공동체 실습하우스, 가구별 텃밭, 냉동창고 등을 구비하고 있다. 주택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월 19만~27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이 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생활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즉, 단순한 기술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주형 농촌생활 실습 플랫폼으로 기능한다(연합뉴스, 2018.03.21).

센터 운영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총괄하며, 교육과정은 실습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입교생은 센터 내 숙소(가구형 원룸 형태)에 입주하여 약 9개월간 생활한다. 개인 또는 부부 단위로 입교할 수 있으며, 숙박·공동취사·세탁 등의 생활 인프라가 제공된다. 기본영농, 6차산업형 창업교육, 현장실습, 귀농 선배와의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지고, 입교 후 일정 기간 내 실

제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군은 정착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한다. 또한 퇴소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귀농인 네트워크 운영이 마련되어 있다. 매년 15~20가구 규모로 선발하고 있고, 교육기간 동안 진로상담 및 창업 매칭이 병행되며, 수료 후 1년 이내에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정착지원금(최대 1,000만 원 규모)을 신청할 수 있다. 23년도 기준, 30세대 가운데 22세대가 입교했고 이들의 정착률은 55%인 12세대였다. 6년간 평균 63% 정착률을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인 55%보다 높은 비율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어바웃전북, 2023.12.08.).

**그림 5-33** 전북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좌), 체류형 주택(우)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4.07.29.

이 모델의 강점은 '거주+학습+사업 준비'가 하나의 공간과 시간 축에서 통합된다는 점이다. 즉, 농업정착 희망자를 단순히 교육생으로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 현지에 머무르며 생활 조건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입 의사와 정착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센터 운영은 지역 농업 인프라와의 유대(농장 네트워크, 농업 선도농가 투어 등)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전환의 문턱을 낮추는 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단순 관광이나 방문 경험에서 벗어나 생활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주형 생활인구 관점에서는 이 공간이 '중간 정착 경로'가 된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은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자본·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고

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총 사업비 약 165억 원(국비+도비+군비+민자 포함), 무장면 일대 약 1만5 천평 규모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교육·보육센터, 창업보육실, 공동작업장, 농기계 실습장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 스마트팜단지는 "기술보육 - 임대운영 - 창업이행"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1년차는 기술보육 단계로, 농업기술센터 및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데이터 관리·에너지 효율화 등 기술교육 실시하고 입주자(청년창업농)에게 생산·경영 시뮬레이션 제공한다. 다음 단계로 2~4년차는 임대운영 단계로 보육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입주자가 단지 내 온실(개별 660㎡ 단위)을 임차하여 직접 생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작목·병해충 컨설팅 및 경영지도 담당한다. 마지막 5년차 이후는 창업이행 단계로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입주자는 군내 타 지역에서 자가 스마트팜 창업 시 토지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하고, 전북도 '청년농 창업자금' 및 농식품부 '후계농육성자금' 연계한다. 전 단계에서 입주 청년은 단지 내 기숙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고창군의 "청년 유입-농업 정착-생활인구 확산" 전략의 핵심 축이다. 첫째, 고비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한다. 둘째, 교육-임대-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경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일시적 체류가 아닌 정주형 농업인구 유입이 가능해졌다. 셋째, ICT·데이터 기반 농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넷째, 단지 인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스마트팜 체험단지,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청년농업-체험-교육-체류-정주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2)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가족 단위 장기체류 인구 유입

고창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학교의 통폐합 위험이 높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학교 살리기'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도시민에게는 자녀 교육과 농촌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농촌 지역에는 학령인구 증가·교육기관 유지·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귀촌 전 단계에서 농촌 생활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험대 역할을 하며, 이후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며,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체험이나 단기 캠프가 아닌, '생활기반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가족 단위 전입과 정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계인구→생활인구 전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38** 전북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성

| 구분 | 주요 내용 | 담당 기관 |
|---|---|---|
| 교육 프로그램 | 고창 지역 초·중학교 정규과정 수업 + 방과후 농촌체험 수업 | 고창교육지원청 / 참여학교 |
| 생활체험 프로그램 | 농촌문화·생태체험, 지역축제 참여, 전통시장 탐방 | 마을공동체 / 군청 |
| 가족참여 프로그램 | 주말 가족농장 가꾸기, 로컬푸드 쿠킹클래스, 지역 탐방 | 고창군 농촌유학센터 |
| 진로·정착 연계 프로그램 | 귀촌희망가정 대상 농업기초교육, 귀촌 상담 |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지원팀 |
| 성과관리 프로그램 | 수료자 만족도 조사, 재참여 의사·정착률 조사 | 군청 교육지원과 |

출처: 연구진 작성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시행된다. 사업유형은 농촌유학센터형(군 또는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유학센터에서 공동생활), 홈스테이형(지역 가정에서 학생이 단독 거주), 가족체류형(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 세 가지로 분류되며 도시지역 초·중학생 및 가족, 귀촌 희망 가정이 참여 대상이다. 연간 약 10~15가구 내외를 모집하며 전라북도와 고창군, 교육청의 3자 매칭 예산 구조이다. 1인당 체류비는 월 30~4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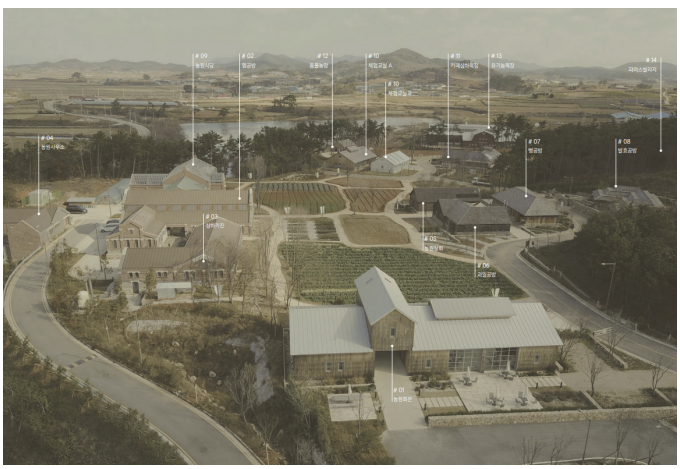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고창군의 생활인구 정책 중 가족 단위 정주형 체류전환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촌교육의 유지와 지역사회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한다. 학생 유입은 곧 마을의 생존과 직결되며, 농촌학교가 유지될수록 정주 기반도 강화된다. 또한 체류 기간 동안 가족 단위의 지역소비(주거·식품·문화)가 증가하여, 소규모 농촌경제의 소비 순환을 창출한다. 아울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스마트팜단지, 상하농원 워케이션 거점 등 다른 사업들과 상호 연계가 가능한 교육기반 인구유입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 (3) 체류형 관광·생활인구 전환 : 상하농원 워케이션 복합공간 조성 사업

고창군은 상하농원·운곡습지·선운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이 대부분 단기 체류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소비의 지속성이 낮다는 진단이 있었다[1]. 이에 따라 군은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4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공모하였다. 상하농원 워케이션 공간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전북 내 유일하게 선정되며 가능해졌다. 총사업비 3억 원(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기존 노후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하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을 새롭게 갖췄다. 선정되어 상하농원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워케이션 특화 거점을 구축하였다.

주관은 고창군과 상하농원 공동으로 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억 원(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연면적 약 97평의 시설 규모이다.

**그림 5-34**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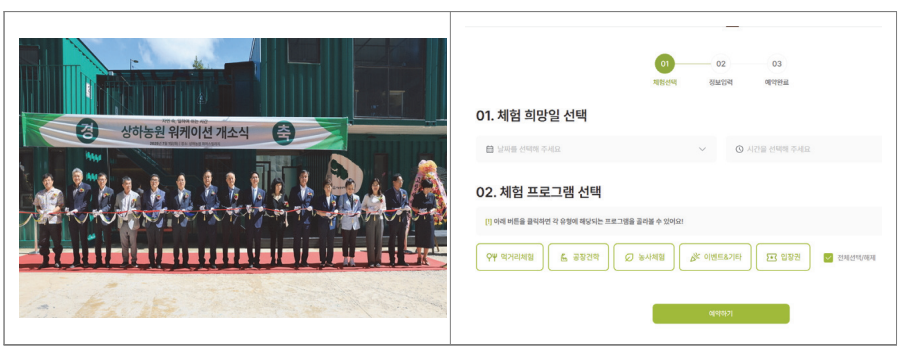
출처: 상하농원 홈페이지

1 이외 고창은 미국식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모델을 벤치마크,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 웰파크시티(150만㎡)를 조성하여 은퇴자 유치를 도모했지만 접근성 부족과 수익성 부진 등의 문제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의료·레저·편의·교통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단기 체류형 휴양레저 방문객이 많고 지속거주형 수요가 적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체류인구의 정착유도 정책은 지속 중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직장인, 프리랜서, 기업단체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창군 최초의 장기체류형 복합공간 사업이다. 상하농원은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농촌관광시설로, 농업·식품·체험·숙박이 결합된 복합형 관광지다. 이곳에 원격근무·회의·공유오피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단순 관광객을 체류형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실험적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농원 워케이션 사업은 고창군이 관광 중심 농촌에서 체류 중심 농촌으로 전략 전환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이다. '일과 삶의 결합형 체류모델'을 농촌에 구현함으로써 도시 근로인구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농촌관광에 디지털노마드 수요층을 유입시켜 새로운 생활인구 집단을 창출하였다. 또한 지역 내 숙박·체험·식음·문화 소비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체류형 소비 구조 확립 가능성을 보였다.

**그림 5-35**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워케이션 센터 개소식(좌), 워케이션오피스 예약창(우)




출처: 상하농원 홈페이지

**표 5-39**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워케이션 사업 운영 구조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유오피스형 워케이션 공간 운영 | 개별 근무공간, 화상회의실, 피트니스룸,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형 워크라운지 운영<br>이용자는 1일·1주·1개월 단위로 공간을 임대해 원격근무 가능 |
| 체류·숙박 연계 | 상하농원 내 파머스빌리지 숙소, 인근 농촌체험 민박과 연계한 숙박형 워케이션 패키지 구성<br>가족형·기업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 구분 | 주요 내용 |
|---|---|
| 농촌 체험 및<br>로컬 콘텐츠 연계 | 지역 특산물 생산체험(쌀빵, 장류, 와인 등)<br>농가레스토랑·전통시장·농촌카페와 연결한 지역 소비 활성화 구조 |
| 운영 주체 및 협력 | 고창군) 시설 리모델링·기반조성, 상하농원) 민간운영·프로그램 기획 담당<br>문체부는 사업비 지원 및 모델 확산 모니터링 수행 |

출처: 연구진 작성

### 3) 추진주체 요인

#### (1) 공공부문 :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고창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촌유학 지원 조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생활인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례는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체류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예산 배정·운영기준·지원대상·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특히 고창군은 체류형 농업이나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인구 사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고창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활·교육·농업·관광 기반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군이 직영하며 주거·교육·실습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스마트팜단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조성된 임대형 청년농업 단지로, 공공이 기반시설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 재정으로 조성된 후 민간이 운영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초기 인프라 투자자로서, 물리적 공간과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의 틀'을 형성하였다.

고창군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체류형 농업 교육생에게는 주거·식비·재료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 식자재·숙박업·상권 소비를 유도하고, 농촌유학 지원금은 체류 가정이 지역 내에서 생활비를 쓰도록 유도하며, 워케이션 사업의 경우 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공공 공간을 조성한 후 지역 숙박·식음업체와 연계한 패키지를 운영하도록 설계하였다. 결국 공공은 소비 기반의 구조를 '제도적 소비 환경'으로 확장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민간부문 : 콘텐츠·운영·소비 촉진

민간부문은 공공이 마련한 제도와 인프라 위에서 소비를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행위 주체로 기능한다. 고창군의 주요 민간 참여 주체는 상하농원, 지역 농가·협동조합, 숙박·체험업체, 청년 창업자 등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스마트팜단지에서 민간(지역 선도농가,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교육과 실습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교육·작목지도·농산물 판로 연계 등 현장 기반의 경제활동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체류형 교육생의 생활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한다. 또한, 지역 농가가 실습·체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지역 내 유통(농기자재, 식품, 숙소 등)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촌유학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이 홈스테이 가정 또는 유학센터 운영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도시 학생과 가족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숙박비·식비·프로그램비 형태의 실질적 소비를 창출한다. 즉, 주민이 직접 소비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주민참여형 생활경제 모델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및 체류형 관광 운영에서 상하농원은 대표적인 민간 운영 주체로, 워케이션 공간의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이 조성한 인프라를 민간이 운영하면서 숙박·식음·체험 패키지를 민간가격으로 구성하고, 카페·레스토랑·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합 판매함으로써 생활형 소비활성화의 실질적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인근 숙박업소·카페·농촌체험장·로컬푸드점 등과 제휴를 통해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민간 소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로써 일시 체류자가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순환되며, 고창군의 생활인구정책은 단순 인구유입이 아닌 소비 기반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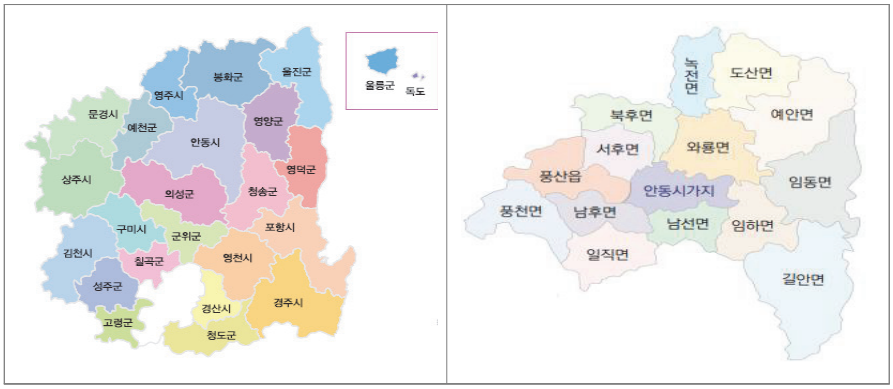
결국 체류형 농업과 농촌유학,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이 시작하고 민간이 유지하는' 구조로 진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두 영역이 맞물려서 작동할 때 생활인구정책이 단순히 '머무르는 정책'에서 '쓰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 경북 안동시: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

## 1. 지역 현황

경북 안동시는 경북 북부 중심에 위치한 인구 15만여 명(24년 기준)의 중소도시로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가장 면적(1,522.09㎢)이 넓다. 하지만 전체 면적 중 70%가 임야에 해당하여 도시화된 개발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행정구역 경계상 동쪽으로는 영양군, 청송군, 서쪽으로는 예천군, 남쪽으로는 의성군, 북쪽으로는 영주시와 봉화군과 인접하며 이들 지역과 유교문화권을 형성한다.

**그림 5-36** 경북 안동시 위치




출처: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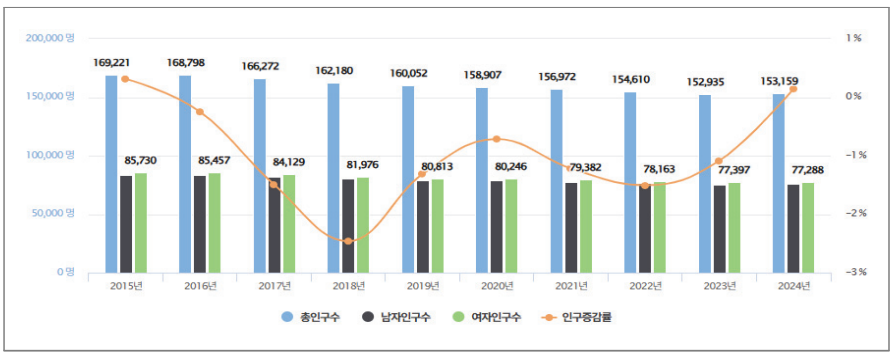
안동시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교통요충지로 중앙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고속철도(KTX) 안동역 등의 교통망이 구축되어 수도권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인근 대도시인 대구와는 1시간 거리에 있고, 24년 12월 중앙선 복선철도화 사업 완료됨에 따라 안동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무엇보다 안동시는 도내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으로, 안동시와 경계를 마주하는 인근 지역과 대략 1시간 거리권에 있다.

**표 5-40** 경북 안동시와 도 내 지역 간 접근성

| 구분 | 영양군 | 청송군 | 예천군 | 의성군 | 영주시 | 봉화군 |
|---|---|---|---|---|---|---|
| 최단거리 | 56㎞ | 43㎞ | 31㎞ | 31㎞ | 34㎞ | 50㎞ |
| 최소 소요시간 | 1시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50분 |

주: 안동시청에서 각 시·군청까지의 평일 오전 10시 자가용 기준
출처: 네이버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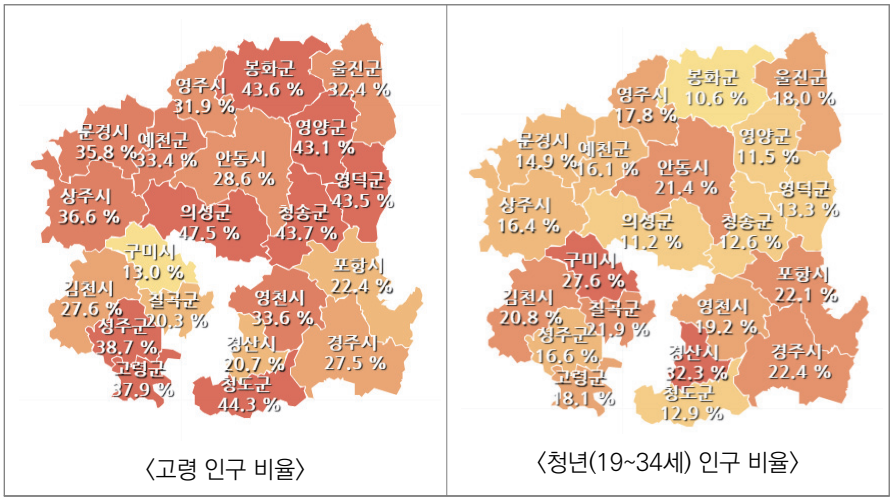
**그림 5-37** 최근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현황(2015~2024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안동시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4년 기준 15만 3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나 지난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동일년도 기준 28.6%로 전국평균(20.0%)과 경북평균(26.0%) 대비 높은 편이며 도내 시 단위 지역 중에서 상주, 문경, 영천, 영주 다음으로 고령화되어있다. 또한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비율은 2024년 기준 21.4%로 전국 평균 26.5%, 경북 평균 22.3%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는 대학도시로 유명한 경산시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미시 등을 제외하고 포항, 경주, 칠곡 등과 유사한 수치다.

**그림 5-38** 경북 안동시 고령인구비율 및 청년인구비율(2024년 기준)




주: 울릉군 고령인구비율은 30.13% 청년인구비율은 13.0%
출처: e-지방지표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안동시의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등 지역 발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었고, 초등학교 역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수도보급률과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편에 속했다. 그러나 노후주택비율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었고, 문화여가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전국 대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표 5-41** 경북 안동시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단위: %)

| 구분 | 지표 | 안동시 | 전국 평균 |
|---|---|---|---|
| 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83.99 | 85.85 |
| |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46.44 | 53.99 |
| 주거 | 노후주택비율 | 37.7 | 23.5 |

| 구분 | 지표 | 안동시 | 전국 평균 |
|---|---|---|---|
| 문화여가 |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37.4 | 60.35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8.85 | 19.08 |
| 생활환경 | 하수도보급률 | 80.6 | 95.1 |
| |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 0.27 | 0.7 |
| 보건복지 |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77.28 | 89.92 |
| |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 0.11 | 16.53 |

주: 2024년 발표 자료 기준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나비스(NABIS) 균형발전지표

2024년 한해 주요관광지점의 내국인 입장객 기준 약 213만 명의 방문객이 안동시를 찾았다. 하회마을이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가운데, 도산서원, 안동관광문화단지 유교랜드, 한국문화테마파크, 시립민속박물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등 유교문화 관련 관광자원이 특히 많았다.

특히, 안동시는 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3대 분야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하회마을과 봉정사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2010년)으로, 유교책판은 기록문화유산(2015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2022년)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7년 시작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인정받으며 곧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안동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학가산온천,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표 5-42** 경북 안동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상위 15개)

| 순위 | 주요관광지점 | 내국인 수(명) |
|---|---|---|
| 1 | 하회마을 | 564,568 |
| 2 | 학가산온천 | 446,152 |
| 3 | 도산서원 | 242,975 |
| 4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 110,336 |
| 5 | 안동관광문화단지 유교랜드 | 108,159 |
| 6 | 안동레이크골프클럽 | 88,527 |
| 7 | 시립민속박물관 | 84,847 |
| 8 | 한국문화테마파크 | 83,617 |
| 9 | 안동체육관 | 69,220 |

| 순위 | 주요관광지점 | 내국인 수(명) |
|---|---|---|
| 10 | 안동문화관광단지 주토피움 | 41,175 |
| 11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 39,565 |
| 12 | 안동국제컨벤션센터 | 38,008 |
| 13 | 권정생동화나라 | 36,523 |
| 14 |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 | 33,123 |
| 15 | 안동포전시관 | 30,358 |

주: 2024년 한해 내국인 기준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안동시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 도·소매업 비중이 22.0%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6.3%), 건설업(14.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14.4%로 가장 크고, 도·소매업(1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1.4%) 등의 순이다. 2023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안동시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를 살펴본 결과, 특화를 의미하는 기준인 특화계수 1 이상인 산업유형은 총 12개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2)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관련 부문도 모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문화산업군에 속하는 도·소매업(1.0), 숙박 및 음식점업(1.1)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 모두 특화도가 1 이상이었다.

**표 5-43** 경북 안동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 및 특화도(2023년 기준)

| 구분 | 사업체 수 | | 종사자 수 | | 전국 대비 특화도 |
|---|---|---|---|---|---|
| | 개수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 계 | 20,992 | 100.0 | 70,678 | 100.0 | - |
| 농업, 임업과 어업 | 98 | 0.5 | 466 | 0.7 | 2.6 |
| 광업 | 11 | 0.1 | 93 | 0.1 | 2.5 |
| 제조업 | 1,046 | 5.0 | 4,873 | 6.9 | 0.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078 | 5.1 | 1,605 | 2.3 | 3.3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40 | 0.2 | 486 | 0.7 | 1.3 |
| 건설업 | 2,982 | 14.2 | 6,610 | 9.4 | 1.2 |
| 도매 및 소매업 | 4,620 | 22.0 | 9,556 | 13.5 | 1.0 |

| 구분 | 사업체 수 | | 종사자 수 | | 전국 대비 특화도 |
|---|---|---|---|---|---|
| | 개수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 운수업 | 2,023 | 9.6 | 3,413 | 4.8 | 0.9 |
| 숙박 및 음식점업 | 3,429 | 16.3 | 6,773 | 9.6 | 1.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8 | 1.0 | 1,034 | 1.5 | 0.4 |
| 금융 및 보험업 | 216 | 1.0 | 2,081 | 2.9 | 1.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34 | 2.1 | 1,307 | 1.8 | 0.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26 | 2.0 | 2,208 | 3.1 | 0.5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345 | 1.6 | 1,182 | 1.7 | 0.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4 | 0.4 | 8,067 | 11.4 | 3.2 |
| 교육서비스업 | 862 | 4.1 | 6,011 | 8.5 | 1.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51 | 2.6 | 10,148 | 14.4 | 1.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81 | 2.3 | 1,566 | 2.2 | 1.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48 | 9.8 | 3,199 | 4.5 | 1.2 |

출처: 안동시청 제 64회 통계연보(2023년 기준)

안동시는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나 우수한 접근성과 산업 구조 등을 토대로 경북 북부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지로서의 면모도 엿보인다. 또한 유교문화,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동시의 강점과 이점이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안동시의 체류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제도, 정책사업, 추진주체 등을 살펴본다.

## 2. 정량적 생활인구 소비 특성

경북 안동시는 군집 4(평일 다세대 생활 중심 지역)에 속한다. 군집 4 전체와 비교할 때, 안동시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41.5%로 높고, 체류인구 비율은 58.2%로 낮다. 참고로 군집 4 전체의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8.9%, 체류인구 비율은 70.6%이다.

체류인구의 특성을 보면, 청년층 비율은 18.1%로 인구감소지역 전체(16.1%)보다 높

지만 군집 4(19.1%)보다는 낮다. 고령층, 아동·청소년층, 중장년층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전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체류인구 중 장기 체류(21일 이상 체류) 9.1%, 재방문 49.2%, 평일과 휴일 연속 체류 34.7%, 장기 실거주 7.7%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모두 인구감소지역과 군집 4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안동시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방문과 장기 체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라는 특징이 있다.

**표 5-44** 경북 안동시 주요 체류인구 비중

(단위: %)

| 구분 | 청년층 | 장기 | 재방문 | 평일+휴일 | 장기 실거주 |
|---|---|---|---|---|---|
| 경북 안동시 | 18.1 | 9.1 | 49.2 | 34.7 | 7.7 |
| 군집 4 | 19.1 | 8.2 | 45.2 | 32.3 | 5.9 |
| 89개 인구감소지역 | 16.1 | 7.3 | 42.5 | 32.2 | 5.4 |

주: 전체 체류인구 중 해당 특성을 지닌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안동시 생활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297.5천 원으로, 군집 4(188.7천 원)과 인구감소지역(192.9천 원)을 모두 크게 상회한다. 업종별로는 음식(65.3천 원/인), 개인서비스(15.0천 원/인), 운송교통(25.0천 원/인), 보건의료(27.3천 원/인), 교육(9.0천 원/인)에서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등 고차서비스 분야 소비가 활발해, 안동시가 경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5** 경북 안동시 생활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경북 안동시 | 65.3 | 1.7 | 9.2 | 15.0 | 25.0 | 27.3 | 9.0 | 112.0 |
| 군집 4 | 45.3 | 3.2 | 9.3 | 6.8 | 13.7 | 21.7 | 4.8 | 66.9 |
| 89개 인구감소지역 | 45.8 | 4.5 | 9.3 | 8.1 | 18.2 | 12.6 | 4.5 | 68.2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155.4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115.0천 원)과 군집 4(119.4천 원)를 모두 웃돈다. 음식과 소매 소비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개인서비스(6.7천 원/인), 보건의료(18.6천 원/인), 교육(2.2천 원/인)에서도 비교 지역보다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안동시를 찾는 체류인구는 관광이나 쇼핑보다는 교육·의료·개인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5-46** 경북 안동시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경북 안동시 | 41.9 | 2.3 | 8.4 | 6.7 | 10.2 | 18.6 | 2.2 | 51.1 |
| 군집 4 | 33.1 | 4.0 | 10.7 | 3.0 | 6.5 | 18.7 | 0.9 | 34.5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3.2 | 5.9 | 10.8 | 3.8 | 9.1 | 7.7 | 0.7 | 33.1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주요 체류 집단인 재방문 체류인구의 1인당 소비액은 208.4천 원으로, 인구감소지역(146.2천 원)과 군집 4(147.5천 원)에 비해 약 1.4배 높다. 업종별로는 음식(47.1천 원/인)과 소매(73.2천 원/인) 소비가 많고, 개인서비스(10.6천 원/인), 보건의료(27.0천 원/인), 교육(3.4천 원/인)에서도 높은 소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안동시의 고차서비스 기능이 재방문 수요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7** 경북 안동시 재방문 체류인구 업종별 1인당 소비액

(단위: 천 원/인)

| 구분 | 음식 | 숙박 | 문화 여가 | 개인 서비스 | 운송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 소매 |
|---|---|---|---|---|---|---|---|---|
| 경북 안동시 | 47.1 | 1.7 | 10.1 | 10.6 | 16.2 | 27.0 | 3.4 | 73.2 |
| 군집 4 | 37.8 | 2.3 | 10.5 | 4.6 | 10.7 | 25.2 | 1.3 | 44.0 |
| 89개 인구감소지역 | 36.8 | 3.1 | 10.8 | 6.2 | 16.3 | 11.6 | 1.0 | 44.5 |

출처: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2024년)

체류인구 출발지를 보면, 경북(37.4%), 대구(17.0%), 경기(13.5%), 서울(10.1%), 부산(3.8%), 경남(3.3%) 순으로 나타난다. 안동시 체류인구 중 경북 출발 인구는 예천군(8.9%), 영주시(6.3%), 구미시(3.8%), 의성군(2.9%), 청송군(2.7%)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접 지역에서의 생활·업무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대구·경기·서울·부산 등 원거리 대도시에서의 방문 비중도 높아 지역 중심지로서의 광역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안동시 체류인구는 관광목적보다는 필수적이거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유입지는 대구·경북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인접 지역 간 방문이 많았다. 경북 북부 중심도시이자 교통요충지로 알려진 안동시의 위상과 맞물려 체류인구 소비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바 정성적 특성 분석은 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 3. 정성적 특성: 생활인구 소비 기반 거점 활성화

### 1) 제도적 요인

#### (1)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도시 위상 제고

경상북도는 해당 도청소재지가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대구광역시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자 2008년 안동·예천으로 도청 이전을 결정하고, 2016년 이를 완료하였다. 신 도청 이전지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의 경계면을 이루는 지역으로, 안동시청으로부터 21.5㎞, 예천군청에서 10.2㎞ 떨어져 있고 낙동강, 하회마을과 인접하며, 도청 이전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주변으로는 국도28호선, 국도34호선 및 3개의 지방도(916호선, 924호선, 927호선)이 위치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와도 연계해 광역적 접근이 용이하다.

경북도(2016)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행정기능으로서 도청과 도의회 및 관련 유관기관의 이전에 따른 신도시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자족(전략)기능으로서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도입,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공연문화시설 등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의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는 지식산업 특화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교육·문화기능으로서 지식산업과 연계한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자립형 사립고, 명문고 유치 및 에듀타운 조성, 주변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시마케팅, 관광, 휴양 기능과 연계한다. 이처럼 도청이전 신도시는 도청소재지로서의 기본기능 외에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전략기능과 자족기능을 포함하여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그림 5-39** 경북도청 이전지 위치도




출처: 연합뉴스. 경북도청 이전지 위치도. 16.2.10.

도청이전 신도시는 도입 기능에 따른 인구추정을 토대로 목표연도 2027년까지 계획인구 10만 명, 가구당 2.5인을 적용한 계획가구 4만 호 계획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도청 및 유관기관 근무인력 이동에 따른 유발인구가 4만 7천여 명, 지식산업, 대학, 병원, 레저시설 유치 등에 따라 유발 가능한 인구 약 1만 명, 타도시에서의 이동한 인구 3만 5천여 명 등을 포함한 수치다. 2025년 6월 말 기준 도청 신도시 인구는 22,867명(9,227세대)으로 당초 경북도가 목표로 설정한 1단계 정주인구 2만 5천 명에 근접하나, 2단계 조성 지연으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외부 유입보다는 안동·예천 내 인구 재배치가 많으며, 전입신고 인구와 실거주 인구 간의 차이가 크다는 양상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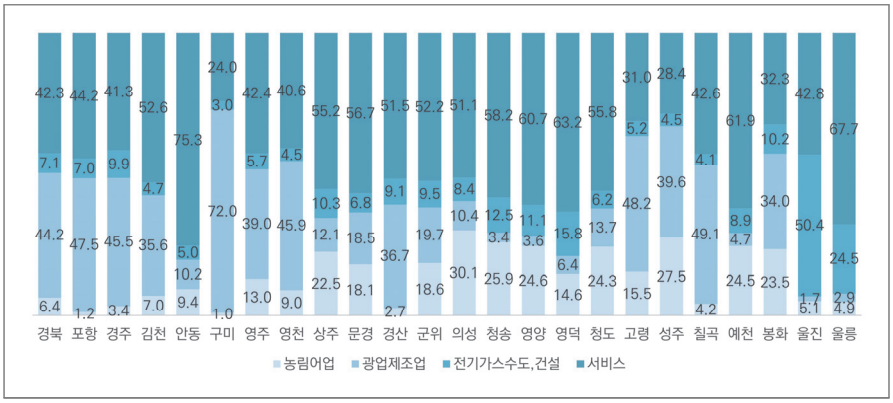
특히,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현재까지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등 109개 이전추진기관 중 2025년 9월 기준 92개(84%)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소수만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과 계획상 추정되었던 공공부문 근무인력 이동에 따른 유발인구 수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는 못하는 인구수가 현재 신도시에 정주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청신도시로 출퇴근하는 체류인구의 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석회(2021)는 실증 연구를 통해 도청 이전 이후 안동 방향으로 대구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밝혔는데,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재방문율(49.2%), 평일과 휴일 연속 체류 (34.7%) 등을 통해 다시금 입증되는바, 정기적 체류 패턴을 보이는 체류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특성은 행정중심지로 위상이 제고된 안동시 생활인구의 주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청이 이전되기 전에도 안동은 경북 북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역사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예부터 물자의 집산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의 이력은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3차산업의 발달을 이끌었다.

2021년 기준 산업별 생산액 기준 경북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경북 전체는 광업제조업 44.2%, 서비스업 42.3%, 전기가스 · 건설업 7.1%, 농림어업 6.4% 등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업종별 비율은 시군별로 차이를 보여 구미는 전체 중 광업제조업 비율이 71.9%로 높은 반면 안동은 서비스업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 약 49만 명의 포항이나 24만 명의 경주보다 높은 수치로 경북 도내 서비스업 비중으로는 최고치다.

신 도청 이전으로 인구 10만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상업, 문화, 교육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중심지로서의 안동시의 기능적 위상이 더욱 제고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안동시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인근 타 지자체인 영주, 의성, 봉화, 영양 등 대비 우위성이 큰 편으로, 중심지 위계에 따른 고차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과 생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안동시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CGV 안동, 메가박스 경북도청 등의 대형상업시설 및 영화관이 있고, 국립경국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등 3개의 대학기관과 종합병원인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등이 위치하여 고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5-40** 경상북도 내 시군별 산업구조(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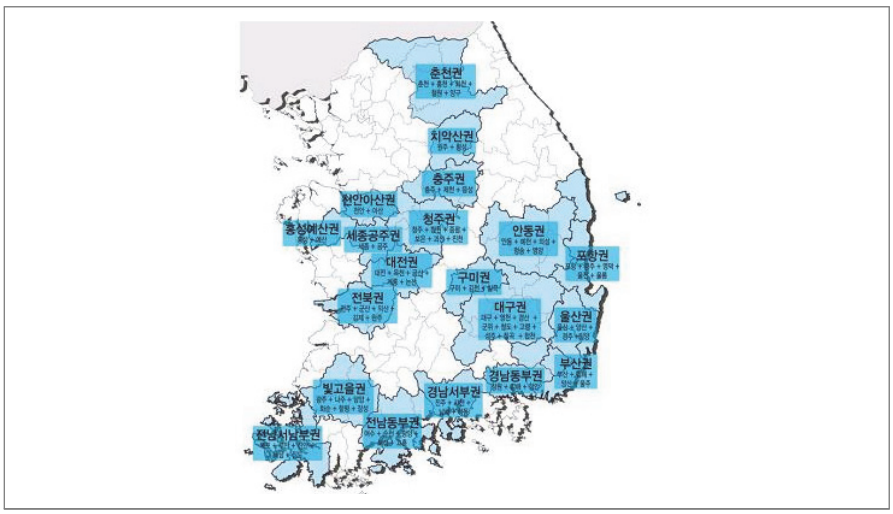



출처: 경상북도(2023). 2021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 내총생산 추계 결과 보고서

그리고 안동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중추도시생활권 제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 고안된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시·군 간에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당시 안동시는 예천·의성·청송·영양과 함께 안동권을 구성한 바 있다(윤영모 외, 2014).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도청 이전과 그로 인한 도시 환경 및 산업 구조 변화는 안동시가 그 이전부터 주변 지역과 형성하고 있던 경제중심지로서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서 안동시는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체류인구나 원거리 외지인의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관광보다는 생활이나 업무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 체류가 발생하는 생활인구 소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41** 2014년 중추도시생활권 지정현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4.3.12.)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 (2) 관련 조례 분석

경북 안동시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인구 및 문화관광, 지역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안동시 조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례는 정책 실행 및 예산 집행의 근거이자 지역의 이해를 담고 있는 제도적 지표로, 조례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안동시는 생활인구 활성화와 이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크게 21개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표 5-48** 경북 안동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구분 | 조례명 | 제정일시 |
|---|---|---|
| 인구 |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23.04.28. |
| |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19.07.05. |
|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23.09.22. |
| 문화관광 |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 15.12.31. |
| |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25.07.04. |
| | 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01.03. |

| 구분 | 조례명 | 제정일시 |
|---|---|---|
| |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20.09.18. |
| |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23.09.22. |
| |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20.11.06. |
| |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22.12.30. |
| | 안동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04.17. |
| |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23.12.29. |
| | 안동 바로알기 등 지원 조례 | 12.11.22. |
| 지역 활성화 | 안동시 기업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23.09.22. |
| |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15.01.09. |
| |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06.12.29. |
| | 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19.01.04. |
| | 안동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2.11.04. |
| | 안동시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 | 24.12.27. |
| |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7.11.17. |
| |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3.11.10. |
| |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15.04.24. |

출처: 연구자 작성

이를 지방소멸 대응 전반, 체류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도시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시책 규정 등을 다루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외하고 부문별로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다.

**표 5-49**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경북 안동시 관련 조례 재분류

| 구분 | 조례명 |
|---|---|
| 지방소멸 대응 전반 (2) |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br>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 체류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4)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br>안동시 관광진흥 조례<br>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br>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 구분 | 조례명 |
|---|---|
|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6) | 안동 바로알기 등 지원 조례<br>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br>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br>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br>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br>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9) |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br>안동시 기업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br>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br>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br>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br>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br>안동시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br>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br>안동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출처: 연구자 작성

먼저, 체류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안동시는 2023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통학하는 청년 체류 인구와 실제 거주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 인구의 전입을 촉진하는 조례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당 1회 현금 100만 원 또는 지역화폐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업 첫해인 2024년 관내 대학생 5,021명에게 5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당해 안동시의 인구는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정책 시행 직후인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안동시는 총 843명의 인구 순 유입이 발생하였고, 주요 대학이 위치한 용상동, 중구동, 서후면의 전입인구는 각각 789명, 137명, 84명으로 집계되었다(경북도민일보. 25.06.03. 보도).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국관광공사(2022)에 따르면 최근 고령 세대는 과거보다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소비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세대로 변화하는 가운데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위한 교통수단이나 경사, 계단 등 관광환경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조례는 관광취약계층,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 확대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체류인구 유입 및 소비 확대를 도모한다.

**표 5-50** 경북 안동시 체류 인구 유입 및 편의 증진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안동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음<br>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br>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br>3. 시장이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br>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 · 군 · 구 전출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br>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함<br>④ 시장은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함 |
|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따라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br>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br>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함<br>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br>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함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다음으로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안동시는 「안동 바로알기 등 지원 조례」와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전자는 2012년 제정·시행되어온 조례로 안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 · 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에게 안동을 바로 알려 이들이 시정의 동반자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안동시 주요 문화자산이나 사업장, 시설 등의 견학과 안동 역사,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이다. 후자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동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의 구현과 사람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인문학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한다.

**표 5-51** 경북 안동시 도시 정체성 강화 및 환경 조성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안동 바로알기 등 지원 조례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 · 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 중 희망자에게 적용함<br>제4조(지원내용) ① 안동시장은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br>1. 안동시 주요 문화자산·사업장·시설 등 견학<br>2. 삭제<br>3. 삭제<br>4. 안동의 역사, 정신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
|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2조(인문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br>1. 시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 · 운영에 관한 사항<br>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br>3.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br>4.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br>5. 인문학도시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br>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의 측면에서 안동시는 「안동시 기업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이 관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마이스·치유농업·영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 기반 확보 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며, 이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주인구의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목적의 체류 형태를 늘려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표 5-52** 경북 안동시 지역경제 산업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 규정

| 조례명 | 내용 |
|---|---|
| 안동시 기업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 제15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및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 · 지원하는 단체,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br>제16조(산학연 교류협력) ① 시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대한 |

| 조례명 | 내용 |
|---|---|
| 촉진에 관한 조례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상시로 운영하여야 함 |
|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사업)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br>1. 안동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br>2. 안동시 바이오관련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br>3. 안동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 보육 및 육성 · 지원사업<br>4. 바이오산업 관련 국 · 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 · 협력사업<br>5.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업 등의 위임 · 위탁사업과 용역사업<br>6. 그 밖에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출처: 각 조례에서 해당 규정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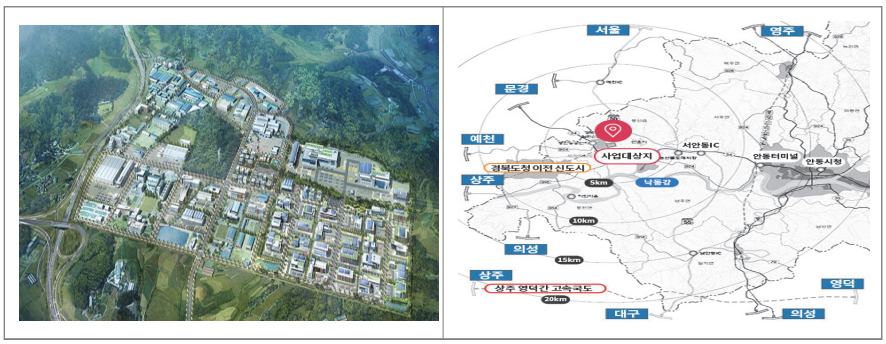
조례 분석 결과, 평일 다세대 생활기반 소비 중심지로서 안동시는 지역을 통학하는 청년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포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가운데,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관광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통해 소비력 있는 방문객 확대를 모색한다. 또한 4차 산업 및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일상을 영위하는 정주인구 증대와 다양한 체류인구 유형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2) 정책사업 요인

### (1)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

경북 안동시는 바이오·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경북바이오 1차 일반산업단지는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위치하며 SK바이오사이언스(민간기업)를 비롯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산업부, 임상지원 중심),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질병청, 후보물질 개발 중심),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경북도, 비임상 지원 중심) 등이 입지한다. 그리고 2021년 사업 준공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급 분양 중이며, 최근 국가 주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약 132만㎡(약 40만 평) 규모로 2030년까지 총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그림 5-42**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조감도 및 입지여건




출처: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홈페이지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특성의 산업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 제조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인력 및 직무를 요구하는 첨단산업 분야다. 우수인력 중심의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R&D 및 기술혁신 등을 위한 인재 교류가 활발하여 지역 입장에서 생활인구 확보에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1년 안동시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에 1,195억 원을 투자해 백신공장인 L하우스를 짓고 305명을 채용했는데, 2018년과 2020년 등 세 차례 총 3,700억 원의 투자를 이어오면서 고용 규모가 700명대로 급증하였고, 이들이 도청신도시에 대거 입주하면서 한때 오피스텔, 원룸 등을 중심으로 공급난이 발생할 정도였다(한경, 2021.07.27. 보도).

특히,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안동시는 바이오산업이 학술적 지식과 현장 지식의 간극이 큰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수요형 인력 확보를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다. 특성화고와 전문대생들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1인당 총 1,000만 원(5개월)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당시 국립안동대학교(현 국립경국대)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여 백신, 헴프 바이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산업 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인력 부족률은 3.4%로 1,23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를 기록한 소프트웨어에 이어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2대 주력 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력 부족 현상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져 SK바

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이오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매일경제, 23.08.16. 보도). 고소득층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추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안동시의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은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면서 정주인구 증대는 물론 이곳을 통근하는 정기적 체류인구, 출장·회의 등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소득 직종 중심의 생활인구 증대는 소비 증진, 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크게 유의미하다.

### (2) 지역 특화성에 기반한 체류인구의 장기체류 도모

경북 안동시는 지역관광 소비에 이바지하는 체류인구의 장기 체류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핵심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인 '안동 고택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안동시 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고택을 확보하여 교육·창업·예술 공간 등을 희망하는 수도권 · 대도시 청년 문화예술인 및 퇴직자 120여 명 모객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안동 고택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대상자는 안동 이외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고택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2박 3일 이상 상주를 조건으로 하였다.

**그림 5-43** 경북 안동시 지역자원 특화한 체류형 관광상품



출처: 안동시 보도자료. 2025.09.21. 안동시, 농촌관광 고도화 이끄는 체류형 여행상품 출시

실제 2022년 경상북도 한옥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시 한옥은 총 7,422채로 경상북도 전체의 12.8%를 차지할 만큼 특화성이 높은 자원이다. 이 중 고택은 한국적 건축양식인 목조건축물로서 지어진 지 150년 이상 지난 한옥을 일컫는데, 안동시 전역에 분포한 고택은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임청각을 비롯하여 치암고택, 우경고택, 도암종택, 수곡고택 등 다수가 있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만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숙박요소 등이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및 관광소비를 유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 안동시는 지속적으로 특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중이다(안동시 보도자료, 2025.09.2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묵계마을의 만휴정을 중심으로 한 고택 숙박여행, '만휴정, 하룻밤 묵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올해 초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인 만큼 자원봉사 체험과 결합해 고택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안동포로 유명한 금소마을의 경우, 대마라는 특화자원을 활용해 '햄프힐링 먹탐 1박 2일' 상품을 운영하며, '기미주안 X 봉

정사'는 안동의 전통주 브랜드 기미주안과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 트레킹, 자연 속 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체류형 문화관광상품이다.

한편, 경북 안동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교문화권으로서 다양한 관광 및 학술 진흥 사업을 통해 외지인의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소비를 유도한다. 1997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비롯해 경북 북부 9개 자치단체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세계유교문화축전, 안동 인근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 의의를 찾고자 20년째 지속 중인 안동학 연구 등은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축제, 강연, 학술회의 등의 다양한 체류 목적과 결합하여 외지인의 방문 및 재방문, 장기 체류를 도모한다.

### 3) 추진주체 요인

#### (1) 안동시

안동시는 생활기반 소비 중심지로 평일 다세대가 생활하는 활동지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특정 세대가 아니라 청년에서 중년, 고령층까지 소비 주체가 균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안동시가 가진 행정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안동시가 상권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문화관광상품 기획·공급, 기업투자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 유교문화 및 안동학 육성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핵심 주체로 작용한 결과라 풀이할 수 있다.

먼저, 안동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시작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구시장, 북문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시장이 가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시장은 풍물시장, 중앙문화의거리는 천생연분데이트길, 음식의 거리는 소소한상점거리, 남서상점가는 청년창업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북문시장은 막걸리 축제, 중앙신시장은 소소문(소주·소고기·문어) 축제, 서부시장은 안동간고등어 먹거리 축제, 풍산시장은 전통주와 김장 축제 등을 개최하였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문경-안동 철도 건설과 서대구-의성-안동 광역철도 연장 추진 등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급행 노선을 신설하고 우회 노선을 직선화하는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림 5-44** 추진주체로서 안동시의 주요 역할




또한 문화관광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주체로서 안동시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매년 주최함은 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체류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자원의 패키지화를 추진하며, 중앙선 복선전철화 개통에 맞춰 철도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등 체류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행사장을 기존 낙동강변이 아닌 원도심 일대로 변경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당해 연도 방문객은 148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바이오·백신, 햄프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안동시는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와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매개하고 지원하여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는 2024년 국가 바이오산업클러스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고, 경북도 내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전국 5곳 중 하나다.

아울러 안동시는 유교문화 계승과 안동학 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정체성 및 문화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로서의 안동의 위상을 제고한다. 1993년 서울학 연구 이후 전국 두 번째로 시작된 안동학 연구는 국내 지역학의 선두주자로, 유교와 불교, 민속 등 다양한 사상이 뒤섞여 전해지는 안동문화의 특징을 연구하며 전통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은 물론 축제, 학술대회 등과 연계한 연구성과의 활용으로 안동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한다. 특히 올해는 안동학연구 20주년으로 안동시는 이를 기

념하여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인문학술주간을 선포하고 안동을 주제로 한 대규모 인문 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추진 주체로서 안동시의 정책적 접근은 직·간접적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시는 인구 및 재정력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북부권 시군의 소비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안동시 역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인구감소 가속화를 방지하는 인구댐으로서 일정 부분 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경북도

경북도는 도청 이전 및 도청 신도시 조성을 통해 안동시의 생활기반 소비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강화하였다. 도내 행정 중심지로서 경북도청의 이전은 안동시에 젊은 층의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왔고, 도청 이전에 따른 정주 및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된 도청신도시는 주민 편의 및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인구의 소비 환경 및 여건을 크게 향상했다. 이는 인근에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의 기업 및 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로서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시와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경북 K-스토리 페스티벌이 그 대표적인 예로, 경북도와 안동시는 K-콘텐츠의 원천을 경북에서 찾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본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는 경북 유일의 스토리 콘텐츠 축제로 지역 창작자와 방송 및 제작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하며, 안동시 도심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1965년 문을 연 지역 대표 서점인 교학사 등과 행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연계형 축제를 표방한다.

**그림 5-45** 경북도와 안동시가 공동개최하는 경북 K-스토리페스티벌







출처: 2025년 경북 K-스토리 페스티벌 홈페이지

현재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전체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2단계 건설사업(5.8㎢, 176만 평)을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상업지구, 공동주택, 학교, 의료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다. 또한 아직 이전하지 못한 경북도기록원, 경북도립예술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도사회복지회관 등의 청사 신축 공사도 함께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해당 지역으로의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동시의 중심성과 위상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 제6절 • 시사점

## 1. 제도적 시사점

사례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라는 개념이 지자체 조례나 지역개발계획에 점차 반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단순한 인구유입 또는 체류인구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이들의 체류·소비 활동이 지역 내부의 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법적·행정적 구조는 아직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첫째, 현행 조례들은 생활인구의 정의나 지원대상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류·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실질적 제도 설계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의 조례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소비, 창업, 거주, 참여 등)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거나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부재하다. 다행히 25년 8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참고조례안(행안부 보도자료, 2025.08.25)'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히 생활인구 확장에만 머물렀던 기존 조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와 계획에서 '생활인구의 유입'뿐 아니라 '소비의 지역 내 환류'와 '장기 체류의 경제적 효과'를 제도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체류형 창업지원, 생활소비 인센티브, 장기체류 거점 인증제도 등 구체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인구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를 촉진할 부문 간 협업 제도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인구 관련 정책은 농촌활성화, 귀농·귀촌, 지역관광 등 개별 부서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생활인구 관련 조례 또한 농촌유학, 귀농·귀촌, 청년창업,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개별 부문별 조례로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거·일자리·소비·문화가 연계되지 못하고, 생활인구의 활동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되기도 하며,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장기체류형 인구의 생활소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는 생활인구정책을 '인구정책-경제정책-산업정책'에 걸쳐 다루는 통합조직 또는 조정위원회 형태의

제도적 틀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구조는 군집 3 지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생활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지역 내 환류가 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정책이 주거·일자리·소비·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생활인구의 체류와 소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성과 기반 제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조례와 계획에서는 생활인구 관련 사업의 효과를 인구수나 유입 건수 등 양적 지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인구의 실질적 가치가 지역 내 소비, 고용, 세수, 공동체 참여 등 질적 성과에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예를 들어 “생활인구 소비지표”나 “지역 내 소비환류율”과 같은 관리 지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지방재정과 인센티브 구조를 결합한 제도적 실험이 요구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인구가 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세제 감면, 포인트 환급, 지역화폐 보너스 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인체계는 단기방문 중심의 ‘관광형 인구’가 아닌, 지역에 머물며 쓰는 ‘생활형 인구’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의 핵심 시사점은, 생활인구 확대의 ‘양적 목표’에서 생활소비 순환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는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를 단순히 외부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인구의 체류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생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 2. 정책사업적 시사점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사업은 대부분 관광 활성화 또는 단기 방문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축제, 계절행사, 특정 시기 체험프로그램 등과 같이 단발적·계절적 성격을 띠며, 생활인구의 일시적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지역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군집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주 및 지속체류형 지역은’의 경우 관광보다는 생활 기반 소비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정책사업은 여전히 '관광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단기 유입을 넘어서 체류와 실거주, 그리고 생활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정책사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첫째, 체류형·생활형 사업모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되 관광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콘텐츠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 양양군이 서핑과 워케이션을 결합하여 청년층의 장기체류를 유도한 사례나, 전북 고창군이 가족단위 농촌유학과 귀농창업, 웰니스 체험사업을 통해 생활기반형 소비를 창출한 사례는 대표적이다.이와 같은 모델은 방문형 사업이 아닌, '머무는'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일상적 소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내생화를 촉진한다.

둘째, 세대별·유형별 타깃형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청년층에게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근무형 워케이션, 창업연계형 스마트팜, 로컬벤처 인큐베이팅 등의 사업을,가족단위에게는 농촌유학, 주말농장형 체류프로그램, 가족형 체류주거 지원사업을, 중장년 및 신중년층에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웰니스·휴양형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력 있는 중장년층은 단순 체류가 아니라 '삶의 제2거점'을 모색하는 특성이 강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리빙·건강관리·지역사회 참여형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기반 연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의 다수 사업은 외부 용역 중심, 단년도 예산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 종료와 함께 효과가 소멸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내 주민, 협동조합, 로컬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즉, 공공이 초기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속운영형 생활인구사업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활인구 소비를 중심에 둔 지역산업 연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체류형 농업, 로컬푸드, 문화예술, 건강·치유산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생활소비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단순 체험이 아닌 '생활소비형 산업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예컨대 고창군의 상하농원처럼 지역 농업과 관광, 체험, 숙박, 소비를 통합하는 복합모델은 생활인구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연계형 정책은 인구 감소지역을 단순한 관광지에서 '살아보는 경제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 기반 사업 발굴도 중요하다. 생활인구의 이동은 단일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광역 생활권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근 시·군 간 체류형 프로그램, 공동 거점 조성, 광역형 워케이션 코스 개발 등 연계형 사업을 통해 장기체류의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책사업적 측면에서 생활인구를 단기 방문객이 아닌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관계를 맺는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기존의 관광·축제 중심 사업구조를 넘어, 청년·가족·신중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류사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산업, 주거, 일자리를 연계한 통합형 생활인구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인구감소지역은 단순한 유입 경쟁에서 벗어나 '머무는 인구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업주체적 시사점

생활인구 기반 지역활성화는 단순히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람이 머물고 쓰며 관계를 맺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지역주민 공동체 간의 역할 배분과 협력 구조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러한 주체 간 조율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민간주체의 상업화와 공공의 관리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첫째, 민간주체의 상업화 및 자정 기능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강원 양양군의 사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서핑·워케이션 인구 유입에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역 내 물가 상승, 숙박료 급등, 유흥시설 과잉 등 이른바 '바가지 소비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는 초기에 생활인구 소비를 견인한 민간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못한 결과이며, 소비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생활인구 관련 사업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격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정기구 또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상권 모니터링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의 행정적 개입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공공이 '시작하고 민간이 유지하는 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정 단계 이후 민간에 운영을 이관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이 단기 인프라 지원에 그치고, 민간이 상업적 이익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이 약화된다. 따라서 공공은 단순한 사업 개시자(starter)가 아니라, 민간의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파트너로서 장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 또한 단기 수익보다는 지역 브랜드 가치와 신뢰 구축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책임 기반 경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민간 간 협력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생활인구의 체류와 소비는 특정 부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주체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공공은 계획 수립, 기반 조성, 행정조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은 사업 기획·콘텐츠 운영·소비 촉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콘텐츠를 운영하는 '공동투자형 모델', 공공이 시설을 관리하고 민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위탁운영형 모델', 주민과 민간이 공동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기반 운영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나 외부 운영자가 중심이 되는 사업은 단기 성과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역주민이 소외될 경우 생활인구의 장기 체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생산, 체험공간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을 잇는 제3의 생활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주체 간 역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민간·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인구 정책협의회(가칭)' 또는 '지역상생거버넌스 포럼(가칭)'등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단계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사업 선정·운영·성과평가 등 주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사업주체적 측면에서의 핵심 시사점은, 생활인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와 민간의 창의성, 주민의 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삼자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공공은 질서와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은 콘텐츠와 수익성을 창출하며, 주민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때,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는 단순한 유입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6

#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전략 추진의 기본 방향
**제2절** 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3절** 제도 개선 방안

# 제6장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 제1절 • 전략 추진의 기본 방향

본 장에서는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절에서는 생활인구 소비를 지역경제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추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강화하는 접근, 주요 소비 주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생활인구 소비 패턴에 따라 구분한 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다. 관광, 여가, 정주, 다세대 생활소비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룬다.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계획·조례·법제 정비와 함께 생활인구의 지역경제 기여가 정책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1.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 연계 강화

현재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입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접근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주 기반 조성이나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사업은 인구의 체류나 전입을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으나, 유입된 인구가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거 단지 조성, 이주 인센티브 제공 등 정주 중심 정책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나 상권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유입 인구가 지역 내 소비나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참여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강화할 수 있는 인구 집단을 유입하고 정착시키는 전략적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연계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체류형 프로그램과 지역경제 생태계가 연결되어야 한다. 관광형 체류 프로그램은 숙박과 식음, 문화 소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로컬 상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창작공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생산자와 연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내부의 여러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 확산은 관광객의 체류 중 소비가 숙박, 음식, 문화 영역을 넘어 소매, 체험, 지역 상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구조적 연계는 소비자의 지출이 아니라 사업체 간 중간재 거래와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체류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식사, 교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내 업체에서 조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숙박시설은 지역 농가나 식품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지역 인쇄업체나 장비 임대업체를 활용하며, 교통 서비스는 지역 운송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사업체가 중간재·용역을 상호 제공하게 되면, 산업 간 연쇄 거래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기반 원격근무(Workation) 프로그램 역시 단순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내 ICT, 시설관리, 청소, 식음료 납품, 인테리어, 문화체험업체 등과 운영 계약이나 서비스 구매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할 때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장기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식음 서비스나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운영하면, 사업체 간 거래를 매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내부에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생활인구의 소비가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포인트 적립제는 생활인구의 재소비와 재방문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제는 체류 기간, 소비 금액, 이용 업종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문화시설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 포인트를 인근 상점이나 다음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지역을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혜택이 누적되는 생활권 공간'으

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적립제는 장기 체류인구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체류인구에게 특히 유효하다. 체류 기간이나 방문 빈도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거나, 누적 포인트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면 지역 충성도(loyalty)를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지역 축제나 공공시설 할인, 로컬 브랜드 제품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생활인구는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을 다시 찾게 되고, 소비가 숙박, 음식, 문화, 소매 등 여러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타깃 설정 기준은 '유효 타깃 인구'와 '경제적 파급효과'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 유입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유입된 인구가 지역 내에서 소비를 수행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의 산업·상권과 연계되어 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약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입 정책은 인구 증대 효과만 낳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유입 정책의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활발히 소비하고 있는 핵심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구 유형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한다.

각 지역은 이미 지역 내에서 인구와 소비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 참여도가 활발한 집단, 즉 정책적 효용이 높은 핵심 인구 집단(유효 타깃 인구)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집 1은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단기 숙박형 관광객이 지역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음식, 숙박, 문화여가 소비가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장기 체류나 정주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소비층인 단기 관광형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재방문, 체류 연장, 로컬 소비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정책 타깃은 단순한 규모에만 근거하기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유형별 분석 결과, 일부 집단은 소비 규모가 크더라도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반면, 다른 집단은 소비 규모는 작지만 산업 간 연쇄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에 더 큰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인구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거나 관리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인구 유입 전략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에서 “얼마나 지역경제에 기여했는가”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유입된 생활인구가 소비와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산업·서비스 생태계에 연결될 때, 비로소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 2.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추진

현재 대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은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모든 생활인구 유형을 포괄적으로 유입하겠다는 광범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 여건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방위적 접근은 한정된 예산과 행정 역량을 분산시키고,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간 재정, 산업,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에서 모든 인구 유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유치·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생활인구 구성과 소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전략의 핵심은 각 지역의 주요 소비 주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에 있다. 본 연구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의 구성, 소비 비중,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의 지역 귀속률 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소비 주체가 서로 달랐다. 어떤 지역은 단기 체류형 관광소비가 중심인 반면, 다른 지역은 정주·장기체류 인구의 생활소비가 핵심이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인구 유형을 동일하게 유치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소비 주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집 1은 단기 숙박형 체류인구 중심의 관광소비 지역으로, 외부 방문객이 지역경제의 주요 소비층으로 작동하므로 이들의 지출이 지역 내 상권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숙박·음식·문화 소비와 로컬 상권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군집 2는 반복 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인근 도시권 주민의 주말·휴일 여가 소비가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문화·농촌관광 프로그램 강화가 효과적이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지역경제가 내부 거주·체류 인구의 일상적 소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 거주자와 등록외국인의 생활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주거·보건·교육 인프라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정책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청년층과 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비를

구성하는 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세대 간 소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청년층의 지역 내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분석이 지자체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모델과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구조,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교통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타깃 인구를 식별하고, 이에 맞는 전략 목표와 실행 수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핵심 타깃 인구 선정 → 전략 목표 설정 → 실행 수단 구성 →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기반의 지원체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 인구군 중심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정책 평가 가점, 우수사례 확산 등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가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3.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생활인구의 유입 및 활동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권한과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데이터 자체도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에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자체가 실제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데이터를 구조화된 집계표 형태로 공개하고, 지역별 체류 유형, 숙박·비숙박 여부, 유입 경로, 체류 요일·시간대 등 정책 수립에 유용한 세부 지표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질적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해석 교육,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컨설팅 지원 체계 등을 병행하여 운영해야 한다.

즉,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체계적 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될 때 비로소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 중심을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 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1.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 1) 추진방향

유형 1 지역은 공통적으로 계절적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기·평일에는 상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상시 소비 인구의 기반이 다소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강원 고성, 삼척, 정선, 평창, 경북 영덕, 울진, 울릉, 충남 태안, 충북 단양 등이 해당 지역으로, '휴가철 단기 관광 소비 의존지역'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름 성수기나 특정 계절에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평일과 비수기에는 지역 내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생활소비가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강원 양양과 같이 서핑이나 워케이션 등으로 청년 생활인구를 크게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하게 지역경제 및 소비 진작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거나 바가지 요금 등으로 상거래 질서가 훼손되어 힘들게 유치했던 체류인구가 고성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인 방문 중심 관광을 일상적인 체류형 소비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의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생활환경을 연계하여 '관광지에서 생활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1) 계절 편중형 관광자원을 다계절형 체험자원으로 재구성하고, (2) 숙박과 소비가 결합된 체류형 생활인구 거점을 조성하며, (3) 평일·비수기에도 운영 가능한 복합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4) 공공·민간·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5)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업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체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추진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 2) 주요 추진전략

위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따라 6가지의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원의 다계절화 및 체험형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유형 1에 해당하

는 다수 지역은 여름철 해양·계곡 중심의 피서형 관광에 집중되어 있으나, 각 지역의 자연·문화·생태 자원은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대표 자원을 계절별 테마로 재구성하여 '한 계절 관광지'를 '사계절 생활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창·정선·홍천 등은 산악레저와 웰니스 중심의 봄·가을형 프로그램으로, 단양·태안·남해 등은 자연생태·캠핑·해양치유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산촌지역은 농특산물 생산, 숲속치유, 로컬푸드 쿠킹클래스 등 일상과 연계된 체험형 소비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방문객이 소비자가 아닌 '생활 체험자'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생활인구 거점 조성과 지역 순환소비 기반 구축이다. 단기 숙박 중심의 관광 패턴을 상시 체류형 소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가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거점을 물리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관광안내소, 폐교, 유휴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워케이션 센터, 공유주방, 지역문화라운지, 체험교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생활인구 거점'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점은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일·학습·문화활동·소비가 결합된 일상형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인근 숙박·식음·상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비의 환류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평일·비수기 체류수요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화이다. 유형 1 지역의 최대 약점은 수요의 계절적 집중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일과 비수기에 체류할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등이 장·단기 체류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계절별 로컬축제, 체험캠프, 시민대학, 청년연수프로그램 등을 정례화하여 지역이 교육·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음악·자연치유 등 다양한 주제의 대회나 페스티벌을 연중 분산 개최하여 방문 동기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숙박, 교통, 체험, 지역상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 소비와 체류가 끊기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이 '지나가는 손님'이 아닌 '일시적 생활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민간-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체계 확립이다. 생활인구 활성화는 단일 기관이나 단기 사업으로 달성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자체, 관광공사, 공항공사, 지역상인회, 숙박·레저업체, 청년창업자, 주

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 예산 편성, 홍보, 데이터 공유, 혼잡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제도와 인프라를 담당하고, 민간은 콘텐츠와 마케팅을, 주민은 지역관리와 환류를 맡는 분업형 체계를 제도화해 나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동해안권(고성-양양-삼척-울진-영덕)과 내륙권(평창-정선-단양-홍천) 등 권역별 협력모델을 구축해, 권역 내 이벤트·교통·숙박·홍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와 재정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생활인구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목적, 행정책임, 거버넌스 설치, 재정지원, 데이터 활용 근거 등을 명문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관광세나 지역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인프라 유지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비수기 체류자·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재정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 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자립형 생활인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지역

### 1) 추진방향

유형 2는 비숙박 당일 여가소비지역으로서 특성이 강한 곳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비 체류인구 1인당 소비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숙박 지출도 적은 편이지만 소매나 문화여가 부문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지역으로, 충남 부여군, 대구 군위군, 전북 남원시, 전남 함평군, 전남 강진군 등이 대표적이다. 업종별 소비 유형상 비숙박 당일 관광객이 우위를 보이는 소매 업종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나 전문소매 등 서비스 산업을 의미하고, 문화여가업은 영화관,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등 관련 시설 업종을 중심으로 분류한 구분이라는 점에서 관광목적이 쇼핑인 경우와 특정 문화여가시설 방문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이나 장기체류 대비 지역에 머무는 비용이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단시간 소비 성향이 강한 만큼 이들의 소비 규모 확대 및 소비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추진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지역관광 소비증대

의 측면에서 대표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진해 방문객 수와 이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고 매력적인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해 이를 하나의 관광상품이나 테마로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한편, 교통, 주차, 먹거리 등 관광 편의성을 증진하여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의 만족도를 높여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체류시간 증가 및 재방문율 향상 등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시장의 규모화를 통해 상시적인 유입량을 키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측면에서 지역화폐 가입 및 이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체류인구를 통해 지역 소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특정 유통업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 중심의 자본 집중은 단가 경쟁 심화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쇠퇴를 야기하고 수익이 역외 유출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여 실제 지역이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외지인의 적극적인 가입 및 사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비창출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 소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관리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지역 내 주요 민간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창구를 다원화하는 방안이다. 우수한 지역브랜드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신뢰는 지역과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는 관계인구의 측면에서 유의미하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역 내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는 인구유발시설의 이점을 살려 지역 농특산물 판로지원, 지역축제 연계, 소상공인 상품매장 입점 지원 등의 상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추진전략

이상의 추진방향에 따라 반복방문형 비숙박 당일 여가소비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요 관광지 간 무료 공공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체류인구의 편의성과 만족도, 지역 상권 소비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6-1** 무료교통수단 제공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소비 활성화




출처: 부여군 홈페이지(좌). 파주DMZ평화관광 홈페이지(우)

관광지 간 무료 서틀버스 운영 등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 중인데, 충남 부여군의 경우, 2018년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개최기간 동안 축제행사장과 부여 시가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와 셔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사장의 혼잡도 및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교통수단 불편 및 비용 부담 등을 줄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 원도심 및 골목상권의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선소비-후관광 연계를 도모하는 곳도 있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DMZ 지역연계관광사업으로 문산자유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도라전망대 일대 안보관광지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상인회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일정 금액 이상 장을 본 후 지역 상인의 스탬프 날인을 받아 관광티켓을 수령하면 문산자유시장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일대를 돌아보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둘째, 야간시간대를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야간까지 늘리고 구매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소비촉진을 유도한다.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단지는 방문객이 주로 찾는 4월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개장을 운영하며, 인근에 있는 롯데아울렛도 연장운영하여 방문객의 체류 소비를 확대한다. 이에 부여군은 부여시가지에 백마강달밤야시장과 골목상권 연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야간시간 지역 소비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그림 6-2** 야간시간대 지역화폐 할인 적용 프로그램 운영







출처: 시사안성. 안성시, “밤마실” 음식값 할인받고 즐기세요. 25.7.11.보도

또한 야간시간대 구매 할인 등의 방식으로 생활인구의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 안성시의 경우, 여름철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지역화폐로 야간 결제 시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야간(17:00~24:00) 시간대 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관내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여 전통시장, 도심 상권 등 총 25개소가 동참하였다. 이밖에 안성시는 야간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화폐로 야간 결제 시 10% 캐시백과 배달 앱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셋째, 지역브랜드 관리를 통한 브랜드 범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요 앵커시설 내 야외장터, 반짝시장 등을 열어 농특산물 및 지역특화상품 등의 소비판로를 확보한다. 근래 들어 가치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이 아닌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함(speciality)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환급 포인트제 등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소비효과를 강화하는 접근도 요구된다.

지역브랜드는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은 상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하다.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1년이라는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수하여 브랜드의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은 물론 온·오프라인에 걸쳐 범용되는 굿뜨래라는 브

랜드는 지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이자 체류인구인 외지인에게 신뢰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이하며 지역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강원 평창군 봉평장이 유명하다. 봉평장은 정보 부족, 고객 응대 미흡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이용 불편함을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간결하면서도 개성 있는 브랜드 로고 제작 및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무대로서 봉평장만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 특유의 매력이 살아있는 관광소비 거점으로서 특색을 부각한 바 있다.

지역 내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과의 교류 접점을 늘리고 틈새 소비시장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 앞서 살펴본 롯데아울렛부여점의 경우 연 3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부지 내 마련된 지역 향토특산물관은 부여군의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고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지점으로 작용한 바 이를 적극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일방문객 중심의 관광 인구가 중심인 만큼 지역 내 다양한 매력과 흥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짝시장이나 팝업스토어 등 판촉 기획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기회를 늘리고 체류시간 및 재방문율 증대, 소비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3** 지역브랜드 관리 및 판촉 기획 등을 통한 가치소비 강화




출처: 부여군 홈페이지(좌), 현대카드 홈페이지(우)

## 3.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 1) 추진방향

유형 3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중·장기 체류인구 등 안정적 생활인구가 소비를 주도하는 지역이다. 말 그대로 관광지 중심의 단기 방문형 지역과 달리,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생활소비를 지속하는 인구가 핵심을 이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병행되는 농촌·산촌·도농복합지역으로, 단순한 관광 활성화보다는 '생활 기반의 장기체류 구조'를 유지·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활인구를 일시적 방문객이 아닌 '지역경제의 지속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책의 중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주형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는 첫째, 체류의 지속성과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거·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형 주택 리모델링, 공유형 생활공간, 실버타운 등 장기체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비의 순환 구조를 결합하는 방안이다. 스마트농업,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디지털 일자리 등은 체류형 인구가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일자리는 곧 지역 내 소비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반드시 농어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생활인구의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 로컬푸드 직거래, 농촌체험과 숙박·식음 결합형 모델 등을 통해 생산-체험-소비가 하나의 생활경제권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공공이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운영과 콘텐츠를 담당하며, 주민이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지역 소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협력적 구조가 정주형 지역의 지속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결국, 정주 및 지속체류형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는 '유입을 넘어 유지', '관광보다

생활', '단기사업보다 제도화'를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북 고창군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촌유학지원, 상하농원 워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장기체류형 모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2) 주요 추진전략

정주 및 지속체류형 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제도,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 정책, 주체 간 협력의 네 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 이벤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생활과 소비가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첫째, 장기체류를 위한 정주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주거시설 노후, 생활편의시설 부족, 교통 접근성 저하 등으로 체류 지속성이 약하다. 따라서 공공이 중심이 되어 농촌형 임대주택, 공유하우스,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귀농·귀촌·농촌유학·체류형 창업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 원격근무 기반 조성, 온라인 행정·교육·의료서비스 확대 등도 생활 불편을 완화하여 체류 인구의 장기화를 돕는 핵심 요인이다.

둘째, 생활소비의 지역 내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주형 지역의 소비활성화는 관광지처럼 외부 수요 유입보다 지역 내부에서 지속되는 소비의 내재화가 중요하다.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 플랫폼, 지역화폐와 포인트제, 로컬푸드직매장, 농촌형 복합상점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체류 인구가 지역 내에서 생산물을 소비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창군의 상하농원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체험·관광 복합형 모델로 소비의 환류 구조를 실현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을 패키지화하는 전략이다. 정주형 지역의 생활인구는 청년, 가족,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체류 요건이 다르다. 청년층에게는 스마트팜, 로컬창업, 디지털 일자리 등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족층에게는 농촌유학, 돌봄·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 가족 단

위 체류정책이, 중장년층에게는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실버타운 및 건강·여가 복합시설 등 필요한 여건이 각각 다를 수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패키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고창 웰파크시티 사례처럼 은퇴자 유치 등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지속 거주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의료·레저·편의·교통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대별 체류정책이 병렬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내 소비 역시 세대 간 연계 구조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민간-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생활인구 정책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행정·기업·주민의 협력적 생태계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공공은 인프라와 재정을 제공하고, 민간은 운영과 콘텐츠를 담당하며, 주민은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체류자와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등 모든 참여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생활인구 협의체' 또는 '정주지원센터' 등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책 조정과 성과 관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생태계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 인프라 확충(전략 1)은 지역소비 순환(전략 2)의 기반이 되며, 맞춤형 정책 패키지(전략 3)는 다양한 주체 협력(전략 4)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장기체류-생활소비-주민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정주형 지역의 생활인구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정주 및 지속체류형 지역은 인구감소의 가장 전면적인 현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동시에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기적 인구유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쓰고, 관계를 맺으며 소비하는 '생활경제권'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체류 인프라 확충, 지역 내 소비순환 강화, 세대별 맞춤정책, 공공-민간-주민 협력체계라는 네 가지 축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은 고창군을 비롯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이미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정주형 생활인구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소멸 위험지역'에서 '생활경제형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경로로 작동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하나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 4.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

### 1) 추진방향

유형 4는 생활기반 소비 중심지로서 특성이 강한 곳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비 숙박, 음식 등 관광 부문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보건의료, 교육 등 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우위를 보이는 곳으로 경북 안동시, 전남 화순군과 해남군, 영광군 등이 대표적이다. 즉, 관광지로서의 특성보다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강한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고차서비스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근 과소인구 보유지역의 생활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유형 4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생활기반 소비 준중심지로서 특성을 반영하고, 생활인구의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을 중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활준거점으로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비거점으로서 역할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단일 도시의 인구 확보 및 거점시설 유치를 목표하기보다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성을 토대로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중심지로서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생활 소비 중심지 기능의 유지 핵심은 상시적인 생활인구의 총량 확보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확보를 통해 정주인구로서의 등록인구, 유동인구로서의 체류인구 모두를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소멸의 핵심 고리가 지역 청년 유출에 있는 만큼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 내 정주 또는 체류하며 생산 및 소비주체로서 기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유출은 단순히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의 성장 동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정책지점이기도 하다.

셋째, 본 유형의 특성상 지역에 정주하지는 않지만, 직장, 학교, 출장 등 지역을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가 많고, 의료나 문화 등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역을 자주 찾는 재방문 인구가 많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시간이나 빈도를 늘리고 소비 규모를 증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을 방문하는 주목적 외 지역과 관계하는 다양한 접점을 늘려 지역 체류의 강도와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2) 주요 추진전략

이상의 추진 방향에 따라 생활기반 소비중심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형 소비거점으로서 고차서비스 기능 유지가 가능할 만한 인구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권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편히 오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유형 4에 속하는 경남 하동시의 경우, 대대적인 노선 개편 및 시외버스와 연계를 통해 총 6.7km에 해당하는 구간에 한하여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를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운행노선을 병원, 시장, 관공서, 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여 의료, 일상품 구매, 행정 등을 위해 지역을 오가는 이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기차역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에 맞게 버스 자체를 짐칸을 겸비한 자동차로 제작하여 짐이 있는 경우에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소비 거점으로서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한 바 있다.

한편, 지역 내 체류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근·통학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유의미하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보편적인데, 전남도는 21개 시군과 함께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경국대학교의 경우, 학생 복지 차원에서 캠퍼스와 안동 시내, 버스터미널 등 지역 거점을 오가는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대구 · 칠곡, 구미, 영주·예천(신도청), 포항 등을 오가는 노선을 일반 교통요금의 45~80%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지역으로 통학하는 타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6-4** 생활인구 소비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편의 제고




경남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하동읍내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출처: 엠투데이, 국토부, 자율주행차 운행에 26억 원 지원. 2025.2.21.보도

둘째, 지역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이 지역에 보다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특화형 인재 양성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사례로 살펴보았던 경북 안동시의 경우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투자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우선 반영, 입지·인프라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바이오특화단지로서 안동시가 자리매김한 주요 배경에는 안동시, 경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민간기업, 국립안동대,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 등 지역대학과의 MOU를 통해 확보한 인력양성 협력 로드맵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는 평이 크다(안동인터넷뉴스, 2024.06.28. 보도).

이는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화순백신특구로 특화된 전남 화순군이나 스마트팜 산업 중심의 전북 무주군도 같은 입장으로, 화순군의 경우 지역 내 소재하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화순고등학교 등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유입·확보하고자 하며, 무주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조성 중인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내 기업이나 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단지 노동력 수급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기에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림 6-5** 지역청년 유출방지를 위한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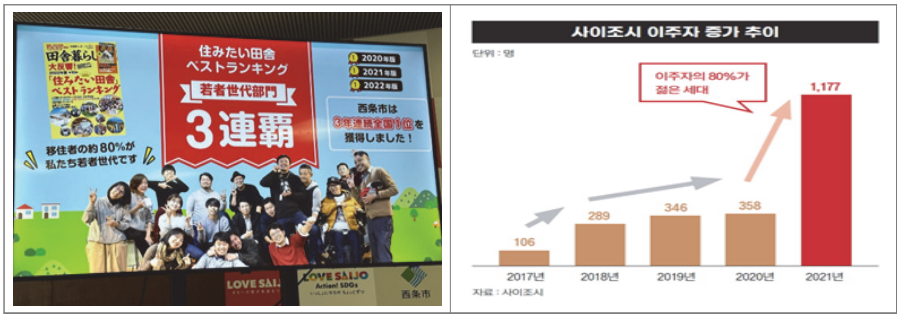



출처: 안동뉴스. 안동시·경북도·안동대,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맞손 잡아!. 2023.08.21.
경북일보. 국립경국대-SK바이오사이언스 손잡았다… 백신산업 인재 양성 '속도'. 2025.09.29.

셋째, 본 유형의 특성상 지역을 찾는 체류인구의 속성이 관광인구와 달리 비교적 고정적인 만큼 이들의 수요를 공략하는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지역 내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경우, 퇴근후 또는 방과후 친교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들은 지역에 관한 이해가 일반 방문객보다 높은 만큼 지역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생활기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에히메현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인 사이조시는 대상별 맞춤형 이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30세대의 이주를 급증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초등자녀 가족의 경우 실제 사이조시 초등자녀 가족의 생활반경과 일상을 체험가능하게끔 1박 2일 코스로 프로그램 구성하여 제공하였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지역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다.

4도 3촌,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특례 등 두 지역 살기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대부분 현물 위주의 접근으로 누구를 타깃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체류인구는 누구이고,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략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6-6** 체류인구 수요를 공략한 맞춤형 전략 마련




출처: 한경비즈니스. 일본 '노잼도시'가 '살고싶은 지방 1위'로 거듭난 비결[지방생존 리포트④]. 2023.11.20. 보도

**표 6-1** 유형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전략

| 구분 | 추진방향 | 주요 추진전략 |
|---|---|---|
| 휴가철<br>단기 관광 소비<br>의존지역 | • 단기 방문 중심 관광에서 일상적 체류형 소비로 전환, 지역경제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높이는 데 초점 | • 지역자원 다계절화 및 체험형 콘텐츠로 전환<br>• 생활인구 거점 조성과 지역 순환소비 기반 구축<br>• 평일·비수기 체류수요 창출 프로그램 설계<br>• 공공-민간-주민이 참여 거버넌스 운영체계 확립 |
| 반복방문형<br>당일 여가소비지역 | • 대표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진<br>• 지역화폐 가입 및 이용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기여 및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br>• 관광 소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관리 | • 지역 주요 관광지 간 무료 공공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체류인구의 편의성과 만족도, 지역 상권 소비 적극 연계<br>• 야간시간대 활용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확보로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구매 할인 등을 통해 야간소비촉진<br>• 지역브랜드 관리 통한 브랜드 범용성 강화, 지역의 주요 앵커시설 내 야외장터, 반짝시장 등 농특산물 및 지역특화상품 소비판로 확보 |
| 정주 및 장기체류<br>생활소비지역 | • '유입을 넘어 유지', '관광보다 생활', '단기사업보다 제도화'를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추진 | • 장기체류를 위한 정주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강화<br>• 생활소비의 지역 내 순환 구조를 강화<br>•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 패키지를 추진<br>• 공공-민간-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 구분 | 추진방향 | 주요 추진전략 |
|---|---|---|
|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 | • 인근 지역 생활서비스 공급 소비거점으로서 역할 보강<br>• 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확보로 체류인구 증가<br>• 지역 방문 주목적 외 지역과 관계하는 다양한 접점증대로 지역 체류의 강도와 밀도 강화 | • 생활형 소비거점으로서 고차서비스 기능 유지 인구규모 확보를 위해 교통편의성 제고<br>• 지역청년 유출 방지 및 체류 증대를 위한 산업 특화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br>• 고정적 성격의 체류인구 수요를 공략하는 생활기반형 프로그램 제공 |

출처: 연구진 작성

# 제3절 • 제도 개선 방안

## 1. 2차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1) 필요성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먼저 투입되고 난 이후 2023년에 다소 뒤늦게 수립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를 행정구역 내에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이 함께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이동·체류하며 실제 소비하는 활동인구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인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생활인구는 2023년 5월에야 구체적인 정의와 작성지침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8월 시범지역 7곳을 거쳐 2025년 10월에서야 우리나라 최초로 2024년 전체연도에 대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 및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자료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정되고 있다. 이에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서는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실제로 추진해야 할 인구감소지역 정책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계획 수립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로 차별화된 구체적인 생활인구 유입 전략을 설계할 수가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1차 기본계획에서는 대부분 실제 생활인구의 유입 패턴이나 체류 시간, 소비 성향, 재방문 가능성, 대표적인 소비 주체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 없이, 일반화된 유입 모델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수립되다 보니 지역간 차별성이나 세부적인 전략이 부족했다.

더 나아가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략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단순히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을 뿐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자영업과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 연계전략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 2)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효과 연계 계획 수립 유도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전략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 연계를 고려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인구 유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개별 특성과 소비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비 활성화 전략을 세워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수의 지자체가 모든 생활인구 유형(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을 포괄적으로 유입하겠다는 일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원과 실행 여건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전방위 전략은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핵심 타깃 인구를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구조, 주거 여건, 교통 인프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전략 선택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우수사례 확산, 성과 평가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실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생활인구 전략은 인구 유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구조적 연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주 기반 강화에 치우친 전략은 실제 지역 상권이나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약해, 유입 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생활인구 유입 전략은 단순 정주 유도에서 벗어나, 소비·활동·참여를 통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연결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류형 프로그램과 로컬 상권, 지역화폐, 문화 프로그램, 교육·의료 인프라를 연계하고, 외국인이나 단기 방문자도 지역 내 소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 유입 규모가 아닌, 소비 여력, 활동 다양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생활인구 세분시장 식별 및 타깃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유입이 곧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개정

### 1) 필요성

생활인구는 2023년에 구체적인 정의와 작성지침이 마련되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에서 생활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지원법상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해서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는 해당지역의 정주인구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생활인구에도 적용가능한 사항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생활인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조문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다소 모호한 편이다.

생활인구는 상주인구[2]의 유지 증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책추진의 초기단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생활인구 시책을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관광객 유치는 계절성과 단발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생활인구 관련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소비'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인구 등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통해 기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025년 8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 규정만으로는 구체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참고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참고조례안에서는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는 조항이 거의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법과의 상충 해소 및 지원법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법규화 등의 차원에서 참고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원법 제5장에서 생활인구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으나 지원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례로 정해도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원법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현행 지원법 제5장의 각 조문 중 포괄적으로 재정지원 근거가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적용을 규정해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여기서는 정주인구 내지는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을 말한다.

### 2)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참고조례안 개정(안)

2025년 8월 제시된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2024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어 산정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신설 조문을 예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시·군·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조문의 표현방식은 해당조례가 위임조례[3]의 경우에 사용된다.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상 지원법에서 정한 시책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며 지원법에서 생활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한 조문이나 시책도 없으므로 위임조례로 보기는 어렵다.

>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지원법 제15조제1항에서 생활인구 확대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고 조례(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 조항에서 지원법 제15조제2항과 연결짓는 것보다는 제1항과 연결지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 이때 자치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입법효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부각시키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원법 제15조제2조에서는 제1호의 경우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지원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2호는 지원법상의 생활인구인 제1호의 생활인구와 이 조례에서 추가한 제2호 해당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4 만약 지원법에 생활인구에 관련된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 각 조문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면 될 것이므로 현행 제15조제2항은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

셋째, 참고조례안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 기본계획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하며, 제6조에서는 이행실태 확인 및 성과평가 반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의 증가에 관한 지역주도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넷째, 제7조(사업 추진)와 제10조(제도의 운영)는 같은 취지의 유사한 내용이 분산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하여 규정하되 생활인구 증대와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화하여 규정하도록 제안한다. 제7조제1항에서 가장 먼저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들고 있는 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 내 학교의 존속과 공단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한 다른 지역 거주 학생 및 근로자의 체류인구화 등 실거주 체류인구를 증대시키는 시책이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더 직접적인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7조제3항의 '생활인구 등록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역시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시책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표 6-2**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 개정(안)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조<br>(목적) |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시(·군·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 목적은 삭제 가능) |
| 제2조<br>(정의) |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br>2."○○시(·군·구) 생활시(·군·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혜를 누리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br>가. 지원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시(·군·구)에 체류하여 활동하는 사람<br>나. ○○시(·군·구)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시(·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다음의 사람<br>1) 출향시(·군·구)민(○○시(·군·구)의 주민이었다가 ○○시(·군·구) 외의 다른 |

| 조항 | 주요 내용 |
|---|---|
| |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시(·군·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br>2) 출향시(·군·구)민은 아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br>3) ○○시(·군·구)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도시의 주민 등 연고자<br>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제3조<br>(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의 증가에 관한 지역주도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도 및 국가와 협력하여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r>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시책이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제4조<br>(다른 조례와의 관계) | ○○시(·군·구)의 생활인구 확대·지원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조<br>(기본계획) | 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br>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br>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br>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br>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br>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br>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br>6. 성과평가 및 개선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br>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6조<br>(시행계획)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원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br>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한 이행실태를 해마다 확인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7조<br>(생활인구<br>관련사업)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br>1. 지역 내 내·외국인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가. 지역 내 특화산업의 유치 및 육성<br>나. 지역 내 소재 각급학교의 학생 유치 및 면학 분위기 조성<br>다. 체류형 관광휴양 및 치유관광 등 개발 진흥<br>2. 지역 내 내·외국인 방문 증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br>가.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br>나.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br>다.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br>3. 체류 및 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가.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br>나.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br>4. ○○시(·군·구) 생활시(·군·구)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br>가. ○○시(·군·구) 생활시(·군·구)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br>나.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에 대한 ○○시(·군·구)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br>다.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br>라. 그 밖에 ○○시(·군·구) 생활시(·군·구)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5. 지역 내 소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가. 지역 내 상가 위생상태 유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br>나. 생활인구에 대한 기념품, 숙박권 등 우대 혜택 제공<br>다. ○○시(·군·구) 생활시(·군·구)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br>6. 지역 원주민과 이주 및 체류인구 간의 갈등 조정<br>7.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8조<br>(생활시·군·구민<br>등록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은 “○○□□시(·군·구)민”으로 한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 제10조<br>(제도의 운영) | 제7조와 통합 |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1조<br>(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생활시·군·구민에게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음 |
| 제13조<br>(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8.26. 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참고하여 연구진 수정안 제시

마지막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목표에 그치지 않고 진일보해 생활인구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신설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법에서 생활인구 대상 조문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주인구에게 해당하는 우대조항 등은 체류인구나 체류 외국인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생활인구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만 아니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항은 정주인구 유지 및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현실에서 유동인구를 포함한 체류인구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체류여건을 개선하는 등 생활인구가 찾아오도록 소극적인 시책을 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체류인구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찾아가서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는 사적 영역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는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합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체류인구 내지 유동인구 유치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조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관점에서 조문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체류하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인 학생들의 경우 지방의 치안상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통학불편 해소, 방과 후 즉시 집으로 귀가하는 대신 학교 인근에서 친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교통수단 운영, 기숙사 및 임대주거지를 확보하여 거주형 체류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출퇴근 상의 불편과 야근 후 귀가대책 미흡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장 인근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 강원 양양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내 업소들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

절 등 법규 외적 요소에 대하여서도 법규를 최대한 적용함과 아울러 자율정화체제를 구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특히, 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생활인구와 연결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북 고창군 사례에서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유동인구형 관광에서 벗어나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치유관광 등 상품개발 지원이 중요하며,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이 나중에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주민과의 갈등은 정주인구 확보는 물론 거주형 체류인구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므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관심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표 6-3**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 조문 추가(안)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의 확대가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등 상가에서 최상의 위생상태 유지와 적정 요금 및 친절 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가 소재지역의 교통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단속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의 집행에서는 무관용 엄벌주의를 보여주고, 제1항과 관련하여 지역 명성에 유해한 사태가 발생하는 즉시 시 (·군·구)차원의 대책 마련과 수습에 나서야 한다.<br>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장기 체류 및 휴양과 치유 등을 병행하는 특수한 유형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내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진사례를 조사 공유하고 새로운 특수유형 관광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br>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군·구)관할구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로의 투자 유치 및 입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리적 표시 농수산가공품의 가공 등을 통한 특화산업의 육성과 시 소재 학교의 학생 충원률 제고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과 졸업생의 취업알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시책 중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와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학업 외에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심야시간대 셔틀버스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3조 (생활인구 등의 체류 정착 지원기구의 설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귀농 귀촌 등 이주인구와 일시 체류인구 등 생활인구가 이주 또는 체류과정에서 원주민들과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해소조치는 법령의 적용에 앞서 쌍방의 의견 청취와 조정 화해의 권고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3) 광역자치단체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 제정

현재 참고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생활인구제도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합계를 의미하고 지원법상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자[5], 일정기간 체류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규정하여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인구의 합이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인구가 되지만 참고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확장 개념은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점도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공동사무에 관하여 각각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6], 인구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의 집계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된다는 점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인구 방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는 위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도에서 관한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생활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재정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한다.

6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 3. 생활인구의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 1) 필요성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지원법에 따른 생활인구 관련시책을 적용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세부사항과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까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생활인구의 지역경제 기여 내지는 촉진을 위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지원법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에서 인구의 추가적 감소를 저지하고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정하고 있지만 생활인구와 관련된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생활인구를 특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참고조례안에서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등록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지만, 생활인구 확대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도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명확하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생활인구 해당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등 행정시책을 펼 경우에 그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는 해당자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이상 당연히 따라야 할 절차로 보아야 하며, 다만, 세부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상향식 행정계획을 도입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한 후 제8조에서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는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계획에는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인구 확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대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가계획에 포함할 사항(제8조제2항 각 호)에도 생활인구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지원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 신설(안)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지원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규정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하여 참고조례상의 내용을 법률적 차원에서 확인함과 아울러 지원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활동은 체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있지만 정주인구라 할지라도 지역 내 상권에서 불친절이나 위생불량, 바가지요금이나 범죄 발생을 보여주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므로 체류인구 내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위생이나 상거래질서 확립과 치안 유지 등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지역 간 경쟁에서 법령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상도덕과 거리질서 등 비법령적 요인도 해당 지역 행정역량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기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활동 중에서는 지역관광으로 잠깐 구경하고 지나치는 관광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형의 관광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특히 웰니스 등 최근 각광을 받는 특수관광휴양산업의 육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생산활동은 투자 유치가 가장 핵심이지만 생활인구 관련 정책으로서는 체류인구의 체류시간 연장 등을 위한 조치, 즉 퇴근이나 방과 후에도 근로자나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하다가 심야에 귀가하도록 교통 등 편의를 도모해 줄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방공단 입주율 제고와 창업지원 및 판로 확보와 기술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행해져야 한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귀농 및 귀촌을 장려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귀농 귀촌 외에 원래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주말이나 주중 일부 시간에만 다른 지역에서 농어업이나 그 밖의 생산활동을 하는 귀농 귀촌 등에 관한 관심은 낮은 편에 속한다. 교류하는 생활인구에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더라도 해당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힘들게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유치했지만 다시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주 내지 체류 중 어려움을 겪는 외지인이 현지 행정

관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갖추되 행정관청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주 내지 체류 외지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표 6-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문 추가(안)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28조의3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의 확대가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등 상가에서 최상의 위생상태 유지 및 적정 요금과 친절 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가 소재지역의 교통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유치와 함께 장기 체류 및 휴양과 치유 등을 병행하는 특수한 유형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내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산업단지로의 투자 유치 및 입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리적 표시 농수산가공품의 가공 등을 통한 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 내 소재 학교의 학생 충원률 제고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과 졸업생의 취업알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시책 중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와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학업 외에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제28조의4 (생활인구 등의 체류정착 지원기구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귀촌 등 이주인구와 일시 체류인구 등 생활인구가 이주 또는 체류과정에서 원주민들과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해소조치는 법령의 적용에 앞서 쌍방의 의견 청취와 조정 화해의 권고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4.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활성화 노력이 보상받는 지방소비세 개편

### 1) 필요성

여태까지 생산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경제이론에서는 지역성장을 생산활동의 함수로 설명해 왔지만 점차 도시화·탈산업화·서비스 산업 확대로 소비 기반 산업이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Markusen과 Schrock(2009)은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소비 행태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시키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Aoyama(2009)는 소비 활동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소비 중심의 접근이 지역경제의 다차원적 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으며, Martin et al.(2019)은 소비자의 수요는 단순한 지출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새로운 산업 경로를 형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적극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정주인구는 지속적인 소비 확대의 주체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신 인구희소 및 저발전지역에서도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농어업 문화, 유무형의 문화역사유산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인구를 유치해 생활인구가 좋아하는 소비 기반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대책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 중심의 정책은 계절성과 단발성이 강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의 취향을 반영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을 파악해 소비 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 주도해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유인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2) 생활인구 소비 기여를 반영하는 지방소비세 개편(안)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김필헌 외, 2021; 안성서, 2024). 국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공동이용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 방식이다. 제도 초기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 취득세율 인하를 보전하기 위하여 6%가 인상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분권 강화방안에 의거 14.3%가 추가 인상되어 2025년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방세는 총 약 112.5조 원으로 이 중 지방소비세는 24.7조 원[7]으로 가장 큰 비중(21.9%)[8]을 차지하고 있으며,

7 지방소비세 다음으로 취득세 24.3조 원(21.6%), 지방소득세 22.9조 원(20.4%), 재산세 14.9조 원(13.2%) 순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지방소비세와 취득세는 시도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한다.

8 지자체 유형별로 특광역시의 지방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24.9%, 도지역은 39.9%를 차지하고 있다(지방

2010년 비중 5.4%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상 외지인이 쓴 돈이 지방세수로 흘러가는 통로는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와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외지인들이 해당 지역에 많이 방문해서 지역 내 소비를 많이 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군세이므로 사실상 시군 간 경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영, 2025). 반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떼서 지역간 재정균형을 고려해 국가가 시도에 배분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시군에 세금이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방소비세의 최초 도입분(5%p)의 배분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비지수인 '민간최종소비지출[9]'의 각 지자체별 비중에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 비수도권 광역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안분된다. 이후 지방소비세는 오롯한 의미의 지방세라기보다는 그간 국세의 지방세 이양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4년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감소분 보전(6%p),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교육 전출금 보전, 전환사업 보전 등(10.3%p+4.3%p)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다(안성서, 2024; 김홍환, 2025).

**표 6-5**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구조 중 2단계 재정분권 잔여분 산정방식

| | | | | | | |
|---|---|---|---|---|---|---|
| **1단계 재정분권 (총 10%p) '19 4%p '20 6%p** | **전환사업 보전분 (3.6조/정액)** | | **재정조정분 (0.9조/정액)** | | **잔여분** | |
| | 약 2.8조 | 약 0.8조 | 조정교부금 약 0.8조 | 교육전출금 약 0.1조 | 시·도 소비지수×가중치(1:2:3) | |
|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 교육청 | 시·도 | |
| **2단계 재정분권 (총 4.3%p) '22 2.7%p '23 1.6%p** | **전환사업 보전분 (2.25조/정액)** | | **재정조정분 (0.67조/정액)** | | **잔여분** | |
| | 약 1.9조 | 약 0.35조 | 조정교부금 약 0.57조 | 교육전출금 약 0.1조 | 시·도 소비지수 ×가중치(1:2:3) | 인구수, 역재정자주도 |
|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 교육청 | 시·도(60%) | 시·군·구 (40%) |

세 통계연감을 활용하여 작성한 김홍환, 2025 참조).

9 통계청에서 발표

여기서 각 시·도의 '소비지수'는 지역 내 총생산(GRDP)[10]을 산출하는 정부와 민간 최종소비지출액 중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생활인구가 증가해 시·군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혜택이 일부는 커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을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지수'로 볼 수는 없다. 민간소비지출액의 대부분은 가계 소비지출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나 어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가구강 소비지출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지출목적에 따라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등 12개 비목으로 분류된다. 이 가구소비지출액은 거주자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 가액으로 구성되므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 지출액이 아니라 거주지 기반으로 산출되는 소비액이기 때문이다.

GRDP를 산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액 또는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지표화하는 방식은 결국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거주지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지방소비세는 가계 소비액 등 지역의 귀착요인을 반영하는 경제지표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의 소비특성을 반영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방소비세 제도로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의미다. 유태현·한재명(2014), 임상수(2019), 주만수(2019), 정종필·이근재(2019), 임상빈(2023), 김홍환(2025) 등 관련 지방소비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이 각 지역의 실제 소비 활동을 반영해서 배분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다.

**그림 6-7** GRDP의 구성요소

<table>
<tr><td colspan="3">최종소비지출</td><td rowspan="2">정부<br>최종<br>소비<br>지출</td><td colspan="4">총자본형성</td><td rowspan="2">재화와<br>서비스의<br>순이출</td><td rowspan="2">통계적불<br>일치</td></tr>
<tr><td colspan="2">민간 최종소비지출</td><td colspan="3">총고정자본형성</td><td rowspan="2">재고<br>증감</td></tr>
<tr><td>가계최종<br>소비지출</td><td>민간비영리단체<br>최종소비지출</td><td>건설<br>투자</td><td>설비<br>투자</td><td>무형<br>투자</td></tr>
</table>

출처: 김홍환(2025), p. 9의 〈표 4〉

10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일정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이며, 지역 내에 거주하는 타지역 주민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를 제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지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더한 것으로 산정된다.

지방소비세의 현재 배분방식은 약 4조 원 규모의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배분방식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따라서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해 지역소비를 증대시킨다고 했을 때 지역의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의 배정액을 생활인구 소비활동 창출 규모에 비례해서 시군에 보다 더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 25.3% 중에서 2단계 재정분권 4.3%p의 잔여분 중에서 현재 40%가 시·군·구에 배정되고 있으므로 이 시·군·구 배정액 배분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2단계 재정분권 잔여분 중 40%는 주민등록인구와 역재정자주도를 고려해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때 주민등록인구로 배분되는 기준을 생활인구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비세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지금과 같이 시·도에 배정하되, 생활인구가 증가해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민간소비액 순증분(+$\alpha$)을 얹어주고, 추후 시·도가 시·군에 배정하는 시군조정교부금 산식을 개편하여 해당 시·군에 배분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시군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배분기준은 주민등록인구수, 재정력지수, 시도세 징수액 등으로 산정되므로 이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등록인구수에 생활인구를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 7

#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 제7장 결론

## 제1절 • 연구결과 종합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정주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인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활인구 소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생활인구를 단순히 '얼마나 머무는가'를 파악하는 행정적 지표로 다뤘던 것과 달리,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제 경제 주체로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의 소득, 고용,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중심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현황과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생활인구 소비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떤 소비 주체가 지역경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해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맞춤형 전략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구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 실행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제2장은 인구감소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며,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생산 중심 지역경제 성장 전략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짚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소비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비 활동이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임을 밝히며, 소비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생활인구의 통계적 산출과 이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동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관광 활성화나 축제 개최,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유입 전략과 주요 소비 주체에 집중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 내 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인구 연구가 행정적·기술통계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생활인구를 지역경제 구성 요소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경제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의 수준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패턴은 연령, 체류 형태, 방문 목적 등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제3장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행태를 '인구', '공간', '시간' 등 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누가 소비를 주도하는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업종별 소비를 강화하는지, 언제 수요가 집중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제1절)에서는 생활인구의 세부 속성별로 소비 수준과 업종별 지출 구조가 달랐다. 체류인구 중 고령층(65세 이상)의 1인당 소비액이 청

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았으며, 이는 보건의료 지출이 총소비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방문객보다 장기 체류 및 실거주 인구의 소비가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었고, 체류 목적별로는 장기 실거주 인구가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소비 주체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제2절)에서는 체류인구 소비를 기준으로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을 도출하여, 어떤 지역적 요인이 특정 업종의 소비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 업종 소비가 높은 경북 울릉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외식 의존도, 숙박 중심의 관광 구조가 결합되어 음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 담양군은 짧은 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이 식도락을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 음식 업종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인프라가 업종별 소비 집중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활인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제3절)에서는 계절성과 명절 등 시기적 요인에 따라 소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1월, 12월)에는 실거주 인구 중심의 보건의료·교통 소비가 증가했고, 리조트 이용 등 숙박 지출도 확대되었다. 반면, 봄·여름철(5~7월)에는 외식과 문화·여가 소비가 증가했으며, 여름휴가철(8월)에는 숙박과 운송교통 지출이 집중되었다. 추석 명절(9월)에는 귀향과 선물 구입으로 인한 소매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4장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의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소비 구조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에는 생활인구의 규모, 소비 규모,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 등 다양한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차원을 축소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으로,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며 외부 방문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가 지배적이다. 숙박·음식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 내 소비의 환류 효과가 낮아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군집 2는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대도시 접근성이 높아 재방문을 동반한 음식·문화·레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높고, 반복

적 여가 소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가 소비의 중심을 이루며, 소매·보건의료·운송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된다.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보이지만 외부 유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인근 배후 지역의 소비 수요를 흡수하며, 음식·소매·보건의료 등 다양한 업종이 균형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광역 생활권의 중간 결절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간 소비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각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주요 소비 주체를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특성과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지역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형 구분은 △휴가철 단기 관광 소비의존지역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 소비지역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휴가철 단기 관광 소비의존지역은 계절적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으로, 관광소비의 일시적 집중과 가격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은 '관광소비 구조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계절 편중을 완화하고 장기체류형 여가소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수기형 문화·레저 콘텐츠를 개발하고, 워케이션 인프라를 확대하며, 지역상권의 자정기능 및 상생 캠페인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소비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표 사례로 양양군을 제시하였다.

둘째,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 소비지역은 문화유적, 축제, 전통시장 등 재방문이 빈번한 지역이다. 핵심 전략은 '지역문화 기반의 순환형 소비촉진 체계 구축'이다. 지역화폐(예: 굿뜨래페이)와 지역공동브랜드를 결합하여 지역 내 소비의 순환률을 높이고, 축제와 야시장 등 지역행사를 연중 운영하여 소비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민간·상인조직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광소비가 지역상권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부여군을 대표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셋째,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은 농촌형 체험·교육형 소비 중심의 장기 체류형 지역이다. 추진 전략은 '정주·체험·창업이 결합된 생활경제모델 구축'으로, 농업·교육·관광을 융합한 복합형 지역경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

터, 농촌유학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가족단위·청년층 중심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주거 및 창업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창군 사례가 이 범주에 속한다.

넷째,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은 전통문화와 산업기반이 공존하는 광역중심도시 유형으로, 정주·근로·문화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전략은 '문화·산업 융합을 통한 지역기반 확장형 생활경제 조성'이다. 지역축제(K-스토리페스티벌 등)와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복합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청·대학·기업 간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한 세대통합형 생활소비공간을 조성해 청년·고령층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생활경제 생태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안동시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생활인구 소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첫째,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인 효과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방향 속에서 제5장에서 제시한 휴가철 단기 관광 소비의존지역,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 소비지역,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역은 네 가지 유형 모두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경제 전환을 공통 목표로 하며, 단기소비에서 장기체류형·순환형 소비로의 구조적 변화를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역은 조례 기반의 제도적 토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역 특성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소비활동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생활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을 넘어, 체류인구의 질적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한 생활인구 유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개별 특성과 소비특성을 연계한 지역경제 순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5년 8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구체화가 부족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참고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 참고조례안에서는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는 조항이 거의 없어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 지원법과의 상충 해소 및 지원법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법규화 등의 차원에서 참고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 참고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생활인구제도를 조례로 따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규정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하는 안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경제이론은 지역성장을 생산활동의 함수로 설명해 왔으나, 도시화·탈산업화·서비스 산업 확대로 소비 기반 산업이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입되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 기반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주도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재정적으로 환류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제2절 •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규모와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경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카드 소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활인구의 실질적 경제 기여를 분석하고, 지역 간 구조적 차이를 해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제약과 분석 방법의 한계, 그리고 전략 실행 및 효과 검증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 등 비카드 결제 소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히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활동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드 결제 정보만으로는 소비의 동기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즉, 특정 결제가 관광 목적의 소비인지, 단순 경유 중 발생한 소비인지, 혹은 지역 거주민을 위한 구매 대행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분석방법 측면에서는 결과 해석 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집분석은 사용된 변수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형 간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속한 군집의 전형적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예외적 지역 사례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였으나, 군집 간 경계의 모호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생활인구 소비 관련 지표는 시계열 변동에 민감하므로, 분석 결과에는 일정 수준의 불안정성이 내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형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책 시행에 따라 군집의 특성과 분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군집분석 결과는 정책적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전략 수립 시에는 지역별 특수성과 시점별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네 가지 유형별 맞춤형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전략의 효과 검증 측면에서는 제시된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이해관계자 간 조정 문제, 그리고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방문객 확대 중심의 단기 성과에 치중될 경우, 정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수용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지역 물가 상승이나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성과와 주민 삶의 질, 환경 수용력 간의 균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집행 과정과 사회적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인구 기반 지역경제 전략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행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비 행위에는 수치로 포착하기 어려운 동기, 태도, 경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나 설문조사, 참여관찰 연구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게 된 배경, 소비 결정을 좌우하는 심리적 요인,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얼마를 썼는가'라는 통계적 결과를 넘어, '왜 그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하는가', '어떤 요인이 재방문을 유도하는가'를 탐색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유입 전략 수립의 정성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적 정보의 축적은 데이터 기반 정책의 인간적·사회적 맥락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생활인구 정책 설계 시 정책 타깃의 행태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카드 소비 데이터만으로는 생활인구의 전반적인 활동 범위와 소비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 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카드 결제 정보 외에도 모바일 위치 데이터, 교통 이동 데이터, 숙박 예약 정보, 문화·관광시설 이용 통계, 온라인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융합 데이터는 생활인구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소비 장소 간 연계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지역 내 소비의 순환 구조를 정밀하게 모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지역별 산업 구조나 상권 분포, 공공인프라 정보와 결합하면 생활인구 소비의 공간적 패턴과 산업 연계 효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데이터를 융합

한 접근은 실증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인구 소비 행태의 맥락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정책의 집행 과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제약, 재정 부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해관계자 갈등 등 현실적인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책 실행의 과정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 파일럿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나 지역 주민 인식조사,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실질적 작동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유입 확대가 단기적 성과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흐를 경우 지역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 주민 삶의 질, 환경 수용력 간의 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생활인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전략이 양적 유입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건설부. (1993).「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건설부. (1994).「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국무회의 통과」.

경상북도. (2016).「도청이전백서 2」.

경상북도. (2023).「2021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 내총생산 추계 결과 보고서」.

경상북도. (2022).「2022년 경상북도 한옥 조사 결과보고서」.

김필·전대욱·김해솔. (2023).「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정책연구 2023-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헌·하능식·최진섭·이준기·문필주·임상수·허등용. (2021).「지방세 개혁과제 Ⅰ:소득·소비세제분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2025).「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 Tax Issue Paper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진경·이원도·김민영·양원탁·김주락·최민정. (2025).「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자체연구 2025-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여군. (2020).「2020백제문화제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

부여군. (2025).「2025년 부여군 재정공시(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안성서. (2024).「2024 지방소비세 현황과 이해」. 제도개선과제 2024-0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안소현·이순자·남기찬·김승종·정우성·유현아·강민석. (2023).「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용역과제. 국토연구원.

유태현·한재명. (2007).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재정논집」, 12(3).

윤소연·이경은·유수동·전대욱·이원도. (2023).「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연구 2023-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소연·이소영·박진경·김도형·이원도·김민영·양원탁·김주락. (2025).「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분석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김주락. (2024).「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24-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윤소연. (2023).「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윤소연. (2024).「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이소영·홍근석. (2023).「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3-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상빈. (2023).「소비지 과세원칙과 지방소비세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석회. (2021). 경북도청의 이전 효과 분석 : 신도청 인접 시·군의 인구이동과 통근통행을 중심으로.「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2): 125-143.

정종필·이근재. (2019).「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의 효과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주만수. (2019).「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예산정책연구 8(2). 국회예산정책처.

충청남도. (2017).「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 (2022).「시니어 세대 여행 수요 심층 분석 및 전망」.

행정안전부. (2024.11.).「2024 지방세 통계연감」.

Aoyama, Yuko. (2009). Introduction—Consumption-Centered Research for Diverse Urban Economies1. *Urban Geography,* 30(4): 341-43. https://doi.org/10.2747/0272-3638.30.4.341.

Bohlin, Magnus, Brandt, Daniel, and Jörgen and Elbe. (2016). Tourism as a Vehicle for Regional Development in Peripheral Areas - Myth or Reality? A Longitudinal Case Study of Swedish 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24 (10): 1788-805. https://doi.org/10.1080/09654313.2016.1194807.

Cochrane, William, and Jacques Poot. (2014). *Demand-Driven Theories and Models of Regional Growth*. In Handbook of Regional Science, edited by Manfred M. Fischer and Peter Nijkamp.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642-23430-9_15.

Kay, David L., James E. Pratt, and Mildred E. Warner. (2007). Role of Services in Regional Economy Growth. *Growth and Change*, 38(3): 419-42. https://doi.org/10.1111/j.1468-2257.2007.00377.x.

Lin, Vera Shanshan, Yang Yang, and Gang Li. (2019). Where Can Tourism-Led Growth and Economy-Driven Tourism Growth Occu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8(5): 760-73. https://doi.org/10.1177/0047287518773919.

Markusen, Ann. (2007). A Consumption Base Theory of Development: An Application to the Rural Cultural Economy.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36(01): 1-15. https://doi.org/10.1017/S1068280500009412.

Markusen, Ann, and Greg and Schrock. (2009). Consumption-Driven Urban Development. *Urban Geography*, 30(4): 344-67. https://doi.org/10.2747/0272-3638.30.4.344.

Martin, Hanna, Roman Martin, and Elena Zukauskaite. (2019). The Multiple Roles of Demand in New Regional Industrial Path Development: A Conceptual Analysis.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1(8): 1741-57. https://doi.org/10.1177/0308518X19863438.

Nunkoo, Robin, Boopen Seetanah, Zameelah Rifkha Khan Jaffur, Paul George Warren Moraghen, and Raja Vinesh Sannassee. (2020). Tourism and Economic Growth: A Meta-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9(3): 404-23. https://doi.org/10.1177/0047287519844833.

Porter, Michael. (2003).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s. *Regional Studies*, 37(6-7): 549-78. https://doi.org/10.1080/0034340032000108688.

Smith, Matthew. (2012). Demand-Led Growth Theory: A Historical Approach. *Review of Political Economy,* 24(4): 543-73. https://doi.org/10.1080/09538259.2012.729931.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03.12.).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3.10.10.). 부여군, 변화가 불러온 2023 대백제전의 성공 '완벽 매듭'.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3.10.12.). 부여 굿뜨래 브랜드, 화폐가치 3,929억원으로 평가됐다.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4.10.07.). 2024 광장·골목형 백마강달밤야시장 개장.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4.12.10.). 부여군, 수도권까지 1시간!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기 맞아.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4.12.19.). 부여군, 제70회 백제문화제 성공을 발판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5.09.24.).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 로컬을 넘어 광역으로!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5.05.12.). 부여군, 국도29호선 대규모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타 현장조사 돌입.

부여군청 보도자료. (2025.09.19.). 부여군, 제71회 백제문화제 부여의 맛과 향을 더하다.

산업통장자원부 보도자료. (2022.12.29.). 2022년「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결과 발표.

안동시 보도자료. (2025.09.21.). 안동시, 농촌관광 고도화 이끄는 체류형 여행상품 출시.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1.05.21.). 양양군,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순항'.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2.06.17.). 양양군, 체류형 관광활성화 위한 '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3.07.23.). 전국 군 단위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25일 선포식 열려.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4.07.01.).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떠나는 양양 워케이션 사업 추진.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4.10.01.). 양양 워케이션센터, 스타트업 혁신 공간으로 주목.

양양군청 보도자료. (2025.05.16.). 양양군-한국공항공사 양양 워케이션 업무 협약.

통계청. (2024a). [보도자료]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통계청. (2024b). [보도자료] 생활인구 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통계청. (2024c).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통계청. (2024d). [보도자료] 전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공표.
통계청. (2025). [보도자료] '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신문기사]**

강원일보. (2024.10.07. 보도). 양양 워케이션센터 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한몫.
경북도민일보. (2025.06.03. 보도). 안동시, 대학생 학업장려금 효과로 2년 연속 인구 증가세.
경북일보. (2025.09.29. 보도). 국립경국대-SK바이오사이언스 손잡았다… 백신산업 인재 양성 '속도'.
경향신문. (2023.07.24. 보도). 양양군,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농수축산신문. (2023.10.12.보도). 부여군 굿뜨래 브랜드 화폐가치 '3929억'.
뉴닉. (2024.08.19. 보도). 고령 도시를 MZ의 상징으로 변신시키다. '서피비치' 브랜드 스토리.
뉴스1. (2024.05.07. 보도). 부여군,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 선정.
뉴스핌. (2025.06.17. 보도). [로컬이 기회다] 서핑으로 하나된 양양, 파도 위에 글로벌을 그리다.
뉴시스. (2025.09.24. 보도). 부여군, 대전에 굿뜨래 직거래센터 설치.
뉴시스. (2024.06.28. 보도). 한국공항공사, 스타트업 종사자 60명과 양양서 워케이션.
뉴시스. (2020.11.26. 보도). 양양군, 서핑비치로드·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노컷뉴스. (2023.12.19. 보도). '서핑타고, 화상영어' 전교생 9명→53명…시골 학교가 만든 '기적'.
동아일보. (2019.01.07.보도). 부여 방문객 6년새 50% 껑충… 지역상권 '롯데 효과'.
동양일보. (2025.07.28. 보도). 굿뜨래웰빙마을 야외 물놀이장 재개장.
대전일보. (2021.4.21. 보도). 롯데아울렛 부여점, '별빛 정원'으로 부여의 밤을 빛내다.
대전일보. (2025.02.10.보도). 부여군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돋보여.

대전MBC뉴스. (2024.05.10. 보도). “기업 7~800개 유치 효과” 진화하는 ‘굿뜨래페이’.
데일리경제. (2023.04.19. 보도). 제2 백종원 예산시장 만든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등 지역개발사업 공모 실시”.
로컬투데이. (2025.08.05. 보도). 부여 ‘굿뜨래페이’ 소비쿠폰 지급률 충남 1위 ‘견인’.
매일경제. (2023.08.16. 보도). “3년 새 2배”… 바이오 인재 몸값 껑충.
세계일보. (2024.12.05. 보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재사용 가능한 순환구조…가치 소비 이끄는 화폐로”.
시사안성. (2025.07.11. 보도). 안성시, “밤마실” 음식값 할인받고 즐기세요.
안동인터넷뉴스. (2024.06.28. 보도). "이젠 국가산단 완성이죠"…바이오특화단지 일궈낸 안동시, 투자유치과 '팀웍'도 빛났다.
연합뉴스. (2021.10.25. 보도). 부여군 굿뜨래페이에 출향인사 참여 기능 탑재한다.
연합뉴스 TV. (2025.09.01. 보도). 주목받는 부여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전국서 벤치마킹.
연합뉴스. (2018.08.19. 보도). 양양군 서핑비치로드 조성 국토부 지원사업에 선정.
이코노미조선. (2020.7.27. 보도). “작아도 뭉치면 산다”…연계중추도시로 인프라 확보.
이투데이. (2022.08.12. 보도). 유통업계가 ‘양양’으로 몰려가는 까닭은?
엠투데이. (2025.02.21. 보도). 국토부, 자율주행차 운행에 26억원 지원.
조선일보. (2018.05.04. 보도). 와이키키 같은 여기… ‘YY키키’ 양양입니다.
중앙일보. (2022.07.26. 보도). 답답한 사무실 벗어나 일과 휴식이 있는 진정한 워케이션을 즐겨 보세요.
중부매일. (2023.09.26.보도). 부여군 대백제전 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 ‘교육·관광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충남일보. (2024.09.27. 보도). 부여군 제70회 백제문화제, 먹거리 안심하고 즐기세요.
충청뉴스. (2024.04.25. 보도). 부여군 백마강달밤야시장, 5월 4일 정식 개장.
충청투데이. (2024.10.15. 보도). 원도심 활성화 불 밝힌 백마강달밤야시장.
파이낸셜뉴스. (2025.03.10. 보도). ‘생활인구’에서 지역문제 답 찾으려면.
한경. (2021.07.27. 보도). 경북도청 신도시 살린 ‘SK바사 효과’.
한경비즈니스. (2023.11.20. 보도). 일본 ‘노잼도시’가 ‘살고싶은 지방 1위’로 거듭난 비결[지방생존 리포트④].

**[홈페이지]**

경북 K-스토리 페스티벌 https://k-story.kr/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http://gbbioid.com/industrial_complex/business
굿뜨래페이 https://goodtraepay.buyeo.go.kr/home/index.html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main.do
롯데쇼핑 https://www.lotteshopping.com/main
롯데리조트 부여 https://www.lotteresort.com/buyeo/ko/about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kr/
백마강달밤야시장 https://buyeonight.com/
백제문화단지 https://www.bhm.or.kr/html/kr/
백제세계유산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escobaekje/221047806366
상하농원 https://www.sanghafarm.co.kr/
안동시청 https://www.andong.go.kr/main.do
애플스토어 https://apps.apple.com/kr/
웨이브웍스 양양 https://waveworksyy.com/yyIndex
파주DMZ평화관광 https://dmz.paju.go.kr:8443/
현대카드 https://www.hyundaicard.com/index.jsp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 Abstract

## Economic 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Depopulating Areas Based on Daily Living Population Consumption

The nationwide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has evolved into a structural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foundations of regional consumption and the overall industrial ecosystem. In particular, in regions experiencing both population outflows and rapid aging, traditional growth strategies centered on resident populations have reached their limits. As a result,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daily living populations*—individuals who contribute to local economies through consumption and activities during temporary stay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as a new source of regional economic vital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umption behaviors of daily living populations (*saenghwal ingu*) as a practical alternative for local governments striving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vitality amid demographic declin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treated the daily living population merely as an administrative indicator for measuring the duration of stay,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them as active economic agents driving regional vitality. It regards their consumption as a key determinant influencing local income, employ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thereby repositioning the daily living population as a central axis in regional economic strategy formul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data on daily living populations and card-based consumption across 89 depopulating regions nationwide in 2024. By classifying regions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economic contributions of daily living populations, the study empirically

addressed the question: "*Which types of consumers serve as the primary drivers of regional economies?*" Buil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type, the study proposed economic revitalization strategi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aiming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alistically imple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help local governments mor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promote these tailored strategi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a *practice-oriente*d research effort, bridging empirical analysis with actionable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2 discusses the paradigm shift required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emerge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daily living population concept.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roduction-oriented growth strategies constrained by demographic decline and aging, and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hifting the growth paradigm toward consumption-led development. It emphasizes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consumption activities as primary pathways generating local income and employment, thereby underscoring the analytical value of a consumption-centered approach.

The chapter further traces recent policy transitions addressing depopulation and explores the background of how the concept of daily living population has emerged and diffused in Korea. A review of existing studies reveals that most prior research has concentrated on statistical estimation and spatial-temporal mobility patterns, yielding meaningful findings regarding spatial distribution and temporal variation but offering limited insights int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behavior and local economies.

An analysis of ongoing local policy initiatives indicates that most depopulating regions have focused on tourism promotion, festivals, or workation programs, while differentiated strategies reflecting local 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remain insufficient. Consequently, the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combine locally tailored attraction strategies with consumption activation policies that target key consumer groups, establishing a sustainable system in which daily living population

consumption circulates within regional economies.

Distinctively, this research advances beyond the administrative or descriptive statistical approaches of earlier studies by reinterpreting daily living populations as structural components of local economies. Grounded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umption functions as a driver of regional growth, it provides an integrated economic analysis of consumption structures in depopulating areas and extends its findings to the level of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The composi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daily living populations vary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age, stay type, purpose of visit) as well as regional and seasonal conditions. Accordingly, Chapter 3 conduct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onsumption behaviors across 89 depopulating reg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population, space, and time. This approach enabl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o drives consumption, which regional factors amplify sectoral spending, and when demand peaks—thereby providing empirical foundations for data-driven policy formulation.

The analysis of demographic factors (Section 1) reveals differences in consumption levels and spending structures across subgroups of daily living populations. Among stayers,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exhibited higher per capita spending than younger groups, largely due to elevated medical expenditures. Long-term residents and stayers generated more stable local demand than short-term visitors, with permanent residents identified as consistent contributors to local economies.

In examining regional factors (Section 2), the study identifies representative consumption-intensive areas by industry sector to determine which regional characteristics amplify specific types of spending. For instance, Ulleung-gun displayed high food-related spending due to elevated prices, reliance on dining out, and a tourism structure centered on lodging. In contrast, Damyang-gun exhibited concentrated food spending driven by short-term gastronomic tourism.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local industrial structures and infrastructure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sectoral consumption intensity. Moreover, by examining regions with significant spending by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the study underscores

that foreign residents also constitute an important segment of the daily living population contributing to local economies.

Section 3 analyzes temporal variations in consumption, revealing clear seasonality and holiday effects. In winter months (January, December), spending on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mainly by resident populations—increased, alongside higher lodging expenditures. In contrast, spring and summer (May–July) saw rises in food service, cultural, and leisure spending, with transportation and lodging spending peaking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August). During the Chuseok holiday (September), retail consumption surged temporarily due to homecoming and gift purchases.

Chapter 4 applies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o the quantitative data for all 89 depopulating regions, classifying them into four types based on their consumption structures.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size, consumption volume, and economic ripple effects were used, with factor analysis employed to reduce dimensionality prior to clustering. As a result, regions were categorized into four distinct types of consumption structures:

Cluster 1: Tourism-dependent regions with short-term seasonal consumption – heavily reliant on seasonal tourism and dominated by short-stay visitor spending, primarily in accommodation and food sectors, but with weak local circulation effects.

Cluster 2: Repeated day-trip leisure consumption regions – characterized by proximity to metropolitan areas and recurring leisure spending (food, culture, recreation) by revisiting consumers.

Cluster 3: Residential and long-stay consumption regions – where local residents and long-stay populations are key consumers, with stable spending in daily-life sectors such as retail,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

Cluster 4: Multi-generational sub-centers of daily consumption – functioning as intermediate hubs that attract consumption from surrounding areas, exhibiting balanced sectoral activity and regional connectiv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on daily living populations should

move beyond simple population inflow targets toward strategies that identify the primary consumer groups for each regional type and design mechanisms that enable their consumption to circulate sustainably within local economies.

Chapter 5 empirically analyzes the consumption structure and stay-residence patterns of depopulating regions along a spectrum ranging from "stay-oriented, consumption-driven areas" to "residence-oriented, everyday-life areas." This analysis is grounded in a typology of depopulating regions derived from the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the daily living populations. Representative case areas for each type were selected by considering per capita consumption of stay and daily living populations, the diversity of consumption categories, seasonal fluctuations, and the share of resident and repeat-visitor populations, while ensuring balanced representation across major macro-regions (Gangwon,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The selected cases are as follows: Yangyang-gun in Gangwon Province for Cluster 1, representing highly seasonal tourism areas with a large share of young adults; Buyeo-gun in Chungnam for Cluster 2, characterized by repeated spring-autumn day-trip visitation with substantial retail consumption; Gochang-gun in Jeonbuk for Cluster 3, defined as a long-stay, residence-oriented consumption area with high spending in culture and leisure; and Andong-si in Gyeongbuk for Cluster 4, a weekday semi-core area with the highest per capita consumption among the daily living populations. For each type, in-depth case analyses are conducted, and tailored strategies for activating consumption among daily living populations are proposed.

Chapter 6 establishes strategic directions for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by leveraging daily living population consumption, deriving tailored strategies for each region type, and propos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to support these strategies. The primary strategic directions are: (1)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the inflow of daily living populations and local economic effects; (2) pursuing region-specific strategies through selective prioritization of key consumer groups; and (3) formulating objective, data-driven strategies.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proactively attract daily living populations—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resident populations—and to promote region-led industrial ecosystem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it is necessary to add provision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daily living population within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Depopulating Areas, which currently contains only general clauses under Chapter 5.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amend their ordinances to incorporate provisions linking daily living populations with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to institutionalize mechanisms for promoting the daily living population framework. Additionally, financial incentives should be enhanced so that local efforts to stimulate daily living population consumption are adequately rewarded.

Finally, Chapter 7 synthesizes the study's findings, discusses limit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